연차보고서

ANNUAL REPORT

2014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4 Annual Report

발 간 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왔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를 목표로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각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연구보고서 80여편, 정책보고서 60여편을 집필, 발간함으로써 보건의료·사회보장·사회복지 부문의 국정과제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현안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정책 집행 평가를 위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에도 중점을 두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일련의 연구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연구활동에 대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면서 지난 성과를 되돌아보기 위하여 2014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연차보고서에는 2014년의 연구목표 및 운영방향, 연구사업 등의 국정과제 관련 주요 연구성과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국제회의, 정책토론회, 학술행사 등의 주요 행사와 정기간행물 발간 등 지난 1년간 연구원이 수행한 주요 연구활동을 담았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도 국민 행복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실용적 정책대안 및 실천 전략을 제시하고자 능동적이며 근거에 기반한 정책연구 수행을 통하여 정책건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환경 및 인구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여 제반 사회문제들에 대한 정책 연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활동과 발전을 지원해 주신 국무조정실과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감사드리며, 협동연구에 협조해 주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구성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성원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차보고서 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본 연구원의 연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7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상 호 김 상 호

CONTENTS

발 간 사 02

Chapter Ⅰ KIHASA 현황

설립목적, 연혁, 주요 기능 34
조직도, 인원 현황 35
비전 및 경영목표 36
조직별 주요 업무 37

Chapter Ⅱ 2014년 연구사업

2014년도 사업목표 46
2014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46

Chapter Ⅲ 2014년 연구성과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한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52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57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64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67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72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74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 분석 79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82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85
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90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93

	생애말기케어의 사회적 가치 측정	96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99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102
	대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방안	105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108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110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112
0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116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I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개발	120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123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도입 방안	125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128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130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분석	134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137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 만성질환, 임신_출산, 보건의식행태	140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과 일본	144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146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149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152
	2014년 빈곤통계연보	15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_원종욱 선임연구위원	157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159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161
	한국형복지모형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163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168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171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174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연구	180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183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189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193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196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5차년 과제 20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02

06 사회통합방안 모색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206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210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213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215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218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20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222

0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232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236
인구구조 변화와 공_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239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242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안정 효과 분석 247

0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252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255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258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262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265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268

0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방안 모색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272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276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279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282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285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금융, 주택, 국방, 사회갈등 288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291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293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297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300

10 국민안전 보호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304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310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 3.0 구현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316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319
사회분야 글로벌 다자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324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327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330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333

Chapter Ⅳ 2014년 연구활동

1. 2014 주요행사 340
2. 정기간행물 352

Chapter Ⅴ 2015년 연구사업

1. 2015년도 사업목표 362
2. 연구사업 운영방안 362
3. 2015년도 사업개요 363

Chapter Ⅵ 부 록

1. 2013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372
2. 기타 간행물 379
3. 연구위원 현황 380
4. 도서관 383
5. KIHASA 웹사이트 384

KIHASA 2014 VIEW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1월	-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1.2) - 한·미·독·중·일 5개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 관련 개인정보 국제 학술 세미나(1.15)	- 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방향에 관한 세미나(1.27)		- 2014년 시무식(1.2) - 정책연구협의회(1차)(1.8) - 논리적 망분리 사용자 교육(1.10) - 2014년 연구원 전략 워크숍(1.17)
2월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2.17) -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관련 세미나(2.19)		- 제1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2.11) - 제2차 인구포럼(통일한국의 적정인구: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2.21)
3월		-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3.7)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재정건전성 관리제도 효과성)(3.18) -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3.27)		- 보고서 작성능력 향상 교육(3.4) - 명사초청 특강(배병준 국장)(3.4) - 정책연구협의회(2차)(3.5) - 상반기 연구자문위원회(3.6) - 제1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3.13) - 「2014한국을빛낸창조경영」 최병호 원장님 수상(3.13) - 공문서 바로 쓰기 교육(3.19)
4월	- 건강한 노년기 준비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발표회(4.21) -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4.21~5.2) - HIA 2014 국제건강영향평가 워크숍(4.29)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공적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전망 모형)(4.9) - 의료기기산업현황과 의료기기 시장도입 및 확산에 관한 전문가토론회(4.9) - 2014년 제1차 보건복지개인정보보호 운영자회의(4.17)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경제균형 계량모형과 사회지출부문 활용방안)(4.29)		- 제1차 사회통합포럼(한국사회, 통합의 좌표)(4.4) -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4.15) - 제2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4.17) - 한경비즈니스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분야 3년 연속 1위(4.21) - 제1차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4.30)
5월	- UK Social Security and Social Service Reform in time of Austerity 포럼(제2차 사회통합포럼)(5.30)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불 국제세미나-미래에의 전략적 대응(5.12) -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정책토론회(5.13)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보건복지부문 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적용방안)(5.14)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5.16~5.17) -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5.23) - 201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전기학술대회(5.23) - 한국의료의 질과 불평등 보고서 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5.27)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출산율을 내생화한 CGE모형)(5.28)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분석)(5.30) - 한국보건행정학회 2014년 전기학술대회(5.30) -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5.30)	- 싱가포르 국립대 인문자연학부(5.8)	- 1사1촌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5.9) - 제1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고 있는가?)(5.20) - 제2차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5.30)
6월	-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움(6.10) - KIHASA-AHRQ Video Conference(6.18) - 일본 사회보장학회 및 인구사회보장연구소와의 사회보장재정 세미나(6.21~6.24)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모형)(6.5)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컨퍼런스(6.13) -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6.13) -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결과 발표회(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안)(6.20) -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6.20~6.21) - 2014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워크숍(6.23~6.24) -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6.26) - HIA 2014 건강영향평가 워크숍(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6.27)	- 미국 UC버클리 경제·인구변동 센터(6.2) -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 한국연구센터(6.3)	- 전직원 청렴교육(6.2) - 제3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6.12) - 연구윤리 교육(6.12)(6.12) - 제3차 사회통합포럼(사회적 경영의 이해, 미션과 성과)(6.13) - 제3차 인구포럼(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걸음,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 · 성장)(6.19) - 제2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 모의 Case 예제 사례분석)(6.19) - ArcGIS 방법론 세미나(6.27) - 불우이웃돕기 바자회(6.30) - 제43주년 개원기념식(6.30)

	국제회의	토론회/세미나/학술대회	MOU	포럼/원내행사
7월	- 대만 주거복지 관련 국제 정책토론회(제1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7.17)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7.3) -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7.15)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장·단기 거시모형과 사회보장 지출 연계 가능성 및 활용방안 모색)(7.18) - 한국형복지모형구축(일반) 세미나(7.22) - 제1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7.24) - 제2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7.31)		- ArcGIS 방법론 세미나(7.10) - 제3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 중장기 자산배분목표와 ALM)(7.14) - 제4차 인구포럼(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세대간 소통)(7.17) - ArcGIS 방법론 세미나(7.29)
8월	-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정책토론회(제2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8.16)	-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지표개발 관련 워크숍(8.1) - 제3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8.7) - 사회분야 국제기구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APEC 사회분야 향후 의제 동향 논의)(8.20) - 제4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8.21)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세미나(8.25)		- 제1차 창조복지 포럼(8.5) - 제3차 지역복지정책포럼(8.19) - 제4차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8.22)
9월	- 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세미나(제5차 인구포럼)(9.5) - 일본, 태국,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정책토론회(제3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9.23) - 중국과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에 관한 정책토론회(제4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9.25)	- 제5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9.4) -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9.12) - 사회분야 국제기구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사회분야 OECD 의제 동향 논의)(9.16)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9.17) -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9.18) -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워크숍(9.18~9.19) - 제7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9.19) - 사회보장 재정추계 워크숍(9.23) - 제6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9.25)	- 전라남도복지재단(9.12) - 한국정보화진흥원(9.16) - 교보문고(9.17)	- 부서대항 탁구대회(9.15~9.19) - 제2차 창조복지 포럼(9.19) - 제4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9.25) - 2014년 추계 체육대회(9.26)
10월	- 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 워크숍(10.1) - 글로벌 가족변화비교 국제세미나 (10.2) - 사회정신건강 관련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10.7) - 한일 공공부조제도 관련 정책토론회(제5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10.13~10.16) - 제1회 아태지역 가족정책 전문가 국제세미나(10.30) - 국민연금 기금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컨퍼런스(10.31)	-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행태 변화 분석 워크숍(10.1~10.2) - 제7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0.2)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10.7) - 제8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0.16) -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10.17~10.18) - 2014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10.17~10.18) - 대한예방의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10.22~10.24) - Gunnar Akner(스웨덴 오레브로 대학 교수) 초청 스웨덴 노인성 복합질환 현황 및 복합질환 관리 체계 관련 워크숍(10.29) -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10.31~11.1) - 한국재정정책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10.31)	-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10.15)	- 전직원 성폭력, 성희롱 등 예방교육(10.6) - 제5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10.30)
11월	-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국제 컨퍼런스(11.7) - 한·독·일 장기요양 국제심포지움(11.13) - 복지환경의 도전과 복지기술의 역할에 관한 국제 공동 컨퍼런스(11.18) -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 관련 공동세미나(11.20) - 보건의료지불제도와 전달체계에 관한 보건복지 국제공동심포지움(11.27)	- 2014년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워크숍(11.6~11.8) -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11.6~11.7) - 제9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1.13)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문가 세미나(11.14) -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11.14) - 저출산·고령사회 예산제도 토론회-저출산 극복, 국가가 나서다(11.14) - 제10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1.20) - UN SDGs 지속가능발전 종합타겟 설정을 위한 주제분야별 발제 구상 워크숍(11.20) - 유사·중복사업 개선 현장 의견수렴 TF 워크숍(11.20)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11.21) -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공청회(11.24) - 사회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 성과토론회(11.25)	- 북유럽장관회의 산하 북유럽 복지·사회이슈 센터(11.14) -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11.14) - 미국 유타대학교(11.27)	- 하반기 연구자문위원회(11.5) - 1사1촌 자매결연 9주년 기념식(11.7) - 제6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일본의 억제적 빈곤정책이념의 형성)(11.13) - 제6차 인구포럼(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을 찾는다)(11.14) - 동양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단체견학(11.17) - 제1차 보건의료정책 리더스 포럼(11.18) - 제4차 연금기금포럼(기금의 액티브 운용 및 액티브위험의 관리방안)(11.21) - 제5차 연금기금포럼(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보상체계란?)(11.25) - 2014 대한민국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식(11.28) - 2014년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식(11.28)
12월	-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대응에 관한 국제컨퍼런스(12.7~12.9) -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적 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12.16)	- 제11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12.4) -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12.10) -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토론회(12.11) -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12.12)	- 공주대학교·우송대학교·청주대학교·충남대학교·충북대학교(12.16)	- UN SDSN KOREA-GREEN KOREA 2014 공동포럼(12.4~12.5) - 제6차 연금기금포럼(바람직한 국민연금운용 보상체계란 무엇인가?)(12.11) - 제6차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12.11) - 정책연구협의회(3차)(12.22) - 제2차 보건의료정책 리더스 포럼(12.26) - 2014년 종무식(12.31)

①

②

③

1. 건강한 노년기 준비에 관한 국제 비교연구 발표회(2014.4.21)
2. HIA 2014 국제건강영향평가 워크숍(2014.4.29~4.30)
3.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 (2014.4.21~5.2)

④

⑤

⑥

4.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 국제컨퍼런스(2014.5.12)
5. 국민보건계정 심포지움 (2014.6.10)
6. KIHASA-AHRQ Video Conference(2014.6.18)

⑧

⑨

⑩

8. 일본 사회보장학회 및 인구사회 보장연구소와의 세미나 (2014.6.21~6.24)

9.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 정책토론회 (제2차 아시아 사회정책포럼) (2014.8.16)

10. 아시아 각국 공공부조제도 전문가초청 컨퍼런스 (2014.9.23, 9.25)

⑪

⑫

⑬

11. 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 워크숍 (2014.10.01)
12. 글로벌 가족변화비교 국제세미나(2014.10.2)
13. 사회정신건강 관련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2014.10.7)

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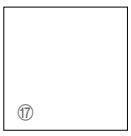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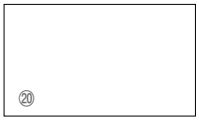
⑯

14. 국민연금 기금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컨퍼런스(2014.10.31)

15. 한·독·일 장기요양 국제심포지움 (2014.11.13)

16. 복지환경의 도전과 복지기술의 역할에 관한 국제 공동 컨퍼런스 (2014.11.18)





17.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국제 컨퍼런스(2014.11.7)
18. 보건의료지불제도와 전달체계에 관한 보건복지 국제 공동심포지움 (2014.11.27)
19.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대응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2014.12.7~12.9)
20.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적 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2014.12.16)

①

②

③

1. 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세미나(2014.1.27)
2.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3.7)
3.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정책토론회(2014.5.13)

④

⑤

⑥

4.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컨퍼런스 (2014.6.13)
5.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안 (연구결과 발표회) (2014.6.20)
6.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전문 위원단 워크숍 (2014.6.23-24)

⑦

⑧

⑨

7. HIA 2014 건강영향평가 워크숍 :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 (2014.6.27)
8. 지역복지정책포럼-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색(2014.8.19)
9.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토론회(2014.7.15)

⑩

⑪

⑫

10.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세미나(2014.8.25)
11.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2014.9.17)
12. 제7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2014.9.19)

⑬

⑭

⑮

13.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2014.11.14)

14. 유사중복사업 개선 현장 의견 수렴 워크숍(2014.11.20-21)

15.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공청회(2014.11.24)

16.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 개최 (2014.12.10)

17. 인구포럼(6회 개최 2014.2.11, 2.21, 6.19, 7.17, 9.5, 11.14)

18.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6회 개최/2014.2.19, 4.9, 4.14, 4.30, 5.30, 8.22)

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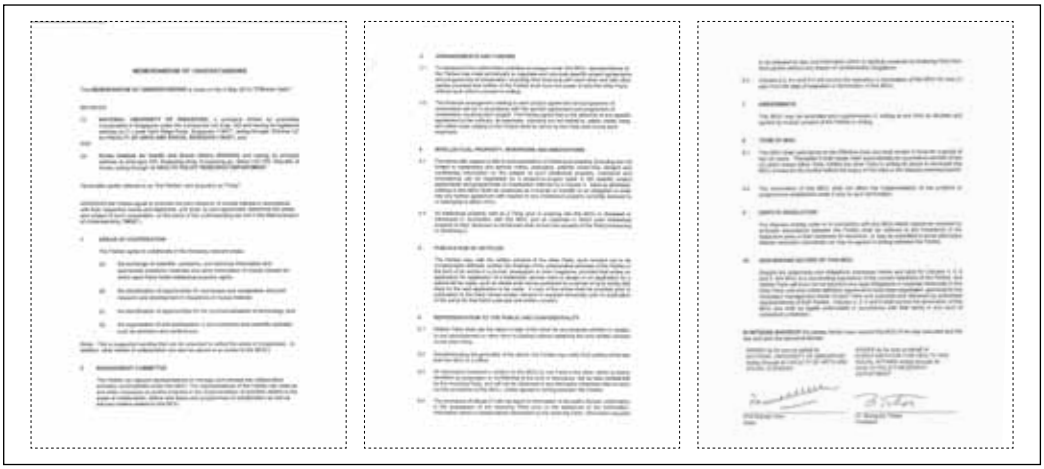
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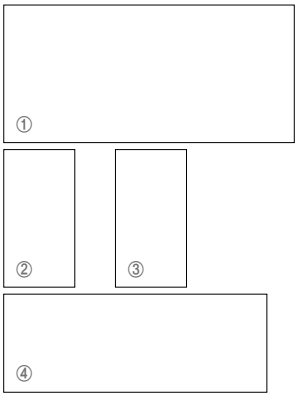
㉑

19. 사회통합포럼(3회 개최 2014.4.4, 5.30, 6.13)
20. 국민연금기금포럼(6회 개최 2014.5.20, 6.19, 7.14, 11.21, 11.25, 12.11)
21. 창조복지포럼 (2회개최 2014.8.5, 9.19)

22. 거시계량모형세미나
(9회 개최/2014.2.17, 3.18, 4.9, 4.29, 5.14, 5.28, 5.30, 6.5, 7.18)

23.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1회 개최/2014.7.24, 7.31, 8.7, 8.21, 9.4, 9.25, 10.2, 10.16, 11.13, 11.20, 12.4)





1. 싱가포르국립대 인문자연학부 (2014.5.8.)
2. 미국 UC버클리대 경제·인구변동센터(2014.6.20.)
3.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 한국연구센터(2014.6.30.)
4. 전라남도복지재단(2014.9.12.)

⑤

⑥

⑦ ⑧

5. 북유럽장관회의산하 북유럽 복지·사회이슈센터(2014.11.14.)
6. 미국 유타대학교(2014.11.27.)
7. 일본 오사카시립대 도시연구플라자 (2014.10.15.)
8. 중국 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 (2014.11.14.)

한경비지니스 100대 싱크탱크 정치 · 사회 부문 1위 선정

정치 · 사회 부문 조사 결과

순위	순위 변동	평가 기관	영향력	연구의 질	연구 역량	종합 점수
1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39	138	139	416
2	–	한국교육개발원	77	96	109	282
3	↑1	한국학중앙연구원	62	113	90	265
4	↓1	한국행정연구원	58	79	99	236
5	↑9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47	86	56	189
6	↑20	국립보건연구원	44	57	86	187
7	–	재단법인 여의도 연구원	90	41	48	179
8	↓2	희망제작소	76	49	50	175
9	↑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35	68	56	159
10	↑3	(사)국가미래연구원	59	42	45	146

①

②

③

1. 한경비즈니스 100대 싱크탱크 정치사회분야 3년 연속 1위
2.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연구협의회 (2014.1.8/3.5/12.22)
3. 연구원 전략 워크숍(2014.1.17)

④

⑤

⑥

4. 2014년도
   연구자문위원회회의
   (2014.3.6 / 11.5)

5. 글쓰기 교육(2014.3.4)

6. 명사초청 강의(2014.3.4)

⑦

⑧

⑨

7. 국립국어원 출장 글쓰기 강의 (2014.3.19)
8.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2014.4.15)
9. 연구윤리 교육(2014.6.12)

⑩

⑪

⑫

10. 제43주년 개원기념식 (2014.6.30)
11.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2014.6.30)
12. 부서대항 탁구대회 (2014.9.15~9.19)

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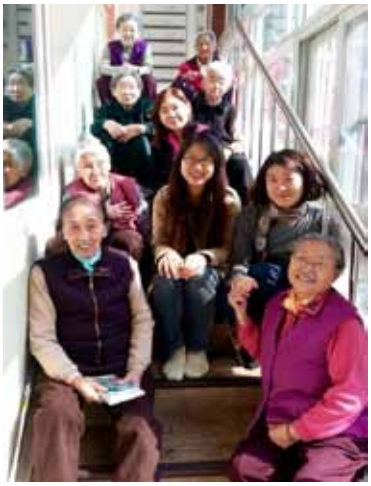
⑭

⑮

13. 추계 체육대회
계룡산 및 세종시
(2014.9.26)

14. 보사동우회 송년회
(2014.12.5)

15. 종무식(2014.12.31)



1. 자매결연마을 농촌일손돕기
2. 봉사활동 – 성산지역아동센터
3. 봉사활동 – 보물섬 지역아동센터
4. 봉사활동 – 흰돌회
5. 봉사활동 – 성우회
6. 봉사활동 – SOS 어린이 마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I

KIHASA 현황

1. 설립목적 / 연혁 / 주요기능
2. 조직도 / 인원현황
3. 비전 및 경영목표
4. 조직별 주요 업무

설립목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 및 사회정책과 관련된 제부문의 정책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의 의견수렴과 이해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장·단기 보건의료 사회복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 혁

1971. 7. 1 가족계획연구원 설립 (대통령령 제5198호 및 법률 제2270호)

1976. 4.19 한국보건개발연구원 설립 (법률 제2857호)

1981. 7. 1 한국보건개발연구원과 가족계획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인구보건연구원으로 발족 (법률제3417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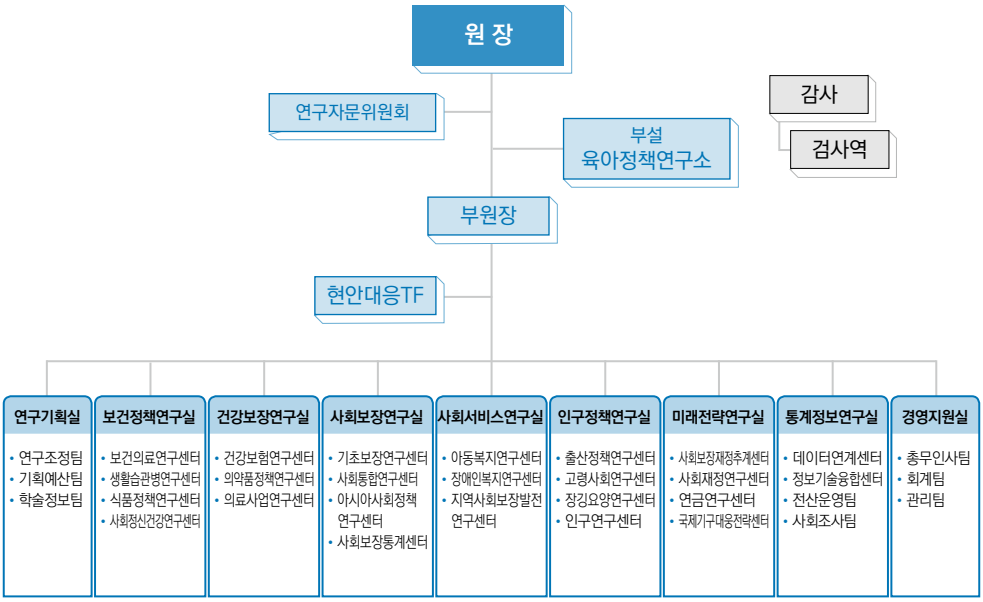
1989.12.30 보건사회부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연구 기능을 통합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 개칭 (법률 제4181호)

1999. 1.29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무조정실로 이관 (법률 제5733호)

주요 기능

- 보건의료·국민연금·건강보험·사회복지·인구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제도 평가 및 정책개발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의 정책수립 및 개발을 위한 국가 기초통계자료의 생산
- 보건의료·사회복지분야의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보건의료·사회복지 분야 정부의 주요 정책위원회 지원
- 보건의료·사회복지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국민 여론 수렴
- 보건의료·사회복지 관련 국내외 전문기관과의 기술 정보교류, 공동연구 및 이에 대한 지원
-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로부터의 공익성이 있는 연구용역의 수탁
- 보건의료·사회복지에 관한 교육, 연수 및 홍보
-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조직도



인원현황

(2015년 5월 31일 기준)

구분		현원	계
임원	원장	1	1
연구직	선임연구위원	10	105
	연구위원	37	
	부연구위원	28	
	전문연구원	30	
전문직	책임전문원	2	8
	선임전문원	5	
	전문원	1	
행정직	책임행정원	6	19
	선임행정원	6	
	행정원	7	
계		133	133

※비정규직 제외

비전 및 경영목표

VISION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선도하는 사회정책의 중심 연구기관

3대 경영목표

경영목표 1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 한국 상황에 맞는 창의적 복지 패러다임 연구
- 국가의 사회정책 평가와 중장기 계획 수립 지원
- 지속가능하며 위기에 대처 가능한 복지시스템 연구

경영목표 2
국가 정책에 대한 기여도 제고

- 근거기반 연구를 위한 통계정보 인프라 강화
- 현장적용이 가능한 실용적 연구 강화
- 정책현안 동향 파악을 통한 정책의 수용성 제고
- 연구성과의 개방과 공유 확산

경영목표 3
연구의 질 향상과 경영 혁신을 위한 시스템 개편

- 연구역량 강화
- 생산적이고 활기찬 조직문화 구축
- 재정구조 안정화

조직별 주요 업무

보건정책연구본부

▶ 보건의료 시스템의 개선과 국민들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연구와 생활 습관병 및 식·의·약안전 정책 연구 수행

• 보건정책연구실

-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관련 연구
- 식품 정책에 관한 연구
- 사회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연구
- 기타 보건정책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연구센터

- 보건의료 공급체계 및 일차의료 관련 연구
- 보건의료자원에 관한 연구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 응급의료에 관한 연구
-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

• 식품정책연구센터

-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생과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공중위생 및 공중보건 정책에 관한 연구
- 식품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기타 식품 안전 및 산업 정책 연구

• 생활습관병연구센터

- 건강증진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연구
- 건강증진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평가
- 질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 모자보건, 구강보건 등에 관한 연구
- 기타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 사회정신건강 실태 조사·분석
- 사회갈등 및 자살 등 사회병리 현상의 발생원인 분석 및 대책 연구
- 사회병리현상 해소와 사회정신건강증진 연구
- 기타 사회정신건강 관련 연구

건강보장연구실

▶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지속가능성 확보라는 정책목표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는 정책대안 모색하고, 의약품정책 및 의료산업정책 연구 수행

• 건강보장연구실

- 건강보장정책에 관한 연구
- 의약품 정책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산업에 관한 연구
- 기타 건강보장에 관한 연구

• 건강보험연구센터

-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연구
- 의료급여제도 관련 연구
-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 재정관련 연구
- 건강보험 약제비 및 약가제도 관련 연구
- 기타 건강보험 관련 연구

• 의약품정책연구센터

- 의약품·의료기술·의료기기·화장품 등의 안전정책에 관한 연구
- 의약품 등의 수요 및 공급관련 정책연구
- 의약품 등의 가격 및 품질관리 제도 연구
- 의약품 등 산업 발전에 관한 정책연구
- 기타 의약품 등의 정책에 관한 연구

• 의료산업연구센터

- 의료분야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
- 해외환자 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전략개발 연구
- 의료기술 R&D 관련 연구
- 관련 규제 합리화 연구
- 의료산업 투자활성화 연구
- 기타 의료산업 관련 연구

사회보장연구실

▶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 사회통합, 아시아사회정책 연구와 사회보장통계센터 운영

• 사회보장연구실

- 공공부조제도 등 소득보장 관련 연구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연구
- 현금 및 현물지원제도의 연계 방안 연구
-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분석 및 연구
- 사회보장통계의 관리 및 연구
-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 기초보장연구센터

- 공공부조제도 등 소득보장 연구
- 근로빈곤층 자립지원 정책 연구
- 빈곤 및 소득불평등 연구
- 사회보장제도 관련 연구
- 현금 및 현물의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 〈한국복지패널〉 조사 및 관련 연구

• 사회통합연구센터

- 분야별, 집단별 사회적 갈등의 실태 및 해결방안 연구
- 국민의식 조사 등 사회통합의 실태 관련 조사 및 연구
- 사회통합관련 제도 개선 발전방안 연구
- 사회통합의 실태 및 정책적 대응 관련 지표 연구
- 기타 사회통합 관련 실태분석 및 제도 연구

• 아시아사회정책연구센터

- 아시아 각국 사회정책의 비교연구
- 아시아 각국의 사회보장 관련 통계구축
- 아시아지역 복지 분야 국제협력 사업 수행
- 아시아지역 복지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국제사회보장리뷰 발간

• 사회보장통계센터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사회보장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
- 데이터베이스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 분류화
- 사회보장 관련 지표 선정 및 관리
- 신규 사회보장통계 발굴 기반 구축 및 필요통계의 승인화
- 사회보장통계 생산관리 방안 연구
-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연보
- 사회보장통계 전문위원회 지원
- 사회보장통계정보망 구축지원
- 사회보장통계정비 등을 통한 사회정책분석

사회서비스연구실

▶ 저출산·고령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 가족구조 변화와 전통적 가족기능의 약화 등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 장애인, 가족이 필요로 하는 다양하고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개발과 공급확대 등 연구를 수행하고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운영

• 사회서비스연구실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조사 및 제도운영 관련 연구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정책 연구
- 사회서비스 부문 제3섹터, 사회적 경제 및 산업 육성 연구
- 기타 사회서비스 관련 연구

• 아동복지연구센터

- 아동정책 수립 및 계획, 평가 연구
- 아동정책 거버넌스 연구
- 아동복지 인프라 연구
- 위기아동 보호 및 지원 관련 연구
- 아동 안전 관련 연구
- 아동실태조사 및 근거기반 정책 분석 연구

• 지역사회보장발전연구센터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및 평가
- 지역사회 복지 실태 및 욕구조사
- 지자체 복지정책 진단 및 평가
- 지역사회내 복지시설 평가 및 컨설팅
- 지역사회 균형발전 관련 연구
- 지자체 복지통계 수집 및 분석 연구
- 기타 지역사회보장 관련 연구

• 장애인복지연구센터

- 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수립 및 평가
- 장애인 관련 정책평가 및 제도 연구
- 생애주기별 장애인 정책 연구
-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정책 연구
- 장애인 정책 국제비교 연구
- 기타 장애인 자립 및 권익보호 관련 연구

인구정책연구본부

▶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및 급격한 인구변동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구에 관한 풍부하고 심층적인 연구기반 구축

• 사회보장연구실

- 중장기 국가 인구전략 연구
- 인구·가구 추계, 안정인구 및 적정인구 추정 등
- 인구현상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
- 인구 변동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 인구고령화 대응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연구
- 인구현상(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중장기 계획수립 연구
- 인구정책 평가 연구
- 인구정책 국제비교연구
- 인구관련 교육·홍보 연구 및 효과 평가
- 기타 인구 관련 연구

• 출산정책연구센터

- 저출산 관련 기초조사 실시
- 저출산 원인 심층분석
- 저출산 극복 정책 개발 및 개선 연구
- 저출산 극복 정책 평가 연구
- 저출산 극복 정책 국제비교 분석

• 장기요양연구센터

- 장기요양 관련 기초조사 실시
- 장기요양 관련 통계자료 심층분석
- 장기요양제도 국제비교분석
- 장기요양제도 개선연구
- 장기요양제도 평가

• 고령사회연구센터

- 고령사회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기초 분석
- 고령사회 관련 지표 개발
- 고령사회 관련 국제비교 분석
- 고령사회정책 개발 및 개선 연구
- 고령사회정책 평가 연구

• 인구연구센터

- 인구기초분석
- 인구동태분석 :
  출산, 사망, 이동, 혼인 등 인구변동요인 추이와 원인, 향후 변화 예측 등
- 인구정태분석 :
  인구 규모, 구조 및 분포의 추이와 원인 분석 등
- 인구, 가구 등 추계분석
- 안정인구·적정인구 추정
- 인구응용통계(자료,지표 등) 개발·생산

미래전략연구실

▶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복지재정 및 공적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 미래전략연구실

- 보건복지정책동향분석 및 정책아젠다 개발
- 보건복지와 타분야 학제간 융합연구
-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제도비교 연구
- 세대간 회계 및 세대간 이전 연구
- 미래사회포럼 운영

• 사회보장재정추계센터

-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모형 개발연구
-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지정된 재정추계 센터 기능수행
- 사회보장 재정평가 연구
- 재정추계결과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사회재정연구센터

- 사회보장지출 영향 평가 및 제도 개선 연구
- 사회보장 지출구조 진단 및 재원배분 방향 연구
- 사회보장지출 재원조달 방안 연구
- 국가-지자체간 사회보장 재정분담 방안 연구
- 주요국의 사회재정 동향 분석

• 연금연구센터

- 인구고령화·저성장 등 경제사회적 실태를 고려한 연금제도 개선방향 연구
- 근로빈곤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연구
-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를 위한 재정평가 연구
- 중장기 환경변화에 대비한 기금운용정책 연구

• 국제기구대응전략센터

- 국외 정책동향 분석 및 연구결과의 국외 홍보
- 영문저널 발간
- 국외 관련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해외 전문가 교육
- ODA 관련 업무
- 국제기구의 보건복지동향 파악

통계정보연구실

▶ 보건복지 데이터 연계 및 정보기술융합을 위한 심층연구와 보건복지부문의 사회조사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통계와 국가차원의 보건복지지표를 생산해 정부, 정책입안자, 학계, 국제기구 국민 등에게 제공

• 데이터연계센터

- 근거기반의 기본통계 생산과 사회변화에 따른 통계지표의 평가 및 개발
- 생산통계의 활용성 제고와 국제기관과의 통계교류 확대 연구
- 보건복지통계정보 체계 및 시스템 구축·운영
- 사회보장통계의 구축, 품질관리, 심층분석과 신규통계 발굴

• 데이터연계센터

- 정부 3.0 추진전략 지원방안 연구
- 보건복지 빅데이터 활용 정책연구
- 소셜 빅데이터 연계 및 활용
- 조사통계의 표본설계 관련 연구
- 보건복지통계포털 구축 및 마이크로데이터관리
- 최신 통계분석방법론 활용을 통한 정책연구
- 데이터 품질 관리 및 표준화 연구
- 신규조사통계 개발·지원

• 정보기술융합센터

- 보건복지 정보화전략 연구
- 보건복지 정보화수요 및 성과분석
- 수요자 맞춤형 보건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보건복지 개인정보보호 관련 연구
- 보건복지와 정보기술의 융합 연구

〈개정 2015.1.5.〉

• 전산운영팀

- 연구원 정보화사업 전략계획 수립·기획·운영
- 정보보안 업무 수행
- IT 인프라 운영 및 관리
- 웹사이트 기획·운영
- 연구과제 정보화사업 지원

• 사회조사팀

- 조사예산, 조사일정 계획수립 및 조사계획 수립지원
- 면접 및 전화조사원 관리
- 면접조사 및 전화조사 실시
- 조사 사후검증
- 조사품질 진단 및 관리
- 조사자료 에디팅 및 데이터 크리닝

연구기획실

▶ 사회정책 전반에 관한 다학제적 연구를 수행하는 7개 연구실의 연구업무를 기획·조정 및 사업 통합관리

• 연구조정팀

- 장단기 연구계획 및 경영목표 등 기획
-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종합
- 연구사업 조정·관리 및 사업평가관리
- 기관평가 관련 업무 총괄
- 직원 근무평정 총괄
- 연구결과의 대외홍보

• 기획예산팀

- 예산편성 등 사업계획 종합
- 연구용역 관리(수탁, 위탁용역)
- 자금 및 운영재원 관리
- 지출원인행위 및 예산관리

• 학술정보팀

- 연구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발간 업무
- 지식정보자료 수집·조직·축적 및 보존

경영지원실

▶ 신축적 조직운영과 합리적 인사관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관리, 물적자원의 적정관리, 안정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혁신적 경영관리

• 총무인사팀

- 직원의 인사 및 복무관리
- 직원 교육훈련계획 수립과 집행
- 규정관리 업무
- 임직원 보수 지급 및 복리후생

• 관리팀

- 물품 구매·제조·공사·수리 및 계약 업무 (연구용역계약 제외)
- 시설 및 장비관리
- 연구원 행사 기획 및 지원 업무
- 청사 경비·보안 및 비상계획

• 회계팀

- 지출관리 업무
- 예산집행실적 종합 및 기업회계처리

Ⅱ

2014년 연구사업

1. 2014년도 사업목표
2. 2014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1. 2014년도 사업목표

총괄목표	-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세부목표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연구 - 저출산 · 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 연구

2. 2014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 보건정책의 실효성 제고 연구

- 보건의료시스템에 내재한 비효율성을 지양하고,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선진적인 체계 구축
- 공급자-수요자 상호신뢰가 작동하는 보건의료체계 운영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100% 행복사회” 구현
-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창조경제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보건의료 부문의 산업생태계 조성
- 정책 개발·결정·평가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근거 생산
- 한국 의료의 질(quality) 성과 평가 및 건강불평등(disparity) 지표 산출
-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방안 연구
-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 기전 분석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안 연구
- 생활습관병 감소를 위한 대응전략 수립
- 자살위험도 변동과정 및 원인분석과 지역간 격차 요인 분석
- 보건복지 조사자료 분석을 통한 빅 데이터 연계방안 마련 및 빅 데이터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연구

▣ 맞춤형 복지정책 구현 연구

- 공공부조제도 개편에 따른 학술 및 정책 기초자료 생산
- 사회보장정책의 이론적 토대 또는 기초 연구
- 사회통합 및 갈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통합도 제고방안 제시
- 국민행복시대 진입을 위한 보건복지재정 분석 및 재정 전망
- 사회서비스 연구분야 간 하이브리드적 연구성과물 생산
- 선진화된 보건복지통계 생산체계 구축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연구

- 인구 변동에 대응한 인구전략 마련
- 저출산 대응 실효성 확보
- 고령사회 대응 종합적인 검토 및 정책방향 제시
-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특히 새 정부 국정방향과의 정합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보완 내지 강화
- 국내외 기관 등과 연구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다학제적 접근 및 국제공동 연구 추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0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06. 사회통합방안 모색
0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0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 만들기
0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방안 모색
10. 국민안전 보호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1. 창조경제와 민생경제 부흥

-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연구보고서
2014-06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Historical analysis of hospital industry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대중
공동연구자 • 오명전·신정우·윤휘외·김진호

Ⅰ. 연구목적

▣ 연구의 배경

– 의료서비스산업이 크게 변화하고 있음. 의료서비스 시장영역이 확대되고, 전통적으로 내수중심이었던 산업이 의료관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을 통해 글로벌화하고 있음. 병원산업의 현황과 성장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함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 병원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향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병원 산업의 성장과정을 고찰하고, 재무성과, 가버넌스 구조 등을 평가한 뒤, 의료서비스산업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병원산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현황

– 의료서비스 산업 규모 측정

•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증가세는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군을 형성하고 있음.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산업의 증가율은 연평균 8.8%로, OECD 평균의 2배에 달함.

– 의료기관 설립 현황

• 2013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기관수는 총 60,182개에 달함. 이중 의원급은 총 57,155개(의원 28,328개, 한의원 13,100개, 치과의원 15,727개)로 전체 의료기관

의 89.2%를 차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총 3,007개(상급종합병원 43개, 종합병원 281개, 병원 1,451개, 요양병원 1,232개)를 차지하고 있음.

– 의료기관 진료비 현황

• 2013년 기준 의료기관 총진료비는 35.7조원에 달한다. 이 중 Big5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2.7조원(7.8%), Big5 병원을 제외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는 5.3조원(15.0%), 종합병원 7.8조원(21.9%), 병원 4.8조원(13.5%), 요양병원 3.0조원, 의원 9.1조원(25.5%) 등의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 수요요인 변화

• 2012년 의료서비스산업은 공공재원 53.6%(정부재원 8.6%, 사회보장기금재원 45.0%), 민간재원 46.4%(민영보험 7.1%, 가계직접부담 39.3%)로 구성되어 있음.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80년대 10.9%로 빠르게 성장하였으며, 90년대와 00년대에는 각각 6.9%와 10.5%로 다소 둔화되었고, 최근 7%대의 성장률에 그침.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00년대 높은 증가세는 정부정책의 영향(보장성 확대, 입원료수가 인상)과 병상수의 증가가 맞물린 결과라고 해석됨.

– 공급요인 변화

• 공급측면에서 1980년대 말부터 기업병원들이 시장에 등장하며 대형화, 고급화 추세가 발생. 2000년 의약분업,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시행되면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 짐.

– 의료자원 변동추이 분석

• 2005년~2013년까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각각 1.66%, 1.37%로서 1%대의 연평균 증가율로 성장하였음. 반면 요양병원은 28.52%, 병원은 5.02%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 의료인력 증가율은 의료기사를 제외하고는 직종에 따라 큰 차이가 없음. 2001년~2012년 간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약사는 연평균 4%대의 성장률을 보인 반면, 의료기사직은 7.47%의 연평균 증가율을 나타냄.

– 병상수 증가요인 분해

•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수는 2005년 대비 14.1% 증가하였음. 대도시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병상수 12.8%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음. 중소도시의 경우 특수법인의 94.8%, 학교법인의 병상수는 59.6% 순으로 컸음.

• 종합병원의 병상수 증가는 2005년 대비 11.5% 증가하였음. 대도시에서는 특수법인과 학교법인의 병상수 증가율이 각각 28.4%, 28.3%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에서는 특수법인 86.3% 증가, 개인 36.1% 증가 순으로 높았음.

• 병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수는 2005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대도시의 증가율이 57.7%, 중소도시의 증가율은 42.2% 증가하였음.

• 요양병원의 병상수는 2005년 대비 7.4배 증가하였음. 특히 특수법인의 증가율이 24.6배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의료법인의 경우도 15.1배 증가하였음.

– 병원 가버넌스 및 전략

• 우리나라 병원은 개인 또는 법인의 형태로 운영되며, 법인인 경우 비영리기관만 인정하고 있음. 비영리법인은 공익적 목적의 달성을 위한 감시 및 견제의 역할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병원의 재무적 성과와 특징

– 병원산업의 총자본이익률은 전반적으로 2~3%대의 수익 또는 손실을 기록함 수익성 악화는 신규투자를 위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 높음. 이는 결국 병원산업의 자본접근성을 악화시켜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더욱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잠재요인이 될 것임.

– 조사기간(1992~2012) 중 전문의 1인당 조정환자수는 병원이 종합병원급에 비해서 더 많고. 수익성도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남.

– 전체병원의 외래환자평균진료비와 입원환자평균진료비는 꾸준히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이는 물가상승과 의료원가의 상승에 따른 자연적 증가추세로 해석됨. 그러나 병상규모별로 평균진료비 격차는 점차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선진국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

– 미국 병원산업의 현황

• 미국 병원산업을 소유형태별로 보면 비영리병원이 지배적임. 미국에는 5,724개의 병원이 있으며, 이중 community hospital은 4,999개이고, 이 중 2,894개(50.7%)가 비영리, 1,068개가 영리(17.9%), 1,037개(18.2%)가 공공병원으로 과반수 이상이 비영리 의료기관임.

• 미국 의료는 전문가주의에 바탕을 둔 의사들의 권위에 바탕을 두었으나, 1970년대부터 병원, 민간보험회사들의 발달로 의사들의 자율성이 약화되고 기업의료가 크게 발전함.

– 일본 병원산업의 현황

• 일본에서는 의료기관을 병상 규모에 따라 100병상 이상은 종합병원, 20병상~100병상 미만은 병원, 19병상 미만은 진료소로 부르고 있음. 20병상 이상 병원은 일반병원, 특정기능병원(고도의료제공), 지역의료지원병원(담당의, 치과의의 지원 등), 정신과병원, 결핵병원으로 구분됨. 진료소는 무병상 진료소와 유병상 진료소(1~19개 병상)으로 구분됨.

• 일본에서는 의료법이 국가 의료공급체계의 기본 룰을 정하고 있음. 일본의료법은 1948년 의료법이 제정된 이후 크게 6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음. 향후 일반병상을 '고도급성기', '일반급성기', '아급성기 등', '장기요양'의 4개 기능으로 세분화하고 상호연계와 지역의료연계네트워크의 구축을 장기 목표로 추구

– 프랑스 병원산업의 현황

• 프랑스 의료기관은 국립병원, 공공이익참여민간병원, 민간영리병원으로 분류됨. 2012년 기준 전체 병원수는 2,660개, 병상수 415,000개로 구성되어있음. 이중 국립병원수는 931개, 병상수는 258,158개, 공공이익참여민간병원은 병원수 699개, 병상수 58,137개, 민간영리병원은 병원수 1,030, 병상수 98,545개임.

• 프랑스는 1970년대부터 공공의료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국립병원뿐 아니라 민간병원에서도 제공하게 함으로써 시장실패성 필수의료에 대한 서비스를 민간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Ⅲ. 정책제언

- 최근 병원의 경영환경이 많이 바뀌어 경쟁이 격화된 구조 하에서 국민들의 욕구변화와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기관의 정책적 육성과 지원이 필요. 특히 의료와 복지의 융합, 의료와 ICT의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개척과 의료서비스의 글로벌화, 의료기술혁신을 위한 정책 등에 대해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임.
- 보건의료자원의 공급이 시장에 맡겨져 있고,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미흡하여 병원간 경쟁심화가 비효율적 성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됨. 의료공급체계에서의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특히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병원산업은 설립형태별로 지배구조가 복잡하여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이사회의 구성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개입 필요.

연구보고서
2014-12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 진단 연구

A Diagnosis Study on the Industrial Growth Possibility of Social service Sphere

연구책임자 • 박세경
공동연구자 • 김정현·이정은·권소일·김형용·엄태영·전용호·허인철

Ⅰ. 연구목적

▣ 저출산·고령화로 촉발된 인구 구조의 변화와 가족기능의 약화 및 현대가족이 직면한 다양한 가족 위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부문의 필요도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른 공적 영역의 서비스 비용 부담 수준 및 사회서비스 공급 양태의 변화와 책임 분담 방식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 이슈들은 사회서비스업 산업화에 대한 찬반논란으로 이어지면서 대안적 사회서비스 공급 모형 모색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한편 서비스산업 전반은 고용비중에 비해 생산성 향상 둔화 및 서비스업종 내 업태 간 양극화 대응 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사회서비스업 부문은 수요와 공급의 양적 확산과 성장잠재력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저효율성과 저생산성의 한계와 복지공급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사업체 및 고용규모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업의 양적 규모 변화의 동태를 살피고,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가 및 현장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관련 쟁점을 정리하고, 사회서비스 산업화 가능성 탐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산업화'는 소비와 공급의 메커니즘에 한정된 체계로 파악하고 있음을 미리 밝히면서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관련 사업체 규모와 고용실태를 통한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위상 진단

• 현장 서비스 공급 경험을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에 대한 인식수준 고찰

- 사회서비스 개념적 논의의 혼란 정도를 파악하고, 사회서비스업 산업화 가능성을 타진하는 준거틀 탐색
- 현행 사회서비스 정책의 한계와 추가적 지원방안 모색 논의
-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추진과정에서 대안적 공급방식의 일환으로서 서비스 공급의 다차원성 고찰과 공유재로서 구현되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공급 가능성의 탐색

II. 연구내용

▣ 사회서비스산업특수분류체계(SSISC, 2013.11 통계청 고시)와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KSIC)를 연동하여 「전국사업체조사」 자료의 2차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업 전반의 산업적 위상을 조명하였음.

– 3,677천여 사업체 자료가 포함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12년 기준 226천여 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체 중 SSISC 기준 상담·재활서비스업(36.1%)과 돌봄서비스업(32.1%)이 전체의 68.2% 차지

– 그 밖에 건강지원 서비스업(27.4%),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16.7%), 사회참여지원 서비스업 (14.7%)의 순으로 관련 사업체 분포

– 대부분의 사업체가 SSISC 체계 상 일부 중분류 및 소분류에 편포되어 있음

- 상담·재활서비스업과 돌봄서비스업 중에서도 '2-1. 요양 및 돌봄서비스업'의 '2-1-6. 보육시설운영업'(17.0%)과 '3-1. 상담·재활서비스 의료업'(27%) 관련 사업체가 많았으며, '4-1-2. 의원'(25.7%), '6-2-1. 스포츠시설 이용 지원서비스업'(13.8%) 관련 사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사회서비스업은 최근 우리나라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대비 2012년 전국사업체 수 34만개 증가하는데 기여율이 높은 업종에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9.6%), 협회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0.8%), 교육서비스업(4.9%) 등 사회서비스 관련 분야가 대부분 포함되었으며, 종사자 수 증가분의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기여율은 16.1%로 전체 산업부문 중 가장 높았음.

– 전체 2,978천 여 명의 사회서비스업 종사자 규모의 65.8%가 여성 근로자이고, 종사자 규모는 사업체 분포와 유사하게 '상담·재활서비스업', '건강지원서비스업', '돌봄

서비스업' 순으로 많았음.

- 전체 종사자의 34.2%가 '교육 및 역량 개발 관련 사회서비스업' 분야, 그 중에서도 교육관련 서비스업인 '초등교육기관'(11.9%), '중등교육기관'(11.4%), '고등 교육기관' (8.4%) 종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교육관련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에 비해 종사자 수가 많았던 반면, '문화·체육 관련 시설 이용의 지원 서비스업'은 사업체 수(16.7%)에 비해 종사자(4.8%)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개별 사업체당 한정된 규모의 종사자가 고용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업 수행 기관의 기관장들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경험을 정책적 지향으로서의 산업화 측면보다는 현장에서 체득하는 산업화에 대한 인식 수준을 바탕으로 고찰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비스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음.

– 사회서비스업 산업화의 개념과 추진 방향

- 현장의 서비스 공급자들은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이들 의견에서 산업화의 개념을 대체로 '시장화'의 개념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으며, 산업화를 자유로운 시장 경제 방식으로 서비스가 시장에서 제공되고, 서비스 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음.

– 주요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이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주로 느끼거나 경험하는 서비스의 시장화 또는 산업화 관련 의견

- 사회서비스업의 산업화 추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엇갈린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었는데,
-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공급자들은 산업화 추진 정책은 사회복지의 기본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산업화를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오히려 사회서비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음.
- 반면에,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들은 사회서비스의 산업화를 보다 적극적이고 명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음.

–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인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 산업화의 장애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제공기관 등록제의 시행, 낮은 서비스 질과 인력 전문성 제고의 한계, 저소득층 중심의 대상자 한정에 따르는 수요 확산의 제약, 제한된 예산과 낮은 서비스 단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음.

▣ 관련 분야의 학계 또는 실천 현장의 전문가 표적집단에 대한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화의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준거 틀을 탐색해 보면서, 산업화 정책 지향이 당분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을 때, 산업화의 장애요인과 이를 제거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비즈니스 모델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타진하는 준거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용자 관련 목표시장의 구성, 제공기관의 핵심가치, 제공기관 및 인력의 핵심역량,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가치네트워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음.

비즈니스모델의 구성요소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사회서비스 산업화 진단의 준거틀
목표시장 (이용자 관련)	•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비중 증가 • 전체 사회서비스 매출 대비 일반 이용자 구매율 증가 • 사회서비스 재 구매율 증가 • 사회서비스에 대한 일반인 이용자수 증가 • 사회서비스의 이용자의 선택권이 강화
핵심가치 (제공기관 관련)	• 서비스 제공기관 중 민간 공급자의 비율 증가 • 서비스 품질의 최소기준 등의 서비스 체계성 마련 • 서비스 상품의 생산과 판매실적 증가 • 구매자가 지불 가능한 서비스 가격 • 구매 유발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 품질의 지속성 • 해당 서비스가 동일한 가격에 일반 시장에서 구매 가능
핵심역량 (제공기관의 경영능력 및 제공인력 관련)	•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기준과 능력이 마련 • 조직구성원에 대한 처우 등 노동관계법 준수 • 기업회계에 따른 세무행정 및 재무제표가 공개 등 운영 투명성 확보 • 사회서비스 영역의 고용창출 규모 증가 • 사회서비스 제공기업의 수 증가 • 제공인력의 직무가 체계화
가치네트워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관련)	중앙 및 지역차원의 서비스 조정체계가 구축 PPP(Public-Private-Partnership)를 확보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의 역량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기획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법적 권한과 조직적 능력 사회서비스 개발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침이 탄력적으로 적용

▣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대안적 공급방식을 제시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공급의 다차원성을 고찰하기 위해 비교사회적 관점에서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제도화 사례를 살펴보고 지역공동체의 대안적 가치를 고찰하였음.

– 사회서비스 공급 방식은 사회정책의 역사적 발전경로의 제약, 노동시장의 구조, 여성의 지위와 경제활동 참여수준, 민간과 공공부문의 서비스 제공 역량, 그리고 복지혼합의 구성에 따른 결과이므로 산업화가 가지는 의미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것임.

Ⅲ. 정책제언

▣ 사회서비스 산업화 추진의 주요 장애요인은 서비스 본연의 특성이 갖는 한계와 함께 각종 규제, 서비스 구매력의 부족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인식부족, 수요확충의 한계와 제공조직 및 인력의 한계, 서비스 다양성 제약 등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정책제언은 다음 표를 통해 제시하였음.

관련 쟁점 분야	구체적 정책제언
이용자 확대	• 현재의 저소득층 편중설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대상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용자 선정기준에 있어 소득수준 외의 욕구수준 또한 함께 고려하여 유효서비스 이용자 규모 및 다양성을 확대해야 함 • 일반이용자와 바우처이용자의 서비스 가격을 따로 책정하여 차등적으로 부가함 • 수요자들이 사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하고 저소득층에 한정적인 복지로 인식하는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
민간영역 사업 참여 촉진	• 취약계층대상 최저수준 사회서비스는 공공부문의 공급확대를 우선적으로 하고, 광범위한 대상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서비스는 민간부문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함 • 특수욕구에 대해서는 일반 시장이나 비공식적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교육기관들이 사회서비스 인력 공급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요인 해소 등 효율성을 추구함
정부지원 확대	• 사회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세제지원 • 개인 특성에 따라 이용가능한 지원액을 설정한 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별 사회서비스 계좌 개발 • 사각지대에 있는 수요자에게 사회서비스 구매금액 지원을 늘리는 등 과감한 공공투자를 통해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함 • 농산어촌에 대한 특례규정을 만들어 복지사각지대를 줄임 • 사회서비스 벤처기금을 조성하고 창업자금을 지원 •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등 산업진흥정책을 수립 • 사회성과채권과 같은 새로운 재원을 마련

정부 관리감독 강화	• 본인부담금 대납사례 등 시장에서의 도덕적 해이에 대응하는 정부규제를 시행 •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양성을 표준화하고 국가차원에서 자격 관리 • 광역자치단체 중심의 사회서비스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서비스 종류와 유형별제공기관 수, 인력조정,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유도 • 지자체 내 전담조직, 전담과가 있어서 책임을 구현하는 행정조직을 구성함 • 사회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표준을 확립하고 표준임금체계를 마련 • 시장에 대한 진입규제와 가격규제는 정보비대칭 상황을 고려할 때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허술한 제공기관 등록기준은 품질저하의 근원적인 원인을 제공하므로 제공기관의 등록기준을 강화 • 정부 관계자들의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제고함
사회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발굴하고 욕구상담, 필요서비스를 설계하는 체계마련 • 산업화가 유망한 서비스를 집중 발굴하고 전략적, 혁신적으로 지원 • 전국의 지역 사업지원단에 대한 장기적으로 지원과 육성 • 서비스 품질 우수기관에 대해 인증하는 시스템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문제 해소	• 근거리 지역을 묶어 서비스 제공인력을 파견하는 제도를 통해 자격조건 취득자 확보에 따른 어려움 해소 • 제공인력 등록제로 전환하여 제공인력관리를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 • 서비스 공급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구체적인 인력정책 마련 • 사회서비스 전문자격증 제도 신설
공공 및 사회적 경제영역의 참여 확대	• 공공서비스 제공기관을 확충하여 민간 제공기관에 대한 견인 역할 담당 • 사회서비스에 대한 공적 책임 확대 및 관련 공공 인프라의 확충 • 공공 공급자 확대와 관리책임 강화를 통해 서비스 성과 관리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 공동체의 시도를 활성화를 위한지원강화 • 사회적 경제영역의 서비스 제공기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규제완화	• 중앙정부는 각종 관리·규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하고 큰 틀에서만 제공기관에 대한 점검 시행 • 서비스 기준정보를 최소한의 품질기준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재량권을 인정하는 방안 마련

▣ 한편 공유재로서 사회서비스 의미를 재해석하고 산업화의 정책적 대안으로서 지역공통체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의 공급의 가능성을 탐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제언으로 마무리하였음.

– 적극적 복지, 생태주의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공인프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산과 사회투자 및 사회자본 창출을 위한 사회제도로서 사회서비스를 재위치할 필요성을 제안하였음.

– 특히 지역사회 기반의 공동체적 발전이 지역단위의 자활·자립을 강조하는 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집합적 수준에서 공동체의 안녕을 유지·증진하고, 개별 인구집단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인적자본, 조직자원,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을 촉진해야 할 것임.

– 이는 탈중앙화와 지역공동체의 활성화,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역사회 책임분담을 포함하는 사회서비스 거버넌스의 변화를 요구하는 바, 사회서비스의 제도의존성을 벗어나 새로운 거버넌스의 구축이 모색,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수시)
2014-07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care Industry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대중
공동연구자 • 김대은·하솔잎·이정아

Ⅰ. 연구목적

▣ 최근 국민의료비 급증세와 더불어 의료서비스 산업 부문의 환경변화는 의료서비스 공급 측면에 새로운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

–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그동안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충분한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도 미흡

▣ 국민들의 니즈 변화와 최근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육성 방안 검토 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 의료와 정보기술(IT)의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개척 및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검토 필요

2. 연구내용

▣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 의료기관의 자본시장 참여 필요성 검토 및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과 관련한 쟁점사항 등을 검토

•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160병상 미만 종합병원의 자본구조가 가장 취약,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등 자본 조달 개선을 위한 정책은 실제 의료기관의 자금 필요도와, 의료기관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우리나라 법인병원은 설립자가 법인을 해산하게 되면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이에 따라 취약한 자본구조와 수익구조를 보이는 병원의 경우 시장에서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나 시장에서 이러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

- 미국의 경우에는 영리병원의 설립과 운영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기업 간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영리병원에 대해서도 비과세 채권 발행시장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신용평가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우리나라와 제도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병원 간 합병은 그리 활발하지 않으나, 의료법인의 합병이 일본 의료법 제57조에서 인정받고 있음.

▣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 국내외 원격의료 추진 현황 및 원격의료의 효용성, 향후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

- 우리나라는 2002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사간 원격의료를 도입하였으며, 의사-환자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 2014년부터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임상적 안전성, 유효성, 유용성(만족도 등)의 평가를 진행
- '의사 대 환자' 원격의료는 1990년대 후반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있음. 미국 메디케어의 경우 원격의료 보험 적용분야를 지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음. 일본의 경우 원격진료는 직접 대면진료의 보완적 성격
- 선행연구를 보면 원격의료를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에 다라 비용효과적인 분야가 존재하며, 특히 정신 및 불안장애 등 심리치료, 일부질환 홈 모니터링(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관리, 건강행태관련 프로그램(금연, 운동 등)에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짐.

▣ 의료서비스 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 의료서비스 무역 모드(mode)별 주요 쟁점 및 정책방향 논의, Richard Smith(2006)의 모형을 근거로 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무역제한지수 및 무역개방 수준을 지수화함.

- 의료서비스 국경 간 공급(mode 1), 의료서비스의 해외 소비(mode 2),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주재(mode 3), 의료서비스의 상업적 주재(mode 4), 자연인의 이동에 의한 의료서비스 공급(mode 4)의 네 가지 모드로 나누어 의료서비스 무역 제한지수를 산출
- 모드별 우리나라의 정책과 규제를 분석하여 Richard Smith(2006)가 제안한 기준으로 무역제한지수를 산출한 결과 0.166점으로 산출

• Richard Smith(2006)가 제안한 기준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Mode (3)에서는 적용 범위를 국가 전체가 아닌 경제자유구역으로 제한하였기 때문에 산출 기준과 정책 해석 방식에 따라 지수는 달라질 수 있음.

Ⅲ. 정책제언

▣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관련 현안과 대응방안

– 단기적으로는 의료기관의 필요도와 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심층 연구가 우선되어야 함.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이는 의료기관에게는 의료기관의 합병절차 등에 대한 전향적 제도 개선을 통해 exit mechanism 제공 필요

– 장기적으로는 의료법인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수익사업도 인정하고 채권발행도 인정하는 일본의 '사회의료법인' 제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법인제도 도입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원격의료 현안과 대응방안

– 정보기술(IT)과 의료의 접목은 피할 수 없는 트렌드로, 단계적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허용범위와 보험 수가 산정을 위해서는 사업의 경제성 및 임상적 유용성에 관한 근거데이터 창출이 필요

–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도입 시 원격처방전 발급의 허용 및 의약품의 원격조제·판매·배송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의료서비스 무역 현안과 대응방안

– 의료서비스 무역과 관련한 향후 정책 방향으로 의료관광의 경우 선진국이 갖지 못한 틈새시장 경쟁력을 고려한 전략 마련이 필요

–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있어서는 진출초기 상대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신뢰관계·인적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국가의 성공사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병원 플랜트 수출과 같은 하드웨어 중심적 접근에서 교육이나 컨설팅, QI 지원 등 소프트웨어 중심적 접근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필요

협동연구
2014-02

복지와 기술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A Study on the System Building for Successful Application of Welfare Technology to Welfare System

연구책임자 • 유근춘
공동연구자 • 서지영·김정일·김태은·최요한·정지원·김선희·이동우·이재성·조규진

Ⅰ. 연구목적

▣ 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근본적인 당면 문제 중의 하나는 복지 요구가 환경변화에 따라 다양해지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복지 요구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은 무한정 증가할 수 없다는 점임.

– 이러한 복지재정의 한계와 양적 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의 충돌문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의 저성장기조 정착 등 미래의 주요 복지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는 과학기술의 복지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제한된 자원 하에서 복지환경 변화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에 선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응을 가능하게 함을 목표로 함.

▣ 국민들의 니즈 변화와 최근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 육성 방안 검토 뿐 아니라, 의료와 복지, 의료와 정보기술(IT)의 융합 등 새로운 시장영역개척 및 의료서비스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 검토 필요

Ⅱ. 연구내용

▣ 복지기술의 의미, 정의, 역할

– 복지기술은 저출산 고령화와 경제의 저성장 기조의 정착 등 미래 복지환경 변화가 가져올 양적·질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제한된 재원의 충돌문제에 대해 의미 있는 대응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짐.

– 복지기술이란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시스템의 관점에서 보면 투입하는 자원, 운영, 재원, 조직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무형의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음.

– 과학기술 이용의 목적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보건복지서비스 생산 혹은 전달과 관련되는 경우와 함께 그러한 생산을 보조하는 경우도 포함함.

– 복지기술의 역할은 소극적인 취약계층의 급여제공의 성격을 넘어서서 복지기술의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확대되었음.

• 이에 따르면 개인 삶의 질 향상 외에도 경제적 역할, 혁신적 역할 그리고 작업환경의 개선 역할도 함.

▣ 복지수요와 복지기술의 적용 현황과 전망

– 복지환경의 주요한 변화로서 저출산 고령화를 보는 경우 주요한 복지수요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자 돌봄 서비스 증가, 장애인 독립생활 지원, 여성건강증진/관리를 통한 건강한 임신과 출산지원 그리고 일상적 건강증진/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저감 등의 복지수요가 유도됨.

• 이러한 복지수요를 가져오는 주요 인구구조의 변화가 북구선진국과 우리나라에 공통으로 있어 동일한 복지수요와 문제를 겪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다섯 가지 복지기술과 결합하는 복지요구를 분석한 결과도 건강(health)과 돌봄(care)으로 압축되어 상기한 문헌분석과 일치함.

– 통신 지원, 보조 기술, 일상생활 지원, 질병 모니터링, 원격진료, 재활 기술, 오락, 사회적·감정적 지원 등의 목적을 위한 기술과 이들이 충족시키는 기능을 수요로 보는 복지기술과 수요의 분류에 따라 문헌과 인터넷에서 찾아본 복지기술의 적용사례들을 보면 이미 많은 사례들이 적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적용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복지기술과 복지의 미래

– 미래 복지환경과 복지기술 및 복지미래는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한 복지수요의 양과 질의 증가(증가하는 요구)와 반대로 이에 대한 복지인력의 감소를 가져오는 저출산의 문제(감소하는 자원)는 동일 자원투입에 대해 동질의 더 많은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

술의 기본적 기능을 필요로 하며, 복지기술의 발전을 요구함.

– 이러한 복지기술이 개인과 복지인력의 삶의 질과 독립성을 향상시키면서 동시에 비용효과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면 복지국가의 유지가 가능할 것임.

Ⅲ. 정책제언

▣ 복지기술 적용 성공의 조건

– 복지에 대한 복지기술의 적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함.

• 첫째로 강조할 점은 복지에 있어 기술이 강조되는 이유는 효율성 상승으로 인한 비용절감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의 질을 낮추지 않는다는 점임.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복지기술의 선택이 필요함. 이를 통해 향상된 삶의 질과 더 좋은 서비스를 개인과 복지인력에게 제공하는 것과 자원의 절약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

• 둘째로 복지기술이 경제에 기여하려면 시장의 규모를 키우는 노력이 필요함. 국내적으로는 공공급여에 편입되는 것이 시장의 규모를 확보하는 기본적인 방법임. 이를 위해서는 재정을 고려해 비용효과성 강조되어야 함. 국제적으로는 공동의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을 통해 시장의 규모를 크게 할 수 있음. 북구의 경우는 비슷한 복지모델, 언어 등을 배경으로 북구 내에서의 국제공동시장을 창출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고령화는 막대한 시장규모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셋째로 복지에 있어 공공의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함. 복지기술에서 유용한 결과를 얻으려면 적절하고 효과적인 동기, 합병 그리고 변화관리 등이 필요함. 이는 외부재원조달 보다 공공의 지역자치단체가 자신의 재원을 직접 투자할 용기가 있을 때 보다 잘 달성될 수 있음.

• 넷째로 복지기술과 관련된 구조화된 작업흐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함. 이는 복지기술을 실행함에 있어 가능한 경제적 이익을 파악하고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임. 이러한 노력이 구조화 될 때 성공적인 실행의 확률이 최대화 되고 복지기술 작업에 투자된 자원에서의 수익이 최대화 됨.

• 다섯째로 공공영역에서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해서 복지기술의 타당한 평가와 관련

작업의 기록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함. 너무 많은 프로젝트와 기술시험은 타당성이 없는 평가보고와 상업적 사례들을 낳음. 따라서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복지기술의 효과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필요한 평가가 계획되어야 함.

- 여섯째로 중복과 그로 인한 자원낭비를 피하기 위하여 평가보고나 상업적 사례 등에 관한 경험을 교환하는 체계가 필요함.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이러한 경험의 교류가 잘되면 자원이용이 적정화 됨. 협동과 경험의 교류는 공공에 의해 구조화된 작업흐름과 철저한 평가를 위한 재원이 투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 쉽게 달성될 수 있음.

▣ 연구개발 전략

– 복지수요의 분석과 기존의 연구개발 동향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강화와 연구개발체계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개발 이슈와 정책과제가 도출 되었음.

분 류	연구개발 이슈	정책 과제
연구개발 강화	건강증진/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IT를 활용한 일상적 건강관리 활성화
		건강증진/관리 방식의 다양화 및 효과검증 연구
	사용자 경험(UX) 기반 기술혁신 촉진	리빙랩 확대
	저출산 극복과 여성건강을 위한 연구개발	이상 임신 발병기전 연구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조산과 감염을 예방하는 조기진단
		내분비계 이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 관리를 위한 연구
연구개발 체계 개선	보건복지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의 연계체계마련	보건복지 주요 정책에 과학기술 연구개발 포함
		수요지향적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촉진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수요지향적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	지식/기술/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개발 플랫폼 구축
	혁신을 촉진하는 평가시스템 구축	기술영향평가 강화

*주요용어: 복지환경변화, 복지수요증가, 제한된 재원, 비용효과성, 복지기술, 연구개발 체계, 복지와 기술 융합체계

Ⅲ. 2014년 연구성과

02.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 분석
-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 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생애말기케어의 사회적 가치 측정
-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 대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방안
-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14-07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Analysis of policy on the adoption and diffusion of new healthcare technology

연구책임자 • 박실비아
공동연구자 • 박은자·채수미·이예슬

Ⅰ. 연구목적

▣ 의료기술이 의료서비스의 제공 과정과 의료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확산, 사용되는 과정은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음

–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를 포함하여 의료기술 전반을 대상으로 그것의 시장 진입과 확산을 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에 대한 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모색이 필요함.

▣ 이 연구는 우리나라 및 외국의 신의료기술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 현황을 고찰하고 신의료기술에 관한 세계적인 정책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망하여 향후 의료기술의 발전을 통해 의료의 질 향상과 자원 이용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료기술 관련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기술' 및 '의료기술'의 개념으로부터 '신의료기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혁신의 확산에 관한 이론을 토대로 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대해 고찰

– 일반 산업에서의 혁신의 확산에 비추어 의료부문에서 독특하게 관찰되는 신기술의 도입과 확산의 양상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논함.

▣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국내 정책 현황을 고찰

–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행위를 포함하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을 결정하는 제도와 건강보험 급여를 결정하는 제도, 신의료기술의 시장 도입 이후 확산 및 재평가에 관한 제도 현황을 조사하고 최신의 동향과 주요 정책 이슈를 검토

▣ 신의료기술의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외국의 정책 현황을 고찰

– 영국, 미국, 호주, 캐나다를 대상으로, 국가별 의료보장체계 하에서 신의료기술의 도입을 결정하는 메커니즘과 기술의 확산에 관한 정책, 기존 기술의 재평가를 통한 투자 중단 결정에 관련된 정책 현황 등을 조사

▣ 국내 및 국외의 신의료기술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정책을 종합하여 최근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을 분류하고 각각에 대해 집중 분석

– 시장 진입 의사결정의 신속화 경향

– 시장 진입 결정과 급여 결정의 연계 동향

– 위험분담을 통한 관리된 급여체계

– 신의료기술의 시장 도입 이후 재평가

Ⅲ.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신의료기술의 도입 결정에 정책적 자원 투입이 집중해 있으며, 도입 이후 적정 사용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적 관리는 미흡함.

– 의료전달체계의 미확립과 행위별 수가제에 의한 지불제도, 비급여시장 등 공급구조적 요인은 의료기술의 통제되지 않은 확산 및 그로인한 의료비의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의료기술에 의한 의료의 질 향상과 의료비 지출의 합리화를 추구하기 위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의 시장 도입 결정 이후 기술의 사용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적정 사용을 위한 제도적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도입된 기술에 대한 재평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은 기술에 대한 정책만으로는 확보되기 어려우며, 의료공급구조와 지불제도의 개혁이 함께 이루어져서 의료공급자의 자발적 의료공급행태가 의료기술의 적정 사용의 방향으로 변화하도록 해야 함.

연구보고서
14-09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The current status of life-style related diseases and policy directions

연구책임자 • 정영호
공동연구자 • 고숙자·박은자·전진아·이난희·최지희·이저아·이예슬·김대은·권진원·손선주

Ⅰ. 연구목적

▣ 생활습관병 실태 분석

– 만성질환과 정신질환의 복합질환(Comorbidity) 현황 및 이환(transition) 패턴, 복합질환자들의 의료이용실태를 분석

– 고혈압과 당뇨병의 치료순응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

–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생활을 위한 욕구와 실천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위험선호체계를 분석

▣ 건강증진 및 생활습관병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제시

Ⅱ. 연구내용

▣ 생활습관병 실태

– 2001년부터의 건강보험통계자료를 활용하여 ARIMA모형을 적용하여 2023년까지 생활습관병을 예측한 결과, 생활습관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함.

–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환자는 전체의 4.1%,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전체의 4.1%인 것으로 나타남.

–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32만원 정도이지만, 합병증을 수반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67만원으로, 이는 약 2배의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은 나타남.

▣ 고혈압·당뇨 환자의 복합질환 현황 및 질환간 이환패턴 분석

– 고혈압과 당뇨는 심뇌혈관 질환의 선행질환으로서(박민정 외, 2010), 치료지속률이 약 25% 정도로 낮게 나타나는 질환임.

–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인 고혈압과 당뇨 환자를 중심으로, 이들의 복합질환 현황 및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고혈압 및 당뇨 환자의 복합질환 이환 패턴을 파악함

– 고혈압과 당뇨 질환자가 다른 만성질환 혹은 정신질환을 보유한 경우를 복합질환 유병자로 정의하여 고혈압과 당뇨 환자의 복합질환 현황을 분석함.

– 의료이용일수와 의료비용으로 고혈압과 당뇨 단일 질환자와 복합질환자간 의료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함.

– 고혈압과 당뇨 복합질환자의 질환간 이환패턴은 해당 질환으로 처음 입원하기까지 걸린 기간 및 고혈압 및 당뇨의 주요 합병증으로 진단을 받게 되기 전에 어떠한 질환이 발생되었는지를 살펴봄.

▣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 고혈압

• 복약순응: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 평균은 3.59점이였고 71.9%가 약물치료에 순응하고 있었음.

• 건강행태: 84.8%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고 고위험음주를 하는 고혈압환자는 없었음. 16.9%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고 27.2%가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음.

• 고혈압환자의 24%가 치료순응(복약순응, 흡연하지 않음, 신체활동 실천)을 하고 있었음. 복약순응만 하는 고혈압환자는 6.5%, 복약순응을 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으나 신체활동을 안하는 고혈압환자는 37.3%였음.

– 당뇨병

• 복약순응: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는 평균 3.63점이었고, 당뇨병환자 중 72.7%가 복약순응 하였음.

• 건강행태: 약 81%가 현재 흡연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95%는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에 불과하며, 걷기 실천은 31.1%로 조사되었음.

- 당뇨병환자의 25.5%는 복약순응하면서 건강행태를 모두 실천하고 있었으며, 33.5%는 복약순응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으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

– 골다공증

- 복약순응: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는 평균 3.35점이었고, 62%의 환자가 약물치료에 순응하였음.
- 복약순응: 골다공증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소지율(MPR)은 평균 약 40% 정도 이며 MPR이 50% 이상인 환자가 약 15%였음.
- 건강행태: 96%가 현재 흡연을 하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이 고위험음주를 하지 않고 있었음. 반면, 신체활동에 대한 순응은 흡연, 음주에 비해 좋지 않았는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환자가 13.4%, 걷기 실천을 하는 환자가 24.8%였음.

– 당뇨병 관리에 대한 치료순응

- 대부분의 환자들이 당뇨병 치료제를 빼먹지 않고 꼭 먹는다고 밝혔으며, 약이 당뇨병 관리에 중요하다고 인식함.
- 반면, 당뇨병 치료제를 잘 먹지 않는 환자도 있었는데 약을 매번 먹지 않아 집에 남은 약이 많다거나, 절반밖에 먹지 않는다고 표현함.
- 일부환자는 식사량, 저혈당 증상에 따라 당뇨병 치료제를 임의대로 조절하여 복용하거나 약 복용을 중단하기도 함.
- 당뇨병환자들은 약 복용과 함께 식이요법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었으나, 상세한 식이요법 내용을 잘 알고 있거나 실천하고 있지는 않았음.
- 대부분 흡연의 중독성 때문에 금연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금연 대신 당뇨병 발병 이후 흡연량을 줄였다고 밝힘.
- 빈번한 술자리가 절주가 어려운 요인이었으나, 당뇨병환자라는 것을 밝힐 경우 주변의 배려로 절주를 할 수 있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되었음.
- 당뇨병환자들은 신체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으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걷기 외 근육운동 등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 인지-실천의 격차 발생요인 분석

– 건강위험행태와 개인의 위험선호체계의 관계

• 흡연상태별로 위험선호체계를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매일흡연자가 보다 위험선호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었음.

• 분석대상자의 음주수준이 가장 낮은 한달에 4회 미만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결과, 일주일에 1회~3회 정도 음주를 하는 경우의 위험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4회 이상 음주를 하는 그룹에서 위험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

– 만성질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 순응도와 개인의 위험선호체계와의 관계

•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는 가끔 복용하는 경우 또는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한 결과,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는 환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301이었으며, 고혈압 약을 가끔 복용하는 경우 또는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258이었음.

• 당뇨병 관리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끔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회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때에 매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응답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314이었고, 가끔 관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139로, 계수 간의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Ⅲ. 정책제언

▣ 복합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과제

– 환자 중심적 접근의 관점에서, 다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한 예로 기존 이루어지고 있는 보건소 단위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서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센터나 병원으로 연계하여 복합질환자들이 의료 및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 지역 사회차원에서,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다영역의 공조를 기반으로 한 사례관리 체계가 이루어져 만성질환 및 정신질환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합질환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훈련이 선행되어야 함.

–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 및 정신질환 관리체계 간 환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합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지원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것임.

▣ 의약품 복약 순응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

– 의약품 복약순응뿐만 아니라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행태 변화에 대한 치료순응이 향상되어야 함.

– 환자의 치료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의 적극적인 중재가 있어야 함.

– 환자에게 의약품 복용,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치료내용별로 구체적인 치료순응방법을 제시해야 하나 질환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는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함.

▣ 건강행태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 넛지는 사람들이 인지를 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는 인지-행동모형이 아니라, 인지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여건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생활하게 됨을 의미.

– 이와 같은 넛지의 자유주의적 개입은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서 개입에 따른 저항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사람들의 행태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변화 필요
- 사람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행태에 근거하여 합리성의 범주로 정책 대상자들을 이끌 수 있는 방식 도입 필요
- 정책수용성의 판단에도 인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위한 접근방식도입 필요
-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의 토대 마련 필요

연구보고서
14-09-01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 -건강행태-건강수준 경로 분석

A pathway analysis of health perception, health behavior and health outcome to reduce the lifestyle-related diseases

연구책임자 • **정영호**
공동연구자 • **고숙자**

Ⅰ. 연구목적

▣ OECD 보고에 의하면, 만성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장애와 사망의 주된 요인으로, 세계인구의 60%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음.

–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담을 유발하는 생활습관병은 주로 건강위험행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건강행태 변화를 위한 이론적 모형 고찰

– 생활습관병 실태 분석

– 행동변화 기제로서의 행동경제학 도입가능성 검토

– 인지-실천의 gap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

– 건강증진정책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Ⅱ. 연구내용

▣ 생활습관병 실태

– 주요 생활습관병 및 합병증 현황

•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환자는 전체의 4.1%,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 환자는 전체의 4.1%인 것으로 나타남.

•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는 전체의 15.6%이었으며, 합병증이 있는 고혈압환자는

전체의 3.9%이었음.

– 합병증이 수반된 생활습관병의 평균진료비 현황

• 합병증이 없는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약 32만원 정도이지만, 합병증을 수반한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연간 1인당 평균진료비는 67만원으로, 이는 약 2배의 진료비 부담이 있는 것은 나타남.

– 건강검진결과에 의한 위험도와 생활습관병과의 관계

• BMI 25이상인 비만자의 경우에 당뇨병 위험은 약 2.0배이었으며, 고혈압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당뇨병 위험은 약 1.5배정도인 것으로 나타남.

▣ 인지-실천의 격차 발생요인 분석

– 위험선호 측정을 위한 설문지 설계하여, 기대효용이론(Expected Utility Theory: EUT)을 토대로 대적 위험회피계수(Coefficient of Relative Risk Aversion: CRRA) 산출

• 위험회피계수(CRRA)은 0.258로, 개인의 선호가 위험회피적인 것이었음.

– 건강위험행태와 개인의 위험선호체계의 관계

• 흡연상태별로 위험선호체계를 분석한 결과, 비흡연자에 비해 매일흡연자가 보다 위험선호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었음.

• 일주일에 1회~3회정도 음주를 하는 경우의 위험선호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았음.

▣ 만성질환자들의 만성질환관리 순응도와 개인의 위험선호체계와의 관계

– 고혈압 환자들의 고혈압관리 순응도와 개인의 위험선호체계와의 관계

•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는 경우는 가끔 복용하는 경우 또는 복용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위험회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험회피계수를 추정한 결과, 고혈압 약을 매일 복용하는 환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301이었으며, 고혈압 약을 가끔 복용하는 경우 또는 복용하지 않는 환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258이었음.

– 당뇨병 환자들의 당뇨병관리 순응도와 개인의 위험선호체계와의 관계

• 당뇨병 관리를 매일 규칙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가끔 관리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위험회피적인 선호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 때에 매일 당뇨병을 관리하는 응답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314이었고, 가끔관리한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위험회피계수는 0.139로, 계수 간의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났음.

Ⅲ. 정책제언

▣ 건강행태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 모색

– 넛지는 사람들이 인지를 통하여 올바른 선택을 해야한다는 인지-행동모형이 아니라, 인지와는 관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군가가 설계해 놓은 여건 속에서 선택을 하면서 생활하게 됨을 의미.

– 이와 같은 넛지의 자유주의적 개입은 사람들에게 강제하기 보다는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선택을 하도록 함으로서 개입에 따른 저항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

• 사람들의 행태를 직접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서의 변화 필요

• 사람들의 비합리적 의사결정 행태에 근거하여 합리성의 범주로 정책 대상자들을 이끌 수 있는 방식 도입 필요

• 정책수용성의 판단에도 인지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을 파악하고 움직이기 위한 접근방식도입 필요

•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고 희망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식의 토대 마련 필요

연구보고서
14-09-02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Prevalence of Multimorbidity and Transitional Patterns of Chronic Diseases among Korean Adults

연구책임자 • 전진아
공동연구자 • 손선주·이난희·최지희

Ⅰ. 연구목적

▣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 및 복합질환자의 의료이용실태 분석, 질환 간 이환패턴 분석

– 복합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손실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를 위한 사전 연구로서 의의

– 복합질환자의 보건복지 수요와 필요를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 마련

▣ 복합질환에 대한 국내 내응체계 검토

Ⅱ. 연구내용

▣ 복합질환 개념 이해 및 선행연구 고찰

• 복합질환 정의: 복합질환은 '공존하는 또는 연구대상인 기준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의 임상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모든 개별적인 추가적인 임상적 실체' 라고 정의함 (Feinstein, 1970).

• 만성질환간 복합 선행연구: 50대 만성질환자들이 평균 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60대 이상의 만성질환자들은 평균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정영호 외, 2013). 해외에서도 노인 중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약 55~98%에 이른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일수록,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가질수록 복합질환 유병률이 높게 나타남(Marengoni et al., 2011).

▣ 복합질환 현황 파악

– 19세 이상 성인의 신체만성질환 간, 정신만성질환 간, 신체만성질환과 정신만성질환의 복합질환 현황 파악

• 외래환자의 경우, 고혈압,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근골격계질환, 알레르기, 수면장애 등 중증도가 낮아 외래에서의 치료가 가능한 질환이거나, 외래에서 잘 관리되었을 때 입원율을 낮출 수 있는 외래 민감성질환간 복합이 높은 순위를 차지함.

• 반면 입원환자의 경우, 암, 뇌졸중, 섬망·치매·기억상실 및 기타 인지장애, 그리고 물질관련 장애 등 중증도가 높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 간 복합 순위가 높음.

– 19세 이상 성인 중 고혈압, 당뇨, 기분장애, 알코올사용장애 환자의 복합질환 현황 파악

• 전체 고혈압 환자 중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합질환자는 전체의 95.6%, 전체 당뇨병 환자 중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합질환자가 전체의 97%, 전체 기분장애 환자 가운데 다른 질환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복합질환자는 전체 환자의 98%를 차지하는 등 복합질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음.

▣ 복합질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실태 분석

•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의료이용일수는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가 34.9일로 가장 높으며, 만성질환 간 복합(26.0일), 정신질환 간 복합(18.8일), 단일 정신질환(10.2일), 단일 만성질환 (8.0일)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연간 1인당 평균 외래 본인부담금은 정신질환 및 만성질환 간 복합질환자가 가장 높으며(232,009원), 정신질환 간 복합(209,726원), 만성질환 간 복합(152,480원), 단일 정신질환(118,506원), 단일 만성질환(57,529원) 순으로 높음.

▣ 복합질환의 질환간 이환패턴 분석

– 고혈압, 당뇨 외래 신(新)환자의 질환간 이환패턴 분석

• 고혈압 신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다빈도를 살펴본 결과,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요통의 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무릎관절증, 만성폐쇄성폐질환, 류마티스관절염, 고도시력감퇴가 뒤를 이음.

• 당뇨 신환자에서 발생하는 질환의 다빈도 질환은 만성위염/위식도역류질환, 알레르기, 만성요통의 순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고혈압, 고도시력감퇴 등이 뒤를 이음.

▣ 국내외 복합질환 대응현황 검토

Ⅲ. 정책제언

▣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체계 제안

– 대상 선정

• 연구 결과, 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의료급여대상자일수록), 여자일수록 복합질환을 가질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복합질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는 초기단계에서는 저소득가구의 고령층을 대상으로 접근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임.

– 질환에 따른 관리

• 질환 간 조합 분석 결과, 치매를 포함한 인지장애가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질환과 조합되는 경우가 외래 및 입원 환자 모두에게서 자주 발견되었음. 특히 여성 및 65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이러한 조합이 높은 순위에서 나타났으며, 외래보다는 입원 환자에게서 이러한 경향성을 더 자주 볼 수 있었음. 따라서 기존의 고혈압 및 당뇨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체계 내에서 65세 이상의 노인 여성으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서비스 전달체계

• 환자 중심적 접근의 관점에서, 다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으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케어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통합적 케어가 가능하도록 만성질환 관리체계 및 정신질환 관리체계 간 환자에 대한 정보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복합질환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 및 평가가 이루어져야함.

연구보고서
14-09-03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Treatment compliance of chronic disease

연구책임자 • 박은자
공동연구자 • 이예슬·이정아·권진원

Ⅰ. 연구목적

▣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유병률 상승으로 의료비가 증가하면서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

▣ 의사의 통제 하에 치료가 진행되는 급성질환과 달리 만성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치료내용 및 권고사항(의약품 복용, 금연, 운동, 식이 등)을 환자가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임.

– 고혈압을 치료·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복용과 함께 소금 섭취 감소, 체중감소, 절주, 신체활동 증가 등이 요구됨.

– 당뇨병을 치료·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약품 복용과 함께 환자의 혈당 자가관리, 식이조절, 신체활동 실천 등이 필요함.

▣ 인구노령화 등으로 향후 만성질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만성질환자의 치료순응을 개선하여 효과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만성질환의 치료순응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음.

– 만성질환의 치료순응 현황 파악

– 만성질환 치료 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도출

II. 연구내용

▣ 고혈압환자의 치료순응 현황

– 2011년도 한국의료패널자료 분석결과

- 복약순응: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 평균은 3.59점이였고 71.9%가 약물치료에 순응하고 있었음.
- 건강행태: 84.8%가 현재 흡연을 하고 있지 않았고 고위험음주를 하는 고혈압환자는 거의 없었음. 16.9%가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고 있었고 27.2%가 걷기를 실천하고 있었음.
- 고혈압환자의 24%가 치료순응(복약순응, 흡연하지 않음, 신체활동 실천)을 하고 있었음. 복약순응을 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으나 신체활동을 안하는 고혈압환자는 37.3%였음.
- 고혈압환자의 치료순응(복약순응+비흡연+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순응을 할 확률이 낮았음.

▣ 당뇨병환자의 치료순응 현황

– 2011년도 한국의료패널자료 분석결과

- 복약순응: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는 평균 3.63점이었고, 당뇨병환자 중 72.7%가 복약순응하였음.
- 건강행태: 약 81%가 현재 흡연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으며, 95%는 고위험음주를 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음. 반면, 중증도 이상 신체활동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7.7%에 불과하며, 걷기 실천은 31.1%로 조사되었음.
- 당뇨병환자의 25.5%는 복약순응하면서 건강행태를 모두 실천하고 있었으며, 33.5%는 복약순응하면서 흡연을 하지 않으나, 신체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
- 당뇨병환자의 치료순응(복약순응+비흡연+신체활동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주관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치료순응을 할 확률이 낮았음.

– 당뇨병환자의 치료순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질적연구결과

• 환자요인

■ 발병기간: 당뇨병 발생 초기에는 적극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정보를 찾았으나 발병 후 시간이 지나면서 당뇨병 관리를 포기하거나 본인의 생각대로 임의로 관리하였음.

■ 스트레스: 식이조절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이며, 금연을 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도 스트레스 때문임.

■ 생활환경: 본인이 당뇨병환자라는 것을 숨기는 당뇨병환자들은 직장에서의 점심시간, 회식시간, 친구모임 등에서 식이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부적절한 식이가 당뇨병에 나쁜 영향을 미칠까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음.

■ 당뇨병 관리방법에 대한 지식: 신체활동을 하고 싶어도 상세한 운동방법을 알지 못해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보건소 등에서 당뇨병환자 대상 운동프로그램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었음.

• 의료기관 차이

당뇨병환자들은 당뇨병전문병원과 동네병원에서 하는 당뇨병 관리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당뇨병전문병원에 가기를 원하는 환자 중 일부는 의료비 부담과 긴 대기시간 때문에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음.

• 진료환경

당뇨병 환자들은 의사 등 의료진에게 당뇨병 관리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물어보지 못하는 이유로 짧은 진료시간을 언급하였으며, 의료진과의 소통이 부족하여 당뇨병 관리방법뿐만 아니라 저혈당 증상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상담하지 못하고 있었음.

▣ 골다공증환자의 치료순응 현황

– 2011년도 한국의료패널자료 분석결과

• 복약순응: MMAS로 측정한 복약순응도는 평균 3.35점이었고, 62%의 환자가 약물치료에 순응하였음.

• 건강행태: 96%가 현재 흡연을 하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이 고위험음주를 하지 않고

있었음. 반면, 신체활동에 대한 순응은 흡연, 음주에 비해 좋지 않았는데,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을 하는 환자가 13.4%, 걷기 실천을 하는 환자가 24.8%였음.

– 2010-2011년도 건강보험청구자료(HIRA-NPS) 분석결과

• 복약순응: 골다공증치료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약물소지율(MPR)은 평균 약 40% 정도 이며 MPR이 50% 이상인 환자가 약 15%였음.

Ⅲ. 정책제언

▣ 건강행태 변화에 대한 치료순응 개선

– 의약품 복약순응뿐만 아니라 금연, 신체활동 실천 등 건강행태 변화에 대한 치료순응이 향상되어야 함.

• 고혈압환자와 당뇨병환자의 의약품 복약순응도는 약 72%이나 금연, 신체활동 실천에 대한 치료순응은 낮음.

• 고혈압환자의 72%, 당뇨병환자의 46%는 의약품 복용에 대해서는 순응하면서도 건강행태 실천은 하고 있지 않음.

– 생활습관병 환자를 대상으로 질병 관리를 위한 금연, 절주, 신체활동 실천의 중요성을 교육·홍보하고 행동 변화가 어려운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한 FGI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금연, 신체활동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흡연의 중독성, 구체적인 신체활동 실천방법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행동을 변화하지 못하고 있었음.

▣ 환자의 치료순응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중재 강화

– 환자의 치료순응을 . 실제 치료순응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에서 당뇨병환자의 복약순응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연구에서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지 않거나 2회분을 복용하는 경우가 나타남

– 또한, 진료시 의료진이 자세하고 적극적으로 금연방법과 신체활동 실천에 대해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시 금연클리닉, 운동프로그램으로 환자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통합적인 치료순응 프로그램 제공

– 생활습관병의 치료순응을 높이기 위해서는 환자에게 구체적인 치료순응방법을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함.

• 환자가 생활습관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약순응, 건강행태 변화, 혈압/혈당의 자가측정 등을 모두 실천해야하기 때문에 환자 관점에서 이를 모두 포함한 서비스 제공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함.

▣ 환자의 치료순응을 유도하는 환경 조성

– 환자요인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요인, 보건의료체계 등이 생활습관병 환자들의 치료순응에 영향을 미침.

• 당뇨병환자의 FGI에서 짧은 진료시간이 치료순응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생활습관병의 치료순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환자의 치료순응을 유도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환경, 생활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4-22-09

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The correspondent strategy development of health care services for older persons with a view to health status cycle

연구책임자 • 선우덕
공동연구자 • 김혜련·고숙자·이소영·김동진·김철웅·윤종률·남효정

Ⅰ. 연구목적

▣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노인계층의 건강상태가 비노인계층에 비해 나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료적 치료욕구가 높아서 의료기관방문이 빈번해지고, 인위적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의 중심이다 보니, 의료기관의 재정운영상 이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료서비스가 개발되고 다양한 진료가 다량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 한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질병위주의 완치 및 관리목적으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의 회복,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능장애가 고착화되어 장기요양상태로 전환되어 장기요양비용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계층의 건강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보건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여기에서는 질병상태로부터의 완전한 탈피(완치)나 질병발생의 사전적 예방 또는 지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건강상태를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신체적 기능상태의 악화를 지연 및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Ⅱ.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의 개념 및 집단분류를 시도하였음.

– 노년기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볼 때, 건강노인집단, 허약노인집단 및 장애노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임. 이는 다양한 허약지표가 개발되어 있지만, 일차적으로 가용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ADL과 IADL 지표만으로도 집단분류에 적용할 수 있었고, 각 집단별로 건강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차이가 있었다는 것임.

▣ 제3장에서는 건강상태별 노인집단의 건강수준 실태를 비롯하여 각 집단별 건강상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건강집단, 허약집단 및 장애집단별로 결정요인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결정요인간 중요도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음.

• 즉, 건강노인집단과 장애노인집단은 일반적인 만성질환관리와 투약관리, 허약노인집단은 추가적으로 우울증관리에 좀 더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제4장에서는 현재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능재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현재 거의 대부분이 건강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허약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제5장에서는 노인보건사업의 개선방안을 사업부문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Ⅲ. 정책제언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건의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향후 노인보건사업체계를 구축할 때, 기본적인 전략으로 ①지역사회기반 체계(community-based care system)의 구축, ②일차케어(primary care)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 ③건강 기능자립지원(functional independence)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둘째,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체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허약노인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 도구는 일차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전국조사가 이루어질 때, 설문문항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고, 노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에 의무적 적용항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선별된 허약노인에게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조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운동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일차적으로 이들 계층은 체력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측면에서는 모든 노인계층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허약노인에게 치중하여야 할 보건의료적 서비스가 약물복용관리와 우울증관리로 볼 수 있음.

– 셋째, 장애집단노인을 비롯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적 서비스의 미흡으로 기능상태의 급격한 하락이나 삶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과 병원간 만성기질환자의 케어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연구보고서
14-22-09-1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Current situations of health care service system for older persons and its policy issues

연구책임자 • 선우덕
공동연구자 • 이소영·김동진·김철웅·윤종률·남효정

Ⅰ. 연구목적

▣ 최근 통계에 의하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장기요양대상노인의 급증에 따른 장기요양비용도 증가하고 있음.

– 이는 노인계층의 건강상태가 비노인계층에 비해 나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의료적 치료욕구가 높아서 의료기관방문이 빈번해지고, 인위적으로는 노인인구의 증가로 노인환자가 의료기관의 중심이다 보니, 의료기관의 재정운영상 이들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의료서비스가 개발되고 다양한 진료가 다량으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 또 한편으로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장애를 고려하지 않고 질병위주의 완치 및 관리목적으로 치료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에서의 회복, 재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기능장애가 고착화되어 장기요양상태로 전환되어 장기요양비용 지출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계층의 건강수준을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효율적인 보건운영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음. 여기에서는 질병상태로부터의 완전한 탈피(완치)나 질병발생의 사전적 예방 또는 지연에 중점을 두기 보다는 노인의 신체적 기능 건강상태를 유지 및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신체적 기능상태의 악화를 지연 및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하였음.

II. 연구내용

▣ 제2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의 개념 및 집단분류를 시도하였음.

– 노년기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볼 때, 건강노인집단, 허약노인집단 및 장애노인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는 것임. 이는 다양한 허약지표가 개발되어 있지만, 일차적으로 가용자료의 한계성 때문에 ADL과 IADL 지표만으로도 집단분류에 적용할 수 있었고, 각 집단별로 건강상태를 분석해 본 결과, 대부분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차이가 있었다는 것임.

▣ 제3장에서는 건강상태별 노인집단의 건강수준 실태를 비롯하여 각 집단별 건강상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음.

– 그 결과, 건강집단, 허약집단 및 장애집단별로 결정요인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결정요인간 중요도측면에서는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였음.

• 즉, 건강노인집단과 장애노인집단은 일반적인 만성질환관리와 투약관리, 허약노인집단은 추가적으로 우울증관리에 좀 더 치중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남.

▣ 제4장에서는 현재 노인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 건강검진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기능재활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시하였음.

– 분석결과 현재 거의 대부분이 건강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허약노인집단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은 상당히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하였음.

▣ 제5장에서는 노인보건사업의 개선방안을 사업부문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음.

Ⅲ. 정책제언

▣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건의 및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음.

– 첫째, 향후 노인보건사업체계를 구축할 때, 기본적인 전략으로 ①지역사회기반 체계(community-based care system)의 구축, ②일차케어(primary care) 중심의 연계체계 구축, ③건강 기능자립지원(functional independence)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둘째,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사업체계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허약노인을 선별할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 도구는 일차적으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같은 전국조사가 이루어질 때, 설문문항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고, 노인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시에 의무적 적용항목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음.
- 이렇게 선별된 허약노인에게는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체조운동과 같은 프로그램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운동프로그램이 요구되는데, 일차적으로 이들 계층은 체력적으로 허약하기 때문에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그리고, 만성질환관리측면에서는 모든 노인계층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허약노인에게 치중하여야 할 보건의료적 서비스가 약물복용관리와 우울증관리로 볼 수 있음.

– 셋째, 장애집단노인을 비롯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계층에 대한 전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 현재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의료적 서비스의 미흡으로 기능상태의 급격한 하락이나 삶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설과 병원간 만성기질환자의 케어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연구보고서
14-22-09-2

생애말기케어의 사회적 가치 측정

Measuring social values in end-of-life care

연구책임자 • 정영호
공동연구자 • 고숙자

Ⅰ. 연구목적

▣ 현재 사망 전 의료이용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고, 이를 건강보험의 틀 내에서 급성기 병원을 중심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지지의 근거가 아직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생애말기에 수술 또는 치료를 통하여 단기간의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나,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러한 치료를 위해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생애말기 환자들을 위한 치료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선호체계를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애 말기에 통증관리와 같은 완화의료보다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를 수행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선호체계 즉,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결과인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Ⅱ. 연구내용

▣ 생애말기 케어에 대한 사회적 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죽음, 생애말기 계획에 대하여 응답자의 60.4%정도만이 가족, 지인 등과 이야기를 편하게 한다고 하였고, 질병으로 인해 죽음에 임박했다고 할 경우에 응답자의 70.6%가 이를 알기를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 생애말기에 임박해 있다고 할 경우에 본인이 원하게 될 것이라 여기는 것에 대해 질병 고통완화(26.0%), 우수한 병원 치료(24.7%) 등이었음.

– 생애말기 돌봄에서 고통이 없는 것(33.3%)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응답하였음.

– 생명연장에 대한 의사결정은 '본인'이라는 응답이 3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의사와 본인'의 응답 33.5%이었음.

– 생애말기(임종 전 6개월)에 생존의 가능성이 낮더라도, 병원치료를 계속 받고 싶다는 응답이 43.44%(65세이상의 경우 45.4%)이었으며, 존엄사를 선택하고자 하는 비율은 58.14%에 달함.

▣ 생애말기 케어에 대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생애말기의 환자들에 대한 치료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회적 선호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개별 프로파일을 비교하기 위한 준거 프로파일은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기대여명이 24개월이고, 이때의 건강수준은 100%이며, 만약 치료를 받을 경우에 기대수명이 3개월 증가하게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음.

– 110개 프로파일 중에서 준거 프로파일은 57번째의 순위에 있었고, 이러한 준거 프로파일보다 상위의 효용점수를 가지는 프로파일 56개 중에 약간의 건강수준 개선(QoL_gain)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파일은 43개(76.8%)이었음.

– 이와는 대조적으로, 준거 프로파일보다 순위가 낮은 53개 프로파일 중에 약간의 건강수준 개선(QoL_gain)과 연관되어 있는 프로파일은 17개에 불과하였음.

– 상위의 순위에 있는 프로파일은 실질적인 수명연장 또는 건강수준개선을 보이는 프로파일을 선택하였음.

• 1위에서 25위까지는 수명연장의 효과가 있는 프로파일이며, 건강수준의 개선의 경우에 12위, 16위, 25위를 제외하면 34위까지 건강수준의 개선이 있는 프로파일이 상위에 위치해 있었음.

– 응답자들은 건강수준의 개선이 없는 경우에 치료를 선택할 선호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프로파일의 순위에서 하위 10까지의 프로파일을 보면, 수명연장이 1개월~3개월정도 있더라도 건강수준에서 개선이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정책제언

▣ 생애말기 환자들에 대한 자원배분에 직면할 경우에 보건의료 우선순위 설정이 요구됨.

– 그러나 건강상태의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수명의 연명가능성도 낮은 환자의 경우에 수많은 의료적 문제와 정책적 문제 등이 수반될 것임.

– 특히, 임종에 임박해 있는 환자의 경우, 대상 환자의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적극적 항암치료의 단계와 완화의료의 단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점이 있음.

▣ 생애말기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면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사망전 통증완화, 가족의 정서적 · 사회적 · 경제적 부담완화, 그리고 부적절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의료정책과 관련 제도가 안착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4-22-09-3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Socioeconomic, Behavioral, Nutritional, and Biological Determinants of Mortality in South Korea: Analysis of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K-NHANES) Linked Data

연구책임자 • 김혜련
공동연구자 • 강영호·여지영

Ⅰ.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1998년과 2001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2012년까지의 사망자료를 연계 추적(Follow-up)한 자료를 구축하고, 이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 주요 질병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 건강행태, 영양섭취 수준, 임상적 위험요인 등 다양한 건강위험요인들의 전체사망 및 주요 질환 사망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인구집단에서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 방향 수립에 기초 근거자료를 제시하고자 함.

▣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망, 주요 질병의 관련성 분석

– 건강행태 요인과 사망, 주요 질병의 관련성 분석

– 임상적 위험요인과 사망, 주요 질병의 관련성 분석

– 상기 결과를 근거로 인구집단 및 노인을 위한 국가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 정책 대응방향 제시

Ⅱ. 연구내용

▣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망의 차이

– 사회경제적 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교육수준, 소득수준별로 계단형의 사망률 격차가 확인되었으며, 비정규직이나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미가입상태에 있는 집단에서 높은 사망위험을 보였음.

▣ 건강행태 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

– 건강행태 위험요인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행태와 사망위험과의 관련성을 파악한 결과, 흡연은 전체사망과 암사망, 폐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사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규칙적 운동, 일상생활 활동수준, 신체활동수준에 따른 사망 위험의 차이도 커서 높은 운동군에 비하여 활동수준이 낮고, 비운동군에서 사망위험이 높게 나타남.

▣ 영양/식이요인 및 비만과 사망의 관련성

– 영양섭취 수준과 사망과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영양섭취수준과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제시됨. 9대 영양소의 식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인 MAR이 높은 그룹에 비하여 낮은 군에서 사망위험이 증가하였으며, 영양섭취기준 대비 에너지 섭취수준과 단백질 섭취수준이 적정한 군에 비하여 영양섭취수준이 낮은 군에서 사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음.

– 비만지표와 사망위험의 관련성을 보면, 저체중군에 속하는 경우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과체중이나 비만그룹에서 오히려 사망위험이 유의하게 낮은 양상을 보임.

▣ 임상적 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

– 대사증후군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사망위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대사증후군 구성 요소의 개수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사망위험의 차이도 명료한 직선적 관련성을 보임.

– 혈압과 혈당 및 당화혈색소에 따른 심혈관계질환 사망위험 차이가 명료하게 제시됨.

▣ 활동제한과 사망의 관련성

– 60세 이상 연령에서 활동제한 지표(ADL, IADL)에 따른 사망위험의 차이 분석결과 활동제한 지표가 사망의 매우 중요한 예측지표로 나타남.

– 일상생활수행능력(ADL)에 제한이 많은 노인에서 사망위험이 높았으며, 연령을 보정한 후에는 상대위험도가 다소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사망위험이 나타났음

–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에 제한이 큰 노인에서도 사망위험이 높았으며, 연령을 보정한 후에는 상대위험도가 다소 감소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사망위험이 나타났음

Ⅲ. 정책제언

▣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관리 정책과 사업의 내실화 및 재원투자 확대

– 조기사망 감소와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건강위험요인의 적극적인 관리가 요구됨.

– 건강생활실천이나 질병예방에 대한 국가 전체의 재원배분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기금 등을 활용한 사전예방적 건강투자의 확대가 요구됨.

▣ 사회경제적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함.

– 최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현실에서 사망률에서의 교육수준, 소득, 고용상태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이 사망의 불평등을 결정짓는 중요한 건강위험요인으로 밝혀져 포괄적 사회정책을 통한 건강불평등 해소의 근원적 접근이 필요함.

▣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 확대와 지지적 환경의 조성

–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의 건강행태가 사망을 비롯한 주요 질병의 사망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특히 흡연과 암사망, 폐암사망과의 높은 관련성을 볼 때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건강증진 정책과 사업의 적극적 확대와 함께 이를 지지하는 건강 환경조성의 강화가 필요함.

▣ 학문적, 정책적 활용을 위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추적연구의 지속

– 건강수준과 위험요인 간의 인과적 연구가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종단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초연구가 정책준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됨.

연구보고서
14-2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Health Impact Assessment Report 2014

연구책임자 • 최은진·서미경
공동연구자 • 김대은·이정아·강아람·나백주·기 명·강은정

Ⅰ. 연구목적

▣ 궁국적으로 건강영향평가법제화 도입을 통하여 정책에서 건강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사업은 2008년부터 시행되어왔음.

– 건강은 개인의 생활습관외에도 사회적 환경과 물리적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게 되고 이에 따른 생활습관도 영향을 받게 됨. 따라서 건강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인 건강영향평가 정책의 시행은 매우 중요함.

Ⅱ. 연구내용

▣ 2014년에는 주택환경건강영향평가가이드라인개발,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국제건강영향평가사업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추진함.

▣ 주택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

– 주택은 가족생활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가족단위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임. 건강지향적인 주택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건강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개발함.

– 건강영향평가의 단계를 적용하며, 주택만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함.

• 새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환경오염,지구온난화방지, 실내 환경,주택성능분야 ,사회경제적 특성, 지역사회 환경

• 헌 주택의 건강영향평가 체크리스트 : 생활공간의 안전, 취약인구집단 배려, 사회경제적 특성,지역사회 환경

▣ 시민체력증진센터 운영 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 대전광역시 시민체력증진센터는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컨트롤타워(The Control Tower)의 역할로서 대전광역시의 건강한 장수도시 구현을 위한 건강관련 시책의 하나로 계획되어 설립됨.

– 이러한 시민체략증진센터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음.

• 시민체력증진센터와 보건소 건강증진센터의 측정 자료를 통합하기 위한 장비 확충 및 전용서버구축이 필요하며,매뉴얼 개발 및 담당자 교육, 워크숍 개최 등이 필요함.

• 이용자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신체활동 관련 생활의 취약계층을 찾아내어 모두가 건강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내 부문 간 협력의 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함.

• 시민체력증진센터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권고하며체육, 보건, 교육, 복지 등 담당 부서 공무원의 참여 및 관련 전문가의 협조 하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중장기투자를 실현하는 것을 권고함.

▣ 세종시 건설활성화에 의한 건강영향평가

– 세종시 건설 프로젝트는 새로운 도시의 건설 과정과 주거가 시작된 곳으로, 현재는 토지정지와 구조물 건설이 활발하여, 도시 전체에서 공사가 벌어지고 있음. 건설사업의 건강에 대한 위험은 잘 알려져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 서 그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이 높음.

– 건강영향평가결과 다음의 방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의 결과에 기초하여 세종시 건강문제에 대한 대규모 조사가 필요함.

• 대기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공개가 필요함.

▣ 건강영향평가 국제회의사업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세계보건기구의 서태평양지역사무소(World Health Organization Western Pacific Office)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환경보건포럼(Regional Forum on Environmental and Health)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의 환경 및 보건정책을 협력적으로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사업임.

– 국제적 협력을 위한 과제

- 국제기구의 건강관련 부문활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다른 영향평가 학술조직과 연계하여 지식과 기술을 교류하여야 함.
- 여러 기관이 HIA를 도입하도록 장려, 그래야 여러장벽 극복 가능, 여러 나라의 보건제도를 보더라도 그 나름의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으로 이를 존중해야 HIA 가 잘 정착할수 있음.
- 질적, 양적인 평가기준에 대한 합의도출을 위한 지속적 논의가 있어야 함.

연구보고서
14-24

4대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방안

A study on four addiction problem and suicide

연구책임자 • 이상영
공동연구자 • 송태민·정진욱

Ⅰ. 연구목적

▣ 4대 중독의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자살시도자가 일생을 거치는 동안 경험한 자살 생각이나 자살시도가 누적되거나 완화되는 과정 분석과 여기에 관여하는 요인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음.

– 세부적으로 4대 중독의 현황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독대책 방안 제시

Ⅱ. 연구내용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연도의 4/4분기 소셜 빅데이터(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을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의 위험은 9.5%(2011년: 11.5%, 2012년: 10.0%, 2013년: 8.5%)로 나타났음

– 네트워크 분석에서 외부 근접중심성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는 셧다운제와 게임중독법, 여성가족부는 게임중독법과 중독법,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이버안심존과 셧다운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터넷 및 도박 중독 실태조사를 분석 결과서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군은 3.9%, 고위험 사용자군은 2.9%로 전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6.8% 인 것으로 나타났고 도박중독 분석 결과 저위험 도박자는 23.7%, 중위험 도박자는 21.5%, 고위험 도박자는 8.5% 순으로 나타났음.

▣ 이 있으며 약물별로는 진통제(20.1%)와 기침, 감기약(18.4%),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15.0%)를 많이 복용하고 있고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중독 측정지표(AUDIT-K)의 결과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87.3%가 정상군으로 12.7%는 위험군(위험 음주군+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충격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건강 위험, 자살생각이 음주위험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신질환 환자수와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지역별 자살사망률의 격차를 보면 강원, 충남, 충북이 매우 높고 연평균 증가율은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소득, 실업률, 이혼율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도 지역별 자살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격차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

▣ 자살생각만 하는 집단, 자살생각에 이어 자살계획을 한 집단, 자살생각, 자살계획에 이어 자살 시도를 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변인, 생활실태 만족도, 흡연, 음주 및 정신건강(우울증과 자존감), 개인사 변수들의 환경이 상이하였음.

Ⅲ. 정책제언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지역 간 자살 위험요인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을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

– 자살 시도자들이 응급처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알코올 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재활·사회복귀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 확충이 요구 됨.

▣ 인터넷 유형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 필요

–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인터넷 중독 위험에 대한 예측모형 제시

– 인터넷 유형에 따른 중독 정도가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 필요

연구보고서
14-24-1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Current Status of Alcohol and Drug Addiction and Policy Response

연구책임자 • 정진욱
공동연구자 • 윤시몬·채수미

Ⅰ. 연구목적

▣ 중독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이러한 중독으로 인한 진료비는 계속증가하고 있는 추세

– 약물 중독자 또는 위험군의 현황 및 유병률 자료가 구축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중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거버넌스가 존재하지 않음.

– 약물 및 알코올 중독 현황 및 인식을 파악하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

Ⅱ. 연구내용

▣ 약물오남용 등의 조사결과, 약물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대상 응답자의 27.1%,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48.4%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음.

– 약물별로는 진통제(온라인조사 20.1%, 면접조사 8.2%)와 기침, 감기약(온라인조사 18.4%, 면접조사 9.1%), 그리고 카페인 성분이 포함된 자양강장제(온라인조사 15.0%, 면접조사 4.9%)를 많이 복용하고 있었음.

– 온라인조사 응답자의 10.3%가 최근 1년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 있다고 하였음.

– 면접조사에서는 536명, 온라인조사에서는 698명이 약물 오남용자에 해당 됨.

– 직업별 분포는 면접조사에서는 육체노동자가 온라인조사에서는 비육체노동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평생 동안 정신적 충격을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하여 1.8배, 정신건강 위험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2.8배 약물을 오남용하였으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약물 사용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음주중독 측정지표(AUDIT-K)의 결과 음주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에서 87.3%가 정상군으로 12.7%는 위험군(위험 음주군 +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으로 나타났음.

– 성별, 연령, 직업, 학력, 소득, 종교가 알코올중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자존감점수가 높을수록 정상군보다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적 계층의 경우 하위에 비해 상위가 문제음주군 및 사용장애 추정군에 속할 가능성이 더 높았음.

– 흡연경험, 주관적 음주습관평가와 음주위험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신체적 건강상태와 수면시간은 음주위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정신적 충격경험, 일상생활 스트레스, 정신건강 위험, 자살생각과 음주위험의 영향은 모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Ⅲ. 정책제언

▣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과 장기적인 계획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물중독에 대한 국가적 전략 및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

– 실적 중심 성과지표(교육실시횟수, 참여인원수)로 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지표의 산출이 필요할 것임.

– 약물중독 예방사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서 마약류대책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 강화가 요구됨.

– 대국민 홍보예방교육사업 전략 수립으로 홍보예방교육사업의 효과성 제고해야 함.

– 중독자를 “범법자”가 아닌 “환자”로 보는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마약류중독자 치료사업 활성화 필요

– 교정시설의 마약류사범 사회복귀교육 강화를 통해서 마약류중독자 사회복귀지원사업의 활성화 지원

▣ 알코올 함량에 따른 부담금 부과, 재활·사회복귀시설 확충 등의 인프라 확충이 요구

– 알코올 중독의 중증도를 기준으로 센터 이용대상자 구분하고 효율성 개선에 따른 예산 및 인프라 조정을 통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

연구보고서
14-24-2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과 대응방안

A study on trends and response of the Internet and Gambling addiction

연구책임자 • 송태민
공동연구자 • 진달래·오영인

Ⅰ. 연구목적

▣ 인터넷 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 문제로 인해 가족갈등, 가상세계 집착, 일상생활 부적응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청소년 및 젊은층의 게임이용이 증가하면서 게임의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정서적·사회적 문제 등이 사회적 우려를 증가시키고 있음.

– 인터넷 및 도박 중독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터넷 및 도박 중독 현황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실시함.

– 인터넷 및 도박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사업 성과평가 및 위험요인 예측

– 부처별 인터넷 중독사업의 예방상담 사업에 대한 예산과 집행실적을 이용하여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

–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해당 연도의 4/4분기 소셜 빅데이터(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를 수집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의 위험요인을 예측한 결과 제시

• 분석결과 인터넷 중독의 위험은 9.5%(2011년: 11.5%, 2012년: 10.0%, 2013년: 8.5%)로 나타남. 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률 조사결과(2011년: 8.1%, 2012년: 9.2%, 2013년: 9.4%)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인터넷 및 도박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도박 중독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

–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군은 3.9%, 고위험 사용자군은 2.9%로 전체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6.8%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박중독 분석 결과 저위험 도박자는 23.7%, 중위험 도박자는 21.5%, 고위험 도박자는 8.5% 순으로 나타남.

– 인터넷중독 요인별 분석을 해 본 결과 내성이 26.4%증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이 가상세계지향(19.2%), 금단(19.1%), 일상생활장애 요인(62.9%)순으로 나타났다. 내성요인에 인터넷 중독 위험군이 7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임.

– 도박 중독의 경우 위험 비문제성 도박자는 전체 대상자의 46.3%, 저위험 도박자는 23.7%, 중위험 도박자는 21.5%, 문제성 도박자는 8.5% 순으로 나타남.

▣ 인터넷 및 도박중독 예방·해소를 위한 대응방안제시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 위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고, 인터넷 중독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대응방안을 제시

Ⅲ. 정책제언

▣ 인터넷 중독 및 도박 중독과 같은 인간 행동은 한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종단 연구를 통하여 각 변수와 인터넷 중독 및 도박 중독 간의 인과 관계 및 상호 작용의 결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인터넷 중독 검사 및 도박중독에 대한 타당화 작업이 필요함.

▣ 소셜 빅데이터에서 수집된 인터넷 관련 문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과 데이터마이닝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위험에 대한 예측모형을 제시한 점에서 정책적·분석 방법론적으로 의의가 있음.

▣ 인터넷 유형에 따른 중독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대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중독 위험에 대한 정책적·분석 방법론적 의의가 있음.

연구보고서
14-24-3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 간 격차 요인 분석

Suicide risk factors in Various regional contexts

연구책임자 • 이상영
공동연구자 • 정진욱·윤시몬·채수미·최희란·김영택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이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 필요 자살사망자 뿐 아니라 자살시도자의 자살 행태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여 지역별로 자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의 지역간 격차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

– 자살사망자 뿐 아니라 자살시도자의 자살 행태까지 상세하게 파악하여 지역별로 자살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자살사망률의 지역간 격차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합의를 도출

–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자살행위 과정 자체를 사회·인구학적 변수, 생활실태 만족도, 흡연, 음주 및 정신건강(우울증과 자존감), 개인사 변수들을 통하여 분석.

Ⅱ. 연구내용

▣ 전국 모든 지역에서 정신질환 환자수와 자살자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정신질환자과 자살은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면 정신질환자의 증가와 관련성이 높은 지역은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다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별 자살사망률의 격차를 보면 강원, 충남, 충북이 매우 높고 연평균 증가율은 광주, 전남, 전북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성별, 연령, 교육수준 등의 인구학적 변수와 경제성장률, 소득, 실업률, 이혼율 등의 사회경제적 요인도 지역별 자살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지역별 격차는 자살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

▣ 자살생각만 하는 집단, 자살생각에 이어 자살계획을 한 집단, 자살생각, 자살계획에 이어 자살 시도를 한 집단별 사회·인구학적 변인, 생활실태 만족도, 흡연, 음주 및 정신건강(우울증과 자존감), 개인사 변수들의 환경이 상이하였음.

– 각각의 변수들이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의 연계에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심층면접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자살이행과정의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으며, 각 단계별로 가족의 영향력은 다르게 작용하였음 자살 관련 위험요인과 지역 간 격차요인의 정책적 시사점

Ⅲ. 정책제언

▣ 자살 관련 위험요인과 지역 간 격차요인의 정책적 시사점

– 정신질환 전문 상담인력 부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사례관리에 필요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없어 지역 간에도 많은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력확충과 표준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 필요

– 중앙 중심의 자살예방 대책 보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이 필요하며 자살 예방 대책 수립에 필요한 지원체계 필요

– 사회경제적 요인은 단시간에 감소시킬 수 없으므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어난 문제를 지원 할 수 있는 체계 수립 필요

– 실업자의 취업 및 정신건강 상담 체계, 이혼부부의 정신건강 상담시설 확충 등이 필요

▣ 시도자들은 응급처치 후 대부분 귀가하므로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 할 필요가 있음.

▣ 지역단위로 가칭 '자살예방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여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자살 고위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 자살을 예방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3.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Ⅱ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개발
-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도입 방안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분석
-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Ⅱ) - 만성질환, 임신_출산, 보건의식행태

연구보고서
14-09-02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안: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Current Status and Public Oriented Strategy for Regional Public Hospitals & National University Hospitals

연구책임자 • 김남순
공동연구자 • 전진아·박금령·최지희·김명희·이희영

Ⅰ. 연구목적

▣ 한공공의료가 당면한 문제의 원인과 기전을 진단하고,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본 공공의료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Ⅱ. 연구내용

▣ 공공성 개념과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접근

– 공공성에 대한 어원부터 다차원적 개념과 조직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관점과 방법을 고찰하였으며, 보건의료 공공성의 철학적 배경과 국내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논의를 정리함.

– 공공성(publicness)는 “사회 내의 공동선”이며, 다차원적 개념으로 정의하면 절차적 공공성, 내용으로서 공공성. 주체로서의 공공성이 있음.

–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내용이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이슈이며,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 하지만 공공의료서비스의 가치는 공공의료조직이 자신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사고하고 시민의 필요를 고려하는 과정에서 만족을 얻게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 미국과 일본의 공공병원 현황 파악

– 국내와 유사하게 공공의료 비중이 적은 국가 중에서 일본과 미국 현황을 조사하였음.

– 일본의 공공병원 비중이 30%로 민간병원보다 적지만 그 역할은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자치제 공공병원은 규모나 진료 역량 측면에서 지역의 중심병원 역할을 하고 있음. 총무성의 공립병원 개혁정책이 시행되기는 하였지만 자치제 병원이 통폐합되는 사례

는 적었음. 자치체에서 공립병원 인프라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함께 노력하는 운영체계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지역사회병원에서 공공병원 22%를 차지하고 있음. 병원 소유구조에 따라 영리성과 공공성을 평가한 연구를 검토한 결과를 종합하면 카운티와, 시가 소유한 공공병원이 가장 영리추구를 적게 하면서 지역사회 편익을 많이 제공하고 있음. 민간비영리병원에게는 면세혜택에 대한 근거로 지역사회 편익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지방의료원과 국립대학병원 현황과 문제

– 지방의료원

- 지방의료원은 1876년에 설립된 부산의료원부터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33개 지방의료원이 있으며 종합병원 혹은 병원형태이며 대부분 중소도시에 위치함.
- 지방의료원은 1925년부터 시·도립병원이었다가 지방공사체제로, 다시 2005년 특수법인(독립채산제)으로 전환되었음. 보건복지부로 관리권한이 이전되었으며, 직접적 관리는 지자체가 담당함.
- 지방의료원은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급성기 2차 진료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핵심기능은 취약계층 진료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담당하는 것임.
- 지방의료원은 일반내과, 외과, 정형외과 등은 90% 이상의 개설되어 있지만 의사 부족으로 인해 흉부외과, 정신과, 재활의학 등이 개설된 경우는 50% 미만임. 지방의료원의 시설과 장비 수준은 동일 규모 민간병원과 비교하여 떨어지는 수준이 아님.
- 지방의료원의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한 100병상 당 의사수는 7.8명으로 민간병원(11.8명)보다 적고, 연간 의사이직율은 23.7%로 높은 편임. 지방의료원은 간호인력은 2011년 기준 100병상당 간호사수는 46.1명(취약지 병원 40.0명)으로 민간병원 51.8명인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적은 수준임.
- 지방의료원 100병상 당 입원 환자는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2012년 병상이용율은 83.0%임. 100병상 당 외래 환자 수는 대체적으로 지방의료원이 민간병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지방의료원 중 다수가 외곽지역에 위치해 지역주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음. 지방의료원의 관내이용률이 가장 낮은 경우는 16.5%이며, 전체 지방의료원의 1/3정도가 40% 미만 수준임.
- 동일 규모 민간병원과 비교했을 때, 환자 1인당 외래/입원 평균진료비는 낮은 수준이며 저소득 계층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고, 비급여항목개수 및 수가가 낮음. 33개 지방의료원 중 경영적자가 있는 곳이 2010년 기준 28개소로 대부분이 경영적자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병원

- 국립대병원은 교육부와복지부로부터 출연금 및 보조금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
- 2006년 이래 의료급여대상자 진료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반면에 거의 모든 국립대학병원에서 선택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전문질환센터의 경우, 수도권 의료집중 완화와 지역의료의 질 개선 등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나 역할이 빈약한 경우도 있음.
- 공공보건의료사업은 예산과 인력이 적어 충실한 사업을 제공하기 어려움. 국립대학병원이 지방의료원에 대한 의료진 파견은 지속성이 없으며, 지방의료원의 진료역량 자체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중심 공공의료 문제에 대한 실재주의적 진단

–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이 공공병원으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 문제의 원인과 기전에 대해 질적 조사를 통한 실재주의적 진단(realistic evaluation)을 함.

– 지방의료원은 대도시, 중소도시, 의료취약지로 구분하여 4개 병원의 6개 그룹(원장, 의사, 일반직원, 노조직원, 지자체 정책담당자, 환자그룹)에 대한 질적면담 수행. 개별그룹별 분석 이후 '지방의료원의 공공성 약화'에 대한 총괄적 "Context, Mechanism, Outcome (CMO) 분석"을 함. 국립대병원은 전문질환센터/공공의료사업 담당의사를 대상으로 초점그룹면담을 실시하였고, CMO 분석을 함.

– 지방의료원에 대한 실재주의적 진단결과

- 공공병원의 역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1)적정진료, 2)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3)비

수익 필수의료와 재난관리 임. 하지만 공공병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4)보건의료 노동에 대한 표준제시, 5) 민간병원에 대한 견제 역할도 제시되었음.

– 국립대병원에 대한 실재주의적 진단결과

•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경우 공공병원으로서 양질의 적정진료 제공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만 합의된 정의 혹은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Ⅲ. 정책제언

▣ 지방의료원의 문제와 개선방향

– 지방의료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공적의료기관임. 공공병원이 주변부화되고 인력문제와 경영적자로 인해 병원의 존폐가 우려되는 상황이며, 현재는 공공병원 정체성이 약화되고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제대로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임.

– 공공의료의 가치는 기관 단위의 수익성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며, 의료에 대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있음.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하며, performance 개선은 안정적 토대 위에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타당함.

▣ 국립대병원 문제와 개선방향

–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을 회복하려면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 국립대병원 평가에 공공성을 중시해야 하며,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보건의료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하고 지방의료원과 보건소를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함. 또한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의 양적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음.

연구보고서
14-02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II -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개발

Policy Issues for Measuring the Quality of Health Care(II) : Developing Korean Healthcare Quality Report

연구책임자 • 강희정
공동연구자 • 하솔잎·이슬기·김소운·김남순·이광수·정희자·인병로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의료의 질을 국가수준에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국제 수준과 비교함으로써 문제 영역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여 보다 적극적인 의료정책 수립의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

– 의료 질과 상관없이 고비용을 유도하는 의료전달체계에 대해 근본적인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비용 대비 질(quality)과 결과(outcome) 향상을 유도하는 가치(value)기반 의료시스템의 구축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의료 질 수준의 향상을 지속적으로 측정하고 공개하는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는 지속적인 정책 개입과 비용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만큼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의료 질 향상 정책의 평가 기전이 필요

– 국가수준에서 의료제공체계의 질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지표 생산, 시계열적 동향 분석, 국제 비교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정책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문제 영역을 확인하고 정책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연구가 필요

Ⅱ. 연구내용

▣ 최신의 국가 의료정책 방향을 반영한 의료제공체계 질 성과 평가의 틀 확정

– 선행연구(강희정 외(2013), 한국의 의료의 질 지표와 정책과제)에서 제시한 질 성과 평가의 개념적 틀을 기본으로 하되, 최근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평가 측면 및 관련 지표의 변경 등을 통해 최종 질 성과 평가의 틀 확정

▣ 비교 관심 집단(의료취약집단) 선정

– 의료제공체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의 질 성과 평가에 있어 주요 관심 집단에 대한 격차 발생을 검토하기 위해 정책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정책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주요 관심 집단을 선정

▣ 질 성과 측정 체계에 따른 일차 평가 및 시계열적 분석

– 측정 체계별 선정된 지표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또는 관련 지표 정보를 수집하여 단면적 평가와 시계열적 추이를 분석

– 필요에 따라 주요 관심 집단 간 차이를 분석

▣ 문제 영역의 진단

– 시계열적 성과가 악화되거나 관심집단 간 격차가 발생하는 주요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 영역을 진단

▣ 질 성과 평가의 타당성 검토

– 질 성과 평가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 및 2차 자료의 신뢰성, 측정 지표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평가의 신뢰도를 평가하고 개선방향을 제시

▣ 문제 영역에 대한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 평가의 정확도의 제한점을 고려하되, 질 성과 평가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적 개입 방향을 제시

Ⅲ. 정책제언

▣ 분석 결과, 영역별로 질이 향상되는 성과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지표들에서 지역 간 격차와 취약계층(노인, 저소득층)에 대해 불평등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 2005년 이후 의료효과성과 적시성에서 질이 향상된 정도가 높았던 반면, 효율성에서는 악화된 정도가 더 높았음.

– 지역별로는 의료인력 분포 및 응급의료 접근성에 있어 지역 간 변이가 높았음.

– 노인집단에 대해 상대적으로 불평등이 우려되는 지표들에는 천식이나 당뇨 등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 혹은 입원예방이 가능했던 비율, 소득대비 의료비 비중이 10%를 초과한 비율 등이었음.

▣ 최근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 개편 관점과 질병구조 변화에 맞춘 질 향상은 지연되고 있음.

–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지표들 중 대부분이 예방가능한 응급실 이용과 예방가능한 입원과 관련된 효율성 범주의 지표들임.

– 적절한 외래 관리를 통해 고비용 입원과 응급실 이용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차의료의 강화와 외래 만성질환 관리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적 관심과 질 측정을 위한 투자가 필요

▣ 의료 질 측정 범주별로 고르게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 및 의료의 질 성과 보고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개념적 틀에 따라 질 측정의 균형을 위한 자료원 개발과 지표 확대

– 성과 향상 판단 및 세부집단 비교를 위한 방법론의 정교화

– 국가단위 의료의 질 관리 거버넌스 구축

연구보고서
14-03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Developing Health Inequalities Repot and Monitoring the Status of Health Inequalities in Korea

연구책임자 • **김동진**
공동연구자 • **기 명·김명희·김유미·윤태호·장숙랑·정최경희·강아람·채희란·최지희**

Ⅰ. 연구목적

▣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의 검토·보완을 통한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현황의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건강불평등 지표 산출을 통한 건강형평성 제고 및 정책적 기여

Ⅱ. 연구내용

▣ 우리나라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국가적 과제와 전망 Review

▣ 기존 건강불평등 지표의 검토 및 보완을 통한 한국형 건강불평등 지표 생산

–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을 위하여 사회구조적 요인, 중재요인, 건강결과요인 등에 대한 총 13개 영역, 87개 세부지표 제안

- 「사회구조적 요인」: 인구, 교육, 고용, 소득 및 빈곤, 지역박탈
- 「중재 요인」: 사회통합 및 사회자본, 생활환경, 건강생활습관, 보건의료서비스
- 「건강결과 요인」: 수명, 주관적 건강, 객관적 건강, 사망

▣ 미래 국가의 균형적 건강 발전을 위한 보건복지부문의 정부 역할 방향 제시

Ⅲ. 정책제언

- ▣ 건강불평등 지표의 지속적 산출 및 모니터링체계 필요
- ▣ 인구집단간 격차가 큰 영역 및 지역에 대한 재원분배, 사업지원의 우선순위로서 건강불평등 지표 활용
- ▣ 지역 차원에서의 건강불평등 지표 선정시 전체 지자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 건강불평등 지표를 선정, 공표 의무화
- ▣ 중앙정부 및 광역·기초지자체 단위별 주기적 지표 측정, 공개 체계 마련 필요
- ▣ 부문별 개발 지표의 객관성을 평가·검증하고, DB화하려는 노력 필요

연구보고서
14-04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 도입 방안

Policy Consideration for the introduction of Value Based in Purchasing in South Korea

연구책임자 • **신현웅·황도경**
공동연구자 • **여지영·박금령·이슬기**

Ⅰ. 연구목적

▣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의 진료비 지불보상 방식에 대한 한계와 발전적인 지불체계로 개편으로 많은 논의 중인 성과연동 지불제도(Payment for Perform ance) 및 의료서비스 가치 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에 대한 적용실태 및 성과분석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나 DRG)별 적용가능성 여부 및 도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성과연동 지불제도(Payment for Perfornace)의 적용실태 및 성과분석

– 성과연동 지불제도(Payment for Perfornace)에서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가치 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에 대한 외국의 도입 사례 및 도입에 따른 성과분석

▣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 타당성 검토 및 주요지불제도(행위별수가제나 포괄수가제)별 특성에 따른 도입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Ⅱ. 연구내용

▣ 가치 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에 관한 이론적 고찰

– Value-based purchasing(VBP)의 이론적 배경 및 개념적 정의

▣ 우리나라 성과연동 지불제도(Payment for Performance) 적용실태 및 성과분석

– 우리나라 성과연동 지불제도(Payment for Performance 대한 선행연구

– 우리나라 의료의 질 평가와 Payment for Performance 도입 경과

– Payment for Performance 도입의 성과와 한계

▣ 외국의 의료서비스 가치 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alue-based purchasing, VBP)의 적용 실태 및 성과분석

– 외국 Value-based purchasing(VBP) 관련 선행연구

– 미국의 Value-based purchasing(VBP), 영국의 Pay by Result(PbR) 등 외국의 구체적인 제도 조사

– Value-based purchasing(VBP) 도입 성과와 한계

▣ 주요 지불제도(FFS or DRG)와 VBP(P4P 포함) 적용 전략분석

– VBP(P4P 포함)는 주요지불에 보조적으로 이용되는 조정 지불 기전이므로 주요지불제도에 따른 적용 전략 분석

▣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 타당성 검토 및 도입방안

–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 타당성 검토

– 우리나라 가치기반 성과보상지불제도(VBP) 도입방안

Ⅲ. 정책제언

▣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피드백 과정을 통한 정책의 보완과 수정은 필수 요소임.

– 현재 가감지급 시범사업과 건강보험에서 적용되고 있는 각종 가산 등 기존 지불제도와의 관계와 지불제도 내 도입 영역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함.

▣ 향후 확대시의 과부하문제로 인해 제도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의료계와의 불필요한 마찰은 사전에 해결해야 함.

–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고려하고, 관련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함.

연구보고서
14-08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Issues and Improving Strategies on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연구책임자 • 윤강재
공동연구자 • 오영호·이수형·하솔잎·여지영·김진호·이기주

Ⅰ. 연구목적

▣ 현재 한국의료전달체계 속에서 미래 지향적 체계로의 전환을 방해하는 비효율, 중복, 낭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인구고령화 등 미래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시급

▣ 공급과 이용 측면에서 한국의료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는 한편, 해외 사례 등을 통해 개선 전략을 제시

Ⅱ. 연구내용

▣ 의료전달체계의 개요와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양상(세부과제 3)

– 의료전달체계의 정의 및 효율성, 전문성, 형평성, 공정한 경쟁질서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구축 목적

– 공급자 및 이용자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 속성과 이에 기반한 의료전달체계의 유형(미국, 영국, 독일, 한국)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전개 양상: 의료전달체계 도입의 목적과 주요 제도적 변천

• 진료권 폐지, 주치의등록제 등 일차의료 강화 노력,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등 기관간 역할 분담과 연계 제고 방안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세부과제 1, 세부과제 3)

–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미분화와 일차의료 취약

– 의료기관 양극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 병상자원의 불균형 원인과 적정 병상공급 추계(세부과제 1)

– 지역간 병상자원의 불균형 분포 현황(불균형 지수 산출)과 원인

– 적정 병상공급 추계

• 우리나라 총병상은 OECD 적정수준보다 1.3~2.4배 과잉공급이며, 급성기 병상은 1.27~2.17배, 장기요양병상은 4~7배의 과잉공급

▣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분석(세부과제 2)

– 진료생활권의 필요성 및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방안

– 의료자원 분포와 환자의 이동행태에 따른 의료이용의 특징양상 파악(시 지역-전주시, 군 지역-평창군)

▣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해외사례(세부과제 3)

– 미국의 ACO(Accountable Care Coordination)

– 일본의 병상자원관리정책: 의료법 개정을 중심으로

– 독일의 통합의료: 베를린 프로젝트 등

Ⅲ. 정책제언

▣ 한국의료전달체계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전략 제시

– 한국형 통합의료모형의 모색

– 지불보상제도로서 가치기반 지불제도(VBP)의 보완적 도입

– 아급성기 치료체계 등 후기의료전달체계 구축

– 병상자원의 적정수급 방향

연구보고서
14-08-1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The Demand and Supply of Inpatient Care Beds and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책임자 • 오영호
공동연구자 • 이난희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병상수급은 양적·분포 및 관리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최근 수도권 대형병원들의 병상증설로 인한 급성기병상 공급과잉문제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장기요양병상 증가문제 등과 관련하여 국가 전체적인 유형별 병상수급과 함께 지역별 병상 수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

- 한국의 병상 수급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며 동시에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응하는 유형별 총량적인 대책과 지역별 수급불균형 문제를 개선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첫째, 현 지역별 병상의 수급불균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병상수급 불균형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
- 둘째, OECD국가의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병상의 적정규모를 추정함.
- 셋째, 최근 외국의 병상자원정책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병상수급 및 관리정책에 적용가능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병상자원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 및 보건의료자원 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Ⅱ. 연구내용

▣ 병상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지니계수를 이용한 불균형 분석의 결과를 보면, 병상자원의 불균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변화율을 보면 모든병상(일반병상+특수병상)의 불균형지수인 지니계수는 2008년에 0.26910

에서 2012년에 0.27298로 불균형 정도가 1.44% 증가하였음.

그러나 특수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은 2008년에 0.31594에서 2012년에는 0.31312로 불균형 상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3차병원의 병상을 제외한 경우에는 불균형 상태가 2%정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었음.

요양병상은 2008년에 0.53102에서 2012년 0.48652로 지역간 불균형 상태가 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회귀분석을 이용한 지역별 병상수급불균형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병상이 수요에 비해 공급과잉이거나 또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도시나 농촌에 모든 지역에 존재하였다. 병상수급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병상수급불균형 지수에 근거하여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공급확대정책을, 반면에 병상이 과잉공급된 지역은 병상공급을 감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병상공급 수급불균형 개선정책은 개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즉, 각 지역의 인구사회경제적인 특성과 병상 등 의료공급체계와 그리고 생활권과 교통여건 등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병상공급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병상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

- 지역별 병상자원의 지역 간 불균형 원인 분석결과를 보면, 일반병상을 대상으로 한(3차병원 병상제외) 적정 병상공급지역에 비해 병상의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을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은 지역의 인구변동과 도시화정도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상태와 의료이용행태 그리고 타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정도인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병상부족지역은 주로 지역주민의 의료이용량이 많고,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그리고 지역주민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한 비율이 높고 타 지역 주민의 의료이용량이 많은 지역이었음.
- 반면 병상공급과잉지역은 주로 인구변동과 도시화 정도가 낮고, 지역주민의 의료이용량이 적고 그리고 타 지역주민의 의료이용이 적은 지역일 가능성이 높았음.
- 따라서 병상공급부족지역의 경우는 해당지역의 병상이용율을 포함한 의료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을 한 후 병상부족 개선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또한 병상공급과잉지역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료이용행태를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공급과잉에 대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적정병상 추계

- 우리나라의 병상자원의 적정성 평가는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의 개념이며 가장 최적이라는 의미로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다만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병상자원이 실제치와 비교하여 어떠한 수준인가를 평가하는 기준이됨.
- 적정병상 추계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총 병상과 급성기 병상 그리고 장기요양병상을 포함한 병상공급 수준은 OECD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상대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총 병상공급은 적정수준보다 1.3~2.4배 이상 과잉공급되었고, 급성기 병상공급의 경우도 적정수준보다 1.27~2.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는 더욱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한데, 적정 수준보다 4~7배이상 공급과잉현상을 보이는 반면 공공병상비중은 적정수준의 17%~22%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급성기병상과 장기요양병상의 공급수준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공급과잉현상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반면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이 소유개념에서 기능개념으로 변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OECD국가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Ⅲ. 정책제언

▣ 기초인프라 구축

- 첫 번째 방안은 병상자원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합리적인 병상자원의 수급정책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총량적인 병상수요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병상자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지역보건의료 수요파악은 일회성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며 지속적인 감시체계가 확보되어야 함.
- 두 번째 방안은 지역별 병상자원의 적정배분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병상자원의 지역별 적정배분을 위한 수요의 파악은 신체건강, 정신건강, 공중보건, 장애인 및 노인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하며, 병상자원의 배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상자원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이러한 수요 및 공급현황 파악을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분배원칙과 공식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정부는 최저기준 또는 국가 표준 등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구체적인 시행전략과 목표를 가져야 함.

▣ 지역별 병상수급불균형 개선 정책수단

- 정책적인 수단으로 우리나라서 논의되고 있는 지역별 병상총량제와 같은 지방보건행정 수준에서 병상 억제 정책과 같은 규제정책은 적어도 단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는 정책이기 때문에 정책집행측면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인책을 제공하는 미국의 CON제도에서와 같이 정부간 관계에서 일정한 유인과 역유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병상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별 병상총량제도를 도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수급불균형 지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점임.
- 왜냐하면 같은 병상 공급부족지역이라도 생활권에 따라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개별 지역에 맞는 병상자원 격차의 해소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지역의 특수한 상황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장기적인 방안

- 향후 병상자원의 적정수급과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공급체계의 효율화가 선행되어야함. 즉, 의료서비스의 지역화, 단계화, 기능분담 등으로 요약되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병상공급 억제방안을 자원의 공급 단계가 아니라 진료의 과정(process) 및 결과(outcome) 평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임. 미국에서는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연방정부의 규제 기능으로서, 동료심사기구(Professional Review Organizations: PROs)와 진료지침(Practice guideline)과 결과 평가 연구(outcome research)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장기요양병상의 경우도 다양한 장기요양 의료수요에 따라 요양병원 외에 간호양로원, 말기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시설 등 각종 중간시설을 수요에 따라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연구보고서
14-08-2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분석

Geographic Health Care Service Market Considered Patient Travel Distance and Health Care Distribution in Jeonju : Focused on Primary Health Care

연구책임자 • **이수형**
공동연구자 • **신호성·박종헌·김지연·오영인·조 훈**

Ⅰ. 연구목적

▣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등 심화

– 진료권 개념 폐지로 의료이용을 위한 환자의 병원 선택이 보장되고, 공간적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이동시간이 발생하고, 의료자원의 지역간 불균등이 심화되며, 대도시 및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됨.

• 의료자원 분포의 지역간 불균등은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있어 불필요한 이동거리 또는 시간비용을 초래함(Simoens &Hurst,2007). 반면 의료기관이 과잉 밀집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의료기관간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저해하며, 공급자의 유인수요, 의료자원의 낭비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이수형, 2014).

• '필요에 따른 의료이용'이라는 의료 형평성 측면에서 또한, 환자들은 외래이용을 위해서 불필요한 이동을 감수해야 하며, 특히 의료취약계층에서 불필요한 이동은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큼(신호성·이수형, 2011).

• 당뇨병, 고혈압 환자의 경우 거주지역내 의료자원이 적을수록 환자는 더 멀리 이동하며, 의료자원의 단순 양보다는 질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은 더 심함. 이는 환자는 거주지역내 의료자원이 충분하고, 의료자원의 질이 담보된다면 의료이용을 위해 구지 멀리 이동하지 않음을 의미함(이수형, 2014).

▣ 공간적 접근성 차원에서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 필요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더불어, 환자중심 진료연계 활동지원 및 육성, 지역친화적 일차의료 서비스 제공, 지역별 의료자원의 적정분포, 진료생활권 등의 공간적 측면에서의 보건의료정책의 필요성 제기

• 결국 거주지역내 의료자원의 배분이 중요하며, 공간적 배분 정책에 있어서 진료생활권을 잘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불명확한 의료생활권 정의는 의료자원 배분정책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임.

▣ 본 연구는 공간적 접근성 측면에서, 환자의 의료이용행태를 살펴보고, 환자의 이동패턴과 의료자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일차의료 측면에서의 진료생활권을 파악하였음

II. 연구내용

▣ 의료이용을 위한 환자의 이동패턴은 질환, 환자의 거주지(시군구), 입원/외래 이용을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생활권에 기반한 진료생활권은 가용자료의 한계로 전주시를 대상으로 살펴보았음.

– 환자의 의료이용 패턴 분석은 외래민감성질환(ACSCs)인 당뇨병, 고혈압, 천식, 폐렴, 관절염, 분만의 6개 질환을 대상으로, 지역은 환자의 거주지를 중심으로 시군구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 분석자료로는 2008-2011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이용하였고, 의료기관까지의 환자의 이동거리 및 시간은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음.

– 진료생활권 설정시 분석질환으로는 외래민감성질환을, 생활권 자료로는 (1) 지가 및 생활중심시설을 이용하여 설정한 이대일과 장한두(2013)의 생활권과 (2)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생활권 계획자료를 활용하였음.

• 분석자료로는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중 7월 한달간의 의료이용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생활권 분석단위는 읍면동임.

▣ 분석결과 환자의 이동패턴은 질환에 따라, 입원/외래에 따라, 환자의 거주지역에 따라, 지역내 의료자원 분포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환자의 이동패턴은 차이를 보였는데, 고혈압환자에 비해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환자에 비해 관절염 환자가 의료이용을 위해 더 멀리 이동함을 알 수 있었음.

–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구지역에 비해, 시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군지역에서의 의료이용을 위한 환자이 이동거리가 더 길었으며, 입원 서비스 이용자가 외래 서비스 이용자에 비해 의료이용을 위해 더 멀리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 이동거리의 차이는 군지역이 구지역보다 같은 입원 서비스라 하더라도 이동거리가 길었음.

– 같은 질환이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의료이용을 위해 더 멀리 이동하였음. 이는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의료서비스접근이 낮은 지역에 거주할 확률이 높기 때문임. 결국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의료취약계층인 저소득층이나 노인의 경우 의료이용을 위한 더 많은 시간비용이 소요됨.

▣ 진료생활권 분석결과 생활권과 의료이용을 위한 환자의 이동반경은 차이를 보였음.

– 일차의료라 하더라도 환자들은 생활권을 벗어나서 의료이용을 함. 실제 환자이동과 의료자원의 분포, 생활권을 기반으로 진료생활권을 설정할 경우 생활권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리 가능하며, 적정 의료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의료자원이 배분을 위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

Ⅲ. 정책제언

▣ 의료자원 배분시 거주지역내 의료자원 분포 이외의 의료이용을 하는 환자의 이동패턴 등을 고려해야 함.

▣ 비록 본 연구는 가용자료의 한계로 특정지역에 한하여 진료생활권을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에서의 진료생활권의 설정과 이를 근거로 한 의료자원의 불균형 정도에 대한 체계적인 제시는 향후 의료자원배분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연구보고서
14-08-3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Trends and Issues for Improvement of Korea Healthcare Delivery System

연구책임자 • 윤강재
공동연구자 • 하솔잎·여지영·김진호·신영석·이수형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의 전개과정과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발전방안의 단초 제시

Ⅱ. 연구내용

▣ 의료전달체계의 개요

– 정의: 가용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필요할 때에 적시에,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적합한 의료인에게, 적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한 것(유승흠, 1988)

• 의료제도의 목표인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의료의 질(quality), 적정성(propriety) 등을 달성하기 위한 공급자와 소비자간 조직적 구조

– 공급자 측면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속성: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분담하고 연계시킴.

• 일반적으로 일차 진료, 2차 진료, 3차 진료로 구분

– 소비자 측면에서의 의료전달체계의 속성: 진료의뢰 및 회송 등 의료기관과 의료서비스의 제한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통해 정적 의료서비스 이용을 유도

▣ 한국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

– 과당 경쟁으로 인한 의료자원 공급과잉 및 비효율성

• 의료시설(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에 대한 규제수단이 미흡한 상황에서 '양적공급 중심의 방임형 시스템'은 심각한 비효율성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

• 상대적으로 규제 수단이 강력한 의료인력 자원에 비해 병상과 고가의료장비 등은 환자 유치를 위한 고급화와 양적확대 위주의 성장전략 수단이 되어 '의료계 군비 경쟁(medical arms war)'으로까지 명명될 정도로 과잉공급된 상황

– 의료기관간 종별 기능 미분화

• 현행 「의료법」 등은 의료기관 종별 설립기준을 설정하고 각 종별 의료기관에 권장되는 의료행위를 규정(예: 의원급은 주로 간단하고 흔한 질병에 대한 외래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병원과 종합병원은 주로 일반적인 입원, 수술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은 수술, 시술 등 고난이도의 치료기술을 필요로 하는 중한 질병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기관)

• 그러나 실제 건강보험 자료를 활용한 진료비 실적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의료기관의 종별 기능 분화는 매우 미흡

•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 비중(37.9%, '13), 의원의 입원진료비 비중(11.4%, '13)이 매우 높으며, 병원급의 외래 진료비 비중은 계속 증가 추세

– 의료기관 양극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 자유로운 의료서비스 공급자 선택권, 수도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다고 믿어지는 '높은 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지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 등으로 인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에 뚜렷한 개선이 미흡

• 호흡기계 질환, 인플루엔자 등 경증질환조차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비중이 증가하며, 소위 빅5병원 환자의 평균 타지역 점유율은 진료인원 50.7%, 내원일수 52.2%, 진료비 61.2%를 차지

Ⅲ. 정책제언

▣ 한국형 통합의료모형 모색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단일보험자 체계는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을 '공급 네트워크'로 다각화

• 다만, 그 출발은 일차의료 중심의 네트워크 구성에 두고, 보험료 차등화와 성과 기반 보상제도의 도입 등 지불보상제도의 개선과 같은 쟁점사안은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

▣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도입 검토

–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한계점 보완을 위해 VBP(Value Based Purchasing)의 보완적 도입 검토

▣ 후기의료전달체계의 구축

– 인구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급성기와 장기요양으로 양극화되어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급성기-아급성(sub-acute)-장기요양]으로 개선·구축

– 아급성기 의료 제공기관은 중소병원, 요양병원, 공공의료기관 등을 검토하되, 수가 마련 등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하여 도입 결정

연구보고서
14-3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A Report on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of 2012

연구책임자 • 최정수
공동연구자 • 최성은·오미애·염아림·정혜란·서남규·안수지·황연희

I. 연구목적

▣ 국가보건의료체계의 대응성·접근성 향상과 효율화를 위한 정책수행의 기초정보로서 질환, 의료이용, 의약품 복용, 의료비지출 및 지출원, 보건의식행태 등에 관한 개인 및 가구단위의 통계를 생산하고 관련요인을 규명함.

– 개인 및 가구단위 보건의료비 지출의 실태와 동태적 변화에 관한 기초정보를 제공함.

– 보건의료서비스 이용과 의료비 지출 및 재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

II. 연구내용

▣ 제9차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실시함.

– 2014년 3~9월 간 9개 조사팀(팀당 지도원1인 및 조사원 4인)의 운영을 통해 총 7,685가구(분가가구 포함) 중 7,339가구 21,218명의 조사를 완료함(95.5%).

▣ 2012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를 구성함.

– 7차(2012년) 및 8차(2013년) 조사자료로부터 2012년 연간의료이용 자료가 모두 수집된 가구원과 이들 가구원이 귀속되어 있는 가구로서 5,434가구 15,872명을 선별함.

– 표본의 대표성 확보, 불균등 확률추출에 의한 편향의 증가 및 조사과정에서의 무응답발생을 보완하고자 가중값 조정을 실시함.

– 만성질환 및 응급·입원·외래의료이용의 진단명에 대하여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의 소분류(3단위분류)를 적용함.

– 연간 가구총소득에 가구원수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소득을 기준으로 연간가구소득 5분위 및 10분위를 산출함.

– 가구 및 개인단위의 연간의료비를 각각 2종과 5종으로 산출함.

▣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를 개최함(2014.12.14.09:30-18:00, 대한상공회의소).

– 연구계획서 제출자에게 2008~2012년 연간데이터, 유저가이드, 코드북을 제공함.

– 베이비붐세대와 건강, 만성질환과 의료이용, 민간의료보험과 의료이용, 의료비 부담, 노인건강과 의료비를 주제로 한 19편의 논문과 4편의 대학원생 우수논문을 발표함.

▣ 2012년 한국의료패널 연간데이터에 대한 기초분석을 실시함.

–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등 의료수요 요인에 따른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 실태와 동향을 분석함.

• 만성질환과 의료: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만성질환 관리 약값 및 약제비 부담수준

• 임신출산과 의료: 분만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출산 후 관리와 의료비지출

• 보건의식행태와 의료: 건강생활실천상태와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활동제한과 의료이용 및 의료비지출, 의료접근성과 미충족의료

Ⅲ. 정책제언

▣ 주요 결과

– 가구 및 가구원 변동사항: 2008년 표본가구 대비 평균가구원수의 감소, 가구주 중 여성과 비경제활동자 비중 증가, 15세미만과 25~39세 연령층 비중 감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부산, 울산지역 비중 감소로,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대도시 거주 젊은 연령층의 조사거부 등 조사 이탈을 시사함.

– 만성질환: 총 5,434가구 15,872명 가운데 4,718가구 8,551명이 1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들이 앓고 있는 만성질환 종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6)의

소분류(3단위분류)기준으로 총 445개이고 그 중 유병률 1%를 초과하는 만성질환은 28개로서 다빈도 1순위는 고혈압(I10)이 차지함. 만성질환자가 1명이상 있는 가구의 비중은 연간가구소득 5분위 중 1분위가구와 연간가구의료비 5분위 중 5분위가구에서 월등히 높음으로써 만성질환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시사함.

– 임신·출산: 2012년 분만의료비는 자연분만의 경우 2007~2012년간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으며 (종합)병원의 경우 오히려 감소 경향마저 나타냈고 제왕절개분만비는 2009년 이후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 2012년 출산여성의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54.7%로, 2007년 30.5%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출산후 도우미 이용률은 24.8%임.

– 보건의식행태: 만19세이상 성인의 2011~2012년간 흡연상태 변화는 흡연에서 비흡연으로 2.3%, 비흡연에서 흡연으로 1.8%로서, 흡연자의 비흡연으로의 전환이 보다 많았으며, 2011~2012년간 고위험음주상태 변화는 고위험음주에서 비고위험음주로 4.9%, 비고위험음주에서 고위험음주로 변화 5.0%로서, 비고위험음주자의 고위험음주로의 전환이 보다 많았음. 또한 주관적건강상태의 변화는 좋은 상태에서 좋지 않은 상태로 변화 18.0%, 좋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변화 15.4%로서, 좋지 않은 상태로의 변화가 보다 많았음.

▣ 한국의료패널조사의 제한점 및 발전방안

–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도를 저해하는 조사누락이나 수집정보의 정확성 미흡과 관련하여 건강보험진료내역자료와의 연계 확대를 필요로 함.

– 장기간 조사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거부감 표출 증가와 관련하여 표본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보완을 필요로 함.

Ⅲ. 2014년 연구성과

04. 국민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선

-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과 일본
-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2014년 빈곤통계연보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_원종욱 선임연구위원
-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 한국형복지모형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14-10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영국 & 일본

A Comparative study on Social Assistance in UK and Japan.

연구책임자 • 노대명·이현주
공동연구자 • 임완섭·전지현·김근혜·박광준·고이시 노리미치·Dan Finn·Neil Lunt·John Hudson

Ⅰ. 연구목적

▣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외국의 최근 공공부조 제도 개편동향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정책연구의 수요증가에 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는 미진하였으며, 실제로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최근 개편동향에 대한 신뢰할만한 연구결과는 매우 부족함.

– 일차적으로 포괄적인 비교연구 자체도 매우 드문 상황이며, 더욱이 각국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심층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임.

• 제도개편 등 제반 정책수요를 감안하면, 포괄적인 비교연구보다 각국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최근 변화에 대한 심층연구가 필요하며, 연구결과를 각 국가별 단일 보고서로 발간함으로써 분석내용의 심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책연구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본 연구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공공부조 체계를 살펴보고 제도개편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의 개편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기본 정책자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함.

Ⅱ. 연구내용

▣ 영국과 일본 등 서구 주요 국가가 공공부조제도를 개편함으로써 변화하는 빈곤층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

▣ 영국의 공공부조제도 개혁

– 영국은 2012년 근로빈곤층 대상 공공부조를 통합해 Universal Credit 도입

– 근로빈곤층 복지수급자가 일을 할수록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도록 정책을 개편

▣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개혁

– 일본은 생활보호제도를 개혁하고, 근로빈곤층 자립을 지원하는 〈생활곤궁자 자립지원제도〉를 도입

– 일본의 제도개편은 빈곤층의 성격변화에 대응하는 신소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Ⅲ. 정책제언

▣ 영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 개편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제도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임.

▣ 최근 영국의 공공부조는 1990년대 자산기초 급여를 강화하여 빈곤의 전략적 퇴치를 앞세웠던 경험에서 더 나아가 근로를 강화하기 위한 공공부조의 축소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당연 빈곤층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려가 큼. 더불어 공공부조와 연계된 제도의 보장성 훼손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 이는 북유럽의 활성화전략과는 매우 대조되는 선택이며, 영국의 경험은 당대 정부의 지향이 복지의 환경이 되는 여론을 어떻게 형성하고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음.

▣ 일본 공공부조제도 연구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경제사회여건의 변화와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확장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 둘째, 한국 사회가 최저생계비라는 상징적 개념에 주목하고 있지만, 정작 일본의 최저생활비 개념이 갖는 강점에 충분히 주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해 보아야 한다는 점.
- 마지막으로 일본 생활보호제도가 개편되고, 이 과정에서 생활곤궁자 자립지원법이 제정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4-09-02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Political Implications of Providing Integrated Public Services for Disabled Elderly

연구책임자 • 황주희·김성희
공동연구자 • 노승현·강민희·정희경·이주연·이민경

Ⅰ. 연구목적

▣ 장애인구 중 장애노인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노인을 위한 정책적 관심은 미비

– 장애노인은 '노인'이라는 특성과 '장애'라는 특성 모두를 가지고 있어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중복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배제되거나 소외

– 또한 장애노인에 대한 개념 및 구분기준에 대한 사회적합의도 부재한 상황임.

– 특히 우리나라의 장기요양제도는 복지서비스 대상별로 (1) 장애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2)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서비스'로 구분되어 있어 제도간 연계 및 조정이 필요

▣ 본 연구는 장애노인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1) 장애노인의 개념 및 구분기준을 제시하고, (2)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라 장애노인특성을 분석함으로써 (3)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가는 장애노인을 위한 미시적/거시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장애노인 관련 연구는 장애인복지분야와 노인복지분야 그리고 일부 의료분야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장애노인의 이슈를 통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매우 미비

– 본 연구의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노인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장애노인의 실태 분석 실시

– 관련 전문가와의 FGI를 통해 현행 정책의 실태 및 한계 분석

–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해외 장애노인 대상 장애노인 관련 정책들을 살펴보아 장애노인 대상 복지서비스 정책 방향 도출

Ⅲ. 정책제언

▣ 장애노인 정책의 우선순위 설정 제안

– 장애기간이 길고 장애가 발달기에 발생한 고령화된 장애노인(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참여 제한 등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비중이 높은 점(19.6%) 등은 적극적 고용지원, 소득지원 등 다각적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 시사

▣ 장애노인의 특성 및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 방향 설정 제안

–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을 포함한 고령화된 장애인의 경우 (1)조기노화의 특성, (2)이차적인 장애발생과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50세 등 별도의 연령 기준에 따라 '장애노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대상 구분의 논의 필요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본인이 원하는 만큼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장애노인을 위한 그룹홈 및 주단기보호센터와 같은 시설의 확대 필요

– 반면, 장애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노화과정 장애인의 경우, 장애로 인한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에의 적응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 내용과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됨.

▣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거시적 정책 환경의 개선 제안

– 장기요양제도의 개선

•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처럼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장기요양제도가 분리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연계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현행 체계를 보존하면서 서비스 대상자에게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 필요

- 이를 위해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필요하며, 장애인 및 노인복지 분야의 전문가간 교류를 통해 '장애'와 '노화'의 이슈에 대한 공통된 이해를 전제로 이용자 입장에서의 통합적 제도 재설계를 고민해야 할 것임.

– 행정조직의 개편

- 미국의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 지역사회국을 신설하여 장애인과 노인, 발달장애인 지원 부서를 통합함으로써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고, 부처별 예산과 행정인력의 통합하여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 환경을 변화시킴.
- 장애노인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영역의 칸막이와 예산 이원화, 인력의 구분 등 서비스 제공에서 효율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에 대한 과감한 변화의 노력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4-15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개발을 위한 연구

Long-term Modelling for Financial Projections of Social Security

연구책임자 • 신화연
공동연구자 • 백화종·주성철

Ⅰ. 연구목적

▣ 최근 기초연금 도입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의료비 부담 등 보건복지제도 확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데, 복지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역할로 논의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재정전망에 기초한 정책대응 방안 마련 필요

–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재원조달 등의 다양한 요인을 감안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회보장재정을 전망하고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정책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재정추계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복지수요에 대한 다양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지출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제도 운영 및 예산집행 등에 있어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또는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복지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자 함.

▣ 사회보장지출의 수준과 구성 및 재원부담 분석시 기초자료가 되는 재정전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추계모형 및 방법론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자 함.

–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 하에서 보건복지제도의 성숙 등을 감안한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전망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한 시사점 도출

II. 연구내용

▣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지출과 함께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일반재정지출을 포괄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 alc 경제저성장 여건하에서 장기적인 사회보장지출 전망

– 향후 인구 고령화 및 경제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대비하여 세대별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향후 40년 이상의 장기적인 재정 상태 점검 필요

– 본 연구에서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 재정추계 모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 재정전망

▣ 인구고령화 및 경제저성장 여건하에서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모형 구축

– 향후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한 중장기 재정전망

– 사회보험재정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재정분석 및 인구거시경제변수 시나리오 분석

–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개선방안 논의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인구고령화 및 저성장 경제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시나리오분석을 통한 전망결과 비교분석

▣ 사회보장재정 전망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도 GDP 대비 사회보장지출의 비중이 장기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한편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특성상 사회보험 중심의 지출 구조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된 이후에는 사회보험 지출 중에서도 대부분의 지출이 노령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짐.

▣ 우리나라의 현 복지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당분간 복지지출의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사회보장제도가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재정 상태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필요

–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중심으로 지출이 확대되면서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적절한 재원배분 모색

– 향후 복지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과 함께 재원 배분의 우선순위와 관련된 세심한 고려 필요

Ⅲ. 정책제언

▣ 전체 사회보장재정 중 사회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사회보험 재정추계모형과 제도관련 변수 가정 등에 따라 사회보험 재정추계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므로 방법론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 필요

– 지출증가에 따른 부담수준 등 분석을 위해서는 사회보험료 인상 등 사회보험 제도개선, 국가재정수지와 국가부채 등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반영하여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전망결과에 의하면, 노령층에 사회보장지출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근로계층과 아동·여성 등 미래세대에 대한 제도발전과 지출확대 등 지출구조 개편 필요

– 복지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사회보험 중심으로 지출이 확대되면서 공공부조나 사회서비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적절한 재원배분 필요

– 사회보험 등 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재원마련방안과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 방안 모색 필요

▣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를 통해 향후 인구고령화 및 연금제도의 성숙 등에 의한 중장기 사회보장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부담수준 분석 및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

– 미래에 지향해야 할 사회보장수준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출과 부담간 균형을 통한 제도개선안 마련

– 현재와 미래의 사회보장지출 수준, 구성, 증가패턴 등을 토대로 한 제도개선방향 논의 시 사회보장지출 전망과 함께 부담수준 등 재정적 지속가능성 점검을 위한 분석 필요

연구보고서
14-16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 Study of the relative efficiency of different methods of social transfer payments

연구책임자 • 고제이
공동연구자 • 노용환·오미애·이우진·최현수·장인수·최요한

Ⅰ. 연구목적

▣ 한정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재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과정에도 개입함으로써 미래의 정부 재정수입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다른 모든 정부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지출 역시 정부수입의 크기에 제약을 받으므로 지출방식의 효율성 확보는 중장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본래의 목적이자 기능이며, 법률적인 지출속성과 별개로 사회지출은 일단 시행되면 하방경직적이고 자기확장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복지후발국가인 우리나라 여건상 사회보장지출의 급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지출방식에 따른 재정효율성과 효과성 차이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군집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사회보장급여 지출구조 비교 검토 및 우리나라 사회지출 구성 현황 분석

▣ 사회급여 유형을 현금급여(소득보조)와 현물급여(소비보조)로 구분, 수리적 모형을 통해 정책효율성 비교분석

▣ 일반균형관점에서 사회보장지출 및 지급방식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회계정행렬(SAM)구축,

▣ SAM 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수행

Ⅲ. 정책제언

▣ 사회보장지출의 유형별 정책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후생을 제공하며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월함.

– 수리모형 분석결과 현물급여가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급여수준은 현물급여액의 60-77%로 측정됨.

– 사회계정행렬 정책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생산보조(또는 현물급여)의 경우, 성장에는 바람직하지만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음.

– 가계에 대한 소득보조 방식에 있어 평균실효세율 인하와 같은 조세제도를 통한 간접지출이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인 이전지출로 전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나 성장효과 모두 열등한 것으로 확인됨.

연구보고서
14-19

2014년 빈곤통계연보

Poverty Statistical Yearbook 2014

연구책임자 • 임완섭
공동연구자 • 이주미

Ⅰ. 연구목적

▣ 2006년부터 시작된 선행연구에 2013년도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여건변화에 조응하는 통계자료를 제시

– IMF 경제위기 이후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정책적 · 학술적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관련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커짐.

• 그러나 대부분의 빈곤, 불평등 그리고 관련 소득분배 지표들에 대한 연구들은 단발적인 연구에 그치고 있어 관련 시계열 자료를 한 번에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 따라서 관련 정책 입안자나 연구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필요성이 컸다고 할 수 있음.

▣ 궁극적으로, 빈곤, 불평등과 대응하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제도의 정책입안과 기존 제도의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다양한 빈곤 및 불평등 지수와 관련 소득분배지표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빈곤 및 불평등의 실태와 추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입안의 적시성 확보에 기여

– 빈곤과 불평등 지수 그리고 관련 소득분배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의 실태를 횡단면적, 종단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다양한 지수의 산출을 통해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 등의 소득분배 실태를 횡단면, 종단면으로 제시

– 빈곤 및 불평등과 관련한 다양한 지수의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실증적 방법으로 빈곤율, 불평등도, 중간소득 계층 분포를 산출

▣ 빈곤율 및 중간소득 계층 분포 파악

– 빈곤율, 빈곤가구율, 소득갭비율, 빈곤갭비율, 중위소득 50~150%, 근로빈곤층 등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가구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소득갭비율
- 정부발표 최저생계비 기준/동일비율 최저생계비 기준/중위소득 기준 빈곤갭비율
- 중위소득 50~150% 소득분포

– 취약계층 빈곤율 제시

- 여성가구주 빈곤율, 여성가구주가구의 가구빈곤율
- 아동 빈곤율
- 노인 빈곤율
- 한부모가구 빈곤율
- 1인가구 빈곤율

– 지니계수, 소득점유율 등 불평등지수 산출

Ⅲ. 정책제언

▣ 본 연구는 통계지표를 생성하지만 그 해석 및 인과관계는 독자 및 연구자들의 몫으로 남겨두었으며, 여기에는 주요 결과만을 제시함.

– 사회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공무원과 학자들, 그리고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람.

• 다양한 기준과 방법에 의한 빈곤 및 불평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활용 가능함과 동시에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연구의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절대적 빈곤율

– 1인가구를 포함한 전가구를 기준으로, 2013년 절대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1.7%로 전년대비 0.6%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9.0%로 전년대비 0.1%p 하락하였음.

– 2009년을 정점으로 감소 경향을 보이던 절대빈곤율이 2013년에는 전년도보다 전반적으로 상승함(가처분소득 적용 빈곤율은 감소).

▣ 상대적 빈곤율

– 2013년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16.7%로 전년대비 0.4%p 상승하였으며, 가처분소득 기준 13.7%로 전년대비 0.3%p 하락하였음.

– 최근 3년간 가처분소득 적용 상대빈곤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나머지의 경우 등락하는 형태의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불평등

– 2013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 0.328로 전년대비 0.001 하락, 가처분소득 기준 0.296으로 전년대비 0.004 하락하였음. 소득의 경우 불평등이 완화된 반면 지출부문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남.

연구보고서
14-22-7

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보장재정

Population Aging, Economic Growth, and Social Security Financing

연구책임자 • 원종욱
공동연구자 • 우해봉·신화연·고제이·황남희·백혜연·장인수·손지훈

Ⅰ. 연구목적

▣ 인구구조의 변화가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임.

– 저출산 현상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수년 전부터 보고되어 왔기 때문에 새로운 충격은 아니며, 오히려 인구고령화라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부가 되어 익숙해져 가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인구고령화 현상을 조명하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즉, 인구구조변화를 수준과 속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망된 결과가 경제성장, 복지지출, 국가재정, 연금제도, 그리고 공·사적 이전의 변화추이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인구구조변화의 사회보장재정, 경제성장, 연금제도, 공·사적 이전에의 파급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과 기대수명의 증가 등으로 인한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이 우리 사회전반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가져옴.

–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를 수준과 속도 측면에서 재조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전망된 결과가 경제성장, 복지지출, 국가재정, 연금제도, 그리고 공·사적 이전의 변화추이 등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 각 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력감소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복지지출의 구성과 수준을 전망
- 인구구조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
- 인구고령화와 장수리스크가 연금제도에 미치는 파급효과
- 인구구조변화가 공·사적 이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Ⅲ. 정책제언

▣ 저출산과 인구고령화는 이미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음.

–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여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노인관련 사회지출이 급증하는 등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 아울러 인구구조의 변화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며, 앞으로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며, 특히 인구고령화가 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게 될 위험요인과 비용을 선제적으로 규명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본 연구는 인구구조변화를 수준과 속도라는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가 노동력감소, 인적자본의 질적인 변화, 경제성장률, 장수리스크,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가재정, 공·사적이전 등 광범위한 영역에 어떤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음.

연구보고서
14-22-7-1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Population Aging and Public Expenditure in South Korea

연구책임자 • 우해봉
공동연구자 • 신화연·박인화·김선희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의 현황과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의 주요 특징, 그리고 이러한 인구 고령화가 복지지출에 미치는 함의를 살펴보는 한편, 급격히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 속에서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운영의 기본 방향을 검토함.

Ⅱ. 연구내용

▣ 한국 사회는 지난 20세기 후반부 동안 출산력과 사망력에서 매우 가파른 인구변천 과정을 거쳤으며, 이에 따라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고령 인구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동시에 고령화의 속도 또한 매우 빠른 모습을 보였음.

▣ 인구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사회보장재정 지출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2014년 현재 GDP의 10.7% 수준인 복지지출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보건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낮은 지출구조상의 특징을 보임.

▣ 중장기적으로도 사회보장재정 지출은 2040년에 OECD 평균인 22.1%(2009년 기준), 2060년에는 GDP 대비 29.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사회보험 지출 중에서도 인구 고령화와 밀접히 관련된 공적연금과 보건지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책제언

▣ 현재까지 복지지출이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성숙과 더불어 향후 인구 고령화의 급격한 진전은 사회보장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증가시킬 개연성이 높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선진국들과는 달리, 고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사회안전망조차 체계적으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급격한 인구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우려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 물론, 과거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인구 고령화가 복지지출 증가로 곧바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급여의 관대성 등 제도적 대응 방식에 따라 국가별로 복지지출에 상당한 변이가 있음 또한 사실임.

– 이에 따라, 사회보장재정에 대한 인구 고령화의 영향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 고령화가 복지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인구 고령화 현상이 인류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건임을 고려할 때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급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향후 본격적으로 도래할 인구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부문을 포함한 사회 전반에서 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연구보고서
14-22-7-2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The impact of an ageing population on the personal income tax revenue in Korea : A dynamic micro-simulation approach

연구책임자 • 고제이
공동연구자 • 권혁진

Ⅰ. 연구목적

▣ 노동력 투입과 경제 활력 감소가 예견되는 현 시점에서 고령사회에서 국정의 핵심영역인 사회보장정책 수행과 재정운용에 대한 정확한 현안 인식과 미래의 재정위험을 진단할 수 있어야 함

–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됨에 따라 관련 사업과 지출규모가 급증함

– 사회보장지출 급증으로 정부재정이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차원과 보장의 적정성 차원이 동시에 평가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 제도의 잠재적 지속가능성을 타진하고 고령사회에 대응가능한 중장기 조세·재정·복지정책의 설계와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Dynamic micro-simulation fortax and welfare policy analysis)을 구축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동태미시모의실험모형을 개발하여 인구고령화와 연금소득증가에 따른 정부 소득세수 추이를 전망함

– 장기세수모의실험에서는 2014년 적용 소득세법을 기준으로 1) 정책적 개입이 없을 경우(기준선) 2) 두 가지 과표상승효과 조정방식에 대한 세수영향과 세구조의 변화를 살펴봄

• 중장기적으로 관련세수의 명목GDP 대비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 기존 국내 연구결과와 달리 우리 모형에서는 전체 추정기간(2014~2100년) 동안 모든 경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인구고령화와 연금제도 성숙에 따른 연금소득자 증가와 동시에 영유아수 감소 및 1인 가구 증가에 기인한 평균 기본공제자수가 감소가 우리 모형 안에서 모두 반영되어 과표계급향상(bracket creep)효과가 정확하게 포착되기 때문으로 확인
- 한편, 연금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에서는 조세의 누진성 구조는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지만 모든 경우에서 평균세율이 하락함에 따라 세제의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이는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대하는 재정안정화 효과가 조세비용과 사회적비용까지 고려할 경우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어떤 제도이든 국민부담률의 조정과 관련한 정책적 개입에 있어 관련된 모든 제도들 간의 유기적인 재정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을 말함.

Ⅲ. 정책제언

▣ 지금까지 우리나라 세제정책은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개입하였고 재정지출을 포함한 여러 정책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세제자체의 경기조절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으며, 이와 같은 재량적 지출이 경기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회경제적 변화에 조응가능한 중장기 세제정책 운용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이번 모의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연금과 소득세를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조세라는 별개의 제도가 회계 상 분리되어 운용되고 있지만 상호유기적인 재정관계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어떤 제도이든 그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고려할 경우 반드시 관련제도들에 대한 재정영향까지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임

연구보고서
14-28

한국형복지모형구축: 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Developing a Korea-Specific Welfare State Model

연구책임자 • **여유진**
공동연구자 • **김미곤·강혜규·장수명·강병구·김수정·전병유·정준호·최준영**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지금까지 문제 중심적, 혹은 제도 중심적인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분석 대신 신제도주의라는 분석틀로 한국 복지국가를 둘러싼 환경과 제도적 유산을 분석하고 '한국형 복지국가'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함으로써 미래 복지국가 설계에 함의를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이 같은 접근은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몇 가지 한계 1) 복지국가에 대한 협소한 영역 설정, 2) 복지국가의 역사성에 대한 상대적 간과, 3) 철학의 빈곤과 관점의 비일관성으로부터 출발함.

– 기존 연구들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들을 염두에 둠으로써, 한국의 복지국가에 대해 좀 더 포괄적이고, 역사적이며, 일관된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러한 접근은 대안의 구체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소의 한계를 가지기는 하지만, 한국 복지국가의 미래 설계에 있어 비판과 반비판의 논쟁점을 촉발하기에는 적절한 방식이라 사료됨.

Ⅱ. 연구내용

▣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라 할 수 있는 자본주의적 산업화 과정은 소위 '자본주의 다양성'으로 대변되는 생산·복지체제와 숙련형성 체제의 특수성으로 발현됨.

– 후발국가의 산업화 전략 중 우리나라는 대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여 산업화를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산업화', '조립형 전략'을 구사해왔음.

– 결과적으로 이러한 성장 경로를 통해 급속한 산업화에는 비교적 성공하였지만, 복선형 산업화보다는 숙련 절약적인 조립형 산업화의 경로를 밟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의 심화, 고용창출 능력의 제약, 대외 무역의존성의 심화, 산업연과 고리의 약화

와 같은 오늘날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조립형 산업화 전략과 이를 지원하는 개발주의적이고 노동배제적 국가의 정책 지향성은 개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적 영역인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화의 단초를 제공했음.

– 특히,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극적으로 전개되면서 계약직과 간접고용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아래 부분은 저임금고용, 비공식고용, 영세자영업, 그리고 근로빈곤의 문제가 편재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시장은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뿐만 아니라 조립형 산업화 전략과 맞물려 향후에도 확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음.

– 그 결과는 청년 세대의 고용의 양과 질 저하로 이어져, 복지국가의 기반이 되는 지속가능한 세대간 사회계약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를 초래하고 있음.

▣ 자본주의적 숙련형성과 근대적 시민만들기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교육은 특히 한국에서 독특한 지위를 향유하고 있음.

– 산업화 과정에서 교육은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들에게는 계층이동의 가장 중요한 통로로 평가받아 왔으나, 한국의 교육체제는 최근 서열화된 고등교육으로 인한 과열된 교육투자와 교육의 숙련형성 기능 저조로 인한 비판에 동시에 직면해 있음.

– 결국 공공재로서의 교육의 가치는 희석된 채 사유화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경쟁을 초래함으로써 고비용·저효율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효율적인 숙련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복지국가의 연대적 가치기반을 침식하고, 보상 격차에 대한 정당성을 확대·포장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위험성이 내포하고 있음.

▣ 이같은 산업화 과정과 발전주의적 국가 개입 전략 하에서 가족은 형식적으로는 많은 구조적·구성적 변화를 보였으나, 이념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가족주의가 강하게 온존하고 있음.

– 이는 여러 지표들(초저출산 저수준 균형상태 도달, 1인가구와 한부모가구의 증가, 이

혼율 등) 사이의 불균형 발전,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의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

– 이러한 지표상의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혼인규범과 자녀중심의 가족주의 규범은 매우 강하게 남아 있으며, 맞벌이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왔지만, 부양구조에서 여전히 성별분업이 지속되고 있는 양상임.

– 한국의 복지국가와 관련하여, 자녀중심의 가족주의, 고등교육의 시장주의적 성격,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화가 맞물리면서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의 연쇄고리가 더욱 고착화되는 경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경제·노동시장·교육·가족적 특성을 배경으로 한국의 복지국가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되고, 한국 복지국가 논쟁이 뜨겁게 가열되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전쟁과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모태적 복지제도들의 특성은 이후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도입과 발전 과정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미군정과 전후 시기 실제적인 구호 재원은 우방국들로부터 지원되는 구호금품과 민간원조단체의 자선사업을 통해 상당 부분 조달되었음.

– 외환위기와 김대중 정권의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제도들이 도입되거나 범위와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초기 잔여적 복지로부터의 출발, 사회보험의 하향식 확대, 민간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라는 '제도적 유산'을 완전히 떨쳐내지는 못했음.

– 오늘날에도 여전히 잔여적인 공공부조제도에 부하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고, 사회보험의 경우 지위유지적인 특성이 강하며, 오히려 불안정한 근로계층을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또한 민간 중심의 전달체계는 때로는 내담자적(clientelism) 이익집단으로 변질되어 공공성을 제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함.

▣ 복지 전달체계에 있어서도 지자체에 위임해온 복지 행정의 수요가 복지제도의 확장에 따라 크게 확대되고, 복지업무의 성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분권화 경향과 결합한 지자체 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형성은 일정 궤도를 유지한 채 지속되고 있음.

– 그 결과 전달체계 내적인 균열과 갈등의 요소가 편재하고 있으며, 지자체 복지 전달체

계의 주축인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 간의 역할갈등으로 가시화된 복지부문과 행정부문의 갈등, 보건과 복지, 복지와 노동 간의 연계와 통합 논의에도 불구하고 분절된 전달체계 속의 유관 부문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 그 한 단면임.

– 민간 서비스 부문 전달체계에서 전통적 사회복지사업을 담당해 온 법인 중심의 비영리 사업자와 바우처 등 사회서비스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도 또 다른 균열의 양상을 보여줌.

▣ 한국의 복지재정은 현 시점에서도 '뜨거운 감자'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근 20여년 간 복지재정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전체 GDP에서 공적 사회지출이 점하는 비율 역시 크게 상승해 왔음.

– 이는 기존 사회보험, 특히 공적 연금의 성숙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인구고령화로 인한 건강보험 지출 상승,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공보육, 장기요양보험, 각종 사회서비스 등 비교적 최근에 도입된 복지제도로 인한 지출 요인 증가를 반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복지재정은 지속가능한 복지라는 측면과 적정한 수준의 복지지출이라는 측면 모두에서 이러한 복지제도의 성숙과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취약한 재정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됨.

– 무엇보다도 낮은 세율과 각종 비과세 감면 조항, 지하경제 등으로 인한 낮은 실질 조세부담률과, 높은 비율의 국방비와 경제사업 비중이 사회복지지출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세 최고세율, 고소득 자영자를 중심으로 만연된 탈세, 그리고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에게 제공되는 비과세 감면 등이 소득세수가 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주요 원인임.

– 이에 더하여 전반적으로 고용률이 낮고, 전체 근로소득자 중 사회보장 미가입자 비율이 낮은 것이 고용주 사회보장 기여금이 낮은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Ⅲ. 정책제언

▣ 첫째, 본 연구가 매우 느슨하기는 하지만 신제도주의적 접근을 준용하여 한국형 복지국가의 특수성과 그 제도적 유산을 분석한 데 대해, 자칫 '제도의 포로'가 될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음.

– 과거의 '경로의존성'에 고착되어 미래의 대안을 사전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이 그것임.

•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분명 어떤 식으로든 '극복'의 대상이며, 그것을 간과하고 '바람직한 이상향'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필자들의 판단임.

▣ 둘째, 복지국가를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에 대해 새삼 강조하고자 함.

– 복지국가는 단순히 '복지제도들의 이러저러한 조합'을 넘어서는 '시장-국가-가족(사회)'의 구조화 방식이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권력균형에 대한 타협 결과로 구축된 '사회적 건축물'이며, 또한 복지제도들은 복지의식과 태도를 변화시키고, 다시 복지태도는 복지제도를 포함한 사회제도의 변형을 가져오는 상호구성적 관계성에 기초하고 있음.

– 따라서 산업조직, 노동시장, 교육과 숙련체제, 가족제도와 가족주의, 복지제도와 구조, 국가의 재정구조, 그리고 복지태도를 역사적·총체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형 복지의 "꼴과 상"을 어느 정도 제대로 짚어볼 수 있다고 판단됨.

• 다만, 한 연구자가 이러한 작업을 모두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에서 협업이 필수적이지만 협업의 한계도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한계를 나름 짚어보는 것도 독자의 몫이라 생각됨.

▣ 마지막으로, 한국형 복지모형의 모색은 '사회목표의 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음.

– 새로운 사회의 목표는 단순히 복지가 잘 구축되어 있는 사회가 아니라 '좋은 사회'를 향한 그 무엇이어야 할 것임. 성장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고 더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좋은 사회는 사실상 자본주의 훨씬 이전, 서구의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동양의 공맹시대부터 인류가 추구해온 공동체의 오랜 이상이자 과제였음.

– '사회질'이나 '행복'연구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며, 큰 틀에서 보자면 '한국형 복지국가' 논의도 이와 다르지 않으며, 결국 한국형 복지모형의 설계는 한국사회가 어디를 향해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리는 작업일 것임.

연구보고서
14-30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The 2014 Korea Welfare Panel Study (KOWEPS): Descriptive Report

연구책임자 • 이태진·정은희·정해식·이봉주
공동연구자 • 오미애·전지현·박형존·신재동·정희선·이주미·오혜인·박나영·김태성·구인회·강상경
이상록·정원오·이서윤·김화선·이혜림

Ⅰ. 연구목적

▣ 국민의 복지 욕구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고 정부 정책영역 중에서도 사회정책, 특히 복지 정책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음. 때문에 실증적 분석에 근거한 정책수립 및 평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

▣ 그동안 생산된 횡단면 조사만으로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특성 및 연령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욕구의 변화 등을 추적하여 이를 정책수립 및 평가에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기존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차상위·빈곤패널과 자활패널,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복지패널을 통합한 '한국복지패널(KOWEPS)'을 2006년도부터 구축하고 있음.

▣ 한국복지패널의 구축목적

– 첫째,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근로빈곤층, 차상위계층의 규모 및 생활실태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정책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정책지원에 따른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함.

– 둘째, 연령, 소득, 경제활동상태 등에 따른 집단별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동태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집행의 효과성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의 형성과 제도적 개선 등 정책 환류에 기여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 조사표 구성은 크게 가구조사표, 개인조사표, 부가조사표로 구성됨.

– 가구조사표는 가구원 공통항목에 대한 설문내용이 중심이고, 가구원조사표는 15세 이상 가구원(중,고생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내용이 구성됨.

– 부가조사의 경우에는 아동, 복지인식, 장애인의 순서로 2006년부터 3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으며, 이 순환 주기에 따라 2014년 9차 조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세 번째 부가조사를 수행하였음.

▣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 개선사항

– 장애인 부가조사 표본의 추가확보: 9차 장애인 부가조사 대상을 6차 장애인 부가조사 참여자로 한정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분석가능성의 제약을 극복하고자 9차 장애인 부가조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이전 차수(6차) 응답자뿐만 아니라, 8차년도 조사의 15세 미만 장애인 가구원 전원(총 25명)을 포함하였음.

– 종단분석 결과의 소개: 2013년 기초분석 보고서부터 도입된 종단분석 결과 보고에 이어, 2014년 기초분석 보고서에서도 일부 핵심변수를 재선정하고, 종단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 리뉴얼 및 영문 홈페이지 개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의 이용도 증진 및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과 홍보를 강화하고자 국문 홈페이지 리뉴얼을 추진하였음. 또한 영문 홈페이지를 신규 개발하여 국제적으로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홍보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표, 유저가이드, 코드북 등의 영문번역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패널 데이터 이용 및 연구성과의 국외확산을 도모하였음.

▣ 2014년 9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수행 결과

– 조사기간: 2014년 3월 8일부터 8월 15일까지 총 161일 동안 모든 조사를 완료함.

– 조사완료가구: 8차 조사를 완료한 조사대상 원표본 5,104가구 중에 4,896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고, 원표본 4,896가구에 더해 기존 신규가구와 올해 발생한 추가 신규가구를 포함한 542가구, 신규 조사대상 가구인 1,800가구 중 조사가 완료된 1,610가구까지 총 7,048가구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였음.

Ⅲ. 정책제언

▣ 한국복지패널(KOWEPS)은 현재까지 9차 조사를 완료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축적되고 있으며, 한국복지패널 데이터 구축 및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 첫째, 효율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복지 관련 패널데이터가 구축됨으로써, 빈곤층을 포함한 국민의 복지 욕구와 경제활동 등 생활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함. 특히 경제, 사회적 행태변화,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규모와 실태변화를 분석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복지정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둘째, 사회복지 관련 통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한국복지패널데이터가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통계인프라 정비와 더불어 사회복지 관련 기초자료 생산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음. 또한 한국복지패널조사 원자료 및 기초분석 보고서, 설문지 등 패널조사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홈페이지(http://www.koweps.re.kr)를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복지 영역을 넘어 사회과학 전 영역에 걸쳐서 학문적 논의를 위한 기초적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분야별 연구 활성화 및 분야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사회복지 분야는 양적 데이터 활용하는 계량적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만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부족하였음. 그러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분석을 수행하고 자료를 학술대회 등의 방법으로 공유함으로써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 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연구보고서
(수시)
14-03

우리나라의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The Korean Welfare Regime : Prospects and Financing Strategies

연구책임자 • 고제이
공동연구자 • 원종욱·박인화·신화연·우해봉·권혁진·박승준·이주하·최연혁·홍인기·김태은·장인수
최요한·김선희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및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 재원조달이나 복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임

–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확대 및 성장잠재력 저하 등 미래의 사회경제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체계를 정비하고, 재원조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주요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시스템 발전과정에 대한 경로분석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및 재정구조 전반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고령사회에 대응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발전경로분석과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미래사회에 대응 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복지지출 전망과 부담수준, 향후 조세·재정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 주요 복지국가 사례분석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변천과정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부담과 지출수준 그리고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개혁방향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음

▣ 경제·사회의 변천과정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그리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재정정책의 개혁방향까지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 급속한 외연적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다양한 국제비교와 분석을 통해 점검하고,

– 이에 기초하여 바람직한 제도설계와 운용방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전략을 제시하였음

▣ 주요 연구내용

– 우리나라 사회보장 지출규모와 구조 검토 및 국제비교

– 사회보장지출 및 보장성 수준 중장기 전망

– OECD 복지레짐별 사회보장지출구조와의 비교 분석

– OECD 주요국 재정지출 동향검토 및 우리나라 사회보장재정의 지속가능성 진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의무지출 증가속도 제어가능성 검토

– 주요국 세입구조 변천과정 검토 및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정책의 특징 분석

– 우리나라 세수구조의 변천과정과 재정여건 진단을 통한 고령사회 대응가능한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 모색

Ⅲ. 정책제언

▣ 고령사회 정부 재정소요 충당을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의 조정이 필연적임

– 기간세목을 통한 세수확충이 요구되는데, 개인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다소간의 조정 여력이 존재함

– 증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세대간 세부담의 형평성과 함께 사회경제적 효율성까지 고려해야 함

– 세율 인상과 같은 직접적인 증세 이전에 과세기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비과세 감면제도의 정비 및 이전지출체계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비세 중심의 조세체계 개편 논의 필요

– 현행 조세재정체계는 후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부담과 적은 혜택을 주는 구조임

– 근로-저축-소비의 생애주기를 고려, 세대간/세대내 부담과 혜택의 형평배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소비(서비스)에 대한 과세중심으로 세수입 구조를 전환할 필요

▣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 특정 세목이나 지출항목에 대한 조정은 필연적으로 사회경제적 갈등을 초래하므로, 큰 틀에서 정합성을 확보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함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각 경제주체들의 부담과 혜택의 배분상태에 대한 면밀한 고찰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수적임

– 사회적 타협과 정책시행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세수확충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임

연구보고서
(수시)
14-06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Assistance Programs for Low-income Families in Korea and Policy Suggestions

연구책임자 • 류정희
공동연구자 • 김정현·박능후·함영진·유진영

Ⅰ. 연구목적

▣ 2014년 12월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정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연동되는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관련된 규정과 기준 조정이 시급한 과제

– 국민기초보장생활제도 등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광범위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차상위 계층 지원사업이 시행되어 왔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급여체계로부터 맞춤형 욕구별 개별급여체계로 전환에 있으며, 기존의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빈곤선으로 대체됨.

▣ 이러한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변화는 모법에 연동되어 시행되어온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 사업지침 및 예산의 조정 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에 대한 기초적인 현황파악조차 미비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차상위지원사업의 체계화 방향과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시행중인 법정차상위계층 지원사업과 우선돌봄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하며, 기타 차상위계층 지원 급여서비스를 포함하여 분석함.

– 14개 부처의 116개 차상위계층 지원 급여서비스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삼았으며, 선정기준과 사후관리에 대한 현황분석은 116개의 차상위지원 급여서비스 중, 범정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는 13개 부처 91개의 복지급여서비스를 중심으로 분석함.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 분석

– 116개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건복지부(57개), 여성가족부(18개), 교육부(11개) 등이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 주를 이루었고, 욕구별로는 의료(22개), 교육(21개), 생계(18개), 자활(15개), 돌봄(9개), 주거(6개), 보육(6개) 등의 욕구에 대응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대상 연령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36개)이 가장 많았으며 전연령(33개)과 성인일반(24개)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뒤를 이었으나, 상대적으로 노인을 지원하는 사업은 (12개)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 116개 사업 총예산 중 주거관련 급여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으며, 전체 대상 가구의 절반 이상이 생계지원과 관련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예산의 욕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36.5%), 교육(26.4%), 생계 (24.1%) 욕구에 대응한 급여서비스가 높게 나타났으며, 정부부처별로는 국토교통부(36.4%), 보건복지부(30.4%), 교육부 (29.2%)의 순으로 예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지원대상별 분포를 살펴보면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개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교육급여가 뒤를 이었음.

– 급여대상자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42개(36.2%)였으나, 법정차상위계층만을 우선대상으로 하는 급여사업은 6개(5.2%)에 불과하였고, 기타 별도의 선정기준을 갖고 있는 사업들이 68개(5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급여유형별 분포를 살펴보면, 116개의 차상위계층 지원 중 51.7%의 사업(60개)이 현금성 급여를 지급했고, 바우처를 포함하여 38.8%가 현물성 급여를 제공.

– 급여지원기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65.5%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급여서비스가 지속적 (43.1%) 또는 주기적인 지원 (22.4%)을 제공했으며, 나머지 34.5%의 급여서비스가 일시적 지원을 제공.

– 지속적/주기적인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76개 급여서비스 중 71.1%가 전산연계를 통하여 수급자격이 관리했으며, 8개의 급여서비스가 증명서 재징구를 통하여 사후의 수급자격을 관리했음. 최초자격확인 이후 미관리되는 급여서비스는 4개 (5.2%)로 나타났음.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리 현황

– 13개 부처 91개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의 선정과 관리현황을 살펴본 결과, 행복e음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이 46개, 범정부 복지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집행되는 사업이 45개임. 특히 복지부의 경우 50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중 38개가 행복 e음을 통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 중 20개 지원사업이 통합관리형을 통해 처리되고 있음.

– 13개 부처 91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범위를 조사단위와 급여수급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사단위는 가구단위 (76개)로 설계되어 있지만, 해당 복지사업의 급여수급단위는 개인단위 (79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상자 선정방법은 29개 사업에 적용되고 있는 자격활용방법이며, 18개 사업이 소득인정액을, 13개 사업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선정기준별 분포에 있어서는 최저생계비가 적용된 사업이 29개, 전국가구월평균소득 기준이 적용된 급여서비스가 13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91개 차상위계층 지원사업간 중복수급 방지 유형을 살펴보면 복지부 등 4개 부처의 14개 사업을 중심으로 30개 중복방지 유형이 행복e음 (13개)과 범정부 시스템 (17개)에 설계되어 있음. 복지사업 신청단계에서 중복수급이 원천 차단되는 기능이 구현되어 있는 행복e음 사업에 비해, 범정부사업 대부분이 사후적으로 중복방지 검토 및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복수급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스템 간 중복수급 방지를 위한 필수정보의 연계가 필요함.

Ⅲ. 정책제언

▣ 차상위계층 지원제도 내에 존재하는 급여서비스의 쏠림현상 개선함으로써 기초생활 수급자와 비수급 차상위계층 사이의 형평성 제고

– 차상위계층을 차상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로 재조정하는 것은 차상위 지원사업들의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며 기초생활 급여 밖 자원의 효과

적인 분배효과를 높일 수 있음

– 급여의 쏠림현상을 개선함으로써 차상위계층 내에서 보다 큰 욕구를 가진 취약계층인 법정 차상위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행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으로부터 사각지대에 있는 일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확대할 수 있음.

▣ 체계화방안의 핵심은 욕구별 급여체계로의 전환에 기초하여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을 욕구별로 조정하는 데 있으며 욕구별 특성을 고려해서 선정기준과 선정방식의 체계화가 필요함.

– 차상위계층 실태조사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범위와 규모를 파악해야 차상위 지원사업의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음. 이를 통해, 각 욕구 영역별로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개입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규모를 밝힐 수 있으며, 차상위계층에 초점을 둔 「차상위계층 지원정책」 개발과 정비가 가능함.

– 선정방식의 욕구별 다양화 구체화해야 함. 돌봄, 자활 등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나 급여액이 낮거나 일시적인 급여의 경우 행정비용과 행정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재산기준의 적용이 불필요한 반면, 생계나 주거지원과 같이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급여가 제공되는 지원사업의 경우 재산기준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재산기준의 적용방식은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재산 상한선(Cut-off)을 활용한 방식이 있는데, 소득인정액과 재산상한선을 사용하는 방식을 혼용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의 재산정도는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산적용방식이라고 할 수 없음.

▣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의 사후관리 체계화

– 사후관리체계화를 위해 범정부 시스템을 활용하는 복지사업의 신청 단계에서부터 실시간으로 중복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 사후 확인 및 환수 등 업무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기능개선이 필요함.

– 아울러 범정부 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되는 복지사업의 업무처리 단계별(신청-조사-결정-지급-사후관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DB를 구축해야할 것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5.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강화

-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연구
-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연구보고서
14-11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지출 정책 연구

Analysis of Employment and Welfare Oriented Fiscal Policy

연구책임자 • 남상호
공동연구자 • 이철선·문석웅·권소일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사상 유래 없이 빠른 속도로 저출산 및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

– 장기적인 성장 둔화로 인하여 고용창출 능력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서 장기침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 또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계구성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득 양극화 및 불평등의 심화, 그리고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한 사회복지 지출이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음.

• 이러한 급속한 사회복지 지출의 확대는 향후 분야별 재원배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를 사전에 평가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먼저 분야별 재정지출이 경제성장·고용·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 개발된 모형을 바탕으로 고용-복지 친화적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재정지출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고,

– 해당 평가 결과를 이용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모색하는데 있음.

II. 연구내용

▣ 호주방식의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분야별 재정지출이 고용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분야별 재정지출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공공행정 및 국방', '교육', '보건 및 의료'의 순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분야별 재정지출이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의 복지증대 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는 '보건의료', '교육', '공공행정 및 국방'의 순서로 나타남.

• 반면 순수공공재인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 지출은 소득재분배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재정지출의 고용 및 복지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고용증대 및 가계부문의 복지수준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공공행정 및 국방 분야 지출은 고용증가율은 높은 편이지만 가계부문의 효용증가 정도는 낮은 편이었음.

– 보건 및 의료분야 지출의 경우에는 가계부문의 효용증가 정도는 높았으나, 고용 확대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음.

▣ 이상의 분석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지출분야의 포괄범위, 초기균형의 정의, 배분규칙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database의 기준 시점(즉, 초기균형)과 재정지출의 가계부문과 산업 간의 배분비율이 최종결과에 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Ⅲ. 정책제언

▣ 여기서는 분야별 재정지출의 차별적 효과를 비교·분석 할 수 있는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향후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의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정책분석 담당자들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 큰 특징임.

• 기존의 수요중심 모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선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재정지출과 다양한 거시경제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 시뮬레이션(counter-factual) 분석 결과로 부터 경제성장 및 고용, 그리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임.

▣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연산가능 일반균형 모형은 비교정태 분석(comparative static analysis)을 위한 모형임.

– 현실적으로 재정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중기 및 장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본 모형을 바탕으로 동태 모형으로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함.

• 향후 중기재정 전망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나 장기 전망의 효과 분석, 그리고 정책당국의 부담으로 자리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위해 필요함.

연구보고서
14-14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가족관계 갈등과 가족기능 갈등을 중심으로

Family Conflicts and Policy Responses-Relational Conflicts and Functional Conflicts

연구책임자 • 김유경
공동연구자 • 이진숙·이재림·김가희

Ⅰ. 연구목적

▣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해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갈등에 대비하여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도출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 정책기반을 마련함.

– 가족갈등의 개념 및 유형을 정립하고, 갈등원인을 다차원적으로 진단하는 한편,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가족갈등 양상을 진단하고 문제점 및 정책욕구를 도출함.

– 국내의 관련 정책 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선진국의 정책사례를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가족갈등의 환경 및 원인, 가족관계 및 가족기능상 갈등양상 진단, 선진국 사례 분석과 등을 기반으로 가족갈등유형별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함.

Ⅱ. 연구내용

▣ 가족갈등의 유형 및 범위

– 가족관계상의 갈등에는 부부 갈등, 가족 내 세대 갈등, 형제자매 갈등 포함

– 가족기능상의 갈등에는 부모-성인자녀 간 부양갈등, 일-가족 갈등 포함

▣ 가족갈등의 원인진단

– 개인수준 원인으로는 생애단계 특성, 성격 특성 및 정신건강 문제, 낮은 자아분화 등으로 개인의 생애과정에 따라 양상이 변화함.

– 가족수준 원인으로는 가족의 생활사건, 경제적 문제나 어려움, 가족구성원 간의 차이와

불일치, 가족 내 부정적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 패턴, 상호작용 부족, 부정적 원가족 경험,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 불공평한 관계 및 분배 등이 해당됨.

– 사회수준 원인으로는 비민주적 젠더관계, 압축적 근대화로 인한 세대 차이, 상충하는 규범의 혼재로 발생하는 사회적 양가성, 감정적 과부하·도구화·물신화 등이 포함됨.

▣ 가족갈등 양상 및 대응욕구

– 최근 1년간 가정 내에서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32.5%로 1/3 정도가 가족갈등을 경험하였고, 그중에서 가족 내 세대 갈등이 1/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형제자매 갈등과 부부갈등이 각각 1/5의 분포를 보였음.

• 갈등의 대처방식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눈다와 그냥 참는다는 경우가 많아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은 반면,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가정 내부적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임.

– 최근 1년 간 부부가 갈등을 경험한 갈등은 32.0%로 기혼 응답자의 1/3이 부부갈등을 경험하였고, 갈등원인은 배우자 성격 및 사고방식, 배우자 생활방식, 부모 및 형제자매 관계, 경제문제, 자녀교육문제, 가사 및 육아부담 순으로 나타났고, 특히 은퇴 후 경제문제로 갈등이 증가함.

• 대처방식은 대다수가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았으며, 주위 사람 및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적어서 부부 중심으로만 해결하려는 특성을 보임.

• 부부갈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변화는 부부간 소통단절로 부부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약 70%이었고, 이외에도 부부갈등으로 폭력과 이혼 등 심각한 결과를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 1년간 부모관점에서 자녀와의 갈등은 청소년기 자녀(45.4%)가 성인기 자녀(28.6%)보다 훨씬 심각하였고, 특히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32.3%로 일반 성인자녀와의 갈등보다 다소 높았음.

• 갈등원인은 주로 생활습관, 취업 및 진로문제 등이었고, 이외에 성인기 자녀는 성격 및 정서문제와 생활부담 등도 파악됨.

• 대처방식은 대체로 자녀와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향이 높았으나 청소년기 자녀에게는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많았음.

– 한편, 자녀관점에서 부모와의 갈등은 친부모(23.4%)보다 고부 또는 장서(28.2%)와의 갈등이 다소 높았고, 갈등원인은 양쪽 모두 성격 및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이 많았으며, 이외에 고부(장서)와는 명절 및 제사, 신체적 돌봄 등이 나타남.

• 대처방식은 부모와의 관계에 따라 차이를 보여 친부모와는 차분하게 대화하거나 격렬하게 논쟁하거나 소리지르는 경향이 높은데 비해, 고부(장서)와는 그냥 참는 경향이 높았음.

– 최근 1년간 친형제자매 간에 갈등비율은 19.8%, 동서 간은 29.5%로 동서 간 갈등이 친형제자매 보다 9.7%p 높았고, 갈등원인은 친형제자매는 성격 및 사고방식이 많은데 비해, 동서 간은 경제 및 부양 때문이 약 3배 높았음.

• 대처방식은 양쪽 모두 그냥 참거나,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외에 동서 간은 의절하는 경우도 많아서 양극적인 경향을 보임.

– 가족 내에서 재산상속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을 경험한 비율은 응답자의 6.9%로 저조한 편이었고, 갈등원인으로 응답자의 약 80%는 특정자녀에게 상속이 많이 되거나 자녀 간 상속방식의 차이로 나타남.

• 대처방식은 불만이 있으나 재산상속 분배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과반수이상으로 많았고, 1/3은 가족 간에 폭력발생부터 법적소송, 그리고 가족관계 단절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됨.

– 일가족 갈등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역할갈등은 평균 69.3%로 나타났고 그중 노부모 부양, 가계 및 재정관리, 가정행사 참여, 자녀양육 및 교육, 가사일 참여 등의 갈등은 62~80%로 높았음.

• 갈등원인은 업무 과중,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부족, 자녀양육 부담 및 가사부담 순으로 높았으며, 대처방식은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그냥 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부간 대화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부부 공동의 취미생활, 부부가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 등이었으며, 이어서 부부 간에 가사분담, 부부관계 개선 프로그램 참여 등의 정책욕구도 많았음.

• 부모와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욕구는 부모-자녀 간에 의사소통 강화와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분위기 조성에 대한 욕구가 많았으며, 일부 중장년층과 여성응답자의 경우 재산상속 및 명절(제사)문화 개선과 돌봄 및 양육부담 경감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국내외 가족갈등 정책사례

– 국내의 가족갈등 정책은 주로 경제적 지원과 서비스적 지원영역에 편중되어 있고, 시간적인 지원은 아동보육에 대한 분야 외에는 매우 미약하며, 특히 경제적 지원은 보육아동 지원에 한정되어 있고, 서비스는 사후치료적인 상담서비스에 치중되어 가족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기에는 매우 한계를 보임.

– 스웨덴은 가족의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체계를 개선하는 데에 긍정적인 모델이 되며, 양육책임 패러다임이 양부모에 근거하여 분리된 성역할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음.

• 영국은 취약가족에 초점이 맞추어져 보편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으며, 독일식 모델은 가족의 돌봄역할과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적 지원을 억제하고자 하는 특징이 강하므로,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갈등들과 어머니들의 역할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Ⅲ. 정책제언

▣ 정책방향

– 가족갈등에 대응하는 정책은 첫째, 가족관계 상의 갈등 원인을 제거하고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접근되어야 하며, 둘째, 가족기능의 취약을 진단하고 이로 인한 사전적 원인과 부정적인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사회환경조성 및 인프라 확대

– 가족갈등에 대응하여 가족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사회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가정을 포함한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변화가 요구되며, 가족갈등의 구조적 요인인 비민주적 젠더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 전반적인 인식개선이 필요함.

– 가족갈등에 대응하는 인프라 확대 및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근거기반 프로그램(evidence-based program)을 반영한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함께 전문 인력의 강화가 요구됨.

▣ 가족관계별 갈등해소 방안

– 갈등 예방적 측면에서 갈등원인 중 상당 부분은 가족생활교육을 통해서 예방하거나 악화를 막을 수 있으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부모교육이나 부부교육과 같이 소집단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프로그램 형태로 제공하되, 가족요구를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부부갈등 해소방안으로 부부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부부교육과 부부상담을 통한 갈등 중재, 황혼기 부부를 위한 이혼예방 프로그램 등 확충되어야 할 것임.

– 가족 내 세대갈등 해소방안으로는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원만하고 지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해 다양한 코칭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할 것임.

– 형제자매 갈등 해소방안으로 갈등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체계적인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갈등중재를 위한 서비스 제공과 함께, 성평등적이고 합리적인 가족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임.

▣ 가족기능별 갈등해소 방안

– 가족기능 갈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에 있어, 가족기능과 가족관계 갈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접근되어야 할 것임. 일례로 아동 및 노인 돌봄 정책 등 가족기능 관련 정책은 돌봄이나 부양과 같은 가족기능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가족기능과 가족관계의 상호 관련성에 염두에 두고 탈가족화와 가족화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요구됨.

– 부모-성인자녀 간의 부양갈등 해소 방안으로 노부모의 경제적인 자원강화가 요구되며 일환으로 노인고용을 활성화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조기퇴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며, 노후준비를 위해 상담과 노후설계 서비스 등을 제공함.

  • 돌봄환경 확충방안으로 돌봄역할 수행을 가족구성원이 형평성있게 분담할 수 있도록 역할의 재구조화와 함께 체계적인 서비스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상속갈등의 예방 및 대책으로 부양의무가 상속의 대가로 이행되기 보다는 애정적 선택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가족부양체계를 대신할 수 있는 공적 노인부양체계의 강화가 요구됨.

– 일·가정 양립갈등 해소를 위해 부부 간 평등적 성역할분담과 돌봄의 사회화 등이 요구되며, 자녀돌봄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및 탄력적 활용, 근로조건 개선 등 제도적 접근이 요구됨.

연구보고서
14-21

국제사회조사 참여 및 비교연구

An International Comparison of Family and Social Change

연구책임자 • 김미숙
공동연구자 • 조성호·최은진·홍석표·이주연·강지원·권소일·성균관대학교 SRC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국제사회조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사회변화에 대한 국제비교를 통해 현상을 진단하되 가족변화와 사회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정책의 개발 및 수립을 도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함.

– 9개국 및 아시아 4개국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데이터 생산 및 국제비교를 실시함.

Ⅱ. 연구내용

▣ 자녀가치관 국제비교

– 자녀가치관은 복지국가 레짐별로 다르기보다는 아동양육 환경과 가족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함.

• 스웨덴은 매우 양성평등적인 가족정책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음에도 자녀관이 긍정적인 이유는 자녀양육을 사회가 부담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 독일, 일본, 한국, 대만은 모두 부정적인 자녀관과 함께 낮은 출산율을 가지는 국가임. 이 국가들은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사회적인 지원이 낮아 자녀출산 및 양육을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임.

▣ 독신가구 현황과 특성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가족정책 같은 거시적인 요인보다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남.

• 성(性)과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독신가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과 사회적 자본

– 동아시아 국가들의 사회적 참여는 낮은 편이었고, 일상적 접촉수준과 사회적 지원망에서 가족 중심의 비중은 국가별로 다소 편차가 있었으나, 전체의 1/3~2/3 수준으로 나타남.

• 한국의 경우, 사회적 참여는 낮았으나, 적극적 참여율은 4개국 중에서 높은 편으로 특히 종교집단, 동창회, 여가모임 등의 조직에서 활발함. 일상적 접촉을 하는 사람의 수는 비교적 협소하였으나 사회적 지원망은 가족중심적인 것으로 나타남.

▣ 가족 내 시간배분 (부부간 교섭력이 가사 및 육아시간에 미치는 영향)

– 교섭력(소득 비)은 가사 분담률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아내의 교섭력이 커지면 가사 분담률은 감소하지만, 아내의 교섭력이 계속 커진다 해도 그만큼 분담률이 감소하지는 않았음.

• 가사 분담률이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는 아내의 가사 분담률이 높았음.

▣ 가족유형과 건강수준

– 공공부문의 건강보험 커버리지가 높은 국가일수록 개인의 건강수준 및 건강행동변수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건강수준은 미혼의 상태일 때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별거, 사별의 경우 주관적 건강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 성역할 변화와 심리적 웰빙

– 성역할 인식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은 스웨덴과 대만 남성에서 나타남.

• 한국은 고학력과 심리적 웰빙간 관련성이 조사 대상 9개국 중 가장 크게 나타남.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고소득,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어 개인의 심리적 웰빙을 가져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사회의 공공성

– 지난 5년간 한국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대한 변동을 분석한 결과, 개인의 자율성과 책임성보다는 집안변수와 인맥관리 변수의 중요성을 중시하는 결과가 타나남.

•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인식과 갈등의 심각성은 감소함.

▣ 위험사회의 인식변화

– 2014년 한국사회 위험지수(KSRI)는 100점 중 40.66점으로 비교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지만 전년대비 1.67점 증가함.

• 남성, 30-40대, 고학력, 판매서비스직, 민주화 탈냉전세대의 위험지수가 높음.

Ⅲ. 정책제언

▣ 가족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 긍정적 자녀가치관 제고

• 고학력 여성을 이한 가족 및 경제활동지원, 가족정책 강화, 가임 및 출산기 연령대를 위한 자녀양육비 완화정책 등 강화

– 독신가구 증가에 따른 현행 제도 개선

• 적정 수준의 등록금과 다양한 학비지원, 청년 창어비원,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확대, 0-2세를 위한 보육시설 확충

– 사회조직과 공동체 구축

• 비가족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조직과 공동체 구축

–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률 제고

• 남성의 가사와 육아 분담을 높이기 위한 남성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캠페인 필요

–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강화

•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하여 운동실천지원, 흡연 및 음주예방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강화

– 심리적 웰빙 제고

▣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 공정성 제고

– 위험사회 대응

• 효율적인 위험관리전략을 마련하고 정책적 반영을 통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마련한 시스템 내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함.

연구보고서
14-22-1-3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Super-aged Society and Social Services for the Elderly

연구책임자 • 강은나
공동연구자 • 박세경·배혜원·이민홍·오세웅·박은정

Ⅰ. 연구목적

▣ 초고령사회 진입에 앞서 노인인구 및 복지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노인복지서비스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거와 현재까지의 노인복지서비스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변화와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위험을 진단하고자 함. 이와 함께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노인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해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사회에 주는 함의를 도출

Ⅱ. 연구내용

▣ 노인복지 서비스의 발달과정과 현황

– 노인복지서비스는 2000년대 초반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에서 경제활동, 여가활동, 노인학대예방과 같은 권익증진 등으로 서비스 영역과 내용이 다양화되는 양상을 보임. 그러나 노인요양서비스와 노인일자리사업의 비중이 타 영역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노인 중심의 제한적·소극적 서비스 제공에서 저소득·일반노인대상으로 확대되면서 포괄적 및 적극적 서비스 제공으로 발전해왔고,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주체의 다양화가 발견됨.

▣ 노인의 사회적 위험 진단과 노인복지서비스 수요 전망

– 불안정한 소득보장과 경제활동

– 사회적 고립과 사회참여

– 불건강 노인과 돌봄

– 불안전한 생활환경과 지역사회 거주

▣ 초고령국가의 사회적 변화와 노인복지서비스

– 국가간 사회문화적, 경제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고령사회는 빈곤노인, 독거노인, 치매노인의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의 경제활동참여, 돌봄수요, 사회참여 증대와 같은 공통적인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음. 또한 노인돌봄으로 인한 돌봄제공자의 경제활동 중단, 개호살인이나 개호자살, 노인범죄, 노인돌봄 제공인력 수급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이를 위해 노인의 고용촉진정책, 사회참여 및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지역사회내 돌봄시스템 구축, 직장-노인돌봄 양립정책 실행, 노인주거의 다양화 정책 등이 실시되고 있음.

Ⅲ. 정책제언

▣ 초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노인복지서비스 및 인프라의 확대와 질적 개선, 그리고 지역친화적인 서비스 제공시스템 구축

▣ 고용환경의 고령 적합화

– 노인의 노동역량 감소를 고려한 근무조건의 다양화와 노인근로자를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노력, 노인고용의 사회적 차별 해소 및 노인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요구됨

▣ 생애주기적 사회참여 기반 마련

– 청·중년기부터 여가문화 활동의 생활화, 노인의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참여 복합모델 개발, 그리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수급 조절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노인돌봄 부담의 사회적 공유

– 일과 노부모 돌봄을 병행할 수 있는 일-돌봄 양립 정책 마련, 노인이 요보호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의 증가에 따른 노인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 돌봄제공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노인돌봄 제공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인상담센터 설치·운영 및 전문상담인력 확보, 지역사회 내 노인돌봄공동체를 구현 등을 제안함.

▣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안전하고 불편함 없는 거주환경 및 노인주거형태의 다양화, 지역사회내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노인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인력에 대한 노인인권 및 학대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 구축

– 지역간 노인복지서비스 격차 및 공백에 대한 대응 장치 마련,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전 연령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 설계, 노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함.

연구보고서
14-22-6-3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 맞벌이 가구 중심으로

Policy Improvement for Parenting Support: With Special Focus on Dual-income Household

연구책임자 • **김은정**
공동연구자 • **이진숙·최인선**

Ⅰ. 연구목적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양육지원정책 현황 및 양육실태 분석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지 살펴보고자 함

– 지속적인 양육 지원확대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체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충분한 유연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맞벌이 가구의 양육실태 분석을 통하여 이들의 양육부담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국내 자녀양육 지원 정책 현황

– 보육교육비 지원

•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계층 보육료 지원 정책 실시

• 이외에 장애아 보육료, 다문화 보육료, 방과후 보육료,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함

– 양육수당

•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계층 지원, 연령별 차등지원

• 영아의 양육수당 지급 비율을 비추어 볼 때, 영아기 자녀의 가정양육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아이돌봄 지원사업

• 사업서비스의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양육수당과 중복지원 불가

▣ 자녀양육 태도 및 돌봄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 분석 자료로는 본 연구를 위해 조사된 「자녀양육 실태 및 정책요구도·수요도」조사와, 관련분야의 2차 자료를 활용함

– 자녀양육과 교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와의 돌봄노동 분담 공평성에 대한 인지조사 결과 아내에게 불공평 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하여 돌봄 노동에 대한 불공평성에 대한 인식정도는 높아지고 있음. 다만 남성과 여성의 가사노동 및 돌봄노동 시간차를 고려할 때 그에 따른 실질적인 개선은 가정 내에서 크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됨

– 개인양육지원 서비스 이용 아동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에 대한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가정내 돌보미 이용 사유를 분석한 결과, 보내고자 하는 시설에 대기자가 많아서 못 보내는 사례와 교사 대 아동의 비율 때문에 못 보내는 사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확충과 함께 교사 대 아동 비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아이돌보미 사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와 높은 반면, 소극적인 수요자 층의 경우 해당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이돌보미 서비스 수준의 질적 제고와 함께 해당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제공을 통한 신뢰 확보 방안 요구됨

– 근로시간에 의한 일가정 양립갈등은 개선되었고 가사노동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부담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자녀돌봄 지원 서비스 욕구 분석

– 맞벌이의 경우 운영시간에 대한 만족도는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보육료, 거리, 정규프로그램 질, 교사의 질, 급식 등 안전위생보다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조사됨

– 맞벌이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양육공백이며, 홑벌이의 시설 이용의 주된 사유는 아동의 사회성 발달 및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

– 가정내 돌봄지원 서비스의 경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이용시간'인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의 운영시간 내에서도 장시간의 시설보육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 및 제공되는 서비스 질에 대한 불만족 등의 이유로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양육지원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국공립시설확충과 서비스질 향상,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

• 국공립 시설의 확충을 요구하는 이면에는 국공립시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고 보이며 해당 시설의 확대는 시설의 양적 확대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적 확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겨짐

– 현재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유아교육비 지원확대에 대한 요구도가 상당하다는 것은 현행의 무상보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함

– 이밖에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지원 차별화 정책과 시설의 시간운영에 관한 조사결과, 홑벌이 가구의 경우 시간이용에 따른 보육료 차별화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현재 법정 운영시간보다 더 길게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맞벌이, 홑벌이 가구 모두 상대적으로 필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현재 시설운영시간은 그대로 하되 정규프로그램 운영시간(09:00~17:00)을 더 길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벌이(4.05점)가 홑벌이(3.87점)에 비해 필요성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Ⅲ. 정책제언

▣ 맞벌이 가구의 경우 특히 양육의 어려움을 크게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양육비에 대한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비용지원 측면과 함께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 양육지원 정책에서 좀 더 취업모 친화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함

– 본 연구 결과, 근로시간에 의한 일가정 양립갈등,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에 따른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맞벌이 가구가 일

가정 양립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의 시설운용체계 개편을 통해서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에 대한 서비스 접근 차별성이 필요함. 시설이용에 대한 맞벌이 부부의 접근성을 좀 더 강화하고, 홑벌이 가구의 이용시간에 따른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비를 차별화하여 지원하는 정책설계가 필요함

▣ 현행의 시설중심의 양육지원 서비스와 함께 아이돌보미 사업이 가정양육지원 서비스로서 충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당제도에 대한 예산확대가 필요함

– 또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시간제와 종일제에 대한 독립적인 예산운용과 센터 평가체계 개편이 요구됨

▣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시설운영 체계 하에서 정규프로그램 이외의 시간 (7:30~9:00, 17:00~19:30)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필요함

▣ 마지막으로, 양육지원 정책은 앞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뿐만 아니라 성통합적 관점을 고려하여 계획되고, 남성과 여성의 양육공동책임에 대한 실제적 분담방법을 제시하고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연구보고서
14-22-6-3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 5차년 과제

Focusing on long-term care in developed countries

연구책임자 • 박수지
공동연구자 • 김가희·이주연·김보영·박수잔·최연혁·홍이진·윤성원·박혜미·김형용

Ⅰ. 연구목적

▣ 본 사업은 각국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심층연구로서 1980년 이후 사회서비스 정책변화를 분석하여 사회보장정책 비교연구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본 연구는 사회보장정책 연구 사업의 5차 년도 연구로서 3차년도의 빈곤정책, 4차년도의 사회보험정책 연구의 연속선 상에서 사회서비스정책 연구를 수행함.

Ⅱ.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거시적 조망과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주요 복지국가의 장기요양돌봄(long-term care) 체계를 비교 분석함.

▣ 연구추진방법

– 첫째, 복지국가의 돌봄서비스 비교연구를 돌봄(care)레짐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돌봄 체계의 변화를 개관함.

– 둘째,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장기요양돌봄 체계와 그 성과를 비교 분석하고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도출함.

▣ 기대효과

– 현재 우리나라 장기요양돌봄 체계의 특성과 성과를 주요 복지국가와 비교하고 그 위상을 논의하고 향후 장기요양돌봄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함.

– 주요국의 장기요양돌봄 개혁사례를 개관하고 그 성과를 실증 비교함으로써 향후 우리

나라 정책 방안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함.

▣ 주요연구결과

– 첫째, 복지국가의 돌봄서비스 비교연구 동향을 돌봄레짐 연구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비교 분석틀을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관리의 5개 차원으로 도출함.

– 둘째, 주요국의 장기요양돌봄 정책 변화를 분석한 결과, 재가서비스 확대, 돌봄노동의 공식화, 서비스 공급구조의 시장화, 이용자 중심의 관리시스템 도입이 공통된 경향으로 나타남. 즉 장기요양돌봄 정책의 수렴현상이 관찰됨.

– 셋째, 주요국 장기요양돌봄 정책의 이용자 중심 성과를 성인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장애인 수발비율이 높은 반면 공식적 돌봄 비중은 낮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주관적 건강, 삶의질, 우울의 승산비 격차가 크게 나타남.

Ⅲ. 정책제언

▣ 그간의 장기요양돌봄서비스의 확대 즉 2007년 바우처서비스, 2008년 노인장기요양서비스, 2010년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등이 우리나라 장기요양돌봄 욕구를 가진 자와 가족내 서비스 제공자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수준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줌.

– 이는 공식적인 돌봄서비스의 확대가 장기요양돌봄 욕구를 가진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과 건장수준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장기요양돌봄서비스 확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

– 또한 그 간의 제도로 커버되지 못한 장기요양돌봄서비스 욕구 자의 사각지대에 대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줌.

– 아울러 장기요양돌봄서비스 대상자로서 ADL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자의 형평성 측면에서 나타난 격차는 서비스의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측면에서의 향상이 도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음.

연구보고서
(수시)
14-04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Causes of Rising Income Inequality and Policy Directions for Distribution Structure Improvement

연구책임자 • 강신욱
공동연구자 • 김현경·김근혜·원승연

Ⅰ.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음.

– 소득분배 악화의 원인을 가능한 다양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일차적 목표를 둠(상품시장, 노동시장, 재분배정책, 인구구조 변화 등 다차원적 원인을 동시에 고려)

– 나아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복지정책은 물론 조세정책, 고용정책, 산업정책 등 정책조합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1998~2008년 사이의 불평등 심화요인을 인구집단별, 소득원천별로 분해함으로써, 각 요인들이 불평등 심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함.

– 10년간의 소득불평등 과정에서 배우자 및 기타가구원 노동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상승하였고, 공적 이전소득과 재분배 정책의 불평등 완화효과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가구소득의 원천별 불평등 변화 요인에 대한 분석 중 가구주 노동소득의 경우 연령효과와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가격효과가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활동상태에 따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별 자산과 부채의 현황을 분석하고, 그것이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특히 소득으로서의 현금흐름이라는 관점에서 금융부채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고, 금융부채와 소득불균형간의 관계를 분석함.

– 우리나라 가계 형태는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 구성과 금융부채 중심의 부채구성의 불균형이라는 문제를 갖고 있으며, 이 결과 금융부채로 인한 이자비용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

– 가계부채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이자부담률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며, 이자부담이 높은 가구가 소득분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가계부채 증가가 소득 증가에 기여하기보다는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더욱 하락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라는 관점에서 소득불균형을 확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함.

▣ 가구 소비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많은 적자가구의 비율은 10년 사이에 13%에서 약 21%로 증가하였으며, 적자가구의 적자폭은 소득 대비 약 39%에서 약 31%로 낮아졌음.

Ⅲ. 정책제언

▣ 가구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원인이 노동시장에 있는 만큼 노동시장에서의 분배를 개선시기키 위한 정책조합이 필요함.

▣ 한국의 가계는 실물자산 중심의 자산구성과 금융부채 중심의 부채구성을 보이는 바, 이자비용이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득불균형을 악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소득재분배 정책 차원에서 신용공급정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게 진행되어함을 시사함.

▣ 적자가구는 거의 전 소득계층에서 나타나고 있음. 적자 보전을 위해 자산의 처분이나 부채 증가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성 저하나 부채상환부담 가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음. 적자가구의 확산이 불평등의 확대로 연결되지 않게 하려면 지출보전정책의 대상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6. 사회통합방안 모색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연구보고서
14-26-1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The Status of Social Cohe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cused on Social Cohesion and Happiness

연구책임자 • **김미곤**
공동연구자 • **여유진·김태완·정해식·우선희·김성아**

Ⅰ. 연구목적

▣ 한국 사회는 압축성장과 민주화 과정에서 최근 10여 년간 계층, 세대, 지역 갈등의 분출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음.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2003년 카드대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등 반복적인 경제위기의 여파가 사회의 각 부문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개인과 가구경제의 불안정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불안과 계층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

–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사회갈등지수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27개 OECD 국가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평가되었고(삼성경제연구소, 2009), 행복지수는 OECD 30개국 중 25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용하, 2009).

▣ 사회통합 및 갈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나아가 사회통합의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행복과 사회통합 간의 관계를 밝히고, 국민행복의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함.

–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합 및 행복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개발하여 사회통합과 행복에 대한 정확한 실태 진단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거중심(evidence-based)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사회통합의 개념 및 수준

– 사회통합은 포괄적 개념이며, 각 국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의 분야가 달라 전 세계 수준에서 동일한 개념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통합을 '한 사회의 공동

의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결속된 상태'로 정의할 수 있음.

– 「사회통합 및 국민행복 인식조사」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이 인식하는 신뢰수준은 11점 만점에 4.59점으로 평균 이하이고, 우리 사회에 대한 갈등의 정도에 대해 8개 중에서 평균 5.40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으며, 공정성에 대해서는 2.39점(5점 척도)으로 한국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보였음. 또한 평균적인 사회활동 참가(적극적 참가)는 0.36개로 1개에도 미치지 못하였음.

▣ 사회통합의식 결정요인

– 사회통합의식에 대한 분석틀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빈곤 및 불평등 의식, 사회자본으로서 신뢰 및 사회참여, 그리고 갈등의식, 세 개 분야로 설정함.

• 빈곤 및 불평등의식과 주관적 계층의식 및 생활수준 변화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하는 비중이 86.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 계층의식에 있어 청장년층인 50대 미만의 경우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13.3%에서 20.4% 인 것과 비교해 50대 이상은 28.1%, 36.3%로 세대 간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사회 전반에 대한 평균 신뢰도는 4.59점으로 5점(보통)을 기준으로 약간 낮음.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 경험이 있을수록 신뢰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낮은 신뢰를 보여줌. 또한 과반수 이상이 그 어떤 단체에도 '소속된 적이 없다'라고 응답하여 단체 활동 정도가 대체적으로 낮았으며, 성·연령·학력에 따라 사회참여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국민들이 가장 큰 갈등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80.0%), 경영자와 노동자간의 갈등(79.9%)이며,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의 갈등(78.4%),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갈등(76.9%) 순으로 나타남.

▣ 행복의 개념 및 수준

– 행복을 '심신이 쾌적하고, 물질적 여유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상태'로 개념 정의하고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10점 만점에 6.18점, 삶의 만족도는 6.33, 우울감은 3.30으로 조사되었음.

• 개인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주(6.00)보다는 비가구주(6.40)의 행복도가 높고, 남성(6.06)보다 여성이(6.34)이 높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행복도와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행복도와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가구특성별로 살펴보면, 가구 내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만성질환자가 있는 경우, 노인이 있는 경우, 실업자가 있는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있는 경우는 상식에 부합되게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면(10분위에서 분위가 높아질수록) 행복도 및 만족도는 높아지고, 우울감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복의 결정요인

–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소득 수준은 그 자체로는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졌음.

• 다만, 주관적 계층의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변수를 추가로 투입할 경우,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고, 여기에 사회통합도 변수를 최종적으로 투입했을 때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소멸됨.

– 또한 주관적인 계층의식과 생활수준에 대한 기대치의 설명력은 객관적인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통합의식보다 더 높은 수준임.

• 특히, 삶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변수들 대부분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더라도 행복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은 정책적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모든 변수들을 투입한 종합모형에서도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사회를 공정하다고 인식할수록,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주관적 행복의 수준은 더 높게 나타남.

Ⅲ. 정책제언

▣ 사회통합이 수단적 성격을 지닌 것이라면, 행복은 삶의 목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수단과 목적간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수단(사회통합)이 목적(행복)을 정당화하는 결과들이 산출되었음.

▣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하고자 함.

– 첫째,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

– 둘째, 만성질환자에 대한 보건의료정책 강화가 필요함.

– 셋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필요함.

– 넷째, IDA 등의 재산 축적을 위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연구보고서
14-26-2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A Study of impact assessment for social cohesion policy

연구책임자 • 정해식
공동연구자 • 김미곤·여유진·유진영·김성아

Ⅰ. 연구목적

▣ 한국 사회 사회통합의 상태 저하

– 각종 불안정성의 확대와 불균등한 위험 분담은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음.

–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균열은 복합적으로 배치되어 있음

• 불안정, 불평등, 갈등이 단순한 현상이 아니고, 내부에서 다양한 역동을 보임.

▣ 사회통합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정책이 추진됨.

– 낮은 사회통합은 정치적 불안정 요인, 경제성장의 긍정적 전망을 낮추는 요인, 공공지출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이에 시장의 불균등한 분배를 개선하고,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개별 시민의 역량을 강화할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통합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 그러나 한국 사회의 복합적 균열지점을 고려할 때, 사회정책이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성과 정도는 명확하지 않음.

▣ 한국의 낮은 통합수준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 추진이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개념을 정의하고, 해당하는 정책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음.

II. 연구내용

▣ 사회통합영향 평가 방법

– 사회통합영향 평가를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 과정평가(집행평가), 성과평가가 필요

▣ 국내외 정책영향평사의 시사점

– 국내 정책영향평가의 시사점

• 먼저, 사회통합정책의 개념 및 정책영향평가의 목표 설정이 필요함.

• 그리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 평가주체 및 주관, 평가절차, 평가지표(적합성 평가, 과정평가, 성과평가), 환류체계 등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필요

– 국외 정책영향평가의 시사점

• 정책 목표의 구체화: EU의 경우 사회통합정책 목표를 '복지 증진과 배제 축소'로 구체화 하고 있음.

• 평가지표의 포괄성: EU 및 캐나다의 경우 평가지표는 협의의 복지 차원을 포괄할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등 다양한 생활의 영역을 사회통합지표에 포괄하고 있음.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위한 정책영역, 정책목적, 지표 선정의 과정을 제시하였음.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정책형성과 정책집행, 정책성과를 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정책 수립과정에서부터 통합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정책 목표와 내용을 고려한 과정평가를 제시함.

•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책영역, 정책목적별 평가지표를 제시하였음.

Ⅲ. 정책제언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한 몇 가지 과정이 필요함.

– 첫째, 사회통합에 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 져야 함.

• 사회통합정책의 추진, 평가 시 정확한 사회통합 실태 파악 중요

– 둘째, 사회통합 관련 대표정책을 우선 선정하여 해당 정책을 집행하고 있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함.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시범사업 실시를 위해 국민대통합위원회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사회통합 종합계획 수립, 각 부처와 관련 기관의 사회통합 관련 정책 취합, 세부 내용 조정, 효과성 평가 등이 필요함.

– 국민대통합위원회가 정책자문 또는 정책제언의 형태로 시범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도입과 성패는 실시 목적을 구체화하고, 실시한 결과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임.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를 도입·실시하는 단계 이전에 여러 유관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필요

연구보고서
14-26-3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Social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on economic development and growth

연구책임자 • 정영호
공동연구자 • 고숙자

Ⅰ. 연구목적

▣ 사회갈등이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사회갈등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갈등수준의 위치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사회갈등이 야기되는 일련의 프로세스를 고찰하고,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고자 함.

– 산출된 사회갈등지수를 토대로 OECD 국가와 우리나라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수준에 대한 현 위치를 파악함.

▣ 또한, 본 연구는 거시경제적 접근을 통해 사회갈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종횡단면 회귀분석을 수행

Ⅱ. 연구내용

▣ 2011년의 갈등요인지수는 민족갈등지수를 포함한 경우 24개국 중 10위, 민족문화갈등지수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4위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갈등요인지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사회갈등지수=사회갈등요인지수/사회갈등관리지수로 표현하여 갈등지수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분석

– 2009년~2011년 동안 OECD 국가의 사회갈등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관리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의 관계가 있음을 확인

– 즉, 사회갈등요인과 사회갈등간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사회갈등관리와 사회갈등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사회갈등관리는 사회갈등을 감소시키는 것을 기대

▣ 사회갈등요인지수와 사회갈등관리지수를 결합한 사회갈등지수를 산출하여 OECD 국가 간 비교를 수행한 결과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대상 25개국 중 5위(2011년 기준)로 하위 20% 수준에 그치고 있음.

▣ 갈등관리는 경제성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인당 GDP는 1.74% ~ 1.75% 증가하게 됨을 보여줌.

Ⅲ. 정책제언

▣ 패널분석결과, 갈등지수는 경제성장과 연관관계가 있는데, 갈등요인보다는 갈등관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즉, 갈등요인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보다 갈등관리를 통한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정부의 갈등관리를 위한 투자가 경제성장이 미치는 선순환적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4-27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A Study on Promotion of Local Social Welfare

연구책임자 • 김승권
공동연구자 • 유진영·오혜인·김근혜·신정훈

Ⅰ. 연구목적

▣ 지역사회보장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통한 전체 국민의 복지수준을 증진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음.

– 지역균형적 복지발전을 이룩하며,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및 성과의 제반 과정을 고도화함.

Ⅱ. 연구내용

▣ 지역사회보장의 학문적, 정책적 논의(센터 운영 및 총괄)

– '지역복지정책포럼' 운영

– 지역사회보장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학술대회 주최

▣ 민관협력 우수사례 분석 및 모형개발

– 민관협력의 이론적 논의

– 민관협력의 다양한 유형 분석

– 민간협력 모형 개발: 단순 민관협력 모형(공공주도형, 민간주도형), 협의기구 중심 민관협력 모형, 실행기구 구축 민관협력 모형

▣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단 운영

– 현장 모니터링위원 위촉 및 운영

– '사회보장 분야별 TF' 구성 및 운영

– '사회보장 중앙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지역사회보장 Issue & Focus

– 지역사회복지 격차 분석과 해소 방안

– 지역사회중심의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우수 지역복지 정책/사업 발굴 및 확산

– 17개 광역 지자체와 229개 기초 지자체의 우수 지역복지정책 공모 및 심사

–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

– 우수 지역복지 정책/사업 자료집 발간 및 전국 확산

Ⅲ. 정책제언

▣ 지역사회복지 증진 방안

–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개선

• 체계적 모니터링의 지속화

•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관계기관(중앙부처 및 시도, 시군구 등)의 개선 노력

– 지역사회보장정책의 성과관리 강화

• 지역사회복지종합평가는 안전행정부 합동평가의 복지평가, 복지재정 및 복지인력 평가, 자체 특화사업 평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 사회복지시설 평가 등으로 구성하여 추진

• 자체 특화사업 평가"와 "보건복지부 중점사업 평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기초 지자체를 평가하고, 중앙에서는 시도별 1~2개 기초 지자체를 선정하여 직접평가를 실시

• 복지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대폭 확대, 특히 부진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 실시 필요

– 우수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굴과 확산의 지속화 등

• 자체사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며, 사기앙양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 민관협력사업을 중시하는 정책 발굴이 요구됨

▣ 센터 운영의 발전 방안

– 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인력보강 및 전문성 강화

• 독립된 센터로서의 위상을 갖고 안정적으로 운영 필요(조직 및 인력 확대 개편)

• 복지, 재정, 평가, 통계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력 배치

• 센터의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하여, 시도 및 시군구와 민간복지기관과의 정보교류 강화

– 지역사회보장 관련 데이터 축적 및 관련 연구 종합화 등

• 센터는 중앙, 17개 시도, 229개 시군구 단위에서 생산되는 각종 복지데이터를 축적

• 센터는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중앙의 국책연구기관 및 부처관련 연구기관과 광역 복지기관의 연구를 종합하여 전체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광역 복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보장정책의 발전을 도모

연구보고서
(수시)
14-05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Redressing the central-local relationship in public welfare provisions

연구책임자 • 고제이
공동연구자 • 유태현·이재원·조성규·주만수·손지훈

Ⅰ. 연구목적

▣ 최근 사회보장지출이 정부 재정소요 증대를 견인함과 동시에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재정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지출의 비용분담을 둘러싼 중앙과 지방의 해묵은 논쟁이 원활한 사회복지 사무의 수행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 간 대립과 갈등을 부추기는 수준에까지 도달함

▣ 지금까지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분담과 관련한 문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과 정책적 대안들이 제시되었으나,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는 실정이며, 더욱이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앞으로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같은 상황은 기존과는 다른 더욱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정분담구조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적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 재정책임 분담구조의 설계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함

Ⅱ. 연구내용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시사점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자료집 발간 및 연구보고서 작성

▣ 주요 연구내용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기능에 대한 규범적 고찰

– 쟁점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기초연금과 보육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간 사회복지 역할 배분에 대한 검토

– 재정책임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관리 강화방안

Ⅲ. 정책제언

▣ 사회복지비 팽창, 지방채무 증가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약화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재정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의 내실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역할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재정관리 역량 증진을 제안

▣ 더불어 지방의 사회복지비 팽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규모 확충과 사회복지세(지방사회복지세 포함) 도입을 제안

▣ 규범적 접점이 되는 지방자치법제와 사회보장관련법제 정비가 필요

– 복잡한 재정이전관계와 행정주체간 사무권한과 기능에 대해 명료하게 규정하지 못하는 실정법의 한계가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음

▣ 최적의 사무권한배분과 재정분담의 제도화를 위한 규범적 원리와 구체적인 기준마련을 통해 국고보조사업 정비가 필요함

연구보고서
14-16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A Study of the relative efficiency of different methods of social transfer payments

연구책임자 • 고제이
공동연구자 • 노용환·오미애·이우진·최현수·장인수·최요한

Ⅰ. 연구목적

▣ 한정된 자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출하는 가에 따라 필요로 하는 재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성장과정에도 개입함으로써 미래의 정부 재정수입규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 아울러 다른 모든 정부지출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지출 역시 정부수입의 크기에 제약을 받으므로 지출방식의 효율성 확보는 중장기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회보장제도 본래의 목적이자 기능이며, 법률적인 지출속성과 별개로 사회지출은 일단 시행되면 하방경직적이고 자기확장적일 수밖에 없고, 또한 복지후발국가인 우리나라 여건상 사회보장지출의 급증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사회보장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로서 사회보장급여의 지출방식에 따른 재정효율성과 효과성 차이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군집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사회보장급여 지출구조 비교 검토 및 우리나라 사회지출 구성 현황 분석

▣ 사회급여 유형을 현금급여(소득보조)와 현물급여(소비보조)로 구분, 수리적 모형을 통해 정책효율성 비교분석

▣ 일반균형관점에서 사회보장지출 및 지급방식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10년 통계를 기준으로 사회계정행렬(SAM)구축

▣ SAM기반 정책시뮬레이션 수행

III. 정책제언

▣ 사회보장지출의 유형별 정책효율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물급여에 비해 현금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후생을 제공하며 재정효율성 측면에서도 우월함

– 수리모형 분석결과 현물급여가 제공하는 동일한 수준의 사회후생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현금급여수준은 현물급여액의 60-77%로 측정됨

– 사회계정행렬 정책시뮬레이션에 의하면 생산보조(또는 현물급여)의 경우, 성장에는 바람직하지만 소득재분배효과는 거의 없음

– 가계에 대한 소득보조 방식에 있어 평균실효세율 인하와 같은 조세제도를 통한 간접지출이 고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직접적인 이전지출로 전 소득계층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거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경우에 비해 소득재분배효과나 성장효과 모두 열등한 것으로 확인됨

연구보고서
(수시)
14-09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Social Pacts Cases for Korean Social Consensus Building Capacity

연구책임자 • 유근춘
공동연구자 • 최연혁·정병기·김종법·이호근·국중호·김선희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갈등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관찰됨

–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음

– 기존 복지선진국의 모형 중 고부담·고복지로 나가야 하는지, 아니면 저부담·저복지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우리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길이 있는 것인지를 두고 깊은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한 가지 대안 제시가 보건복지의 방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임

▣ 사회대타협 자체보다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사회대타협을 창출하는 능력에 눈길을 돌려야 할 때임

– 현재 어떻게 사회대타협이 이루어졌어도 변화하는 상황에 의해 새로운 대타협이 필요해지는 경우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이 없으면 곧 갈등으로 인한 문제를 겪게 됨

– 즉,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이 있는 사회는 갈등이 계속 밀려와도 이에 대해 계속적인 대처를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음

– 반면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이 없는 사회는 운 좋게 갈등을 해결하는 사회대타협에 성공할 수는 있어도 계속 밀려오는 갈등에 제대로 된 대처를 계속하기가 어려워 궁극적으로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됨

–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대타협에서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으로의 관심의 전환이

라는 주제에 대해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고, 대표적인 국제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형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II. 연구내용

▣ 사회대타협을 위한 일반적 이론고찰에서의 시사점

– 사회대타협에서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으로 초점의 전환 필요

•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집단행위를 통한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이 가능함

– 사회대타협 창출능력의 배양조건

• 의식적 참여 가능하게 하는 제도조직조건 형성 노력(민주사회)

• 커다란 강요된 위기에 의해 새로운 합의질서를 창출할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진 형성적 순간을 인식하는 민감성 제고노력

• 형성적 순간에서 올바른 방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향상노력: 공적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집단기억을 결정하고 정신적 지도를 형성시키는 사회적 지도자의 자질향상노력, 사회적 지도자가 선택되는 과정을 결정하는 조직적 조건의 개선노력

• 비이타적이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울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비이기적 규범과 가치 중 비이타적: 현실성): 의사결정 상황(공적영역에서 다른 사람 의식하는 토론과정)

• 조건부 동의에서 공적이익 추구 우세하기 위한 노력: 실체적 정의(공익추구), 절차적 정의(정부신뢰), 진정한 참여(예: 비용분담)의 제고(동료시민신뢰)

• 전통적 정신적 자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발견해서 진흥: 전체와 부분 이익의 갈등: 先公後私(조건부 동의에서 공적이익 추구 우세), 장기와 최적 이익의 갈등: 어떤 전통적 정신자본이 해당하는지 찾는 노력(ex. 教育은 百年大計)

▣ 스웨덴: 북구유럽국가 사회복지제도의 정치·사회적 함의

– 내용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스웨덴의 경우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스웨덴의 경우 노사 간의 2원적 타협 접점이 역사적으로 50년대와 70년대 사이에 노

조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발휘되어 찾아지고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유지

- 스웨덴의 노사정 모델은 정치주도형이었고 약간 느슨한 형태로 갈수록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
- 사회갈등, 지역갈등 등의 해결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힘들고 정치적 세력 간의 합의, 노사 간의 합의,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
- 이러한 조건은 스웨덴의 정치참여 수준, 관용, 신뢰 수준이 세계적 수준인 데서 충족되는데, 이는 국민계몽운동과 사회운동, 평생교육, 학교에서의 민주주의 교육과 교육제도 개혁 등으로 가능
- 결국 노·사·정·민의 4원적 정치모델의 구축이 필수적이고, 이는 정치개혁과 행정개혁이 기초적으로 이루어질 때 가능하며 법치(the rule of law)와 효율(efficiency), 민주주의적 통치의 틀(대의 민주주의의 설득, 합의)은 필수적임

– 스웨덴의 사회타협의 생산능력은 쌍방 주도형임

- 우선 정당주도형은 연립정권창출, 노사간의 합의유도, 위기 시 여야 대타협 등에 동참하는 협의적 모델을 제도화하고 있음
- 두 번째로 민간주도형은 다양한 시민운동(절제운동, 여성운동, 노동운동, 시민교육운동, 평생교육운동, 국민스포츠 운동) 등을 통해 국민의 정치의식과 참여가 높아 사회적 타협과 관용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진행된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은 제도의 중요한 토대를 깔아주었고, 그 토대 위에서 정당, 노사, 그리고 국민의 3자 참여 모델이 완성될 수 있었음

▣ 네덜란드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연구

– 다음의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네덜란드의 사회 코포라티즘적 사회협약이 제도화되었음

- 파편화되고 복합적인 사회 균열의 상황에서도 전통적인 양보와 타협의 문화를 배경으로 제2차 대전 종전 후 비례대표제에 근간을 둔 합의 민주주의 체제를 구축
- 노동과 자본은 비록 복수 조직이었지만 포괄적 정상 조직들을 갖추었고 초기의 협력관계를 거쳐 점차 일반 사용자단체와 일반 노총들이 각자 통합되어감

- 노사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상호 역동적인 힘의 균형을 이루어왔음
- 정부는 강력한 개입주의 정책을 사용할 정도로 상대적 자율성이 보장되었음
- 비록 연립정부의 형태였지만 친 근로자 국민정당의 집권이 이루어짐

– 네덜란드 사회협약 정치에서 정부는 외부에 존재하는 '제3자'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파트너십 안에 있는 '제3의 행위자' 혹은 '제3의 파트너'로 기능해 왔음

- 정부의 개입이 노사의 자율적 교섭을 억제할 때에는 노사가 방어적 양자 협의를 체결하기도 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하지만 제도적이든 비제도적이든 정부의 개입 없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노사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음
- 또한 연립정치라는 정치적 조건에서 사회협약 정치는 종종 연립정당들의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곤 했음. 따라서 네덜란드 사회협약 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국가 개입의 성격과 연립정치의 영향임
- 정부는 '유도 국가(enabling state)'로서 노사의 교섭을 적극적으로 촉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으며, 정부 정책은 연립 정당들의 주장에 따라 복합적으로 결정되어 왔음

▣ 이탈리아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연구

– 이탈리아 사회협약 모델의 지속성과 안정화의 제도적 기반

- 이탈리아 사회협약 모델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견해가 표명됨
- 하나는 이탈리아 재정적자와 재정부채의 주범으로 꼽히는 과다한 사회보장비용으로 인해 더 이상의 사회협약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주장임
- 다른 상반된 주장은 경제위기 상황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사회협약 시스템의 안정성과 제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주장임
- 전혀 상반된 평가와 주장의 근거에는 각각 합리적인 주장의 근거가 존재

– 지역협약과 노동조합

- 이탈리아 산업구조나 노동운동의 구조 속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산별협약의 제도

화와 네오 코포라티즘이라 불리는 새로운 노사정 협력 시스템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최근 산별협약만큼이나 우리의 관심을 끄는 제도의 하나가 바로 지역협약임. 지역협약의 시행근거는 전국 차원의 협약 기준에 의함
- 매년 4년마다 전국차원의 협약 내용이 확정되면 각 지역에서는 산업과 부문별로 노조들은 이를 근거로 하여 지역의 사용자 단체들과 협약의 수준과 구체적 내용들을 결정

– 이탈리아 연합정치

- 우파와 좌파 대연정의 성립은 이탈리아 사회협약 시스템의 지속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도 유지하고자 하는 제도적 기반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임

▣ 독일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연구

– 독일은 조정된 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로서 자본주의 다양성(Varieties of Capitalism) 모델의 대표적인 국가로 분류

– 독일 사회협약 체제의 성공과 한계 및 도전요인은 지극히 경로의존적(Path-dependent)인 것이고 다음에 기인함

- 사회적 시장경제(social market economy)
- 사회국가(Sozialstaat) 원리
- 높은 수준의 법제화(Verrechtlichung)
- 이중구조(dual structure)의 노사관계
- 독립적인 연방중앙은행(Bundesbank) 제도
- 포괄절인 적용과 높은 자치를 누리는 단체협약제도(Tarifautonomie)
- 참여와 협력 그리고 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사업장수준에서의 '직장평의회'(Betriebsrat)
- 기업경영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공동결정권'(Mitbestimmung)제도

– 2008/9년 최근의 경제위기시 상기한 독일 사회협약 창출능력의 주요 요소들의 작동

– 이러한, 독일 모델은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농축된 제도화의 결과가 표출된 것이라

평가할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사회협약 창출능력은 지속적인 제도적 기본 틀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결과라는 점임
- 둘째, 사회협약 창출능력은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민주적 토론의 결과라는 점임
- 셋째, 사회협약 창출능력은 국민경제 규모의 크기나 대외경제 체제에 의존하는 정도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 나름의 '사회적 선택'(social choice)이 중요함

▣ 일본의 사회협약 창출능력 사례연구

– 일본의 일반적 의사소통 상황과 과제

- 일본으로서 심각한 문제는 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횡적유대라는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을 실현할 동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음

– 경제주체를 노동자, 사용자, 정부라 보는 경우 노사정(勞使政)의 합의점 찾기는 '사회대타협 창출'을 가져오는 중요한 조건이고, 일본에서도 이를 통한 '사회통합' 시도가 계속됨

– 고도성장 시 성공적이었던 사회협약 창출과정이 거품경제 붕괴 후 잘 작동하지 않음

– 일본의 노동조합은 경영자(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상충관계에서 완충역할을 함

Ⅲ. 정책제언

▣ 이상 각국의 사례를 보면 사회타협은 한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사회타협 자체보다 계속적인 사회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타협 창출능력이 더 중요함

▣ 이러한 사회타협 창출능력은 각국의 경험과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이는 어떤 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타협 창출능력이 해답으로서 이미 존재하고 있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구성원 간의 합의에 의해 발명되어야 하는 성격의 것임을 나타냄

▣ 각국마다 나름대로의 발명을 하여야 하나 각국의 사례를 보면 발명 시에 참고할 공통의 성공조건을 찾아볼 수 있음

– 의식적 참여 가능하게 하는 제도조직조건 형성 노력(민주사회)

– 커다란 강요된 위기에 의한 역사적 조건을 형성적 순간으로 인식하는 민감성제고노력

– 형성적 순간에 올바른 방향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 향상노력

• 공적영역에서 경쟁을 통해 집단기억을 결정하고 정신적 지도를 형성시키는 사회적 지도자의 자질향상노력

• 사회적 지도자가 선택되는 과정을 결정하는 조직적 조건의 개선노력

– 비이타적이면서 개인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앞세울 수 있는 합당한 행위의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비이기적 규범과 가치 중 비이타적: 현실성)

• 의사결정 상황(공적영역에서 다른 사람 의식하는 토론과정)

– 조건부 동의에서 공적이익 추구 우세하기 위한 노력

• 실체적 정의(공익추구), 절차적 정의(정부신뢰), 진정한 참여(예: 비용분담)의 제고(동료시민신뢰)

– 전통적 정신적 자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 발견해서 진흥

• 전체와 부분 이익의 갈등: 先公後私(조건부 동의에서 공적이익 추구 우세)

• 장기와 최적 이익의 갈등: 어떤 전통적 정신자본이 해당하는지 찾는 노력(ex. 教育은 百年大計)

▣ 각국의 사례에서 유도되는 사회적 대타협 창출능력 형성과 유지 및 발전의 시사점은 결국 성공하는 국가는 역사에서 오랜 시간을 거쳐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형성적 순간의 선용이 필수적임

– 우리나라도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 정신적 자본 중에서 사회타협 창출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적극 발굴하여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킨다면 사회타협 창출능력의 형성과 유지 및 발전에 성공할 수 있음

– 전통적 정신적 자본 중 중요한 것은 대립에 대한 사고방식에 관련된 것임

- 모든 행위는 사고방식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임
-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창출능력과 관련된 사고방식으로서 대립을 보는 사고방식이 기본적임
-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만듦으로써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시하는 적대적 이분법의 사고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고방식을 나눌 수 있음
- 적대적 이분법은 무조건 상대방을 악으로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방법임
- 그러나 한 사회의 다른 부분인 구성원을 악으로 몰아세워 작은 싸움에서 이길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전체 사회적으로 보면 사회의 갈등이 치솟고, 통합이 깨지고, 사회의 생명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임. 따라서 적대적 이분법은 자살적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자살적인 적대적 이분법을 피하고 아무리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사회의 상대방이라도 소통하고 이해하여 크게 하나가 되는 사고방식의 강조와 실행이 가장 근본적인 관건이라 생각됨

*주요용어: 갈등, 사회대타협 산출능력, 사회대타협 산출능력의 조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 인구구조 변화와 공_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안정 효과 분석

연구보고서
14-22-1-4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Hyper Aged Society and Retirement Income

연구책임자 • 김재호
공동연구자 • 전승훈·최장훈·이선희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초저출산·초고령화에 따른 노인부양비가 급격히 증가할 2020~2050년 동안 평생소득가설을 바탕으로 65세까지 축적한 공적연금 및 자산이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최소·최적소비를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을 충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함[1)]

– 국민연금의 성숙과 기초연금의 지급방식을 고려하여 공적연금이 필요노후소득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분석

– 또한 공적연금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역모기지 방식으로 유동화하여 정기적인 소득으로의 전환할 경우 필요노후소득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도 함께 분석

Ⅱ. 연구내용

▣ 분석의 대상은 2020년부터 65세 이상이 되는 코호트를 기준으로 공적연금수급이 가능하고 가구순자산이 존재하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을 현금으로 유동화하여 발생하는 소득만을 분석함[2)]

–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현재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적연금가입기간이 실제 가입기간보다 과다하게 가정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반영하지 않고 공적연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1) 생애소득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 1~15차 개인 자료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조사된 자료이기 때문에 은퇴시기까지의 생애소득경로 등을 추정하는데 적합한 자료임. 또한 개인의 임금, 비임금소득에 대한 자료 및 가구소득, 소비, 자산 등에 대한 자료가 조사되어 있어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 개인 자료 중 2012년 기준 27~59세 개인자료 및 이들의 가구자료를 활용하여 이들의 은퇴 후 공적연금자산 및 필요소득수준을 추정함.

2) 국민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20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해야 완전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지만 10년 이상을 납부했다면 감액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10년 미만 일시금 대상자는 분석에서 제외함.

• 이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비율이 매우 낮고, 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그 금액이 매우 낮은 것을 근거로 함

▣ 가구주와 배우자의 연금자산을 합산하여 가구의 연금자산규모를 추정한 결과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2020년 38.9만원에서 2045년 65.3만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지만, 이후 2050년에는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적연금제도의 성숙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서 급여증가효과가 발생하지만, 소득대체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가입증가효과를 상쇄됨

– 또한 가구주 혹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가구내 연금 수급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연금급여 수준 역시 낮아지기 때문임

▣ 기초연금 급여의 현재가치는 2020년 14.3만원에서 2050년에 7.2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도입된 기초연금제도가 현재의 노인세대에게는 유리한 제도이지만, 현재의 근로세대에게는 크게 유리하지 않은 제도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함

– 첫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구의 국민연금 급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작아짐

– 둘째, 기초연금 급여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증가하므로, 명목임금상승률을 이용하여 현재가치화 할 경우 현재가치가 점점 작아지게 됨

▣ 2020년부터 2050년까지 65세 이상 노인의 가구순자산을 추정하여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한 결과, 2020년에 1억8,887만원이며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50년에는 3억 286만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추정된 자산과 기대여명을 바탕으로 남은 기대 생존기간 동안 자산을 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소득은 2020년 1,576만원이며, 이를 소득전환율[3]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음

3) 자산의 유산동기, 거래비용에 따른 자산보유 욕구를 반영하여 순자산의 전환율(25%, 50%, 75%, 100%)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전환함.

– 25%의 소득전환율을 적용하여 월소득으로 전환하면 2020년 32.8만원에서 2050년 59.3만원으로 증가, 50%를 적용하면 2020년 65.7만원에서 2050년 118.5만원, 75%를 적용하면 2020년에 98.5만원에서 2050년에 177.8만원, 그리고 100%를 적용하면 131.4만원에서 2050년 237.1만원으로 증가함

▣ 노후소득 적정성 분석의 기준이 되는 필요노후소득수준으로 적정소득수준은 생애효용을 유지해주는 소비수준으로 정의하고 필요소득수준은 최저생계비수준을 기준으로 함

– 적정소득수준은 가계소비함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은퇴 후 각 연도의 소비수준을 추정한 후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하여 합산한 결과, 은퇴 후 필요소득수준 평균은 약 4억 322만원, 최소소득수준은 1억 9,943만원, 월평균 필요소득은 약 69만원으로 추정됨

▣ 추정된 노후소득과 필요소득을 바탕으로 생애효용을 유지하는 공적연금의 소비충분율은 2020~2045년 기간에 25%수준에서 45% 수준으로 높아진 후, 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공적연금의 자산충분성을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공적연금 자산충족률은 2020~2045년 기간에 60% 초반 수준에서 100% 수준으로 증가한 후, 이후 이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65세 가구주의 생애효용수준을 기준으로 자산소득환산액을 고려한 총노후소득[4]의 충분성을 살펴보면, 소득전환율을 적용할 경우 생애소비수준의 49.8%~76.3%를 충당할 수 있으며 2050년에는 88.7%~166.7%의 충분성을 나타냄

– 하지만 생애효용에 미달하는 가구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6.4%~80.2%에서 2050년 68.0%~33.1%로 여전히 상당히 높은 비율의 가구가 생애효용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망

▣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한 자산충족률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93.5%~147.6%에서 2050년 168.5%~317.3%로 총 노후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상당히 초과하는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남.

4) 총노후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순자산의 소득환산액

–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의 비율은 전환율에 따라 2020년 60.8%~17.1%에서 2050년 10.0%~0.2%로 점차적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Ⅲ. 정책제언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서 이상의 연구결과를 보다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첫째, 두루누리사업을 통한 소규모사업장의 국민연금가입 촉진과 함께 주부들의 임의가입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각지대에 속해 연금수급이 되지 않는 은퇴가구에 대해서는 공적부조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함

– 둘째, 국민연금 급여수급 직전까지 근로활동과 국민연금 가입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중고령자의 근로활동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동시장 환경의 형성 필요

– 셋째, 부족한 노후소득을 주택연금가입을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본 연구는 다음의 한계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2020~2050년까지 현재 근로자들이 65세까지 근로를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공적연금가입기간이 실제 가입기간보다 과다하게 가정하고 있으며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반영하지 않은 공적연금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함

– 자산의 소득환산에 사용된 기대여명의 한계로 5년마다 65세 가구주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원자료인 한국노동패널의 연령별 인구구성의 한계로 추정이 후반기로 갈수록 관측치의 수가 낮아 신뢰도가 다소 낮아지는 한계가 있음

연구보고서
14-22-7-3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A study on trends and response of the Internet and Gambling addiction

연구책임자 • 원종욱
공동연구자 • 백혜연·손지훈

Ⅰ. 연구목적

▣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기대수명의 증가세는 2013년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중위가정을 넘어서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처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매우 동태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연금재정연구가 필요

– 최근의 기대수명신장세를 분석하여 장수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점검하고 장수리스크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기금운용에서 감당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 필요한 자산배분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장수리스크를 기금운용과 연계시키고자 함

▣ 국민연금의 장수리스크분석과 함께 퇴직연금제도의 실질적 연금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시

–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자산운용측면과 연금제도측면 전체를 분석하고 이를 계기로 연금제도와 기금운용을 함께 분석하는 포괄적 연금정책관련 연구의 활성화 계기 마련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수리스크헤징을 위한 전략적 자산배분의 변경

– 최근의 기대수명추세를 반영한 수급자전망 및 기금고갈시점의 변화에 대한 분석

• 2010년 장래인구추계상의 중위가정을 넘어서는 기대수명이 전망됨, 수급자수가 2013년 재정추계의 중위가정 보다 많아짐에 따라 기금의 고갈시점은 5년 더 앞당겨지는 것으로 전망됨

– 장수리스크에 따른 추가 지출을 기금운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 필요

- 보험료수준 등 다른 가정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장수리스크를 기금운용실적제고로 충당하기 위해서는 2040년까지 현행 자산배분에 비해 위험자산의 비중을 20%~30%p 높여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
- 장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자산배분안은 무제약 상황인 만큼 자산배분의 방향성만을 점검할 수 있음

▣ 퇴직연금운용의 문제점과 Inflation Risk Hedging

– 가입자들의 일시금선택과 기업의 비용

- 퇴직연금제도는 기존 퇴직금제도에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일시금을 연금화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에 도입되었고 퇴직금을 회계장부상의 자산이 아닌 사외적립을 이루어냈다는 점은 성공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연금화에는 실패하였음
- 자산운용측면에서도 DB형의 경우, 은행권에 예금으로 예치되어 기금운용은 전무한 실정임. 기업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원리금보장형 상품 위주의 운용에서 벗어나 기금운용을 위한 포트폴리오구성이 필요함
- 보사연의 MVO(Mean Variance Optimization)모형과 합리적 risk-return profile로 임금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분석

▣ 우리나라의 다층노후소득보장제도 확립을 위한 퇴직연금제도의 발전방안

– 국민연금제도의 소득대체율 감소로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해 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실적인 가입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합계 소득대체율을 계산하여 보장성의 수준을 검토

– 퇴직연금의 연금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이 갖추어진다는 것을 전제한 통합소득대체율을 계산

- 출생코호트별 학력별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추정하고 동일한 기간을 퇴직연금가입기간에도 적용
-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의 보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퇴직연금의 연금화가 중요하며 퇴직연금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의 추가불입에 대한 세제혜택이 필요

Ⅲ. 정책제언

▣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재 평균 47%에서 앞으로 40%까지 감소하게 됨. 이는 민간연금, 퇴직연금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재정안정화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이 여파로 민간연금의 역할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직면에 있음

▣ 본 연구는 주요 OECD 국가의 기대수명추세와 최근의 우리나라의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장래인구추계의 중위가정보다는 고위가정에 따른 재정추계가 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얻게 됨

▣ 장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을 현 수준에 비해 대체자산의 비중을 20%p 내외로 증가시켜야만 가능한 것으로 분석됨

–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략적자산배분에서 대체자산의 비중을 20% 내외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고, 기금운용본부는 전술적으로 대체자산의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내부역량강화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인 추진이 필요

– 근본적으로는 해외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기금공사의 설립이 필요

• 기금공사 설립을 통해 해외부분에 역량을 집중하고 수익률제고를 위한 전술적 노력을 추구해야 함

▣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측면에서 궁극적으로는 수급기간을 10년 이상 강제화하고 연금퍼즐효과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업과 개인의 추가 납입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

– 연금제도 내의 개선책과 더불어 정년 연장 및 고용 안정화 등의 사회 구조적인 해결책도 함께 반영될 필요성이 있음

– 점점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길어진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퇴직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형태로 노후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게 제도적으로 강제화할 필요성이 점점 요구됨

연구보고서
14-22-7-4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 이전 분담실태 연구

Study on Demographic Change and Public-Private Transfer Division Status

연구책임자 • 황남희
공동연구자 • 이상협·양찬미

Ⅰ. 연구목적

▣ 노후소득보장정책의 효과는 주로 공적이전을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사적이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공·사 양측면에서 전체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

– 정부의 공적 개입으로 인해 사적 개입이 축소된다면 의도했던 정책의 전체효과는 반감될 수 있기 때문임.

• 이러한 공적이전과 사적이전의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공적연금이 발달한 선진국에서 오래 전부터 사회적 이슈였지만, 거시적으로 공·사적이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론이 부재하여 사회적으로 합의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국민이전계정(National Transfer Accounts; NTA)이 개발되어 거시적으로 세대간 경제를 이해하고 연령집단 간의 자원배분을 측정할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됨.

– 따라서 국민이전계정을 이용하여 노후소득보장에서 공·사적 이전의 역할과 관계를 규명하고자 함. 공적 및 사적이전의 구축관계는 향후 중장기 고령화 대응 정책 입안에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Ⅱ. 연구내용

▣ 세대간 경제의 추정과 분석 : 국민이전계정 방법론을 중심으로

– 고령화는 생산 보다 소비를 많이 하는 이른바 생애주기적자(lifecycle deficit) 계층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함.

• 유년층과 노년층은 기본적으로 생산하지 않는 연령집단이며, 생산을 하더라도 그 규모는 극히 미미한 수준임. 하지만 유년층과 노년층의 소비는 청장년층과 거의 차이가 없음.

– 생애주기적자를 충당하는 방법에는 공적이전, 사적이전, 자산재배분(asset-based reallocation) 이 있음.

• 자산재배분은 개인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자산축적의 기회가 거의 없는 유년층에게는 활용하기 어려운 방식임. 따라서 유년층은 주로 공·사적이전에 의존하게 되고, 노년층은 공·사적이전 외에도 자산재배분을 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생애주기적자를 메우는 방식, 즉 생애주기재배분(age reallocation)은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 국민이전계정은 생애주기적자와 생애주기재배분을 측정하여 세대간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용한 경제 분석틀임.

• 국민계정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세대간 이전을 측정하기 때문에 국가 및 가계의 재정부담 등과 같은 미래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위험 요인들을 대비하기 위한 관련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

• 또한 인구고령화의 거시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빈곤이나 분배, 조세귀착 등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함.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국민이전계정 개발 및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화와 공·사적이전 구조 등의 국제 간 비교가 가능함.

▣ 국민이전계정을 통한 공·사적 이전의 변화 분석

– 국민이전계정을 통해서 2000~2011년 동안 노년층 부양체계로서 공·사적이전의 관계를 분석함.

• 2009년 경제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제외할 경우, 최근 12년 간 공적이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적이전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패턴을 보임.

• 공적이전은 12년간 총 18% p(37% → 55%)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1/2 이상을 차지하며, 사적이전은 총 3% p(16% → 19%) 증가에 머물러 노후소득의 1/5에 미치지 못함.

– 노년층 내에서도 다양성이 존재하여 전기노인은 2006~2011년 동안 사적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후기노인은 2006년에 비해 2011년 감소함.

• 노년층 집단 내에서 공·사적이전의 관계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 17개국의 국민이전계정 결과를 이용한 국제비교에서는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공·사적 이전의 구축효과가 존재한다는 단서를 발견하지 못함.

• 고령화가 진전될수록 노후소득에서 공적이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적이전은 거의 변화 없음.

• 그러나 본 보고서에서 살펴본 공·사적이전의 관계는 단정적인 것이 아니며, 앞으로 국민이전계정의 시계열 확장 및 비교국가의 확대 등을 통해 보다 명확한 관계 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Ⅲ. 정책제언

▣ 최근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공적 재정투입 확대는 사적부문의 소득이전을 감소시키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고령화가 진전되더라도 공·사적이전의 구축관계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노인복지정책의 확대가 노년층에 대한 부양부담을 단순히 가족에서 국가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며, 노년층의 노후소득의 양적 규모를 확대시켜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됨.

• 다만 노인복지정책 확대로 인해 세대간의 형평성을 크게 저해하는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책당국은 정책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균형 있는 시각을 유지해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14-22-8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Living Profiles of Older-Persons-Only Households and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자 • 정경희
공동연구자 • 오영희·황남희·권중돈·박보미

Ⅰ. 연구목적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노년기의 거주형태의 변화라는 맥락에서 노인단독가구의 특성 및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더불어 위하여 노인단독가구 중 시급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대상을 도출하고자 함.

▣ 연구 방법

– 양적 분석을 위해서는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2012년도 가계동향조사를 보완적으로 활용

• 질적 분석을 위해서는 50대 후반~60대 초반의 예비노인 7명과 65세 이상의 노인 8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을 각각 1회, 15명에 대한 일대일 면접 실시

– 정책개입 대상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하여 양적 자료를 활용한 유형화 실시

• 보건복지부가 독거노인 중 정책적 개입 우선 순위 설정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는 영역을 기반으로 하되 경험적 분석에 활용한 노인실태조사 상의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반영하여 활용

Ⅱ. 연구내용

▣ 노인단독가구의 특징

– 노인단독가구는 전반적으로 사회적 고립의 위험이 있는 일정 규모의 대상이 있으며, 경

제적 충분성과 안정성이 낮음.

- 지출 중 식생활비의 비중이 높지만 유제품이나 기호식품 등에 대한 지출액 수준은 낮은 등 균형 잡힌 식생활을 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독거가구과 부부가구의 특징 비교

– 독거노인의 경우 가까이 사는 자녀가 없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높은 우울증상을 보이고 있음.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경로당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적 연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는 그러한 기제가 부족한 상황임.
- 독거노인은 상대적으로 운동실천율과 건강검진율이 낮고 빈곤경험률이 매우 높음.
- 독거가구를 대표하는 삶의 유형은 빈곤과 질병, 고립과 무위라는 4가지 고통을 모두 경험하고 있는 유형으로 공적개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위기집단은 독거가구의 25.2%에 달하고 있음.
- 이외에도 공적 보호를 우선시해야 하는 취약집단은 35.7%로 도출되었음.

– 한편, 부부가구의 경우 부부가 모두 75세인 비율이 21.3%이며, 독거가구에 비하여 제 특성별 차이, 즉 내부적 다양성 수준이 높음.

- 부부가 공간과 생활을 모두 공유하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적 유대와 중요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가구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빈곤과 질병이라는 문제는 경험하지 않지만 소외와 무위의 문제를 경험하는 유형이 15.1%, 4가지 문제를 모두 경험하는 경우가 14.1%임.
- 정책적 개입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적 개입이 필요한 위기집단 가구가 13.0%, 공적 보호를 우선시 해야 할 취약집단(4고(四苦) 중 3개의 문제를 갖고 있는 집단)이 27.4%임.

〈표〉 노인복지 정책대상의 집단 분류와 비율

(단위:%, 가구)

집단 분류	서비스 수요 내용	정책대상 문제의 경험	노인가구형태		
			독거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소계
위기 집단	노후생활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모든 영역의 노인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식적 보호를 전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	1. 경제문제+건강문제 +소외문제+무위문제	25.2	13.0	17.8
취약집단	다수 노후생활 영역에서 취약성을 보여 3가지 영역의 노인복지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식적 보호를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집단	2. 건강문제+소외문제+무위문제	7.8	11.5	10.1
		3. 경제문제+소외문제+무위문제	5.1	6.6	6.0
		4. 경제문제+건강문제+무위문제	4.4	3.0	3.5
		5. 경제문제+건강문제+소외문제	18.4	6.3	11.0
		소계	35.7	27.4	30.6
사회지지 필요집단	일부 노후생활 영역에서 공식적 보호와 비공식적 보호와 지지를 필요로 하며, 공식 및 비공식 지지망의 협력적 지원을 통하여 의존적 생활이 강화되는 것을 예방해 나가야 하는 집단	6. 소외문제+무위문제	3.9	15.1	10.7
		7. 건강문제+무위문제	2.7	3.7	3.3
		8. 건강문제+소외문제	7.2	5.9	6.4
		9. 경제문제+무위문제	1.8	1.7	1.8
		10. 경제문제+소외문제	5.2	4.2	4.6
		11. 경제문제+건강문제	4.4	1.9	2.9
		소계	25.3	32.6	29.7
자립생활	특정 노후생활 영역에서 문제를 경험하여 단일영역의 급여와 서비스를 필요로 하며, 공식적 서비스와 비공식적 지지를 통하여 문제를 경감하여 자립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집단	12. 무위문제	2.0	7.2	5.2
		13. 경제문제	1.3	2.0	1.7
		14. 건강문제	4.4	3.3	3.7
		15. 소외문제	3.9	9.4	7.2
		16. 문제없음	2.3	5.2	4.1
		소계	13.9	27.0	21.9

자료: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가구단위로 재구축한 자료

▣ 제특성별 단독가구의 생활현황 비교

– 지역의 특성이 매우 두드러져,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비교적 단단한 지역사회와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의 효과로 영양상태나 건강교육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고, 119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반면 도시지역에서는 사회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반면 학대경험이나 자살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아 심리적 안전이 취약한 상태임.

– 연령의 경우도 후기 노년기로 갈수록 자녀와의 정서적 교환도 약화되고, 행동반경이 축소되는 등 사회적 연계망과 활동이 축소되고 있음.

• 한편, 예비노인의 경우는 현세대 노인과는 달리 그들 앞에 놓여있는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암중모색하고 있음.

– 다른 연령층의 경우와 유사하게 노인단독가구에 대한 경제상태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다양한 지표에서 발견되고 있고, 종교활동이 삶에 갖는 의미와 기능이 매우 크다는 점은 비노년층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모습임.

Ⅲ. 정책제언

▣ 정책 방향과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

– 노년기의 단독가구 형성은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현상으로, 이러한 노인단독가구의 증가추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함.

– 노인복지정책의 서비스 단위(unit of service)를 개인단위에서 가구단위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와 노인단독가구로의 전이과정과 생활사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의 수립이 요구됨.

▣ 노인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노인단독가구 내에서도 독거가구와 부부가구의 차이점이 분명하므로 정책을 차별화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상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하거나, 노인단독가구 거주자들의 욕구가 높은 서비스 위주로 적극 개발·제공해가야 할 것임.

• 주택보수, 반찬배달서비스의 필요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범위 밖에 있는 빈곤한 노인단독가구에 대해 동절기 난방비 지원, 사회적 고립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기제마련, 농어촌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119 적절한 활용 등

▣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강화 및 보완

– 단독가구의 다양성과 욕구 증대에의 적극적 대응이라는 새로운 시도뿐만 아니라 기존 노인복지정책의 대상범위 확대 및 체질 개선 등의 노력도 필요함.

• 노인복지정책의 질적 수준 제고 및 범위의 확대 없이는 노년기 단독가구의 삶의 질 향상이 어렵기 때문임.

– 구체적으로는

• 첫째, 노인단독가구의 생존 및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식적 보호체계의 역할과 책임의 강화

• 둘째, 절대빈곤계층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한 정책 강화

• 셋째, 노인단독가구의 주거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대안의 모색

• 넷째, 실질적 소득보완 효과를 지닌 좋은 일자리 공급 확대

• 다섯째, 질병치료나 장기요양보호 수요 충족을 위한 급여의 확대와 아울러 가사, 일상생활지원 등의 노인돌봄서비스의 확대

• 여섯째, 노인단독가구의 생활안전 보호를 위한 노인돌봄서비스, 여가 및 사회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확대 등이 요구됨.

연구보고서
(수시)
14-01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Analyzing the effect of the Basic Pension for the stable life after retirement

연구책임자 • 원종욱
공동연구자 • 백혜연·김태은·최요한

Ⅰ. 연구목적

▣ 기초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현 노인세대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정착되기 위해 노후생활 안정 효과에 대하여 분석

– 국민연금과 연계를 통해 국민연금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수록 세대 내, 세대 간 형평성 유지 가능 여부에 대한 평가가 요구됨

–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예상하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주기적이고 장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 있음

Ⅱ. 연구내용

▣ 해외 주요국의 기초연금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별 유형을 소개

▣ 현 노인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노후생활 안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로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 산출

• 분석대상 설정을 위해 2012년 국민연금통계의 63세(2012년 기준) 이상 노령연금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의 통계치를 사용

• 분석대상의 소득은 2012년 국민연금통계의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평균액(B값) 분포를 사용

– 국민연금 현 수급자 대상으로 한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의 예상 수급액 산출

•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의 증가에 따라 수급액도 함께 증가하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증가에 따라 수급액이 감소

- 그러나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 수급액과 기준연금액(20만원, 2014년 기준)의 격차보다 가입기간 증가에 따른 국민연금 수급액의 상승폭이 더 크므로 두 연금의 총 수급액 합은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일수록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또한 증가
- 현 노인세대의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총 수급액은 평균적으로 44만원 정도이고, 총 소득대체율은 약 20%로 예상됨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의 노후생활 안정 효과 분석

– 2012년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이용하여 출생코호트의 교육수준, 소득계층별 소득 분포를 가정

-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의 조사범위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민간부문 모든 산업에 대하여 통계적 방법으로 추출된 표본사업체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출생코호트별 미래세대에 대한 분석은 상용근로자 기준임
- 국민연금 수급액의 경우 1955년생에서 1970년생까지는 교육수준, 소득계층 상관없이 점점 증가하고, 그 이후 출생코호트에서는 제도 내 설정된 소득대체율의 감소로 인하여 수급액이 감소
-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액과 연계된 기초연금은 그와는 반대로 70년대생까지는 수급액이 감소하다 그 이후 세대로 갈수록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합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출생코호트별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것으로 예상되나, 소득계층별로 볼 때는 모든 교육수준별 그룹의 하층 그룹이 소득대체율 50%대로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저소득계층일수록 기초연금으로 인한 노후소득 안정 효과 정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임

Ⅲ. 정책제언

▣ 기초연금제도가 현 노인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에게도 제도의 기본 목적과 같이 노인빈곤 완화 효과가 높아지도록 제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 있음

– 기초연금법에서는 매5년마다 기초연금액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조정한다고 명시함

• 보정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 또는 방향이 제시될 필요 있음

▣ 기초연금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형평성 그리고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이슈임을 고려할 때,

–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이들 이슈와 관련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장기적인 제도 보완 및 발전 방향 모색이 요구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8. 저출산·고령화 대응 건강한 가정 만들기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연구보고서
14-22-6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Overcoming the problem of low fertility by improving child-rearing environment

연구책임자 • 신윤정
공동연구자 • 박종서·김은정·기재량·최인선

Ⅰ. 연구목적

▣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래 정부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나 국내 출산율은 아직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음

– 기존 연구들이 제도적인 현황과 효과성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둔 것과 차별적으로 본 연구는 출산 및 양육의 사회 문화적 환경, 자녀 양육의 현 실태,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을 통해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함

Ⅱ. 연구내용

▣ "외국의 저출산과 자녀 양육 환경"은 서구 사회에서 자녀가 갖는 의미, 그리고 유럽 가족정책과 출산율의 관계를 파악하고,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프랑스와 북구 유럽 국가, 출산율이 낮은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자녀 양육 환경을 비교하였음

– 우리나라는 저출산 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북구 유럽 국가의 양성 평등 정책과 프랑스의 영유아 보육 지원의 양상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아직도 낮은 출산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과 이탈리아의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현실과 유사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음

▣ "출산 및 양육의 사회 · 문화적 환경 분석"은 출산과 자녀 양육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현재의 문화적 환경이 매우 강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문화적 구조의 역사는 뿌리 깊고, 사회체계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었음

–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정책은 설정되어야 필요가 있으며,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를 구현할 필요가 있음

▣ "자녀 양육 정책 및 실태 현황"은 2013년 이후 양육지원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자녀돌봄 지원정책이 부모의 양육욕구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부합된 환경을 제공하는지 살펴보았음

– 수요자들의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영아기 가정양육 수요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실적으로 서비스 제공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이 지난 몇 년간 다소 감소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가구가 일 ·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육책임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음

▣ "가사 노동 및 자녀 돌봄 시간 변화 분석"은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 자료를 활용하여 저출산 · 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 이후 자녀 양육과 관련한 시간적인 부담에서 나타난 변화를 분석함

– 가사 노동 및 돌봄에 있어 남성들의 참여가 과거보다 증가하고 있고 성 역할 규범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절대적인 시간량에서 남성들의 참여는 부족

– 남성들의 자녀 돌봄과 가사 시간의 변화는 인구사회학적 특징이 아닌 인식과 태도와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분석

– 무상 보육 및 초등 방과후 돌봄 등 그 동안 자녀 양육을 위한 많은 서비스가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특히 여성들의 돌봄 시간은 오히려 증가

Ⅲ. 정책제언

▣ 분명한 국가적인 철학과 이념 하에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 자녀 양육에 있어 국가, 가정, 지역 사회의 역할과 책임 범주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 시장을 포함한 거시적인 사회경제 체계 개편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자녀를 가진 여성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저조한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하여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휴직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국가 영유아 보육교육 지원 정책은 정책 목적의 범위를 확장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현재의 시점에서 보육 정책이 추구해야 할 목적은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 여성의 경제 활동 활성화, 사회적 형평성 제고임

– 취업 여성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서는 보육 서비스 지원 정책과 유연한 근로시간 정책이 함께 밸런스를 맞추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자녀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국민인식 개선사업의 방향을 재정립해야 할 것임

– 적절한 교육 및 홍보 컨텐츠 개발을 통해 출산과 자녀에 대한 의미, 생명의 존귀함, 인간의 권리로서의 양성 평등과 다양한 가족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치의 형성이 필요

– 국민들의 높은 의식 수준이 정부 정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잘 고안된 정부 정책이 국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다가오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국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정부의 역할이 모두 크고 중요하다고 할 것임

연구보고서
14-22-6-1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Analysis on childcare behaviors after the expansion of family policies

연구책임자 • 신윤정
공동연구자 • 기재량·우석진·윤자영

Ⅰ. 연구목적

▣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 노력으로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보편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국내 출산율은 초저출산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녀를 키우는데 직면하고 있는 경제적 및 돌봄 부담을 감면시킬 수 있어야 할 것임

–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정책 확대시기를 이후로 나타난 자녀 양육과 관련한 가사 활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시계열적 변화와 그 변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메커니즘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였음

Ⅱ. 연구내용

▣ 국내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1999, 2004, 2009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사 노동 시간과 자녀 돌봄 시간의 변화 및 이러한 변화를 가져온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함

– 기술 분석을 통하여 전반적인 시간 활용 변화,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돌봄에서의 성별, 연령별, 세부 활동 영역별, 시간량 분위별 변화를 비교 분석

– Oaxaca-Blinder 분해 방법론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시간 변화에 내재되어 있는 요인을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으로 분해하고 시간 변화를 설명하는 크기와 유의도를 검증함

– 시간 사용이 많은 집단과 적은 집단 간의 구조적 요인과 비구조적 요인의 상대적인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Juhn-Murphy-Pierce 분해와 무조건 분위회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

▣ 기술 분석 결과, 남성의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자녀 돌봄 시간은 증가하였으나 가정 관리 시간은 감소하였음

– 남성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참여율과 시간 사용량이 현저하게 낮고, 여성의 참여율과 시간 사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 사회에서 가정 관리 시간과 자녀 보살피기에서 강한 성 역할 관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

– 남성들의 시간 증가의 대부분은 인구학적 특성 등 구조적인 요인의 차이보다는 관습과 인식과 같은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분석

• 여성들의 경우 가정 관리 시간의 감소는 비구조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비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증가된 바가 컸음

– 남성들의 평균적인 시간 증가는 시간 사용량이 높은 3사분위(Q3)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서 나타났음

• 여성들의 경우 가정관리시간의 감소는 전체 분위에서 어느 정도 고르게 나타난 반면에, 자녀 돌봄 시간의 증가는 시간량 분포의 5분위(D5) 이상을 차지하는 집단에서 나타남

– 남성과 여성 모두 시간 사용량이 높은 집단일수록 구조적인 요인보다는 구조적인 요인과 비구조적인 요인의 상호 작용에 따라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음

• 남성의 돌봄 노동 시간의 증가가 비구조적 요인에 의해 전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은 남성의 의식 변화가 저출산을 타개하는 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변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인 요인 효과는 노동 시장 구조 및 관행에서 크게 달라진 바가 없음을 시사함

• 여성의 돌봄 노동 시간에서 구조적인 요인의 부정적인 영향을 비구조적인 요인의 긍정적인 영향이 상쇄하고 있다는 점은 자녀 돌봄 시간에 대한 심리적 동기가 자녀 양육 행태를 떠받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음

Ⅲ. 정책제언

▣ 남성들의 자녀 양육 및 가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 사업과 함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거시적인 경제 지표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가족을 위하여 생계 활동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할 수밖에 없는 중산층 이하의 남성들의 가사 및 양육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 주는 노동 시장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확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증가한 자녀 돌봄 시간이 자발적인 선택에 의한 정서적인 가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자발적인 선택에 따른 돌봄 부담의 증가로 귀결되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여성들의 돌봄 시간 증가는 최근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음

▣ 자녀 돌봄 시간 증가는 자녀에 대한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자녀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차원에서의 투자도 함께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에 대한 투자는 아동이 공공재라는 개념 하에 공적인 영역의 주도하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 등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효율적인 투자에 대해서 제고해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14-22-6-2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A Study of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Childbirth and Childrearing

연구책임자 • 박종서
공동연구자 • 변수정·조성호·기재량·박 건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사회 · 문화적 환경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문화적 요소로 가치, 규범, 제도라는 세 가지 차원에 주목하여 각각의 연구문제 설정

Ⅱ. 연구내용

▣ 가치의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전통적 자녀가치는 약화되는 가운데, 70년대와 80년대 동안 근대적 자녀가치가 다양하게 등장한 이후, 90년대 들어 자녀는 교육적 목적을 위한 투자 대상으로 수렴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90년대를 지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점차 전문화되고 자원의 집중도가 증가

• 부모들은 경제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그렇지 못할 경우 부모로서 심한 죄책감을 느낌

• 자녀 교육은 현재 가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부모들에게 사회적 압박으로 작용하는 구조가 형성됨

– 자녀에 대한 근대적 가치로서 정서적 만족감은 다른 가치에 의해서 억압되는 특징을 보임

• 90년대 이후 현재까지 다른 근대적 자녀가치들이 정서적 만족감을 짓누르고, 더욱 내밀한 것으로 만들었음

• 건강한 자녀의 출산, 아낌없는 교육투자, 자녀의 안전한 성장, 양육비용의 부담, 양육의 육체적 고통 등이 정서적 만족감을 능가함

– 1960년대 산업화가 시기, 국가는 경제적 관점에서 자녀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형성

- 정서적 관점보다, 인구의 양적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존재로서 주로 경제적인 가치로 표현
-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녀가치는 현재까지 그 방향은 정반대로 바뀌었지만, 의미의 함축은 거의 동일하게 인구의 양적 측면에 집중

▣ 규범적 측면에서,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규범은 대체로 고착화되었으며, 때로는 상반되는 규범이 모순적으로 현재까지 공존

– 가족규범 측면에서, 전통적인 도덕적 자녀 훈육규범이 가족계획사업 추진 시기동안 근대적 교육체계에서 자식을 성공시켜야 하는 것으로 변화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투자는 개인 또는 부모의 책임이라는 분명한 의미가 함축
  - 1990년대 이후 더욱 강화되어, 현재까지도 사회에서 자녀의 세속적 실패는 전적으로 부모책임으로 전가됨

– 젠더 규범과 관련해서, 가사노동 및 돌봄 노동의 성별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음
  - 가족계획사업 추진기에 성역할 구분은 거의 전통적 가치를 그대로 따름

– 남녀평등 행위 규범은 1970년대 말부터 여성의 법적 지위에 대한 담론이 형성
  - 1980년대 가족법 개정을 둘러싸고, 남녀평등의 주요 문제가 담론적 힘을 형성
  - 여성의 취업을 인정하면서도 전통적 여성상이나 여성의 역할을 주장하는 모순을 드러냄

– 노동규범과 관련하여, 경영담론은 공동체성을 강조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집단의 화합과 우애 등을 강조하고, 조화와 안정을 주요 덕목으로 제시
  - 시간에 대한 노동규범은 엄격한 근로시간 관으로 형성

▣ 제도적 현실

– 여성은 여전히 가족제도 속에서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유지
  - 여성은 남성보다 8배 이상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

– 자녀의 교육비 지출은 지난 10년간 크게 줄지 않고 있음
  - 가구소득이 증가하면 교육투자는 더 증가

• 노동력 재생산과 인적자본 축적의 책임이 대부분 가족에게 남아있는 상태

– 노동시장제도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음

• 지난 10년간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50%수준에서 정체

• 노동시장 이탈 지속, 성별 임금격차는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점차 증가

– 입학경쟁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진한 교육제도 개혁은 사교육과 학군수요를 조절하지 못함

Ⅲ. 정책제언

▣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핵심 요점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둘러싼 현재의 문화적 환경이 매우 강력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 이러한 문화적 구조의 역사는 뿌리 깊고, 사회체계 전반에 보편적으로 확산되어 있음

▣ 출산이라는 행위 결정은 문화적 의미로 보면 미래에 대한 기대를 반영

– 미래에 대한 기대는 제도적 예측 가능성과 함께 심리적 안정(믿음)을 포함

– 따라서 문화적 관점에서 정책은 개인들에게 이 양 측면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함

▣ 정책 과제는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함

– 부모들이 느끼는 도덕적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가적 지원과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 형성이 중요

▣ 가족형성초기에 해당하는 결혼, 임신, 첫째아 및 영아기 단계에 정책적 지원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과적일 것

– 기존에 추진된 정책 중, 신혼부부 주거지원의 강화, 임신 중 의료 지원, 첫째아 양육수당 및 영아 돌봄 지원 강화 필요

▣ 남성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고,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대책 필요

– 양성평등의 가치와 규범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사회구조 형성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 필요

– 휴가·휴직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법적 권리를 보장

▣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참여기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보장

– 현재의 문화적 구조에서 여성은 비임금노동·임금노동 두 영역 모두에서 합리적 처우를 받지 못함

– 노동시장의 처우에서 여성의 권리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함

▣ 국민인식 개선사업의 방향을 재정

– 가치나 규범은 그 스스로 변화하지 않고, 제도적 개선노력과 사회구조적 요인의 고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함

– 기존의 인식개선 사업에서 중점을 두었던 계몽적 가치관 교육보다는 정책 내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개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함

협동연구총서
14-60-1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Preconception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연구책임자 • 이상림

Ⅰ. 연구목적

▣ 이 보고서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협동과제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의 총괄 보고서로 2년 간 진행된 연구보고서들의 요약과 그 함의를 담아 정리하였음

–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1차년 총괄보고서),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 및 지원 방안(한국보건사회연구원),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연구: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여성정책연구원)

–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2차년 총괄보고서),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방안 연구: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 임산부의 산전 질환 및 출산결과 동향분석과 정책적 함의(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본 협동연구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인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임신 전 관리, preconception care)의 관점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임신 이전 시기부터 출산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함

▣ 이상과 같은 목적에 따라 2013년 1차 연도 연구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반적인 임신 전 출산건강관리 실태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4년 2차 연도 연구는 시급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미혼여성들의 생식건강 관리 관련 사안들을 대상으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II. 연구내용 및 정책제언

▣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에 관한 개념 정립 (이론적 구성)

–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산전 및 임신 이전의 위험요인 및 증진 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요인을 회피하고 증진요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

– 해외의 임신 전 출산 건강 관리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여 해외에 서 논의되고 있는 생애적 접근에 기반 한 이론적 방향성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출산건강 지원 정책 및 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 임신 전 출산 건강관리 및 임신관리 실태 분석

– 임신 준비에 관한 조사 자료와 심층 인터뷰 등의 질적 접근을 통하여 그간 연구되지 않았던,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들을 파악

– 더불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발생하게 된 사회경제적, 문화적, 건강행동 인식적, 의료서비스 구조 및 제도 구성의 원인들과 발생 과정들을 분석

– 임신 전 관리의 부정적·긍정적 행동이 나타나는 출산모들 및 고령임산부의 특성을 분석하여, 출산결과에 실제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

▣ 미혼여성 산부인과 이용 증진 방안

– 임신 전 출산 건강과 관련된 지식과 인식의 실제적으로 반영하는 건강행동에 대한 장애요인 제거와 건강행동 실현 접근성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과 자원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 청소년을 위한 산부인과 이용 쿠폰 제도

• 초기 성인기 미혼여성을 위한 산부인과 정기 건강검진

• 임신가능성이 높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신 전 검진 지원

▣ 생식건강 정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 미성년자의 산부인과 방문 및 상담이 어려운 현실 아래에서 생식건강 관리에 관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인터넷을 통한 올바른 정보 제공

•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자 교육 제공

• 상담기능을 갖춘 생식건강 전문 건강정보 사이트 운영 방안

▣ 학교 및 지역 사회 기반 생식건강 교육 및 상담 환경 개선

– 청소년 및 성인 미혼여성 대상 생식건강 교육을 이용하는 측과 교육을 제공하는 측, 즉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생식건강 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등 분석

– 임신 전 관리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임신 전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수준을 높이는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 교육과 홍보 정책

• 생식보건 교육을 포함한 학교 성교육 강화 방안

• 학교 기반 건강행동 인식 개선 및 학교 상담 기능 강화 방안

▣ 해외의 임신 전 생식건강 관리 사례 연구

– 해외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프로그램 방안 사례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

•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 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교육과의 의료 서비스의 연계

• 대중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

협동연구총서
14-60-2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Preconception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Un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

연구책임자 • 이상림
공동연구자 • 임지영·이은주·조영태·라채린

Ⅰ. 연구목적

▣ 우리나라의 출산결과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전 연령집단의 여성들에서 나타나는 경향으로, 출산건강 증진 정책은 일부 위험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예방적 정책으로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주산기 이전부터 누적되는 위험요인과 증진요인은 추후 출산건강을 결정

– 현재 사후대처에 그치는 임신·출산 지원정책은 실제 출산건강의 증진이나 악화 예방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어 예방 차원의 임신 전 관리 정책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는 아직 출산건강 관리의 정책대상으로 포섭되지 않은 미혼 여성의 생식건강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이들의 임신 전 생식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임신 전 관리(preconceptional care or preconception care)는 출산결과 결정에 대한 생애적 관점에 기초하여 임신 이전부터 실제 출산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

– 임신 전 관리의 대상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정책주체나 정책내용 역시 정부 이외의 지역사회나 NGO 등과 폭넓게 연계되어야 하며,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정책을 전달할 수 있어야 함.

– 미국이나 기타 유럽국가 등의 국가들에서는 미혼여성의 임신 전 관리와 관련한 정책 혹은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추진

- 이들 국가는 종합적인 의료 서비스와 임신뿐만 아니라 비임신적 내용과 관련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고, 성교육과 의료 서비스 를 연계할 뿐만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도 시행
- 또한 정책 대상자 이외에도 부모에 대한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점,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을 꾀하는 점 등은 우리나라 가 정책을 추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부분

▣ 성인 미혼여성 1,314명과 청소년 708명을 대상으로 한 국내 미혼여성들의 산부인과에 대한 인식 및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여성들은 많은 높은 수준에서 산부인과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

– 생식건강을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건강 관련 문제로 인식하더라도,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여 산부인과 이용을 망설이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들로 인하여 생식건강 이상 증상 경험이 곧바로 산부인과 방문으로 이어지지 않음.

- 청소년의 42.1%가 생식건강 이상 증상이 있었고, 이 중 42.1%가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음. 청소년의 경우 부모님과의 관계가 생식건강 관리에 중요한 결정요인.
- 성인 미혼여성의 53.2%가 생식건강의 이상을 경험하였으나 생식건강 이상이 있음에도 산부인과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가 56.9%로 나타나 증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경향

▣ 그러나 실제 산부인과 이용경험이 있는 경우는 산부인과 이용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뚜렷하게 감소

– 미혼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을 원활하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인식의 개선과 더불어 실제 산부인과 진료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불어 산부인과 진료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요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인터넷은 산부인과의 상담기능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의료 현실과 미혼여성이 산부인과를 방문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실 아래에서 생식건강 관리에 관한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실태조사를 통해 본 인터넷 생식건강 정보 이용률은 청소년 26.4%, 성인 미혼여성 50.4%로 성인 미혼여성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는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과 성인 모두 정부나 공식 의료기관·보건소나 시민단체 등 비의료 기관 외에 포털사이트 등의 비의료 민간사이트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음(청소년 88.2%, 성인 미혼여성 91.4%).

Ⅲ. 정책제언

▣ 현재 정책은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건강한 아이 출산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임신 전 관리 지원 정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함.

– 청소년과 성인 미혼여성이 임신 전 생식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하게 산부인과를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 청소년에게 산부인과 상담쿠폰 제공 등을 통하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산부인과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초기 성인기 여성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정기검진을 실시하여 심각한 질환을 예방하고 산부인과 방문의 높은 문턱을 낮추는 효과 도출

• 산부인과 방문을 막는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대중 홍보 및 교육 방안

– 인터넷을 통한 생식건강 정보 검색이 활발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담기능을 갖춘 생식건강 전문 건강정보 사이트를 운영하여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정보를 수용하는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 이용자의 측면에서 정확한 생식건강 정보를 유통하고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용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임신 전 관리는 건강한 아이의 출산뿐만 아니라 생애적 차원에서의 건강 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역시 의의가 있으므로 건강 증진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개선되고 의료 및 비의료 영역 간의 협업체계 구성이 필요

협동연구총서
14-60-3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Preconception Care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Unmarried Women of Childbearing Age: Focusing on School and Community Based Reproductive Health Education

연구책임자 • 김동식
공동연구자 • 김영택·김돌순·배호중·이수연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예방적 차원의 출산건강 증진 접근인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의 실천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임.

– 특히 본 연구는 그간 출산건강 관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져 온 미혼 여성을 대상으로 이들의 출산건강 증진 방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시리즈의 일부이며, 이 연구는 특히 임신 전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기존의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서비스 제공기관들을 이용·연계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에서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청소년 생식건강 교육 및 상담 실태 분석

– 학교에서 제공하는 생식건강 교육은 대부분 성교육의 일부로 다뤄지고 있으며, 이조차도 형식적 수준에 머무는 형편임. 정규수업 편성이 교육의 질 측면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생식건강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을 때 생식건강 예방 행동 실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학교 내 및 학교와 외부기관과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생 생식건강 교육 및 상담 실태 분석

– 대학 내의 교육·상담은 청소년에 비해 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 내 생식건강 교육은 주로 교양과목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담은 학생들이 방문하여 이루어지는 형태임. 외부와의 연계 역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러한 미흡한 접근은 생식건강 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과 최근의 대학교 교육 환경 변화와 깊은 관련.

▣ 성인 미혼여성 생식건강 교육 및 상담 실태 분석

– 학교 졸업 후 생식건강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성은 26.3%에 불과였으며 주로 연령이 낮고 전문·관리직 종사자임. 지역사회 내 기관들로부터 상담을 받은 성인 미혼여성은 16.2%이고 90% 이상이 병의원을 통한 경험임. 보건소가 모자보건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미혼여성의 방문이 저조한 것으로 사료됨.

Ⅲ. 정책제언

▣ 생식건강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와 교육대상 확대가 우선되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과 새로운 전달 방식이 개발되어야 함. 기관별로 다르게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뿐만 아니라 생식건강 교육 전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

– 청소년 대상으로는 보건교육을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통합적 관점의 단계별 체계화된 생식건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기 생식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함.

–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생식건강 교육은 찾아가는 적극적인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여야 함. 대학 내 생식건강 관련 기관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밖의 생식건강 관련 기관과의 연계성을 구축하여야 함.

– 미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생식건강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보건소 내 생식건강 관련 전담 간호상담사를 배치하는 등, 일상 속에서 생식건강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루트를 마련해야 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09. 저출산 극복과 인구자질 향상방안 모색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금융, 주택, 국방, 사회갈등
-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Ⅱ)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14-22-1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Impa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연구책임자 • 이삼식
공동연구자 • 최효진

Ⅰ. 연구목적

▣ 초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초고령화 등 인구 변동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임.

– 인구 변동의 영향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거나 미흡할 경우 그만큼 미래사회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초저출산과 초고령화에 따른 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치밀하게 수립할 수 없기 때문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사회 제 측면(거시경제, 노동, 산업, 금융, 주택, 국방, 노후소득, 노인복지서비스, 농촌 등)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위험을 명료화하고자 함.

– 아울러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여 인구변동에 따른 미래사회위험을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본 연구에서는 초저출산지속을 가정하여 인구(3가지 시나리오 설정)를 추계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회 제 영역(거시경제, 노동수급, 산업, 금융, 주택, 국방, 노후소득, 노인복지서비스, 농촌)에서의 위험 예측

▣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진단: 경제부문

– (거시경제)2000년대 연평균 4%를 시현한 경제성장은 2030년대까지는 2%로 2050년대에는 1%내외로 둔화될 전망

– (노동수급)노동공급인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나 노동수요인 취업자는 2030년대 초반부터 감소할 전망으로 취업률의 급격한 하락 예상

•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보다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음.

– (산업구조)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이 지속 축소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SOC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되어 서비스업 비중 확대 전망

– (금융시장)고령화 진전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순저축률,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주택시장)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장래 주택수요는 2040년대 초부터 감소할 전망이나, 가구분화에 따른 소형가구 증가, 노인인구의 주거소비 유지, 가구소득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 다변화 예상

▣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진단: 사회부문

– (국방인력)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제1국민역 대상인 19세 남성인구가 감소하여 입영인구는 2022년부터 부족해지며, 특히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부족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

– (노후소득)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20년경 기초연금이 은퇴 후 필요소득을 충족함에 있어 큰 역할을 차지하지만, 2040년 이후에는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해져 결과적으로 국민연금만으로 은퇴 후 최저생계비의 90%이상 충족할 전망

– (노인복지서비스)초고령화의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노인의 취업욕구와 돌봄욕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노인 및 부양가족의 위험규모와 유형이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전망

– (농촌사회)농촌 지역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는 특히 면지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날 전망

Ⅲ. 정책제언

▣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만혼화와 관련하여 취업, 일-결혼 양립, 주택 등에 대한 지원에 우선순위 부여 필요

– 이와 함께 만혼화로 출산을 늦게 시작하는 만큼 임신능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인하여 비자발적으로 출산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적극적 지원 필요

▣ 현재와 같은 인구성장과 경제성장간의 선순환적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출산율 제고와 같은 인구정책과 더불어 국내 소비나 투자 자체를 유인하는 경제정책이 동반되어 수출과 국내수요 간의 구조적 불균형 개선 필요

▣ 노동공급 감소에 따른 성장잠재력 둔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출산율 제고가 중요하며, 급격히 저하되고 있는 고용창출구조 개선 필요

▣ 향후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의 출현 혹은 소규모 산업의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고,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필요

▣ 위험분담 및 중개기능을 강화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령화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위해 적절한 위험분담(risk-sharing)방안 마련, 소비자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 및 시장형성, 금융인프라 구축 등 모색 필요

▣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의 다변화를 고려한 주택 정책(공급, 주택규모 다양화 등) 추진 필요

▣ 국방인력 감소는 일정 전력 수준의 유지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안 필요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택연금 또는 농지연금의 제도적 한계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사용 권장 필요

▣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원만한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비자발적 은퇴를 줄이고, 50~70세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활성화 필요

– 고령화에 따라 늘어나는 취업수요와 돌봄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인일자리와 돌봄 등과 관련한 노인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인력 전문성 등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개선 필요

▣ 농촌 공동화라는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민 역량에 근거한 지역사회자원 활용 극대화, 농촌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율화, 지역 특성을 감안한 농촌발전의 효율화를 위한 분권적 농촌정책 강화 등 필요

연구보고서
14-22-1-1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Causes of Continued Lowest Low Fertility and Future Policy Directions

연구책임자 • 이삼식
공동연구자 • 이지혜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01년 이래 지속되고 있는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하여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하였던 시기(1992~1997년)와 초저출산현상 진입 전후 시기(1997~ 2005년), 초저출산현상 진입 후 변화 시기(2005~2013년)로 구분하여 인구학적 원인과 사회경제적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

Ⅱ. 연구내용

▣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대한 인구학적 원인 분해 결과

– 1992~1997년에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의 부적 영향력 모두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기여(특히 만혼화가 주도적 역할)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7~2005년에는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이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5~2013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의 정적 영향력이 유배우율의 부적 영향력을 상회하여 합계출산율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음. 다만, 유배우출산율의 증가 크기가 미세함에 따라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출산연기 효과(템포효과)는 1992~1997년간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1997~ 2005년간에는 상대적으로 높아지면서 초저출산현상으로의 진입을 촉진한 것으로 나타났음. 2005~2013년간에도 여전히 출산연기 효과가 일정 수준 발생하고 있어 초저출산현상으로부터의 탈피를 어렵게 하고 있음

▣ 초저출산현상의 사회경제적 원인 분석 결과

– 사회경제적 집단별 출산이행확률 분석 결과 특히 셋째아 출산 이행 비율이 급격하게 낮아져 평균 출생아수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전통적으로 출산율이 높았던 집단인 저학력층, 자영업자, 농림어업, 단순노무, 장치·기계조작, 기능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등일수록 강하게 나타나 사회경제적 집단 간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 이것이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지자체의 주출산 연령층의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농촌에 비해 대도시에서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이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 합계출산율은 2001년에만 차이가 나타나 저출산현상이 중소도시 및 농촌으로 확대되어 초저출산현상 지속에 기여하고 있음

• 주된 가임기 여성의 고학력화는 2000년대 중반부터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 역할을 하였으나 학력 간 합계출산율 차이가 줄어들어 2011년에만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남

• 가임기 가구의 전월세 비율은 모든 시기에 유배우율을 낮춘 반면, 2006년에는 유배우출산율을 높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인구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점유형태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가 줄어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남. 주거불안정이 출산율을 전국적으로 하락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초저출산현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주된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과 실업률은 일관되게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모두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쳐 합계출산율을 낮추는 작용을 하고 있으며 종사상지위는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 및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고출산 집단이었던 비임금근로자의 결혼 및 출산 행태가 임금근로자와 유사해졌기 때문임. 직업 중에서는 사무종사자 비율이 2001년 유배우율과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데, 2006년에는 관리자·전문가 비율이 유배우출산율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이외에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음. 이는 최근으로 올수록 고출산 직종 종사자들의 출산율이 낮아져 직종 간 차이가 미세해졌기 때문임

Ⅲ. 정책제언

▣ 향후 정책은 초저출산현상을 야기하고 지속시키는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원인에 근거를 두고 개발 내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구학적 원인으로 만혼화가 심화되어 유배우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최근의 유배우출산율 상승을 압도하여 초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만혼화를 억제하여 유배우율 하락을 억제하는 정책들이 필요함을 시사해줌

• 결혼의 용이성을 제고하여 유배우율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과제로 취업준비 단축 지원, 일-결혼 양립 지원, 주거지원 강화를 들 수 있음

– 만혼화를 되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배우출산율도 더 높아질 필요가 있음

• 유배우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한 임신 보장, 출산간격 단축 지원, 비용지원, 시간지원 등을 제시할 수 있음

▣ 이 외에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 고려 필요

– 과거부터 저출산 성향이 강하였던 집단과 전통적으로 고출산 성향이 강하였으나 최근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는 집단으로 구분하여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의 비용대비 효과성은 후자 집단에게서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에 고려 필요

– 향후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출산순위에 의거하여 확연한 차별을 둠으로써 예산 집행을 추가 출산 이행과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 필요

– 정책들 간 조화(best policy mix)가 매우 중요함. 특정한 정책 하나에 보다 집중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라도 다른 정책들이 충분하지 않거나 성숙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유배우율이나 유배우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선택-집중이라는 차원에서 핵심적인 정책들을 중심으로 강도 높게 실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연구보고서
14-22-1-2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population quality in lowest-low fertility and super-aged society

연구책임자 • 이소영
공동연구자 • 최인선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한국의 인구자질의 현 상태를 진단하며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출산장려정책과 더불어 추진해야 될 인구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Ⅱ. 연구내용

▣ 인구자질의 개념

– 역사적 관점에서의 인구자질

• 인구의 자질은 우생학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우월한 유전자 혹은 좋은 환경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모성과 태아의 건강 그리고 빈곤과 문맹에 관한 논의가 인구자질의 측면에서 이루어짐.

– 학문 분야별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인구자질

• 경제학 영역에서는 인구자질을 인적자본으로 보고 노동의 생산성을 인구자질의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봄.

• 보건의료 영역에서는 특히 모자보건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으나 기타 질병이나 수명 등을 인구자질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기도 함

• 그밖에 생물학, 유전학, 우생학 등에서는 유전자나 신체적인 능력으로 인구자질을 바라보는 관점과 환경적인 측면의 개입으로 인구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있음.

– 인구정책에서의 인구자질

• 인구정책의 목적에 따라 인구자질과 관련된 내용은 그 비중을 달리 하긴 하였으나 인

구 정책에 있어서 인구자질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존재하였음

▣ 인구자질 관련 이론 및 인구자질의 구성요소

– 인적자본(human capital, human resources) 이론 및 인적투자에 있어서 유아기 및 아동 시기의 투자의 중요성에 관한 아동투자모형(Model of child investment), 인구자질을 구성하는 학문 영역 및 인구정책,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구성하고 있는 인구자질의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생애주기별·영역별로 구분하여 재구성함

▣ 인구자질의 구성요소 및 개념 정립을 위한 전문가조사

– 생애주기별·영역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선정된 인구자질 지표

<table>
<tr><th rowspan="2">영역
생애주기</th><th colspan="2">보건</th><th colspan="2">교육</th><th colspan="2">경제</th><th>기타</th></tr>
<tr><th>생애 주기별</th><th>전생애</th><th>생애 주기별</th><th>전생애</th><th>생애 주기별</th><th>전생애</th><th>전생애</th></tr>
<tr><td>영유아 & 아동</td><td>- 선천성 기형아 출생률
- 정상 출산아 출생률
- 저체중 출생아 비율
- 영아 사망률</td><td rowspan="4">- 인지된 건강상태
- 비만율
- 흡연율
- 자살 사망률
- 평균수명
- 기대여명
- 건강수명</td><td>- 아동 1인당 보육교육 서비스 공공지출</td><td rowspan="4">- 평균 교육 수준</td><td rowspan="3"></td><td rowspan="4">- 부양비 (노동가능 인구)
- 고용률 (취업률)
-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td><td rowspan="4">- 관계망</td></tr>
<tr><td>청소년</td><td>- 십대 출산율</td><td rowspan="2">- 교육 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정도</td></tr>
<tr><td>성인</td><td>- 평균 초산연령</td><td rowspan="2">- 평생교육 참여율</td></tr>
<tr><td>노인</td><td>- 노인건강</td><td>- 노후 소득 보장</td></tr>
</table>

▣ 한국의 인구자질

– 한국의 인구자질 현황을 추이와 함께 살펴본 결과, 보건 영역에서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아야 할 지표들은 선천성기형아 출생률, 정상출산아 출생률, 저체중 출생률, 평균초산연령, 노인건강, 인지된 건강상태, 비만율, 자살사망률로 나타났고, 교육 영역에서는 평생교육참여율이었으며 기타 영역에서는 관계망으로 나타남

– OECD평균의 수준보다 낮은 지표는 선천성기형아 출생률, 평균초산연령, 노인건강, 인지된 건강상태, 자살사망률, 아동 1인당 보육 및 교육 서비스 공공지출, 교육수준별, 학생 1인당 공공지출 정도, 평생교육 참여율, 노후 소득보장, 여성 고용률, 관계망으로 나타남

Ⅲ. 정책제언

▣ 서로 상호보완적이며 서로 관련이 있는 각 영역에서 인구자질의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인구자질이 향상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초저출산·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적합한 인구의 자질임

▣ 추이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OECD의 평균에 못 미치는 지표들은 계속해서 추적하여 집중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음. 더 나아가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는 인구자질의 추이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향후 인구구조의 변화, 정치적 기류의 변화, 정책 변화 등에 따른 한국의 인구자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진단하며 열악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초저출산·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바람직한 인구자질 향상을 꾀할 수 있을 것임

연구보고서
14-22-1-5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Projection of Macroeconomy and Labor Market in Ultra-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연구책임자 • **한국경제시스템분석학회**

Ⅰ. 연구목적

▣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급진전하면서 경제전반에 초래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 증가

▣ 특히, 우리경제는 근년에 들어 저성장기조와 수출과 내수의 불균형 심화, 고용 창출력의 저하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에 있어서 인구고령화의 급진전은 당면한 경제적 구조 문제의 심화와 더불어 또 다른 구조적 문제 초래 가능성 증가

▣ 장기성을 갖는 인구변화에 대한 특성을 감안할 때 경제 전반에 걸친 장기적 구조변화를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정책적 수단 강구 필요

– 이에 본고는 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성장 및 노동수급에 대한 구조변화를 분석 및 전망하고, 중장기적 대비책의 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구체적으로 우리경제의 중장기 성장패턴과 수요구조 변화 및 노동수급에 대한 구조변화 분석을 위해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총수요·총공급, 노동수급, 재정복지의 3개 부문이 상호 작용을 하는 거시경제계량모형을 연립방정식 체계로 구성

• 계량모형에 기초하여 2060년까지의 초장기간에 걸쳐 인구변화 시나리오별 거시경제와 노동수급 및 재정복지 관련 변수 전망

II. 연구내용

▣ 2000년대 연평균 4%를 시현한 경제성장은 2030년대까지는 2%로 2050년대에는 1%내외로 둔화될 전망

– 경제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인구감소에 의한 부정적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향후 최종수요는 수출과 수입이 빠르게 확대되는 반면, 투자가 축소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국내수요와 수출 간의 불균형이 심화될 전망

– 국내수요(소비+투자)에 대한 수출의 비율은 2010년에 52%에서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 94~100%까지 상승 전망

• 인구규모가 작아지고 고령인구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내수와 수출간 구조적 불균형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 노동공급인 경제활동인구는 2040년대 초반부터 감소하나, 노동수요인 취업자는 2030년대 초반부터 감소할 전망이어서 취업률의 급격한 하락 예상

– 2010년에 97%에 이르던 취업률이 2060년까지 85%까지 빠르게 하락할 전망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보다 고용감소로 인한 실업문제가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 가능성 시사

▣ 재정수지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시작하는 2010년대 초반부터는 적자기조로 전환되어 그 폭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2030년에는 명목GDP의 2%수준까지 적자가 확대되며,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에는 12-15%수준까지 적자폭 확대 예상

• 재정수지 악화에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연금 및 복지 지출의 증가뿐만 아니라 취업자 감소 등에 의한 사회보장기여금의 상대적 둔화도 크게 작용

Ⅲ. 정책제언

▣ 인구감소의 파급영향은 장기적이고 누적되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 마련 중요

– 특히 인구감소가 일단 시작되면 그 파급효과는 장기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함을 고려하여 인구성장과 경제성장간에 선순환 구조가 유지되고 있을 때 충분한 대비책 마련 긴요

▣ 우리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인구가 감소될수록 심화될 것이지만 이를 해결하는 문제는 출산율 제고와 같은 인구관련 정책만으로는 한계 존재

– 수출과 국내수요 간의 불균형 문제는 인구 증가에 의한 소비증가 등을 통해 부분적으로만 해소 가능

– 국내적인 소비나 투자 자체를 유인하는 경제정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기에 한계 존재

▣ 노동공급의 저하 방지를 위한 출산율 제고가 중요하지만,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고용창출 구조의 개선이 더욱 시급한 과제

– 국내산업의 낮은 고용창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경공업, 중소기업 관련 업종, 서비스 업종 등에 대한 생산증대와 경쟁력 제고를 유도하는 정책수단의 강구 필요

▣ 재정수지 적자의 누적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출산율 제고, 노동수요 확대 정책 이외에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필요

– 향후 재정수지의 적자 폭 확대는 대부분 국민연금 관련 수입과 지출의 격차에 기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미래세대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대비책의 마련도 장기적 시각에 바탕을 두어야하며, 지속적 추진전략이 동시에 마련되어야함.

– 특히 출산율 제고와 관련된 정책들은 그 유효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의 포괄적인 문제를 염두에 두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연구보고서
14-22-1-6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Industrial Structure of Ultra-low Fertility and Aged Society

연구책임자 • 이진면
공동연구자 • 이용호·김재진

Ⅰ. 연구목적

▣ 고령화의 산업적 영향은 그 정도와 방향성이 일률적이지 않아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심층 분석 필요

– 인구구조 변화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수요와 공급 양측면에서 작용하나, 연령별 수요구조 상이, 산업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간의 대체관계 차이로 고령화의 산업별 영향 상이

– 특히, 산업구조 변화에는 인구구조 외에 소비구조, 자본축적 및 기술진보, 국제 분업구조 변화, 사회·문화적 특성 등 다양한 요인 작용

▣ 본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중점을 두면서 국내 산업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중장기 산업구조 변화의 전망 및 발전방안 모색

– 향후 세계경제의 발전구도와 국제적 분업구조 변화, 국내의 수요구조와 생산여건 변화 및 인구고령화의 가속을 고려하여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별 접근을 통해 향후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Ⅱ. 연구내용

▣ (산업생산구조 전망) 농림어업과 광업의 비중이 지속 축소되는 가운데 제조업과 SOC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됨에 따라 생산구조의 탈공업화가 지속되어 서비스업 비중 확대 전망

– 1차 산업인 농림어업과 광업은 전산업 증가율을 큰 폭 하회하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

– 제조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지속적인 R&D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을 소폭 하회하는 수준의 성장 지속

– SOC 관련 산업은 경제의 저성장기조와 인구규모 축소에 따른 수요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생산 증가율의 둔화와 함께 전산업 대비 비중도 다소 축소될 전망

– 서비스업은 경제의 서비스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성장세 지속 전망

• 금융 및 보험업, 장비 및 용품 임대업, 정보서비스, 전문서비스, 연구개발업, 사업지원서비스 등 생산자 서비스의 성장이 두드러질 전망

• 공공행정 국방, 교육서비스, 의료 및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 위생서비스 등 사회 서비스의 성장도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

• 도소매, 음식숙박, 주거 서비스 등 소비자 서비스의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전산업 대비 비중은 정체될 것으로 예상

▣ (수출입구조 전망) 수출구조는 제조업 비중의 확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림어업, SOC, 서비스업의 비중은 축소하는 반면, 수입구조는 광업의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비중은 축소 전망

– 농림어업 수출은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비중 축소 지속

– 산업의 생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산원료 수입에 치중되어 있는 광업부문의 수입 증가 전망

– 제조업 수출은 신흥국과의 경쟁심화로 둔화가 예상되지만 기술개발투자의 지속을 통해 경쟁력은 일정수준 유지 전망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해외시장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신흥 대국과의 경쟁심화로 제조업 전반의 수출은 둔화되고, 제조업 내 산업별 수출의 불균형은 심화 전망

– 내수의존도가 높은 서비스업과 SOC 관련 산업의 수출은 제조업의 지속적인 비중확대로 인해 축소 예상

• 서비스업의 수출 비중 감소가 수입 비중 감소 보다 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서비스 부분의 무역수지 악화 예상

▣ (고용구조 전망) 경제성장 둔화, 산업의 기술발전 및 생산구조 효율화 진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등으로 고용증가세 둔화 전망

– 농림어업은 생산의 감소, 기계화의 가속 등으로 취업자 비중이 크게 축소될 전망

– 제조업도 생산증가율 둔화, 기술 개발에 따른 설비 자동화, 효율화 진전으로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고용 감소 전망

• 소비재업종에서의 고용감소가 지속, 심화될 전망이며, 대규모 생산설비를 기반으로 하는 조립가공 부문의 고용도 둔화 이후 감소 전망

– 서비스업은 수요 확대, 경제의 서비스화로 인한 생산 증가 등으로 취업자 비중 확대 전망

• 2030년 이후에는 성장세 둔화와 함께 생산효율성 증대로 고용창출력 다소 축소 전망

• 생산자 서비스와 사회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취업자 비중 증가가 두드러질 전망

Ⅲ. 정책제언

▣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에 따른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산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설정 필요

– 고령화시대에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부양인구는 증가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은 둔화 전망,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해법

▣ 특히,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산업의 출현 혹은 소규모 산업의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산업계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대응 필요

– 인구고령화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수요를 발생시키거나, 특이 수요(unusual demand)를 일상적인 수요(usual demand)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요를 소비로 연계하는 산업계 노력 필요

– 고령친화 산업 등 내재화된 수요를 표면화시키는 산업화의 초기단계에서는 산업계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진입규제의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 긴요

– 산업적 발전은 자연스럽게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므로 초기단계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응책 마련 중요

연구보고서
14-22-1-7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 금융, 주택, 국방, 사회갈등

Impacts of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ing in Korea: Focusing on Financial Market, Real Estate Market, National Defence and Social Conflict

공동연구자 • 유경원·이창무·신성호·김선업

Ⅰ. 연구목적

▣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현상이 미래에 가져올 파급효과를 사회 제 측면(금융, 주택, 국방, 사회갈등)에서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미래사회 위험을 명료화

–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미래 사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기여

Ⅱ. 연구내용

▣ (금융시장) 고령화의 빠른 진행은 가계부문에서 향후 고령화로 인한 위험 인식을 강화시켜 이에 대한 대비를 위한 저축 및 안전자산 선호 행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구체적으로 고령화 진전에 따라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순저축률, 금융자산 중 위험자산 보유 비중이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금융자산 축적이 금융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질 전망

• 경제성장률의 지속적인 하락, 초고령화로의 진전 심화 등으로 2030년 이후 순저축률은 (-) 값을 나타내 부(-)의 저축(dis-saving)이 실현될 전망

• 2050년에는 대부분의 가계가 보유 금융자산의 90%이상을 안전자산 형태로 보유할 전망

– 이는 고령화 수준뿐 아니라 고령화 전개 속도도 경제주체들의 행태, 특히 재무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

▣ (주택시장)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반드시 급격한 수요의 감소와 소형주택에 대한 선호 증가로 이어지기보다 연령대·경제력에 따른 주거소비 선호 변화를 고려하면 장래 주택 점유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날 전망

– 노년인구 증가로 주택 수요가 감소하기 보다는 노년층의 연령대별 수요가 유지되기 때문에 장래 주택수요는 2040년대 초부터 감소할 전망

– 아울러 가구분화에 따른 소형가구 증가, 노인인구의 주거소비 유지, 가구소득 증가 등으로 주택수요 다변화 예상

▣ (국방인력) 저출산현상 지속으로 제1국민역 대상인 19세 남성인구가 감소하여 입영인구는 2022년부터 부족해지며, 특히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부족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

▣ (사회갈등) 초고령화는 거대한 고령 인구층을 형성하며 이들의 보호와 복지를 둘러싸고 사회의 여러 행위자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이로 인해 사회집단 간 갈등 발생 가능

– (경제갈등) 2030년대 초반에 경제성장과 임금 등 증가폭이 감소하면서 "시간적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와 같은 성장률의 상대적 하락이 특정 집단들에게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면 이는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사회적 상대적 박탈감"으로 발전하여 정치적 항의나 특정 집단에 대한 적대적 행위로 발전 가능

– (정치갈등) 초고령화 사회의 정치 갈등과 관련하여 세대 격돌, 경제적 이념 격돌, 공존의 등 고려 가능

– (가족갈등) 초고령화 사회에서 예측되는 가족관계(상호의존, 명백한 갈등, 단절과 고립, 자율)는 가족 내부 뿐 만 아니라 가족 외부 세대관계의 변화를 가져와 전체 사회 수준의 사회갈등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Ⅲ. 정책제언

▣ (금융) 위험분담 및 중개기능을 강화한 금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고령화 리스크를 줄이고, 이를 위해 적절한 위험분담(risk-sharing)방안 마련, 소비자의 금융니즈를 반영한 상품개발 및 시장형성, 금융인프라 구축 등 모색 필요

▣ (주택)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수요의 다변화를 고려한 주택 정책(공급, 주택규모 다양화 등) 추진 필요

▣ (국방) 국방인력 감소는 일정 전력 수준의 유지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할 때, 인력 확충, 예산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대안 필요

▣ (사회갈등)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배제의 억제를 위한 정책, 단절적 연령 범주화에서 연속적 연령으로 전환을 통한 인구학적 이분화에서 사회적 다극화로의 방향 전환, 세대형평성과 세대교류에 대한 정책적 고려, 갈등 조정과 관리를 위한 국가 능력의 제고 필요

연구보고서
14-22-1-8

농촌의 중장기 인구 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Regional Revitalization Tasks in Response to Mid- and Long-term Population Changes in Rural Areas

연구책임자 • 성주인
공동연구자 • 엄진영·박유진·정규형

Ⅰ. 연구목적

▣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출생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 인구 비율은 증가하고 있으며 과거 젊은 층 인구의 유출이 지속된 결과 인구의 자연감소가 가속화되는 상황

–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도시 은퇴 인구 및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라 농촌의 인구이동 방향 및 농촌 지역 인구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재 농촌에서 나타나는 인구학적 변동 요인들을 고려하여 장래 농촌 지역 인구를 전망하고자 함.

– 통계청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코호트 요소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여 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시나리오별 미래 농촌 인구 추계

Ⅱ. 연구내용

▣ 시나리오에 따라 장래 농촌 인구 변화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전 시나리오에서 장래 농촌의 총량적 인구 증가는 한계점에 도달한 뒤에는 감소

– 농촌 내에서도 읍과 면으로 구분하여 보면, 읍지역 인구는 하위 시나리오를 제외하고는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나, 면지역 인구는 시나리오와 상관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 전망

• 읍지역의 경우 귀농·귀촌자의 유입뿐만 아니라 젊은층 유입으로 인한 인구의 출생까지 더해서 인구 상승으로 이어지나, 면지역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많고 젊은층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심각해 자연적인 인구 감소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인구 감소가 더해져 인구 과소화 지속 전망

▣ 시·도별로 나누어보 농촌 인구를 전망하면,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도 있지만 향후 40년 뒤에 인구가 현 수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지역도 존재

– 특히, 시·도의 총 인구가 증가하는데도 농촌 인구는 감소하는 지역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지역 내에서도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고 배후 농촌의 인구는 정체 또는 감소하는 양상이 상당수 지역에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

– 농촌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과 함께 각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 모색 필요

▣ 향후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될 전망이며, 특히, 면지역의 고령화가 더욱 심화될 전망

– 빠른 농촌 지역의 고령화는 노인 관련 보건·복지 분야 비용 증가로 이어질 것임

Ⅲ. 정책제언

▣ 주민 역량에 근거해서 지역사회가 지닌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발적인 정책 접근 요구

▣ 농촌에 대한 재정 투입의 효율화 필요

– 농촌의 총량적 인구가 일정 기간 동안 증가하더라도 원격지 농촌 마을의 공동화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과 고령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이 다수 분포하는 농촌의 특성상 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농촌 지자체의 재정 부담 증가 예상

– 따라서 공동화되는 농촌 마을 문제에 대응하여 각종 공공 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거점 육성 요구

▣ 분권적 농촌정책 발전 필요

– 농촌은 일률적이지 않고 입지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분화됨을 고려하여,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인 농촌 발전모델 보다 분권적 농촌 정책 발전 필요

연구보고서
14-22-2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를 중심으로-

Community tracking study for the dyna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and aging society(II): Focusing on three selected areas

연구책임자 • 오영희
공동연구자 • 정경희·이소영·오신휘·김경래·임지영

Ⅰ. 연구목적

▣ 한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동태적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양적·질적 연구를 통하여 관련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결혼·출산·양육 과정에 대한 변화 관찰을 위한 추적 데이터 생산으로 출산정책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 신체적, 심리적 및 사회적 노화 현상 및 적응 모습 등 노화에 대한 경험을 조사·분석하여 고령사회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조사지역의 정책현황 분석

– 저출산 관련 정책 현황 및 고령사회 관련 정책 현황을 각 지자체의 세입·세출 예산 현황을 통해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함

▣ 2014년 지역추적조사(II)의 기초분석

– 조사가구의 특성

– 미혼인구의 만혼화 실태

– 기혼여성의 임신·출산·양육 실태

– 중고령자의 생활실태

▣ 중고령자의 배우자와의 관계

– 고령사회분야 부가조사의 양적 분석과 심층사례연구의 질적 분석 결과를 서술

▣ 2013년 지역추적조사(Ⅰ)의 심층분석

– 장기적인 심층주제를 설정하고, 당해 연도는 장기적인 데이터 구축없이 심층연구가 가능한 주제를 선정하여 분석 실시

– 당해 연도에 관심을 둔 주제는 미혼남녀의 결혼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여성의 출산자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

▣ 조사지역 기초자료에 대한 비교분석 및 정책적 함의

– 비교 분석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 도출

Ⅲ. 정책제언

▣ 지역사회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홍보교육의 강화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현황 분석에서 3개 조사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독자적 사업 발굴·추진에 한계가 있음

• 비예산 사업 발굴 등 다른 접근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건복지 자원·인프라 이용 조사결과를 토대로 저출산 영역에서는 홍보거점기관 지정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 고령사회 영역에서는 이용빈도가 높은 노인여가시설 활용을 통한 여가문화기능 강화를 들 수 있음

• 오프라인 홍보는 정책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임

• 기혼여성의 출산·양육 관련 인프라 이용률에 있어 보건소는 농촌지역(소태면 54.3%)에서 이용률이 높은 반면, 산부인과는 대·중소도시(정릉3동 54.5%, 영등2동 56.5%)에서 이용률이 현저히 높음

• 따라서 저출산정책 홍보거점기관을 농촌지역은 보건소, 도시지역은 산부인과 또는

소아과 등 병의원 중심으로 지정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비치·배포하고 정책대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

- 조사지역별 65세 이상 고령자의 복지자원 이용실태를 보면, 농촌지역은 경로당 이용경험이 높은 반면, 노인복지관 및 공공·민간 여가문화시설 이용경험은 도시가 높은 수준임

▣ 결혼·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는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

–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혼 및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적 지원은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다고 볼 수 있음

- 본 조사를 통해 미혼남녀 및 기혼여성 모두 도시지역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나 정책의 경험률에 있어서 농촌지역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결혼과 출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와 정책의 홍보가 필요함을 방증함
- 정책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가 정책 홍보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도 있으나 정책을 통해 지원받을 자원이 되는 질적인 인프라 자체의 부족에서도 기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홍보와 더불어 농촌지역의 인프라 확보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지역의 균형 있는 결혼·임신·출산·양육 지원 인프라의 구축 및 확대가 필요함

▣ 중고령자의 생애주기별 노후생활설계 활성화

–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 또는 부부간의 일상생활 공유 등에 관한 분석에서 적극적인 여가문화활동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중고령자의 여가문화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의 구축과 관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방안 등이 같이 모색되어야 함

– 중고령자의 미래 전망과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서 자신의 노후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이 막연한 기대 또는 회피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임

- 부부가 함께 자신의 노후에 대하여 고민을 공유하고 연령단계별 대응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임

– 중고령자의 사회적 관계망 분석에서 노화의 진전에 따라 모든 지역에서 사회적 연계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고령자의 고립생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개인의 노력과 함께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위한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 지역사회 인구구조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주기에 맞추어 경제적 노후준비 뿐 아니라 건강관리, 가족관계와 대인관계, 여가활동 및 지역사회활동, 경제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의 능력을 발전시켜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연구의 한계점

– 본 연구의 조사지역은 과학적인 표본추출방법에 의거하여 추출되지 않고 도시화 정도가 다른 3개 소지역으로 한정되어 자료분석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제한점이 있음

- 추후 계속적인 추적조사를 통해 상세한 인과관계의 메커니즘을 명료화하는 것이 중요함

연구보고서
14-22-4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A Study of Population Quality for Marriage Migrant Women and Their Children

연구책임자 • **조성호**
공동연구자 • **변수정·이소영·박종서·서희정·유재언**

Ⅰ. 연구목적

▣ 인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들이 안정된 적응을 이루고 그들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을 발휘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아가는 것이 한국사회에, 그리고 결혼이민자 자신 및 그 자녀에게도 중요함

– 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적절히 파악해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역량증진 및 인구자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방향 제시

Ⅱ. 연구내용

▣ 인구자질개념에 대한 정리

– 본 연구에서의 인구자질에 대한 정의는 경제학에서 정의되어 온 인적자본과 삶의 질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초점을 둠

• 결혼이민자: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생활만족도

• 결혼이민자의 자녀: 언어능력, 정신건강

▣ 결혼이민자의 노동시장성과(취업과 소득)에 대한 분석

– 학력이 낮을수록 취업확률 높아졌고, 남편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취업확률이 낮아짐

•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보조적 소득원으로서의 역할

– 반면,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결혼이민자의 소득이 높아짐

– 미취학 자녀가 존재할 경우 취업확률이 감소

▣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에 대한 분석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체류 기간이 길수록 생활만족도 감소

– 중국 출신 조선족과 일본 출신 결혼이민자의 생활만족도가 낮음

–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는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낮아짐

▣ 결혼이민자 자녀의 언어 능력에 대한 분석

– 한국어 능력은 대체로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어 한국어 수준은 높은 편

–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자녀의 한국어 능력은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도 입국한 자녀의 경우 한국어 능력이 매우 낮은 편

–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한국어 능력과 반대로 하향 평준화되어 있어 어머니 모국어 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의 어머니 모국어 능력은 어머니 나라에 대한 관심도와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클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결혼이민자 자녀의 정신 건강에 대한 분석

– 한국어 능력이 낮고 차별 경험이나 폭력 경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자녀의 경우 슬픔이나 절망감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아짐

Ⅲ. 정책제언

▣ 학력이 결혼이민자의 소득에 중요한 영향력을 갖는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모국의 학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인정되지 않거나, 정규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결혼이민자에 대해서는 한국에서의 정규 학위 취득을 도와주는 것이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을 높이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출신 한족과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의 경우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초기정착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결혼이민자들

의 생활이 중기 또는 후기 정책 단계로 이동함에 따라, 한국사회의 이민 주기에 따른 현상들을 고려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은 결혼이민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국가별로 영향력도 다르게 나타나 한국어 교육이 일률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 자녀들의 이중언어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 다문화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점과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지원이 마련되어 언어적인 우수성을 키워가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

▣ 자녀들의 차별과 폭력경험이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결혼이민자 자녀의 특성상, 언어나 피부색 등으로 인해 한국인 자녀보다 폭력과 차별이 노출되기 쉬운 점을 고려해 방지책마련에 더욱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연구보고서
14-22-5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the State and Policy for Muticultural Family in East Asian Counties

연구책임자 • **변수정**
공동연구자 • **조성호·이상림·서희정·정준호·이윤석**

Ⅰ. 연구목적

▣ 본 연구는 대만, 일본, 한국 3국의 다문화 현상 파악 및 관련 핵심정책 비교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발전방향 모색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를 통해 각국의 현재 다문화 사회 이해와 각 국마다 결혼이민자가 가족이 중심 대상이거나 포함된 다문화 핵심정책을 정착지원 정책, 자녀지원 및 건강증진관련 정책,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관련 정책, 그리고 보호·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으로 나누어 비교하면서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동아이사 3국(한국, 일본, 대만)의 다문화사회 비교

– 결혼이민자는 각국의 농촌총각 문제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결혼에서 외국인여성의 비율이 높다는 공통된 특징

• 각 국의 국제결혼 중 외국인 여성과 남성 간의 결혼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동아시아 3개국 중 대만

– 대만은 대륙 배우자, 한국은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중국대륙 출신을 제외하면 베트남 출신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함

• 대만에 있는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는 486,703명 중 대륙배우자(중국본토와 홍콩, 마카오 출신)는 329,073명(2013년)

• 한국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281,295명 중 중국(한국계)가 100,524명, 중국출신이 67,944명, 그 다음은 52,323명(2014년)으로 베트남 출신 비율이 높음

▣ 3국의 다문화정책 소개

– 대만에는 외국인 배우자 및 대륙 배우자 즉, 여성결혼이민자가 주요 정책 대상인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지원지도조치”와, 최근에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 자녀에 대한 정책으로 “전국신주민횃불계획”을 시행

– 일본은 외국인이 정책의 대상인 “지역 다문화공생 추진 플랜”에 더해 생활지원분야에 대한 내용을 더욱 세부적으로 추가해 설명하고 있는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대응책” 시행

– 한국은 여성결혼이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이 정책의 대상인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 3국의 다문화정책 비교

– 3국의 다문화정책 중 정착지원과 관련된 정책의 특징 비교

• 대만은 “횃불계획”에서, 일본은 “생활자로서의 외국인에 관한 종합적인 대응책” 중 〈외국인 자녀 교육의 충실〉 내용에서, 한국은 다문화가족정책 자체 내에서 공통적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을 강조

• 3국 모두 취업과 관련된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유사하지만 한국은 직업교육이나 훈련, 일자리지원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일본은 취업지원과 함께 창업을 지원, 대만은 더 나아가 외국인 및 대륙 배우자가 초·중등교육 보충과정을 통해 정식 학력을 취득하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

• 일본과 한국은 언어와 관련된 계획들로 통역이나 행정 및 생활정보 제공에 있어서 다언어화를 추진, 대만의 경우는‘횃불계획’에서 중국어 강습 사업을 포함

– 3국의 다문화정책 중 건강증진과 관련된 정책의 특징 비교

• 한국과 일본은 건강 사업에서도 언어 집중지원, 대만은 다양한 건강증진관련 사업을 포함. 한국은 중앙핵심계획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결혼이민여성 무료건강검진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지역 스스로 보완, 일본 또한 지자체에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

• 한국과 대만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건강에 초점을 둔 정책들이 있는데 반해, 일본은 고령자·장애에 대한 대응을 포함

– 3국의 다문화정책 중 의식개선 및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의 특징 비교

- 한국은 군에서의 다문화교육이나 차별행위, 종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사회적 특성 반영
- 한국과 대만은 핵심정책 상에서 다문화에 대해 대만인들이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의식을 갖추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유사점
- 일본은 대만이나 한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핵심정책 상으로는 보일 수 있지만, 지자체에서는 외국인 집단별로 다른 요구사항을 맞추면서 일률적인 기준을 두지 않고 각 외국인 집단의 문화적 배경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다문화정책을 시행

– 3국의 다문화정책 중 보호·안전관련 및 기타 정책의 특징 비교

- 대만과 한국이 가정폭력 문제와 결혼중개업으로 인한 피해, 그리고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정책 등 비슷하게 이슈화 되었던 사회적 문제로 유사한 정책을 가진 특징
- 일본은 지리적 요건 상 외국인에 대한 정책에 재해에 대한 대응책을 담고 있다는 특징

Ⅲ. 정책제언

▣ 적응지원 정책에서 단편적인 지원에서 나아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과 함께 이미 형성된 다문화가족이 앞으로 겪을 부모의 노후나 자녀의 사회진출 등 거시적으로 한국 다문화사회의 주기를 고려해 후기 가족생활주기에 알맞은 정책 구상 및 실행할 준비 필요

▣ 중앙정부 정책 내에 건강증진 및 의료에 대한 더욱 다양한 정책 요구됨

▣ NGO, NPO, 기업, 및 지역주민들이 핵심이 되어 이끌어나가는 사업들이 함께 역할을 분담해 수행할 때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사회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와 더불어 시민, 기업의 역할 재고가 요구됨

▣ 지역의 인구구성이나 환경에 알맞은 사업실시를 위해 현장에서부터 형성되는 정책이 보완·강조되어야 할 필요

▣ 다문화가족과 일반가족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사회·문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쌍방향 노력 강조할 필요

Ⅲ. 2014년 연구성과

10. 국민안전 보호

-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14-18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International Case Study for Future Crisis Management and Implications

연구책임자 • 유근춘
공동연구자 • 홍석표·윤문구·김선희·최요한

Ⅰ. 연구목적

▣ 현대의 기술발전과 사회의 복잡성 증가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대규모 위기가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대해 선진 각국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 이들이 어떠한 형태의 위험을 대비하고 있는지,

– 어떤 방식으로 체계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도출하여,

–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위기대응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 연구관점의 전환필요성

– 연구초기에는 대표적 선진국의 미래위기 대응에 대하여 예측기관과 예측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실질적 대응체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시사점 제시

– 기존연구 고찰의 심화에 따라 연구의 차별성을 위해서는 미래위기의 내용을 일반적 미래위기와 보건복지적 미래위기로 나누어 제시하는 것이 필요

–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나라 세월호 사건의 전 과정을 경험하면서 궁극적인 미래위기 대응은 미래위기대응과 관련된 내용 및 조직을 별도로 고려하는 것보다 사전적으로는 위기를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단합하여 총체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의 전체 상태에 대한 규명이 핵심이라는 결론에 이름

▣ 위기의 개념

– 첫째, 가장 단순한 시각은 위기는 자명하다는 것임. 이는 개념적 혼란을 야기함

– 둘째, 따라서 객관적 시각이 필요하며 객관화를 위하여 다음의 조건이 제시됨: 1. 심각한 위협, 2.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 3. 실행에 대한 긴급한 필요성

– 셋째, 이러한 객관적 시각에 대한 판단이 개인에 따라 상대적일 수 있음이 지적됨.

–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둘째와 셋째의 개념을 종합하여 위기를 사회적 구성물로 볼 수 있음. 즉 사회적으로 객관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대한 상당한 일치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일부는 이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고 보는 견해임

▣ 용어에 대한 정리

– 기존에 위기라는 용어로 혼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리필요: 위기(crisis), 재난(disaster), 위험(risk)

– 기존의 논의에서는 특히 위기와 재난 사이의 차이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 이들 논의의 공통점을 고려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시간적 발생순서, 사건의 위해성

• 위험: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위기의 배아(가능성, 확률과 위해)

• 위기: 위험요인인 현실화된 인지된 혼란의 상황(급박함, 전환점, 위협)

• 재난: 결말이 부정적인 위기(실질적 피해)

– 광의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험, 위기, 재난 관리가 거의 같음

▣ 미래위기의 종합적 분류: 사회와 그 환경

– 인간사회: 사회조직과 그 변동

• 사회조직의 수준

• 사회조직의 기능적 분석

– 사회생활의 환경: 자연환경과 문화환경

• 자연환경: 인구현상과 기술

• 문화환경

– 발생위치의 혼합에 의한 복합적 위기

▣ 위기의 보건복지적 측면: 위기대응 조직의 전문성 조직의 확정

– 미래예측과 보건복지적 관점

• 이전의 미래연구는 정부에 의해 주도되고 군사에 집중된 관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

• 이에 대한 비판이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 안보 연결망과 관련이 없는 외부의 미래학자(futurologist)들에 의해 제기됨

• 이들에게 미래학은 기존의 프로그램에서 인식되고 있던 바와 같은 예측의 과학과 합리적 정책의 도구가 아니라, 유토피아적 이상(utopian ideals)에 근거하여 현재를 반성해보는 수단이었음. 이들의 공통된 신조는 인류의 조건을 개선(betterment of the condition of mankind)하는 것이었음

• 이러한 기조는 실업보험,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확장, 포괄적 연금시스템의 발전 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정부책임이 현저하게 증가함에 따라 정부 미래예측 활동에 점차 편입되게 되었음. 선진국의 정부부처들이 그들의 주요관심 영역들에서 미래예측 활동을 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현재 일상사가 되었음.

– 보건복지 위기의 관리대상을 한정하기 위한 보건복지의 영역

• 건강문제, 소득문제, 사회통합문제

• 보건복지제도: 보건, 복지, 위기 시 긴급지원제도

▣ 위기대응에서 나타나는 위기와 종합적, 통합적 위기대응의 필요성

– 사회적 갈등의 위기: 감정적, 정서적 위기, 정당성의 위기 등

• 세월호 사건 이후 문제가 된 좌절, 분노 무력감 등 감정적, 정서적 위기의 대응 필요

• 세월호 사건 이후 문제가 된 공공영역에 대한 불신 등 정당성 위기에 대한 대응 필요

– 전문적 지식을 가진 책임자 주관의 위기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위기

▣ 위기대응에 대한 기본적 태도

– 머피의 법칙과 보수적 태도

• 엔지니어들이 발견한 경험법칙: 잘못될 수 있는 일은 결국 잘못됨

•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 “최선의 선택보다 최악의 회피가 중요함”(Karl Popper)

▣ 해외사례에서는 영국, 싱가포르, 스웨덴, 핀란드와 같이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예측기관과 대응기관이 조직상 독립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경우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영국의 경우 미래의 도전과제와 위험요인을 세계화, 경제, 행복한 삶을 위한 기회, 인구구조 변화적응, 가정과 지역공동체 강화, 안전, 개인요구반영 맞춤형 공공서비스, 저 탄소국가로 전환, 21세기를 위한 민주주의 갱신 등의 미래위기를 제시하고 있음

– 일반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이 있으며 전염병 창궐과 같은 보건관련 위기 시에는 보건부가 주요역할을 담당하도록 체계가 변화함

3. 정책제언

▣ 종합적 위기대응: 사회의 상태를 기반으로 한 위기의 과정적 이해에 근거

– 한 사회의 상태를 물질적 및 정신적 기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존재, 자연의 최적화 여부 그리고 사회의 최적화 여부에 따라 다음의 상태로 구분

• 가능상태: 물질적 기반과 정신적 기반이 발생하는 원형의 존재 상정. 현실로 나타나기 이전의 상태 ex.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말하기 힘든 원시적 상태의 집단

• 혼돈상태: 물질적 기반과 정신적 기반이 통합되어 현실화된 상태 ex. 공적영역이 중심에 확립되지 않은 지역이지만 나름대로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

• 질서상태: 물질적 기반과 정신적 기반이 통합된 상태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이 확립된 사회의 상태. 공적영역이 사회의 중심에서고 사적영역이 외부에서 중심의 공적영역의 질서에 따라 움직임 ex. 안정적 국가질서를 유지하는 국가

• 성취상태: 질서상태에서 상반된 사회의 영역들을 통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자연을 최적화(의식주, 번영) ex. 미국

- 완성상태: 성취상태에서 상회구성원 간의 관계를 최적화(평등적측면) ex. 북구의 선진국

– 위기상태

- 상기한 각 사회의 상태의 과정을 진행시키는 과정에서 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과정상희 상태를 유지할 수 없을 때를 사회상태 과정상희 위기라 함
- 그러나 정형적인 위기는 질서상태에서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구분이 파괴되어 질서유지가 안 되는 경우임

– 그러한 상태는 상반된 두 가지 세력 간의 소통행위의 종류에 따라 결정됨

- 부정적 변증법: 분열과 위기, 부정하는 대상이 존재할 때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가지게 됨, 누군가를 악으로 몰아세울 수 있을 때에 한해 자신이 선이 되는 관계, 대립하는 상대방을 부정하고 공격하고 파괴해야만 자신의 삶이 유지되는 삶의 방법론, 이원적 일원론, 대립에 대하여 한쪽이 다른 쪽을 부정하고 박멸하는 방식
- 이율배반: 양쪽의 세력을 균등하게 하는 양자긍방식의 대립, 비결정의 상황, 대립에 대하여 양자를 긍정하는 상태에서 해결을 얻는 방법, 냉전 시의 세력 균형에 의한 평화
- 긍정적 변증법: 통합과 통일의 이론, 대립에 대하여 양자가 최적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어 그것을 실현하여 통합과 통일을 이루어 내는 방법. 더불어 사는 방법, 공존과 공영의 방법론

▣ 공공영역과 사적영역간의 이상적 관계에 대한 모델

– 공동체 내부의 인간과 인간의 소통과 통일을 8가지의 행동 과정을 통해 설명하는 모델

– 공공과 민간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우 앞의 네 가지 행동은 공공영역에서 솔선하는 내용이고, 뒤의 네 가지 행동은 이에 따른 사적영역의 반응임

– 공공영역

- 성(誠): 서로 정성스럽게 대하는 것
- 신(信): 정성이 축적되면 신뢰가 형성
- 애(愛): 신뢰가 쌓이면 서로 사랑하는 상태로 혁신

• 제(濟): 서로 사랑하게 되면 자신과 남을 구제하기 위하여 서로 함께 일을 도모할 수 있게 됨

– 사적영역

• 화(禍): 이상의 과정에서 서로 속이거나, 숨기거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과 같은 거짓이 있었다면 이 관계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서로의 관계는 파괴되고 위기상태로 돌아감

• 복(福): 이상의 거짓이 없었다면 사랑한 만큼 복을 받음

• 보(報): 서로 믿은 만큼 보답

• 응(應): 서로 정성을 드린 만큼 응함

연구보고서
14-02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

A Study on Developing the Third Basic Plan on Food Safety Management

연구책임자 • **정기혜**
공동연구자 • **김동우·김동영·최지현**

Ⅰ. 연구목적

▣ 한2008년에 제정된 식품안전기본법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될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함

– 제1, 2차 식품안전기본계획 추진 성과 평가

– 식품안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식품안전 정책 및 환경여건 변화를 분석, 예측

– 새정부의 국정목표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비전, 정책목표, 추진전략을 수립

– 각 추진전략별 대과제 개발

–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의 중복, 사각 조정 및 성과지표 도출

– 각 부처별 세부추진과제 확정

Ⅱ. 연구내용

▣ 식품안전에 관한 정책여건 및 환경변화 심층 분석

▣ 한국, 미국 등 주요국의 향후 식품안전 추진 전략 고찰 및 시사점 도출

▣ 제1, 2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추진실적 성과평가

– 양적평가

• 당초 8% 목표에 4.1%를 달성한 GAP 인증사업, 십만명당 식중독 환자수 34명 목표에 48명 발생한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 등의 사업이 지표상 당초 목표를 달성 못한

사업으로 평가된 반면 농약 재평가, 국내외 정보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추진실적이 지표상 목표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되었음

– 질적평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단 추진 운영」, 2013년 대비 2014년에 약 2%내외 상승한 식품안전 체감도, 150여개로 확대 설치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속적인 식중독 예방 등의 사업이 성과를 보였으나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정책 추진 등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안전기반 관리 강화, 원산지표시제도 개선 및 단속 효율화, 축산물 이력추적제 확대 등의 성과를 보였으나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한 인증관리시스템 구축, GAP 활성화 등에서 미흡한 성과를 보였음

▣ 현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체제에 대한 SWOT 분석 및 전략 도출

– SO 전략

• 미래대응 및 Global & Local 안전기반 구축, 식품규제 합리화 추진, 식품수출 확대 등 식품산업 육성, 선제적 위해 평가 및 관리

– ST 전략

• 식품안전 인프라 진단 및 확충, 수입식품 사전 안전관리 강화, 경쟁력 있는 근거기반한 정책연구 활성화

– WO 전략

• 중앙-지자체간 식품안전망 구축 및 강화, 합동산속 확대 등 감시체계 개선, 전자상거래 등 대응, 식품이력추적제 등 확대

– WT 전략

• 지자체 인프라 진단 및 개선, 올바른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 안전신속대응체계 구축, 건강기능식품 및 신소재 식품 등 관리 강화

▣ 비전, 목표 등의 Key words 선정을 위한 FG 인식조사 실시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의 도출에 사용될 주요 key words를 선정하기 위해 연구진에 의해 선정된 여러 단어 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가 실시되었음

– 온라인 웹조사 방법으로 약 19일간 85명의 전문가와 31명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식조사가 실시되었음

– 조사결과를 보면 비전에 사용될 주요 Key words로는 안심, 건강, 행복, 국민 등이 선정되었고, 정책목표로는 소비자, 효율화 및 과학화, 보호 등, 그리고 추진전략으로는 예방, 교육 및 홍보, 소통, 사전 및 사후대응, 인프라, 조화, 협력 등의 Key words가 선정되었음

▣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기본틀 제안

– 비전: 안전한 식품,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 목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식품안전관리

– 추진 전략

• 기본적인 식품안전관리 추진

•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및 평가

• 소통 확대 및 환경변화 대응

• 건강한 식생활 조성

Ⅲ. 정책제언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가 제2차 기본계획부터 추진되고 있지만 각 관련 부처에서는 연구결과보다는 부처 편리를 우선하여 세부추진과제를 개발, 정리하고 있어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정책연구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정임

▣ 세부과제별 성과지표 확정

– 기본계획의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성과평가는 해마다 이루어지지만 매번 해당년도에 과제별 성과지표 및 목표달성치를 개발하여 대부분의 과제가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음

– 향후에는 각 과제별 성과지표가 미리 선정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달성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임

▣ 당초 계획의 조정없는 성실한 추진

– 대부분의 과제가 성실히 수행되나 일부과제는 과제 수행과정에서 처음 계획된 내용과는 다르게 수행당시의 상황에 맞게 수정, 조정하여 추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음

–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은 3년 주기로 장기계획이 아니므로 처음 계획된 과제범위의 축소나 조정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성과지표 교체시 교체사유 등을 명확히 제시토록하고, 감점을 하여 애당초 계획된 내용의 세부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Ⅲ. 2014년 연구성과

11.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3.0 구현

-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 사회분야 글로벌 다자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4-05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Efficient management of Big Data on Health & Welfare

연구책임자 • 송태민
공동연구자 • 진달래·박대순·박현애·안지영·김정선

Ⅰ. 연구목적

▣ 정부3.0의 효과적인 추진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건복지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한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분야 빅데이터 추진방안이 마련됨에 따라 국내외의 보건복지 관련 빅데이터 현황과 기술을 분석하고 수요공급의 예측과 분석사례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함

Ⅱ. 연구내용

▣ 빅데이터 세계시장 규모 및 빅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전망

–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부 및 민간에서 빅데이터 활용과 지원서비스에 주력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안전을 위협하는 글로별요인, 테러, 재난재해, 질병, 위기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빅데이터를 도입하여 가치창출 사례 및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

– 빅데이터 관련 기술 분야를 수집기술, 저장기술, 처리기술, 분석기술, 활용기술로 구분하여 각 영역별 기술 기법에 대하여 국내·외 보건복지 분야의 기술동향 및 사례 제안

▣ 국내 빅데이터 관련 인력 양성 현황, 국내 공개 및 개방된 공공데이터의 지자체별 제공 유형과 국외 빅데이터 현황 및 활용사례 제시

▣ 우리나라 보건복지 영역별 이슈를 감지하여 보건복지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분석

– 보건복지분야의 주요 학술지에 개제된 키워드를 분석하여 상위 키워드의 연도별 응집 구조를 분석한 결과 'Adolescents(청소년)'와 'Social support(사회적 지지)', 'Self-esteem(자존감)', 'Self-efficacy(자기효능감)', 'Smoking(흡연)', 'Suicide(자살)' 등이 서로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었으며, 'Suicide(자살)'는 다시 'Depression(우울)', 'Stress(스트레스)', 'Social support(사회적 지지)', 'Self-esteem(자존감)' 등과 함께 연결되어 연구되고 있음

▣ 국내 보건복지 빅데이터 수요공급 예측 모형 개발

– 우리나라 기업 빅데이터 기술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목적에 따른 차이점을 분석하여 기업에서 빅데이터 기술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시

– 우리나라 온라인 뉴스사이트, 블로그 카페, SNS, 게시판 등에서 수집한 소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과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수요공급을 예측할 수 있는 의사결정나무를 모형과 보건복지 주요정책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결과를 제시

▣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비만, 청소년 자살, 사이버 폭력 담론분석을 통한 예측모형 개발

–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까지의 국내 온라인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비만 및 다이어트'에 관한 버즈 발생은 특정 시즌이 아닌 1년 내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3개년 동안 해마다 온라인상의 언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동안 SNS의 언급량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블로그에서 다수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들의 다이어트 방법으로는 꾸준한 노력보다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약물, 수술 치료 등에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으며, 최근 3년간 비만 및 다이어트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Ⅲ. 정책제언

▣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인 활용방안 제안

– 빅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가칭)보건복지 빅데이터 관리 운영회 운영,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관리하고 민간기관과 협조체계가 마련, 국가 차원의 오픈 API(Open Application Programing Interface)의 제공,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 구조화되지 않은 대규모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정보를 찾아내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인재 양성, 보건복지 빅데이터의 개인정보화 기밀정보에 대한 보안정책 마련이 필요.

연구보고서
14-05

2014 보건복지정책 현안과 정책과제

Health and Social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2014

연구책임자 • 신영석
공동연구자 • 정홍원·김태완·강희정·김대중·강은나·황주희·조성호·정해식·황남희·강지원·김 윤·정현진

Ⅰ. 연구목적

▣ 고령화·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행 제도들의 사각지대를 검토하고 새롭게 대두된 복지욕구에 대한 정책방안 모색 필요

– 부처간·부처내 칸막이를 없애고,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통해 수요자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제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

• 재정 투입 대비 국민의 체감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재검토

– 새로운 복지욕구의 등장에 따라 정책 대응성 강화 필요

• 신사회적 위험에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업에 대한 검토

• 세계적 흐름에 견주어 시급히 준비해야 할 사업에 대한 검토

Ⅱ. 연구내용

▣ 위 4개의 원칙에 근거하여 보건복지 및 인구분야 11개 주요 이슈를 선정함.

– 보건정책 분야 현안으로는 가치기반 지불제도의 확대와 의료기술혁신, 고령화 시대 노인의료 정책방향이 선정됨.

– 복지정책 분야 현안으로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보장, 고령장애인구의 증가, 금융소외계층과 재정융자사업, 지역기반 사회보장 현안, 사회보장통계 현안이 선정됨.

– 인구정책 분야 현안으로는 결혼 지원정책과 노인일자리정책, 노후설계가 선정됨.

▣ 보건정책 현안 : 고령화시대 노인의료정책방향

–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은 연구개발에 따른 기술혁신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낮은 편임.

• 기초 기반 기술 연구 개발 역량은 향상되었으나, 실용화 및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한 핵

– 급격한 인구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 변화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11.0%(2010년)에서 40.1%(2060년)까지 증가 예상

• 건강보험진료비 중 노인인구가 사용한 비용은 약 18조 656억원, 35.4% 점유(2013 기준)

•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는 복합만성질환 증가, 거동 및 신체기능 저하(의존성 증가), 치매 등 인지기능 장애, 비만인구 증가로 요약됨

• 의료와 요양이 연계된, 장기적 · 일상적 · 지속적 통합관리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함

▣ 복지정책 현안 1: 등록장애인구 감소와 고령장애인구의 증가

–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고령화로 장애인구의 증가 및 장애인 고령화 현상 뚜렷

• 장애범주 확대에 대한 논의의 부족으로 최근 등록장애인구 감소

• 장애인구의 고령화 및 고령장애인구의 증가로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변화 필요

▣ 복지정책 현안 2: 지역사회기반 사회보장

– 사회보장정책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체감도는 높지 않으며, 지역간 편차가 확대되는 추세

• 지역사회는 사회보장정책과 정책 수요자가 대면하는 공간으로 정책을 지역 특성에 따라 적절하게 시행하고, 필요한 사회서비스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지자체가 담당하는 것이 필수

• 사회보장에 있어서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지자체의 역할 강화를 정책방안의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인구정책 현안 1: 노후설계 현안과 정책대응

–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보장, 건강보장, 여가보장, 사회적 관계는 매우 저조한 수준임

• 한국 노인 빈곤율은 2007년 44.6%, 2009년 45.1%, 2011년 47.2%이며, 66세부터 75세 노인의 소득은 전체 인구 대비 평균 62.4% 정도로 OECD 평균 90.1%에 훨씬 미치지 못함

•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주된 여가활동은 TV 또는 라디오 시청이 35.1%로 가장 높으며, 가족 및 친구 등과의 대화 18.2%, 혼자 하는 운동 11.7% 등의 순으로 대부분이 소극적이고 일상적인 여가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음

– 현재의 청·장년 세대가 노후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길어진 노년을 빈곤한 노년과 무위의 노년으로 채우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러므로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노년기를 준비해 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Ⅲ. 정책제언

▣ 보건정책 현안 : 고령화시대 노인의료정책방향

– (단기) 개념 재정비를 통한 통합과 연속적 서비스 체계 활성화 기반 조성

• 장기요양보험서비스의 성격을 보호와 수발 강조에서 Self care 능력 향상에 중점

• 요양서비스는 돌봄서비스보다는 대상자의 신체기능 회복 및 복구 차원에서 케어플랜을 통해 구체적, 장단기 목표를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 서비스 성격을 재조정

– (단기) 병원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 노인인구의 기능 저하는 점진적 과정이라기 보다는 질병에 따른 증상 발현, 갑작스런 상해나 사고 등의 계기를 통해 기능악화가 촉진되는 계단식 과정을 보임

• 병원(요양병원) 입퇴원 관리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재가서비스로의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smooth transitioning) 하는 연계체계 구축

– (중기) 간병인력, 요양인력과 보조인력의 역할범위 정의와 수급체계 개발

• 요양인력 수요 증가에 맞춰 적정한 수급과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인력의 종류와 범위, 권한, 위임정도에 대한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개발작업이 선행되고 이를 인력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중기) 노인의 복합적 서비스 수요에 대한 케어방안의 과학화

• 근거기반 의료와 마찬가지로 간호, 요양 부문 또한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방안에 대해 과학화하고 학문적 성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확산 과정 필요

– (중장기) 노인보건복지 계획의 총괄 관리 필요

• 보건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연계, 인력 개발 및 서비스 배치 등을 총괄하는 관리체계를 수립해야 함

▣ 사회정책 현안 1: 등록장애인구 감소와 고령장애인구의 증가

– (단기) 등록장애인구 감소에 대한 관련 데이터생성으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 필요

• 등록장애인구 감소에 대한 원인분석을 위해 관련 데이터 구축 필요

– (중·단기) 장애 정의(범주) 확대에 대한 논의 필요

• 우리나라의 '장애' 정의의 확대를 위한 제3차 장애 범주 확대 연구 필요

– (중·단기) 고령장애인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방안 마련

• 고령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개발은 장애인의 노화가 가지는 조기노화의 특성을 반영하여 50세를 전후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고령장애인을 위한 이차적 장애 및 조기노화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의료적 서비스 내용(물리치료 등) 개발 및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체계 필요

– (장기) 고령장애인이 가지는 복지욕구는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 양 분야에 걸쳐 발생되므로 각 분야의 서비스연계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이용방안 모색 필요

• 장애인복지서비스와 노인복지 서비스 간 연계를 활성화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권장

• 장기요양의 욕구가 높은 장애인과 노인을 통합하고 '장기요양제도(현 노인장기요양제도, 명칭의 변경 필요)'를 통해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합하고, 장애인의 특성 및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의 통일성과 효율성 측면의 지속적 검토 필요

▣ 복지정책 현안 2: 지역사회기반 사회보장

– (단기)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지원

• 사회보장정책의 투입(시설, 인력, 재원)을 지역단위로 통합하여 분석하고, 사회보장 취약 지역에 우선적인 예산 배분과 인력 및 사회복지시설을 확충

• 지역단위 사회보장 수준 및 현황 분석, 중앙 차원에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분석□평가 등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 업무를 지원하고, 관련 연구·분석 기능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

– (중기) 지역사회보장조사

• 조사항목과 내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하고, 동시에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함

• 조사방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여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며, 또한 시군구, 시도, 그리고 전국단위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함

– (중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확대 개편(2014년 12월 법률 근거는 마련됨)

•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중앙정부 주도 방식에서 지자체 주도로 전환

• 시군구 계획은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이자 전략계획으로 전환해야 하며, 시도계획은 시군구 지원계획의 성격을 포괄해야 함

▣ 인구정책 현안 1: 노후설계 현안과 정책대응

– 법적 및 제도적 환경구축

• 노후설계지원법 제정, 일원화된 노후설계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노후설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노후설계상담사 양성과 전문성 확보, 노후설계관리사 자격관리 방안 마련

– 노후설계프로그램의 체계화와 전문화

• 노후설계서비스 표준매뉴얼 개발, 노후설계프로그램의 다양화, 노후설계프로그램의 평가 또는 인증제 도입, 노후설계 취약지역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집중

– 노후설계서비스 지원들과의 연계성 확보

•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주체로서 기업의 역할 강화, 공공-기업-민간부문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자원 활용 확대

– 전 국민의 노후준비 인식제고

연구보고서
14-20

사회분야 글로벌 다자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Future social policy directions for OECD

연구책임자 • 홍석표

Ⅰ. 연구목적

▣ 국제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사회모델(Social Model)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각종 국제기구에서 사회이슈가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하고 있음

– 사회이슈에 대응하는 현존하는 다양한 사회모델은 효율성과 형평성에 있어 고유의 특성과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데, 효율적이지 못한 사회모델은 지속될 수 없고 개혁되어야 함

▣ 1996년 OECD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들의 사회정책 경험을 습득·활용하고 새로운 사회정책논의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분야 공공정책의 선진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필요

– 한국이 사회복지분야에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OECD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효과적인 대응과 참여가 요구됨

▣ ASEAN은 사회개발 이슈로 각료급 및 고위공무원급 회의를 매년 진행하면서 아세안 역내 사회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역내 후발국들은 새마을운동과 사회보험확대 등 한국형 사회발전 모형에 큰 관심을 표명

– ASEAN의 사회발전 노력에 한국이 동참함으로서 역내 후발국에 대한 정책적 영향 면에서 지대한 파급효과가 예상됨

▣ 본 보고서에서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현하는 OECD의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기 위해 현행 OECD 사회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진화 및 효과적 참여 전략을 제시

– 또한 ASEAN의 사회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향후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함

II. 연구내용

▣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빈부격차는 30년 이래 최고 수준임. 2011년 현재 OECD 회원국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약 9.5배 높음.

- 1980년대에는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비율이 7:1 이었고 이후 이 격차는 꾸준히 벌어져 1990년대 8:1, 2000년대에는 9:1을 기록
- 거의 모든 회원국에서 최상위 1%의 평균 소득은 나머지 인구의 평균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

▣ 소득 불평등 심화의 직접적인 주요 원인은 임금 및 급료 격차의 확산, 조세 및 복지급여 제도를 통한 재분배 약화 등에 있음

- 임금 상위 10% 근로자의 급여가 하위 10%의 급여에 비례해 상승
-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발생된 조세 및 복지급여 제도를 통한 재분배의 약화는 순소득 불평등 심화의 주된 요인 중에 하나임

▣ 저소득가구는 금융위기 동안 더 많은 손실을 입어 고통은 균등하게 분담되지 않았음

- OECD 국가 전체에 걸쳐 평균적으로 하위 10%의 소득은 상위 10%의 소득보다 두 배나 감소
- 가구소득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 중 일부에서 빈곤 가구의 소득 하락이 특히 두드러졌음

▣ OECD의 사회정책은 일을 통한 소득 정책과 일자리 창출, 훈련 및 교육, 그리고 유연한 고용에 방향 지어진 정책과 같은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무게를 두고 있음

- 현재 나타나고 있는 비숙련 일자리의 낮은 유지가능성, 비숙련 일자리의 저임금 및 가족부양의 책임(어린 자녀 및 고령자) 등은 전통적인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정책의 변화를 요구
- 직업훈련을 넘어선 고등교육 및 기타 교육의 기회 제공, 최저수입의 보장, 일터의 안정성 제고 및 가족부양의 부담 공유 등 저소득층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덜어 줄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이 필요

Ⅲ. 정책제언

▣ OECD 사회정책의 진화를 위해 강조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 각 개인들이 사회에서 자립적이고 책임감있는 방향으로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주는 사회정책이 바람직함

– 단순히 한 세대 내에서의 재분배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닌, 현 세대와 미래세대 사이의 재분배를 조명

– 개인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능력배양을 제공하거나 또는 인적자본에 대한 공적/사적 투자의 장려를 통해 개인들이 사회에 통합된 채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초점을 맞춤

▣ OECD 글로벌 거버넌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포괄적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을 OECD 사회정책에 반영케 하는 노력이 필요

– 국가별 사회이슈를 분석하고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연구를 OECD 고용노동사무국(ELS)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

– 따라서 우리나라 복지관련 정부부처 및 연구원 인력의 ELS 취업 및 파견을 통한 포괄적인 측면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연구 참여가 요구됨

▣ 저개발국가가 다수인 ASEAN의 경우 향후 사회보호 정책의 발전전략은 다음과 같음

– 개발도상국의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은 단기적 혹은 임시적인 사회부조 프로그램 뿐 아니라 사회보험과 같은 중·장기적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

– 재정의 누출을 막고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이 누구인지, 선정된 사람이 규명된 취약계층에 속하는지에 관한 믿을 만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수적

– 대다수 ASEAN 국가는 사회보장보험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관리 효율성을 향상시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다자적, 양자적인 사회부조 기관이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고안, 표적화, 모니터링, 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중요

연구보고서
14-29-1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Data portal system construction and operation for activating the use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연구책임자 • 오미애
공동연구자 • 최현수·이연희·고제이·전진아·진재현·천미경

Ⅰ. 연구목적

▣ 보건복지통계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는 지속 가능한 포털사이트 구현

– 보건복지통계정보의 통합적 제공이 가능한 사이트 구축 및 운영

• 보건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기초통계 및 파일형태의 조사자료, 책자형태의 보고통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계자료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고 질 높은 통계서비스가 가능한 체계 구축

• 해외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접근 용이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이용자층 다각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계 서비스가 가능한 포털사이트 구축

– 국가통계로 승인된 조사통계의 일관성 유지와 조사사업간 조사결과에 대해 동일 아이템의 비교가 가능한 조사항목별 표준화된 자료수집체계 마련으로 보건복지관련 국가통계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Ⅱ. 연구내용

▣ 편리한 보건복지정보 서비스 환경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시스템 운영·관리

– 사용자 중심의 화면 디자인 설계, 보건복지정보 접근단계의 최소화

– 통계정보 서비스의 고도화 및 환경 개선을 통한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 보건복지 분야 마이크로데이터를 집적화하여 체계적으로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개편(보건복지데이터포털 오픈)

– 기존 보건복지통계포털은 보건복지 분야 각 사이트 및 보고서에 산재되어 있는 통계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음

– 통계청 KOSIS와의 차별화 도모 및 국정과제인 정부 3.0의 공공정보 개방 및 공유를 위한 실천과제 수행

▣ 개편 보건복지데이터포털 주요 내용

– '연구DB'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과제 정보를 이와 관련된 Micro & Macro 데이터의 메타정보와 연계하여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음. 연구과제 관련 정보를 연구주제별, 생애주기별, 명칭별로 구분. 연구주제별 분류체계는 트리 형태로 구조화하였으며, Micro & Macro 데이터의 연구주제별 분류체계와 일치키도록 함

– '사회보장통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및 공공기관이 작성한 다양한 사회보장 관련 통계 제공. 사회보장통계의 체계적 구축을 위하여 지표의 정의, 측정 산식, 관련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자 항목을 구성함

– 'Micro & Macro Data'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 동안 수행한 연구과제에서 조사·수집된 Micro & Macro 데이터의 메타정보와 조사표 및 원자료 등을 제공. 다양한 데이터들을 연구주제별, 데이터유형별로 구분하였으며, Data Summary에서는 여기에 수록된 다양한 주요 마이크로데이터의 메타정보를 요약하여 여러 내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제공함. 연구주제별 Micro & Macro 데이터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그동안 수행한 연구과제 정보를 제공하는 연구 DB의 연구주제별 분류체계 및 개별 연구과제 정보와 연계하여 조사목적, 조사방법, 조사대상, 표본설계, 통계승인여부, 데이터 제공여부 등의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데이터유형별 Micro & Macro 데이터는 Micro 데이터(양적), Micro 데이터(질적), Macro 데이터로 구성되며, 데이터유형별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의 목록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

– '해외자료'를 새롭게 추가하여, 기존의 국제통계를 국제기구통계로 정리·보완하였음. 해외 마이크로데이터 및 매크로데이터 메타정보를 제공하고 링크를 해줌으로써 유용한 해외자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음

Ⅲ. 정책제언

▣ 2014년부터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 데이터포털은 다음의 시사점을 반영하여, 보건복지 분야의 마이크로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제공함으로써 정부 3.0 실천을 선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포털시스템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해야 함

– 데이터포털은 철저히 이용자 중심의 DB로 구축 및 운영되어야 함

– 개별 연구자가 생산 및 활용한 데이터를 관리해주고 다른 연구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며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 필요

–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및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

연구보고서
14-29-2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A study on the Micro data linkages to promote the production and utilization of health and welfare statistics

연구책임자 • 전진아
공동연구자 • 손선주·이난희·최지희

Ⅰ. 연구목적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여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3.0 지원을 위한 실천과제

– 다양한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 데이터 연계 방법론임

▣ 기존 데이터 간의 연계 필요성

– 보건복지분야의 조사는 횡단적 조사와 종단적 조사가 있으나, 패널자료를 제외하고 이질적인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어 조사 간 연계가 어려운 실정임

– 표본이 다른 조사 자료와의 연계는 한 조사에 수록된 정보의 한계를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보건복지 서비스 수요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존 통계의 활용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봄

▣ 국가요구에 따른 적극적인 역할 모색

–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의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조사자료의 연계에 대한 연구 시도가 필요함

– 근거기반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 심도있는 연구 및 학술 정보 필요

▣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 활용에 도움

– 다양한 표본으로부터 생산되는 빅데이터(조사자료)의 연계를 통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보건복지 통계생산의 기반 확보

– 빅데이터 연계 통합으로 예측가능한 맞춤형 복지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함

II. 연구내용

▣ 데이터 연계 용어 및 데이터 연계 시 필요한 개념을 정의

– 조사데이터와 행정데이터의 조합을 통해 연계할 데이터의 특성에 따른 분류 시도

– 정확 매칭(exact matching)과 통계적 매칭(statistical matching)으로 데이터 연계 방법을 분류하여 각 방법의 이론적 배경과 특징 및 매칭 절차를 살펴봄

▣ 주요 데이터연계 유형별 실제 활용사례 제시

– 데이터연계 유형은 두 데이터를 연계할 때, 기준이 되는 기준파일과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사용되는 연계파일의 데이터 특성, 매칭방법에 따라 8유형으로 구분

– 각 유형별로 보건복지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고, 활용가능성이 있는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해외의 데이터 연계 사례를 소개

▣ 복수의 데이터에서 유사한 개체를 찾아 연계할 때 고려되는 통계적 매칭기법들의 매칭결과에 대한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연계된 데이터인 통합데이터 활용의 신뢰성을 살펴봄

– 다양한 거리함수를 적용하여 데이터 연계 simulation을 수행

– 기준파일과 연계된 연계파일의 개체와의 유사성을 MSE(Mean Squared Error)로 측정하여 통계적 매칭 기법간의 성과를 비교

▣ 연구자들이 주로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매칭 방법과 관련하여 두 조사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 기준파일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파일인 재정패널 연계 분석

• 납세여부와 복지수혜 여부에 따른 집단을 구분하여 복지인식에 대한 차이를 분석

– 기준파일인 한국복지패널과 연계파일인 의료패널을 연계 분석

• 만성질환자의 소득수준별 의료비 지출 부담 및 건강관련 주요특성을 분석

▣ 데이터 연계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사례를 제시하고,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의 법률적 정의 및 근거와 주요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률 체계를 살펴봄

– 데이터 연계 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자료 이용자의 요구에 맞게 데이터가 분석·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방법론을 제시하여 개인정보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Ⅲ. 정책제언

▣ 보건복지분야 통계정보인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고려사항과 몇 가지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통합데이터 구축 시 중요한 고려사항은 연계대상이 되는 두 데이터 중 어떤 데이터를 기준파일로 선택 할 것이며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이용할 것인가에 있음

• 두 데이터의 매칭변수로 활용될 공통변수 선택에 따라서도 통합데이터의 품질이 달라질 수 있음

– 통계적 매칭방법으로 데이터를 연계할 경우, 기본가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매칭기법 선택에 따라 분석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함

–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정보보호임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접근, 통계적 방법으로 매스킹 기법 등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정책적으로 데이터 연계 센터나 가칭 데이터 거래소를 설립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는 방안도 필요

▣ 데이터 연계는 빅데이터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예측 가능성을 극대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비전을 제시함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지닌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정책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연구보고서
(수시)
14-06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National Health and Welfare Agenda: Progress and Policy Challenges

연구책임자 • 신영석
공동연구자 • 강지원·여지영·전지현·이지혜·김태은·김은아·김종걸·김진우·석재은·송현종·신종철
오인환·이소정·이진형

Ⅰ. 연구목적

▣ 박근혜정부의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집권 하반기 정책의 우선순위와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것임.

– 박근혜정부는 집권 초 국정과제를 통해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과적인 전달체계 운영을 통해 부처간 유사중복 사례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한국형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 제시

• 총 140개의 국정과제 중 국정기조❷ '국민행복'의 전략④ '맞춤형 고용·복지', 전략⑥ '국민안전', 전략⑦ '사회통합' 등이 보건복지분야에 해당함.

– 지난 2년간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의 수행을 위한 정책환경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4.12.9.)

•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해 『기초연금법』 도입 및 시행(2014.7.1.)

• 치매노인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을 통해 치매특별등급 도입

– 본 연구는 보건분야와 사회분야, 저출산·고령화분야의 국정과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추진 실적이 저조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과제, 법·제도 등 인프라가 부족한 과제, 개선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과제들을 점검함으로써 하반기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전략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총 8개의 과제를 제시했으나 연차보고서에는 지면 관계상 4개 과제만 제시함.

II. 연구내용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추진전략

– 140대 국정과제 중 9.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제시

• 정부는 투자 활성화 대책으로 유망 서비스 6개 분야 (보건/의료, 관광/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를 선정함.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은 한국의 의료서비스의 제도 개선을 통한 보건의료분야의 투자확대와 해외 진출로 인한 일자리 부가가치 창출을 목표로 함.

– 정부는 보건의료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와 제도개선 기반조성을 추진함.

▣ 가치기반지불체계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

– 140대 국정과제 중 48.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⑥ 수가 및 지불제도 개선 제시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13년부터 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요양기관에 확대 적용

• 신포괄수가제: '12년 40개 병원에서 550개 질병군을 대상으로 시행

• 성과연동 지불제도(가감지급사업): '13년 기준 가산 기관은 155개 총 20억원 가산, 감산 기관은 59개 총 1억2천만원 감산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방안

– 140대 국정과제 중 43.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제시

– 정부는 '빈곤위험계층까지 정책대상 확대' 계획('13.5.28, 관계부처합동)

• 중위소득 50%이하 계층에 기초생활보장, 긴급지원, 차상위 지원사업 등 개별지원 확대

• 긴급지원제도의 위기사유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검토, 지자체 재량범위 확대를 통해 선제적 대상 발굴 및 지원유도

–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도 확대했으나 여전히 지원대상 선정의 엄격성, 지원수준의 불충분성의 문제가 남아있음.

▣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정책과제

– 140대 국정과제 중 47.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으로 ① 기초연금제도 도입 제시

– 기초연금 추진경과 및 실적

• 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제시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초연금 도입안 제시

• 국민행복연금위원회(2013. 3~7)를 통한 의견 수렴

•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 발표(2013. 9.25) 및 국회 제출(2013. 11. 25)

• 여·야 합의에 따른 기초연금법안 마련(2014. 4. 30) 및 기초연금법 제정(2014. 5. 2)

– 기초연금법 제정

• (목적) 정기적·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 (법적 근거) 기초연금법 (제정: 2014.5.20/시행: 2014.7.1)

• (수급대상)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하위 70%

•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87만원, 부부 139.2만원) 이하: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제외

• (기초연금액 산정)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

• (월 급여액 결정)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가구유형(부부2인 수급 시 20% 감액) 및 소득인정액에 따라 감액 (최하 월 2만원)

– 기초연금 실시

• 2014년 7월부터 개시 8월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중 420만명 수급: 전액 수급자(92.4%), 감액 수급자(7.6%)

Ⅲ. 정책제언

▣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의 합리적 추진전략

– 보건투자활성화 정책 추진방향은 공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과 산업 창출로 일자리를 늘리고, 부가가치 또한 증진 시키는데 있음.

• 이를 위해 실질적인 대안을 창출하여 의료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해외 수출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을 완화해야 함.

– 보건복지 투자 활성화 단기 대책

• 데이터 제공과 실증 데이터 분석 장려, 의료경영 전문가 양성, 투자 성공사례 전파

– 보건복지 투자 활성화 장기 대책

• 자법인 투자 확대, 해외환자 유치 확대, 보건의료 연구 임상 활성화, 의료정보 보호 및 활용

▣ 가치기반지불체계로의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방안

– 추진방향

• 포괄적 지불제도의 확대와 함께 성과에 따른 지불제도의 확산이 요구되며, 이는 포괄적 지불제도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음.

– 질병군 포괄수가제와 신포괄수가제의 통합을 고려하고, 더 나아가 행위별 수가제에서 포괄적 지불제도로의 전환 시도

– 포괄적 지불제도의 성격을 강화시키는 모형으로 개선하고, 질병군 분류체계가 자원소모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류체계를 고도화하며, 민간병원까지 시범사업 기관으로 포함

– 성과연동지불제도의 확대를 위해 보고에 따른 추가 보상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평가지표 개발

• 현재의 가감산 비율을 격차를 확대하여 성과향상의 동기부여

• 예방과 건강증진 범위까지 적용

• 수가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 고려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방안

– '제도운용의 관대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애매한 자에 대한 불필요한 지원으로 인한 낭비와 비합리성보다. 제도운용의 엄격함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되어 생에의 의지를 포기하는 한 생명의 가치가 더 소중하다'는 시각이 제도 전반에 걸쳐 투영될 필요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기사유 융통적 적용 및 소득기준 완화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2015. 2월) : 생계지원 최저생계비의 120% → 185%로 상향조정

–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난 위기상황을 감안한 지원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

• 다만, 의료지원 300만원 상향조정은 쉽지 않지만 간벽인력, 입원초기의 불가피한 상급병실료 등에 대해서는 융통성 발휘 필요

–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긴급복지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판단 재량 여지 확대 필요

– 일상적인 삶의 패턴에서 벗어난 위기상황을 감안한 지원수준이 되도록 상향조정

– 우선적으로 통상의 사회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국민이 느끼는 다양한 일상생활상의 위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이고 포괄적인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긴급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에 허점을 드러내는 싸인이라고 보고 사회안전망 개선 필요에의 객관적 증거로서 긴급복지지원 사례를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피드백 시스템 구축 필요

▣ 기초연금제도 도입의 의의와 정책과제

–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정과제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완수되었다고 평가됨.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기초노령연금이 갖고 있던 선별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의 싹을 끊어내고 보편적인 기초연금으로서의 제도정체성을 갖게 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향후 기초연금의 안정적 재원조달 마련을 위한 방안의 강구가 필요함.

– 기초연금액 수준의 실질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Ⅳ

2014년 연구활동

1. 2014 주요행사
2. 정기간행물

1. 2014 주요행사

국제회의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전문가 초청 세미나	1.2(목)	노동과 복지 – 소득주도 성장과 Income Floor를 향한 탐색	-
한·미·독·중·일 5개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 관련 개인정보 국제 학술 세미나	1.15(수)	한·미·독·중·일 5개국의 개인식별번호 정책 소개	-
건강한 노년기 준비에 관한 국제비교 연구 발표회	4.21(월)	성공적 노화 및 사회관계조사 결과분석 및 연구협력방안	-
HIA 2014 국제건강영향평가 워크숍 (International HIA Workshop)	4.29(화)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지역 국가의 건강영향평가 네트워크 개발 및 건강영향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적 문제 논의	-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움	6.10(화)	2013년기준 국민의료비 추계 및 국민보건계정 심포지움	보건복지부 연세대의료복지연구소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KIHASA-AHRQ Video Conference	6.18(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적 접근	AHRQ
일본 사회보장학회 및 인구사회보장연구소와의 사회보장재정 세미나	6.21(토) ~ 6.24(화)	한국와 일본의 사회보장지출 현황 및 전망 논의	일본 사회보장학회 일본 인구사회보장연구소
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에 관한 국제 워크숍	10.1(수)	아시아 국가의 인구정책 및 결혼제도 비교	-
글로벌 가족변화비교 국제세미나	10.2(목)	동아시아 가족변화 관련 국제비교연구 결과 공유	-
사회정신건강 관련 국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10.7(화)	일본의 개호(간병수발)에 따른 자살 및 살인 실태와 대응방안	-
Gunnar Akner(스웨덴 오레브로 대학교수) 초청 스웨덴 노인성 복합질환 현황 및 복합질환 관리 체계 관련 워크숍	10.29(수)	스웨덴 노인성 복합질환 현황 및 복합질환 관리 체계 소개	-
제1회 아태지역 가족정책 전문가 국제세미나	10.30(목)	동아시아 7개 지역의 출산율 변화 및 가족정책 현황 논의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국민연금 기금지배구조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10.31(금)	바람직한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무엇인가	-
사회보장지출 장기추계 국제 컨퍼런스	11.7(금)	사회보장 지출 장기추계: 방법론과 시사점	-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한·독·일 장기요양 국제심포지움	11.13(목)	한국, 독일 및 일본의 장기요양보험제도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동향·성과평가 등 논의	한국장기요양학회 한국노년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복지환경의 도전과 복지기술의 역할에 관한 국제 공동 컨퍼런스	11.18(화)	복지환경의 도전과 복지기술의 역할-복지의 미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Nordic Centre for Welfare and Social Affairs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 관련 공동세미나	11.20(목)	한국의 인구고령화와 사회보장	Rand Corporation
보건의료지불제도와 전달체계에 관한 보건복지 국제공동심포지움	11.27(목)	보건의료 개혁의 국제적 동향과 대응: 전달체계와 지불제도의 연계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와 유럽의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정책 대응에 관한 국제컨퍼런스	12.7(일) ~ 12.9(화)	인구고령화와 정책대응	Oxford 대학교 Birmingham 대학교
21세기 인구변동과 사회적 변화에 관한 국제 심포지움	12.16(화)	21세기 인구변화와 사회구조적·제도적 변화	한국인구학회

국제훈련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보건정책관리연수」 중간관리자 연수 실시(모잠비크, 탄자니아)	4.21(월) ~ 5.2(금)	근거 중심의 의사결정/보건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주제로 한 강의 및 워크숍	-

정책토론회 등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방향에 관한 세미나	1.27(월)	한국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논의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17(월)	재정지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IO 분석 특강	-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관련 세미나	2.19(수)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에 관한 연구 관련 세미나	-
한국형 복지 패러다임의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	3.7(금)	한국형 복지가 나아가야할 모델 모색	국민경제자문회의
거시계량모형 세미나 (재정건전성 관리제도 효과성)	3.18(화)	재정건전성 관리제도 효과성	-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과제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3.27(목)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와 과제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공적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거시경제변수의 동태적 전망 모형)	4.9(수)	Matlab 프로그램을 활용한 동태확률일반균형모형 구축	-
의료기기산업현황과 의료기기 시장 도입 및 확산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4.9(수)	의료기기산업현황과 의료기기 시장도입 및 확산과 관련된 국내정책, 주요이슈 논의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경제균형 계량모형과 사회지출부문 활용방안)	4.29(화)	경제성장분석을 위한 방법론 구축 및 적용에 대한 주제발표 및 논의	-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정책토론회	5.13(화)	사회적 불평등과 정책적 대응	한국사회정책학회
거시계량모형 세미나(보건복지부문 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적용방안)	5.14(수)	경제적 효과분석을 위한 보건복지부문 사회회계행렬 구축 및 적용방안	-
한국의료의 질과 불평등 보고서 개발에 관한 정책토론회	5.27(화)	National Healthcare Quality & Disparity Reports 토론회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 (출산율을 내생화한 CGE모형)	5.28(수)	출산율을 내생화한 CGE모형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한 국민연금 재정안정성 분석)	5.30(금)	재정추계의 거시모형 적용을 위한 거시모형과 사회보장지출의 주제발표 및 토론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국민연금 재정추계를 위한 주요 거시경제변수의 장기전망모형)	6.5(목)	경제성장과 거시경제변수 적용을 위한 장기 거시모형 구축 및 적용방안 논의	-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에 관한 컨퍼런스	6.13(금)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보건정책연구본부 연구결과 발표회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안)	6.20(금)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위치와 발전방안	한국보건행정학회
사회보장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6.26(목)	사회보장위원회 안건발굴과 선정, 위원회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HIA 2014 건강영향평가 워크숍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	6.27(금)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	-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	7.3(목)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권의 기준과 범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분야 전문기자단 초청 정책 토론회	7.15(화)	보건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등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현안 (1) 의료시스템 성과향상을 위한 국가 의료 질 측정과 보고 (2) 한국의 건강불평등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방향	-
거시계량모형 세미나 (장·단기 거시모형과 사회보장 지출 연계 가능성 및 활용방안 모색)	7.18(금)	장/단기 거시모형 – 사회보장 지출 연계 가능성 및 활용방안 모색	-
한국형복지모형구축(일반) 세미나	7.22(화)	사회경제모델로서 한국형 모델 구상	-
제1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7.24(목)	환자만족도	-
제2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7.31(목)	흡연, 음주, 기업과 건강	-
의료의 질 향상 분담금 지표개발 관련 워크숍	8.1(금)	의료 질 향상 관련 지표 개발	-
제3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8.7(목)	존엄사, 생명 연장	-
사회분야 국제기구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APEC 사회분야 향후 의제 동향 논의)	8.20(수)	APEC 사회분야 향후 의제 동향 논의	-
제4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8.21(목)	공중보건측면에서 수면의 사회제도적 영향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관련 세미나	8.25(월)	한국의 소득분배	-
제5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9.4(목)	The effects of transformed primary care on health care cost and disparities	-
보건복지 현안과 정책과제에 대한 정책토론회	9.12(금)	사회보장 현안, 복지욕구의 변화, 보건의료 분야 현안과 정책과제	-
사회분야 국제기구 대응방안 전문가 세미나(사회분야 OECD 의제 동향 논의)	9.16(화)	사회분야 OECD 의제 동향 논의	-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 토론회	9.17(수)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서비스산업 환경변화와 정책쟁점	-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9.18(목)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보건복지부
OECD 등 국제기구 통계생산 및 관리 워크숍	9.18(목) ~ 9.19(금)	보건복지통계의 생산과 관리, 활용의 중요성과 국제기구 요구통계 현황과 과제	-
사회보장 재정추계 워크숍	9.23(화)	2015년 재정추계 대비 2013 사회보장 재정추계 검토 및 역량강화를 위한 2014년 연구방향 논의	-
제6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9.25(목)	개인건강정보	-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행태 변화 분석 워크숍	10.1(수) ~ 10.2(목)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양육행태 변화 양상 논의 및 시사점 모색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제7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0.2(목)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	-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	10.7(화)	소득불평등 요인분해를 위한 방법론 논의	-
제8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0.16(목)	호스피스, 완화의료, terminal care	-
제9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1.13(목)	서울대병원의 아랍에미리트 칼리파병원 위탁운영 수주의 정책 효과	-
사회보장 재정추계 전문가 세미나	11.14(금)	2015년에 대비한 재정추계 모형 및 방법론 보완 방안 논의	-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에 관한 토론회	11.14(금)	국민건강증진기금 활용방안 토론	국회의원 김춘진 의원실
제10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1.20(목)	The impact of outsourcing on hospital productivity	-
UN SDGs 지속가능발전 종합타겟 설정을 위한 주제분야별 발제 구상 워크숍	11.20(목)	컨퍼런스 지명토론자 명단 및 주제분야별 발제문 요지 확정	KDI 국제정책대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유사·중복사업 개선 현장 의견수렴 TF 워크숍	11.20(목)	사회보장사업 조정·연계방안 협의 및 운용지침 의견 수렴	-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공청회	11.24(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 발표 및 종합토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사회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 성과토론회	11.25(화)	안전 관련 종합정책연구 성과토론회	-
제11차 보건의료정책 세미나	12.4(목)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간의 역할 정립 방안	-
중앙-지방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 방안 모색에 관한 정책토론회	12.10(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소요의 정립방안 논의 및 시사점 모색	국회의원 이만우 의원실
보호자 없는 병원(포괄간호시스템) 제도화에 관한 토론회	12.11(목)	여성난임에 대한 시술비 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검토 및 지원사업 개선방안 검토	국민건강보험공단

학술대회(후원 포함)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불 국제세미나	5.12(월)	미래에의 전략적 대응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프랑스국립학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사회보장학회 2014년도 춘계학술대회	5.16(금) ~ 5.17(토)	한국사회보장의 성찰과 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5.23(금)	보건·의료서비스 무역의 현재와 미래	한국무역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경영학회)
201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전기학술대회	5.23(금)	보건의료서비스무역의 현재와 미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행정학회 2014년 전기학술대회	5.30(금)	인구집단에 대해 건강 책무성을 갖는 보건의료서비스 조직과 우리나라에의 적용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정책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5.30(금)	공공성과 민영화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기요양학회 2014년 춘계학술대회	6.13(금)	장기요양제도와 치매케어	장기요양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경제연구학회 제13차 국제학술대회	6.20(금) ~ 6.21(토)	New Challenge for Trans-Ragionalism in the Asia-Pacific	한국경제연구학회 워싱턴대 국제경제연구센터 한국개발원 금융연구원 한국은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7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9.19(금)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시상 및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후원)
2014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	10.17(금) ~ 10.18(토)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점검한다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주관 7개 학회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한국연구재단) (국민연금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
2014년도 한국재정학회 추계 정기학술대회	10.17(금) ~ 10.18(토)	공·사적 연금의 개혁방향	한국재정학회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금융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예방의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10.22(수) ~ 10.24(금)	지역사회의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예방의학의 역할	대한예방의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10.31(금) ~ 11.1(토)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 이대로 좋은가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재정정책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10.31(금)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정정책의 역할	한국재정정책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11.6(목) ~ 11.7(금)	인구집단 기반의 책임의료: 도전과 과제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11.21(금)	보건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의 쟁점에 대한 논의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6회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12.12(금)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활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포럼 등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 (후원)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2.19(수)	한국의 가처분소득 및 순자산 불평등	-
	4.9(수)	모니터링위원 선정	-
	4.14(월)	사회보장 모니터링 포럼 신규 전문위원 발굴 및 제 4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확정	-
	4.30(수)	제4기 사회보장 모니터링 전문위원 위촉식	-
	5.30(금)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포럼 현장 모니터링 전문위원의 제2차 온라인 서면의견제출	-
	8.22(금)	모니터링 전문위원 제출 서면의견 취합 안건 검토 및 전달체계간 협력 제고	-
보건의료정책 리더스 포럼	11.18(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관리 운영 방안	-
	12.26(금)	집단개원, 통합의료전달체계(IDS) 관련 발표 및 토론	-
사회통합포럼	4.4(금)	한국사회, 통합의 좌표	-
	5.30(금)	내핍(austerity)기 영국의 사회보장 및 사회서비스 개혁	-
	6.13(금)	사회적 경영(Social Business)의 이해, 미션과 성과	-
아시아 사회정책포럼	7.17(목)	타이완 근대사회주택정책의 발전과 문제	-
	8.16(토)	일본과 한국의 빈곤문제와 공공부조제도	-
	9.23(화)	일본, 태국,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
	9.25(목)	중국과 한국의 공공부조제도 비교	-
	10.13(월) ~ 10.16(목)	한일 공공부조제도 논의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11.13(목)	일본의 억제적 빈곤정책이념의 형성	-
연금기금포럼	5.20(화)	국민연금기금은 어떻게 자산배분을 하고 있는가?	-
	6.19(목)	국민연금기금 중기자산배분 모의 Case 예제 사례분석	-
	7.14(월)	국민연금 중장기 자산배분목표와 ALM	-
	11.21(금)	기금의 액티브 운용 및 액티브위험의 관리방안	-
	11.25(화)	국민연금의 바람직한 보상체계란?	-
	12.11(목)	바람직한 국민연금운용 보상체계란 무엇인가?	-
인구포럼	2.11(화)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 이슈 진단과 과제	-
	2.21(금)	통일한국의 적정인구: 통일 대박으로 가는 길	조선일보
	6.19(목)	저출산 위기 극복의 첫걸음, 모든 아이들의 건강한 출생·성장	-

행사명	개최일자	주제 및 내용	공동주최/주관 (후원)
인구포럼	7.17(목)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세대간 소통	-
	9.5(금)	한·일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비교 국제세미나	-
	11.14(금)	한국사회의 저출산 해법 논의	한국사회보장학회
지역복지정책포럼	8.19(화)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모색	-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단	6. 9(월)	지역사회보장 현장모니터링 보고서에 대한 내용검토 및 개선방안	-
	6.23(월) ~ 6.24(화)	신규 모니터링위원 위촉, 전체 위원 교육, 1분기 모니터링 활동보고서 검토	-
	7.4(금)	지역사회보장 보니터링단 교육 및 위촉식	-
	11.6(목) ~ 11.8(토)	지역사회보장모니터링활동보고서에 대한 T/F회의 진행 및 교육 등 워크숍	-
	12.3(수)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연구」 (기본) 공공부조분야 TF회의	-
	12.4(목)	「지역사회보장 모니터링연구」 (기본) 사회서비스분야 TF회의	-
	11.28(금)	지역사회복지대상 시상	한겨레신문사
창조복지 포럼	8.5(화)	맞춤형 고용복지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논의	-
	9.19(금)	'맞춤형 고용·복지' 이념과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논의	-
	10.30(목)	고용복지 전달체계 선도 지자체 현황 파악	-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	3.13(목)	북한 사회복지에 대한 최근 변화와 남북 통합시 문제점	한반도선진화재단
	4.17(목)	북한의 노동시장 및 기업복지구조 변화와 체제전환국의 사회복지체제 통합경험의 시사점	한반도선진화재단
	6.12(목)	북한 사회복지의 최근 연구동향 및 남북한 통일단계의 사회적 위험에 관한 고찰	한반도선진화재단
	9.25(목)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및 통일 후 사회 보험 모델	한반도선진화재단
	10.30(목)	통일 후 북한지역의 의료, 북한 모자 천일 패키지 사업	한반도선진화재단
	12.11(목)	통일 노동시장제도 모델 관련 세미나	한반도선진화재단
UN SDSN KOREA-GREEN KOREA 2014 공동포럼	12.4(목) ~ 12.5(금)	UN의'지속가능발전종합목표(SDGs)'체제정립대응: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종합 타겟(Targets)설정을 위한 예비 토론	KDI국제정책대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특강 / 교육

주제	개최일자	강사
[명사초청]		
명사특강(스마트복지-영국 복지개혁 브리핑)	3.4(화)	배병준 국장(복지부)
[통계교육]		
ArcGIS 방법론 세미나(1차): GIS 기본개념 및 ArcGIS 기본 사용법	6.27(금)	박성우 연구원(건양대)
ArcGIS 방법론 세미나(2차): ArcGIS 툴 실습	7.10(목)	
ArcGIS 방법론 세미나(3차): ArcGIS 툴 실습	7.29(화)	
[기타]		
논리적 망분리 사용자 교육	1.10(금)	김성우 과장(미라지)
학술적 글쓰기의 원리와 방법	3.4(화)	박현희 교수(서울대)
공문서 바로쓰기 특강	3.19(수)	김주미 전문위원(국립국어원)
Refworks 이용 및 참고문헌 작성 교육	4.15(화)	김경원 과장(프로퀘스트 한국지사)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	5.28(수)	시청각 교육
청렴교육: 청렴사회의 보루 공익신고	6.2(월)	시청각 교육
연구윤리교육	6.12(목)	박완규 교수(중앙대)
성폭력,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10.6(월)	최현주 전문강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MOU

기관명	체결일자	협약내용
싱가포르 국립대 인문자연학부	2014.05.08	·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류 · 교류, 협력 및 공동연구 개발 · 기술 상용화 · 공동 학술행사 개최 및 세미나 참여
미국 UC버클리 경제·인구변동 센터	2014.06.20	·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참여 ·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 ·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류
미국 하와이대 마노아캠퍼스 한국연구센터	2014.06.30	· 공동 연구 및 학술행사 참여 · 세미나 및 학술회의 참가 ·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류
전라남도복지재단	2014.09.12	· 공동연구 수행 및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 학술자료, 출판물 및 지식정보의 교류 · 공동캠페인, 교육 및 조사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시행 ·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한국정보화진흥원	2014.09.16	·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인증 확산 · 보건복지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 인력 양성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공동개최 및 양 기관 인력교류 활성화 등 인적·물적 상호협력 · 기타 양 기관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반사항의 교류협력
교보문고	2014.09.17	· 스콜라(scholar.dkyobobook.co.kr)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제공하는 콘텐츠가 무료로 통합 및 분류 검색, 연계 · 스콜라(scholar.dkyobobook.co.kr)에서 연계된 자료에 대한 출처를 명시하고 분기별 이용 통계를 제공 · 스콜라(scholar.dkyobobook.co.kr)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대한 소개 및 배너를 노출
일본 오사카시립대학 도시연구플라자	2014.10.15	· 공동 연구, 강의, 심포지엄, 워크샵 및 이와 관련한 연구자 교류 · 양 기관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 · 학술자료 및 기타 정보교류
북유럽장관회의 산하 북유럽 복지·사회이슈 센터	2014.11.14	· 경험과 지식 교류 · 연구결과 및 인쇄물 교류 · 세미나와 컨퍼런스 참여
중국사회과학원 사회정책연구센터	2014.11.14	· 공동연구, 강의, 심포지엄, 워크샵 및 이와 관련한 연구자 교류 · 양 기관에서 관심있는 분야의 정보와 자료의 교환 및 출판물의 간행 · 스터디 투어와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정책연구 전문가 육성과 교류 · 기타 연구원 교류에 지원 및 협조
미국 유타대학교	2014.11.27	· 공동 조사사업 · 교수 및 연구인력 교류 · 연구자원, 인쇄물, 정보 교류 · 조사 및 인턴십을 위한 학생교류 · 단기 특별 학술 프로그램
공주대학교 우송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2014.12.16	·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기본정신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활성화 노력 · 대학원 간 학점교류 및 석박사 연계과정 운영 지원 등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공동협력 · 연구기관 연구인력 및 대학교 교원 등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지원 등 · 연구회 및 연구기관 직원과 대학교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 기타 상호 기관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항

봉사활동

▣ 목적

- 사회공헌 및 의사가 있으나 개별 참여하기 어려웠건 직원에게 기회 제공
- 소속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내용

- 일회적, 단발적 행사를 지양하고 시설과의 협의를 통해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기획하여 정기적 봉사활동 수행

▣ 실적

- 본부별 1개 시설을 전담하여 자발적 운영
- 5개본부 연간 50여회 실시
- 봉사시설
  - 양로시설 성우회
  - 모자쉼터시설 흰돌회
  - 지역아동센터 보물섬
  - 서울 SOS 어린이마을
  - 성산지역아동센터

2. 정기간행물

보건사회연구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보건의료, 사회보장,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보건복지 정보·통계와 관련된 이론적이고 정책적인 문제를 다루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연 4회 발행합니다.

○ 제34권 제1호

논문제목	저자
한국복지패널(2005-2011)의 다차원적 빈곤개념을 활용한 도시·농촌 간 빈곤 격차에 대한 연구	김혜자, 박지영, 고난난, 진나연, 김정은
주택상속 의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고령자 가계를 중심으로	유승동, 김주영
프랑스 복지정책의 사회연대개념과 실천적 함의	이은주
탈북 중·고령자의 심리사회적 특성과정부지원 인식에 따른 삶의 만족도	정순둘, 박지혜
중요도-성취도 분석을 활용한 도심형 요양병원 선택요인 연구	정윤, 이견직, 김슬기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보상만족과 소명의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신숙, 박인아
요양병원 간호사와 요양보호사의 노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비교 연구	박주화, 김계하
독일의 새 장기요양 평가판정도구 시안에 관한 고찰	남현주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부모자녀관계, 사회적 자본, 자아존중감: 통합연구방법의 적용	김현정, 최은영
영아가 있는 맞벌이 가구의 단시간 보육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정원, 도남희
베이비부머세대 여성의 취업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원석, 이진숙
학령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양육태도 유형: Q방법론적 연구	김명애, 남승희, 박은실, 박은아
청소년의 여가문화활동이 자기조절능력, 학업성취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의 학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차동혁, 옥선화
알코올중독자의 대인관계와 자살생각 간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아름, 전종설
중소 의료기관 종사자들의핵심자기평가와 셀프리더십이혁신행동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분석: 부산지역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김대원
기온과 지역특성이 말라리아 발생에 미치는 영향	채수미, 김동진, 윤석준, 신호성
폭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취약계층의 사망률 변화 분석: 서울을 중심으로	이나영, 조용성, 임재영

○ 제34권 제2호

논문제목	저자
국민연금 기금 거대화에 대응한 국민경제적 관점에서의 기금운용방안에 대한 고찰	김용하
한국 노년층의 여가활동 유형화 및 영향요인 분석	황남희
저소득 여성노인의 거주이동 경험에 관한 탐색적 연구: 마산시를 중심으로	하춘광, 김효순
노년기 장애와 지역사회환경의특성에 관한 연구	구본미
시설거주노인의 사회적 네트워크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인요양시설 외부 관계자원을 중심으로	강은나, 이민홍
변혁적 리더십과 집단문화가 요양보호사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진희, 장윤정
노인전문사회복지사의 임종케어의향에 미치는 영향연구	권성애, 박용순, 송진영
치매 가족의 자살 및 살인사건에 대한 신문기사 분석	김원경
장애노인의 주관적 건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조절효과	정덕진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제적 능력과 삶의 질: 구조방정식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한 정신건강 요인의 매개효과 검증	조용운, 조경훈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김정란, 김혜신
학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성역할 고정관념의 조절효과	좌현숙
청년층 대학생의 소비욕구와 기대결혼비용이 기대결혼연령에 미치는 영향	유계숙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 및 취업형태 결정요인	성혜영
내집단의 특성이 다문화 집단에 대한 수용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 통합적 갈등이론을 중심으로	오영삼, 남성희, 윤수경
Acculturation and Self-rated Health among Foreign Women in Korea	Lee Sunmin, Kim Doo-Sub
병원전 심정지 환자의 단계별 생존요인에 관한 연구	박일수, 김유미, 강성홍

○ 제34권 제3호

논문제목	저자
가구소득과 아동기의 건강 불평등	이용우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불평등 측정	김동진, 윤흰뫼, 이정아, 채희란
소득 수준에 따른 암검진 이용 형평성 연구: 집중지수와 집중지수 분해 방법을 이용하여	허종호, 황종남
당뇨병 유병률의 지역 간 변이 요인	김유미, 조대곤, 강성홍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중독 위험예측 모형	송태민, 송주영, 진달래
사행산업 장외발매소 이용자의 도박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준모, 김정진
담배규제 정책 쟁점별 국내 연구 현황 분석	이민진, 임성원, 이성규, 조홍준
의약품 사용평가(DUR) 사업의 미국 47개주 Medicaid 자료비교 및 정책적 함의 고찰	전하림, 박주희, 김동숙, 최병철
복지정책의 소득흐름에 관한 고찰: 사회계정행렬 승수분해 및 구조경로분석	노용환
주관적 만족도를 이용한 가구소비 규모탄력성 추정: 한국노동패널 만족도자료를 이용하여	김진, 황남희
아동의 정서학대 경험 수준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검증	김자영
광주·전남지역 대학생의 문화개방성, 고정관념 및 차별, 상호교류 행동의지의 관계구조에 관한 연구	홍유진
중장년층 1인 가구의 사회활동 참여:다인 가구와의 비교	이병호
중년기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의 은퇴기대와 노후준비: 충남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남, 한정란
노인의 독거여부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연구	김예성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노인의 자살 생각 유발변인	이현경, 김미선, 최승순, 최만규
반연령주의적 문화 실천으로서의 노년 연구: 고령화시대의 노년 연구에 관한 제언	정진웅
SERVQUAL모형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서비스의 품질과 서비스 기관의 영향에 대한 연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박수지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및 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를 중심으로	전종설, 심혜선, 신선아

○ 제34권 제4호

논문제목	저자
OECD 복지국가 지속가능성의 다차원적 평가와 지속가능 유형별 복지정책의 특성	석재은
건강보험료 부과형평성 측정에 관한 탐색적 연구: Palma 비율의 응용을 중심으로	남재욱
Long-Term Care Insurance and Health Care Financing of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Shin, Jaeun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이웅, 임란
지역사회 영유아 지원서비스가 어린이집 충족률에 미치는 영향	유재언
가임기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형태가 출산 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최효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경제적·심리적·관계적 특성이 결혼만족도 및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손정연, 한경혜
『8만 시간 디자인』공모전 기록물 분석을 통해 본 백세시대 노인의 노후에 대한 기대와 계획에 관한 연구	김유진
노년기 노동시장 참여변화 궤적과 삶의 만족도	백옥미
초고령 노인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응방식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이인정
영구임대주택 남성독거노인의 우울증과 자살충동: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용운, 한창근
탈북 1인 가구의 남한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김현아, 조영아, 김요완
다문화가족 외국인 배우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지 및 이용 결정요인	손병돈
사회적 미션조직으로서 의료기관의 단계별 성과분석	김소희, 이견직, 정윤
패널자료를 이용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과 수익성 관계 분석: 의료급여환자 중심으로	양종현, 장동민, 명성민
집합적 효능과 건강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임훈민, 김중백
사업장 폐업으로 인한 실업이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패널(2003-2012년) 분석	최요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청소년의 흡연행태 변화	조경숙, 윤장호
중년여성의 문제음주수준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자아존중감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송진영
카지노 이용자들의 자살에 대한 심리적 부검 연구	강준혁, 이근무, 이혁구

보건복지포럼 Health-Welfare Policy Forum

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로서 월간으로 발행합니다.

호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월호 통권 207호	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최병호)	**2014년 보건복지 정책 방향** ·건강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신현웅, 여지영)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상영, 강희정) ·빈곤층 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중심으로(김미곤)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박세경) ·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이삼식) ·노인복지정책의 현황과 과제: 사회참여활동과 가구형태변화를 중심으로(정경희) ·나라살림과 복지재정 운용(박인화)	·한국의 아동정책 지표(전진아, 오혜인) ·보건복지 정보화 성과 계획 현황 및 개선방향(최정아)	·국민이전계정의 국제 연구 현황과 향후과제(황남희) ·미국 의료의 질 보고서와 시사점(강희정)
2월호 통권 208호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과 지역사회복지 계획의 내실화 (정홍원)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전략과 방향(김보영)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의의와 제3기 계획 수립 방안(정홍원, 최환)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관한 논의(이준영)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욕구조사(이소영) ·지역사회복지계획 평가(엄태영)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 제도 추진현 황및 향후 확대방향(정기혜) ·신중년층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마음 챙김의 긍정적 효과(박지숭)	·일본의 유치원(幼稚園)과 보육소(保育所) 통합 현황과 시사점(조성호) ·독일의 식품위기관리 지침(김정선, 김명옥)
3월호 통권 209호	'증세 없는 복지' 딜레마의 대책은 사회복지 기술 (양수길)	**미래 복지·기술 융합** ·미래 복지·기술 융합을 보는 세 가지 관점: 과학기술의 수단적 측면, 복지재정 그리고 적정기술(유근춘) ·복지-기술 연계의 조건(서지영) ·복지기술 융합의 도전과 과제: 정보통신기술을 중심으로(박세경) ·의료분야에서의 정보기술 융합연구 동향과 시사점(이태희, 정영철) ·보건의료기술의 혁신과 확산방안 모색(김대중)	·노후준비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방향(김재호) ·2013년 음식점 위생등급 시범평가 결과 및 성과평가(정기혜)	·모자보건 ODA 동향과 국제사회의 활동 전략(황나미) ·미국의 최신 나트륨 저감화 전략 분석(윤시몬)
4월호 통권 210호	우리나라 건강 불평등 연구와 정책의 과제 (강영호)	**한국의 건강 형평성 현황과 과제** ·한국 여성의 전반적 건강수준의 차이: 기대수명, 건강인식 및 활동제한 중심으로(김남순, 김유미) ·한국 성인의 성별 정신건강 수준 차이: 우울을 중심으로(전진아) ·미국의 건강 불평등 지표와 시사점(이소영) ·우리나라의 건강 형평성: 현황과 과제(김동진)	·위험사회에 대한 국민의식: 한국사회위험지수 분석 (김미숙, 김상욱, 신승배)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강희정)	·호주의 Life Saving Drugs Program 운영 현황과 시사점(박실비아, 채수미) ·일본의 빅데이터 프라이버시 보호방안(송태민)

호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5월호 통권 211호	가족의 변화를 있는 그대로 지원 (조진우)	**가족안정과 사회적 지원**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김유경) ·기혼자녀의 비동거부모와의 접촉 및 상호지원(김승권) ·가족관계 만족도의 특징과 사회적 함의(박종서, 이지혜) ·노인의 가족 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이윤경)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현황과 개선과제(김혜련, 여지영) ·우리나라의 금연정책 통합지수(정영호, 고숙자)	·싱가포르의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현황과 시사점(신윤정) ·영국 NICE 2007/2014 개인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지침(탁지연, 이성규)
6월호 통권 212호	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이의경)	**의료기술평가와 보험급여** ·보건영역 근거활용에 필요한 지식확산체계: 의료기술평가 중심으로(김남순) ·기술변화에 따른 의약품 평가와 급여제도의 동향(박실비아) ·치료재료 평가와 급여의 발전방향(배은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현황과 발전방향(이선희)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운영실태(정영철)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소득 및 자산빈곤 실태와 정책방안(이주미, 김태완)	·OECD 국가들의 공급자 지불제도 동향과 시사점(강희정) ·호주의 보건복지관련 통계서비스 및 METeOR (Metadata Online Registry) 운영(이연희)
7월호 통권 213호	초저출산에 대처하는 국가적 대책이 시급하다 (최병호)	**초저출산 현상과 인구전략** ·초저출산과 향후 인구 동향(이삼식)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조성호) ·고령임신 현황과 정책방안(이소영) ·인구 대응을 위한 가족 정책의 전략(신윤정) ·저출산 대응을 위한 보육정책 현황과 과제(김은정) ·저출산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상림)	·우리나라 식품업종 분류 현황 및 개선 방향(정기혜) ·한국여성의 체중 관리: 비만과 저체중(박은자, 김남순) ·소셜빅데이터를 활용한 보건복지정책 동향 분석(송태민)	·독일 고용센터 사례와 고용-복지 통합 정책에 대한 함의(이현주) ·일본의 아동보호체계간 연계성 고찰: 동경도 아동가정지원센터와 아동상담소를 중심으로(김미숙)
8월호 통권 214호	건강영향평가의 정책적 의의 (권덕철)	**건강영향평가의 적용과 과제** ·건강도시의 건강영향평가 적용 및 추진방안(박윤형) ·건강영향평가 제도화의 과제: 지방자치단체 건강영향 평가 시범사업을 중심으로(서미경) ·환경부의 건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과 전망(이영수) ·신체활동증진관련 건강영향평가의 적용방안(고광욱)	·우리나라의 회피가능 사망 분석(정영호) ·노인돌봄서비스 관련 현행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이선희)	·주요 OECD 국가의 사회지출과 사회적 성과(원종욱, 최요한) ·최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동향(조성호) ·무엇이 '삶의 질'을 결정하는가? OECD 'Better Life Index'를 활용한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및 국제비교(김광석)
9월호 통권 215호	공정한 소득분배, 어렵지만 가야할 길 (박능후)	**소득불평등 추이와 쟁점** ·빈곤 · 불평등 추이 및 전망(김미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 및 조세부담 · 재정지출 수혜 분포(성명재) ·노동시장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이병희) ·산업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강신욱)	·보육시설의 지역별 공급현황 및 정책과제(김은정) ·장애인의 주거 재난안전 실태 및 정책과제(이연희)	·영국의 인구 변동과 정책 동향(이삼식, 최효진) ·음주정책통합지표와 OECD 국가간 비교(정영호)

호	권두언	이 달의 초점	정책분석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0월호 통권 216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정책 방향 (김동배)	**고령화 대응 정책의 성과와 향후과제** ·노인의 특성변화와 정책과제(정경희) ·노후소득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김재호, 이선희) ·건강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선우덕) ·사회참여 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경제활동을 중심으로(강은나) ·고령친화 환경부문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황남희)	·사회서비스 수요 · 공급의 지역간 격차와 접근성 이슈에 관한 탐색적 접근(박세경) ·응급의료 만족도 실태와 개선방향(오영호)	·독일장기요양 질 관리 체계의 동향과 시사점(유근춘) ·독일장기요양 질 관리 체계의 동향과 시사점(유근춘)
11월호 통권 217호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 과제 (조흥식)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실태와 정책과제(김성희)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24시간) 현황 및 과제(황주희) ·중증장애인을 위한 제도 현황과 정책방향: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의 다양성의 필요성(변경희)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김동기)	·돌봄서비스 근로자 임금체계 구축과 추진과제(이철선) ·저출산시대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위한 산전관리 내실화(이난희)	·프랑스 및 독일의 간호인력 활동 동향과 시사점(황나미 김대중) ·일본 신의약품의 시판 직후조사제도 현황과 시사점(박은자) ·유럽연합회원(EU) 28개국 및 노르웨이, 스위스의 학교식품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의 학교식품정책 개선방향 모색(윤시몬)
12월호 통권 218호	국민통합,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광옥)	**국민통합의 현안과 과제** ·국민통합의 개념과 필요성(정해식) ·국민통합의 여건 및 실태 진단(여유진) ·국민통합의 현안과 과제: 노동시장과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양재진) ·정부의 국민대통합 종합계획(최홍재)	·시 · 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이상림) ·시 · 도단위 인구이동 유형과 지역 고령화(이상림)	·미국 WIC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이소영) ·스위스 사회과학 데이터 포털(DARIS)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오미애) ·미국 WIC 사업의 현황과 시사점(이소영) ·스위스 사회과학 데이터 포털(DARIS)의 주요내용 및 시사점(오미애)

보건·복지 Issue & Focus

주요 정책고객 및 고위 정책결정자를 대상으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이슈를 제공하여 국가 사회정책에 기여하고자 주간으로 발행 합니다.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222호(2014-1)	보험약가 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박실비아	2014-01-03
제223호(2014-2)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특성 및 시사점	김미곤	2014-01-10
제224호(2014-3)	우리나라 다차원적 빈곤의 현황과 과제	남상호	2014-01-17
제225호(2014-4)	신종담배규제정책의 과제	최은진	2014-01-24
제226호(2014-5)	기초연금 도입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원종욱, 우해봉, 신화연, 백혜연	2014-02-07
제227호(2014-6)	식품규제 정책 변화 추이와 규제합리화 방향	정기혜	2014-02-14
제228호(2014-7)	의무지출과 복지재정	박인화	2014-02-21
제229호(2014-8)	OECD Well-Being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 현황	신윤정	2014-02-28
제230호(2014-9)	정부 3.0과 빅데이터: 보건복지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오미애	2014-03-07
제231호(2014-10)	보건복지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발전 방안	이야리	2014-03-14
제232호(2014-11)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의식 이해	이현주	2014-03-21
제233호(2014-12)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	황남희	2014-03-28
제234호(2014-13)	사회보장 장기재정추계와 정책과제	신화연	2014-04-04
제235호(2014-14)	중증질환자의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이 주는 시사점: 지역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중심으로	이수형	2014-04-11
제236호(2014-15)	은퇴전환기 중고령자 특성과 삶의 만족변화	강은나	2014-04-18
제237호(2014-16)	박탈지표를 이용한 아동빈곤집단의 특성과 정책과제	정은희	2014-04-25
제238호(2014-17)	소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위험 요인 예측: 청소년 자살과 사이버따돌림을 중심으로	송태민	2014-05-02
제239호(2014-18)	역(逆)피라미드형 인구구조의 도래와 연금제도의 미래	우해봉	2014-05-09
제240호(2014-19)	통일 대비 보건의료분야의 전략과 과제	황나미	2014-05-16
제241호(2014-20)	복합 정신질환(Comorbidity)의 현황과 정책과제	전진아	2014-05-23
제242호(2014-21)	사회보장에서의 세대 간 형평성 현황과 전망	유근춘	2014-05-30
제243호(2014-22)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상태가 빈곤결정에 미치는 효과	김재호	2014-06-06
제244호(2014-23)	건강한 공공정책을 위한 건강영향평가 적용의 과제: 미국의 제도를 중심으로	최은진	2014-06-13
제245호(2014-24)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의 의미 및 향후 발전방향	이윤경	2014-06-20

호	제목	저자	발행일
제246호(2014-25)	한국인의 가족가치관과 사회정책 방향	김승권	2014-06-27
제247호(2014-26)	우리나라의 건강수명 산출	고숙자	2014-07-04
제248호(2014-27)	보육시설 유형별 서비스 수준 분석 및 개선방안	김은정	2014-07-11
제249호(2014-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이 사회적 신뢰에 미치는 효과	임완섭	2014-07-18
제250호(2014-29)	사회서비스 산업과 사회적경제의 상생	이철선	2014-07-25
제251호(2014-30)	이상(異常)출산의 동향과 정책과제	이상림	2014-08-01
제252호(2014-31)	중증장애인의 실태와 과제	김성희	2014-08-08
제253호(2014-32)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창출능력 국제사례와 시사점	유근춘	2014-08-15
제254호(2014-33)	복합건강위험요인과 만성질환의 네트워크 분석	정영호	2014-08-22
제255호(2014-3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운영 성과 및 확대 개편에 따른 정책과제	최현수	2014-08-29
제256호(2014-35)	임산부의 고령이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	이소영	2014-09-05
제257호(2014-36)	OECD 국가의 사망원인별 사망률 비교	장영식	2014-09-12
제258호(2014-37)	가족변화양상과 정책함의	김유경	2014-09-19
제259호(2014-38)	유럽연합 및 회원국의 식품안전관리 사례 및 시사점	김정선	2014-09-26
제260호(2014-39)	노인장기요양시설 평가결과와 시사점	선우덕	2014-10-03
제261호(2014-40)	영아사망과 불명확한 사인	최정수	2014-10-10
제262호(2014-41)	국민연금 장기 재정 안정화를 위한 보험료율 상한 제안	백혜연	2014-10-17
제263호(2014-42)	사회적경제와 지역재생	노대명	2014-10-24
제264호(2014-43)	의료기술의 시장도입 결정과 의료기술평가의 발전방안	박실비아	2014-10-31
제265호(2014-44)	복지국가, 사회신뢰의 관계 분석과 시사점	정해식	2014-11-07
제266호(2014-45)	치료를 통해 회피할 수 있는 사망률(Amenable mortality)과 의료비 지출의 지역별 분포	신정우	2014-11-14
제267호(2014-46)	한국과 일본 미혼인구의 결혼 및 자녀양육에 대한 태도	조성호	2014-11-21
제268호(2014-47)	아동의 삶의 질 현황과 정책과제	김미숙	2014-11-28

V

2015년 연구사업

1. 2015년도 사업목표
2. 연구사업 운영방안
3. 2015년도 사업개요

1. 2015년도 사업목표

총괄목표	- 사회정책의 국가비전 선도
세부목표	-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과 의료이용 및 국민의료비의 효율화 · 합리화 -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 - 효율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과학적 및 실증적 근거 기반의 연구 추진

2. 2015년도 연구사업 운영방향

▣ 의료보장 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안전망 확충과 의료이용 및 국민의료비의 효율화 · 합리화

- 의료보장 사각지대 관련 의료비 및 서비스 지원 등 제반 정책을 재검토하고 사각지대의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지원방안 마련
-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비합리적 의료이용의 문제를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마련
- 의료서비스의 질(quality) 및 형평성(disparity)에 대한 국가 기간통계를 생산 ·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보건의료시스템 개편을 위한 정책적 근거(evidence) 확보
- 보건의료 수요변화와 HT의 발전 등에 따른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새로운 보건의료시스템과 보건의료산업의 발전방향 모색
-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을 평가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보건의료 인력의 자격관리 합리화 방안 마련과 국민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분석과 대응방안 마련

▣ 국민의 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종합적인 사회복지정책 수립

-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지속하고, 정책 흐름을 점검하고 정책을 기획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의 지원체계 구축
-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초연구의 추진

- 사회정책의 지속적 혁신을 위한 국제적 협력
- 사회정책의 집행 기반 강화

▣ 효율적인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과학적 및 실증적 근거 기반의 연구 추진

-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기초자료의 지속적인 생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과 정부 간 소통 원활화 도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간 유기적인 연계성 강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변동에 대응한 국가인구전략 마련

3. 2015년도 사업개요

▣ 기본연구사업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 의료이용 합리화를 위한 실태 분석과 제도 개선방안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비합리적 의료이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원인과 기전을 분석하여 수요자, 공급자 측면을 포괄하는 개선방안 제시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㊽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2.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 개선방안	보건의료인력의 연수교육실태조사 및 연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력의 평생교육제도로서의 연수교육제도의 개발과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 제공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3.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보건의료산업 정책과제	정부가 추진한 보건의료육성산업정책에 대한 평가와 미래지향적 산업발전방안 제시
	⑨ 보건·고령친화산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
4.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 격차 모니터링	우리나라의 건강불평등 측정 및 모니터링을 위해 선정한 지표의 재검토 및 세부지표 생산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해 중재도구 개발을 통해 정책적 개입 가능성 제고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㊿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5.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성과와 과제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과에 대한 국내 추세 변화와 국제 비교 분석을 통해 국가적으로 의료의 질을 관리하는 정책의 성과 평가와 시스템 개선의 근거 및 방향을 제시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6. 보건의료 공급체계 재설계를 통한 국민의료비 합리화 방안	국민의료비 합리화를 위하여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재설계하는 정책 방안 모색
	㊶ 건전재정 기조 정착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7.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의료 및 사회서비스 연계 방안	기존의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말기 암환자 중심에서 기타 만성질환자를 포함하는 포괄적 제도로 확대 하고, 병원중심의 의료모델에서 지역사회중심의 의료사회적 모델로의 전환 계기 마련하는 한편 호스피스의 통합적 사회보장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지역단위 형평적 접근모델 구현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8. 주요 기초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 평가	소득보장제도 전반 및 현안에 대한 효과성 평가 틀 구축과 기초 소득 보장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현안을 파악하고 제도 개선 및 개편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
	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㊼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9. 돌봄·보건의료 연합서비스 (Joined-up Services) 공급 모형에 관한 전망과 과제	지역사회내 노인, 장애인을 둘러싼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분절적 제공형태와 양상을 파악하고, 수요자 및 공급자 측면에서 기존의 서비스 제공방식의 문제점과 성과를 진단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통합의 필요성과 이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도출
	㊼ 편안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 ㊿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편익 증진 ㊾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10.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부양체계 변화전망과 공사간 부양분담방안	급속한 산업화 및 후기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족부양체계의 약화에 대비하여 사회변동에 따른 가족부양관 및 가족부양체계의 변화를 진단하고 전망하여 가족·사회·국가 간 균형 있는 부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기반 마련
	㊹ 건강한 가정 만들기 ㊺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㊻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㊻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11. 공공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와 정책적 함의	사회복지 공공 전달체계의 역사와 현황을 각 시기의 이념이나 정치, 집행하는 정책 자체의 내용, 공공행정 환경과 연결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각 시점 별 원론적 쟁점-전문화와 일반화, 분권, 민영화, 규모의 경제, 공적 사례관리의 차별화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문제의 근원 파악
	㊸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12.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 연구: 스웨덴 & 프랑스 & 미국 편	최근 공공부조제도 개편과정에서 연구 및 정책수요를 고려한 기초연구자료 구축을 목적으로 프랑스, 스웨덴, 미국의 공공부조제도를 심층분석
	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㊽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3. 사회보장 역할분담 구조 변화와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사회에서 사회보장의 각 주체의 역할분담 구조를 시기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의 주체별 재정적 책임성 수준을 비교국가적 관점에서 진단하여 변화 가능성 고찰 및 국가의 역할에 대한 복지인식의 변화 확인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㊼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4. 시간제 일자리 확산이 소득 불평등과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시간제 일자리 확산의 영향을 분배적 측면에서 분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시간제 관련 정책 제시
	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 운영 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㊼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15. 사회보장재정 재구조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보장 환경을 전망함과 함께,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환경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사회보장 중장기 전략 수립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㊶ 건전재정 기조 정착 ㊷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㊼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6. 사회보장재정과 경제 선순환 국제비교연구	인구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복지수요 증폭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복지지출의 증가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사회보장재정과 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는 관계 규명
	㊶ 건전재정 기조 정착
17. 공·사적 연금의 수급권 구조와 노후소득보장 수준 분석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수급률과 급여율을 동시적으로 분석하여 공·사연금 체계의 효과성을 경험적으로 검토
	㊼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8.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 전망과 재정평가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정책변화를 동일한 분석틀에서 사회보장 재정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구축하고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에 따라 격년마다 시행하는 장기재정추계를 위한 기반 마련
	㊶ 건전재정 기조 정착 ㊷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19. 사회복지법인의 재정운용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사회복지법인이 민간복지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고 아울러 모금과 배분측면의 역량강화 방안을 제시
	㊿㊄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㊶ 건전재정 기조 정착
20. 주민복지욕구조사를 활용한 시군구 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모형 산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주민복지욕구조사 결과를 전국단위로 취합하고, 이를 행정자료 및 복지자원현황 데이터와 결합하여 지역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 모형을 산출
	㊷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㊾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㊿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21. 수시연구사업	보건복지 부문의 환경변화에 따른 긴급정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긴하고 우선 순위가 높은 정책과제 선정 수행

▣ 일반/협동연구사업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 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전반에 걸친 정책 수립, 모니터링, 평가·환류 등에 대한 과학적 및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과제 및 기반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
	㉙ 교육비 부담 경감 ㊺ 건강한 가정 만들기 ㊻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㊼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㊽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㊾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㊿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강화 (62) 행복한 임신과 출산 (63)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64)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 확대(0~5세) (65)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72)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계 구축 (73)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만들기
2.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한국사회의 사회심리적 불안의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	사회심리적 불안에 대한 실태 및 원인을 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불안에 따른 사회심리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함. 이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정책적 대안 수립
	(89)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110) 사회 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3.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대기환경변화 요인에 따른 생활환경내 라돈의 사회적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사회 취약 계층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관리사업의 건강결정요인 분석과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건강영향평가의 적용 방안을 마련
	㊸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㊽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99)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102)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115) 지방분권 강화 및 시민사회·지역공동체 활성화
4.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생애주기별 소득·자산·소비 연계형 복지모형 구축	소득-자산-소비의 추이, 구조, 특성의 종합적 분석과 선진 복지국가와 비교를 통해 한국형 복지국가 모형 설계의 체계와 방향성 모색
	㉗ 주거안정 대책 강화 ㉘ 서민금융부담 완화 ㉙ 교육비 부담 경감 ㉚ 통신비 부담 낮추기 ㊻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52) 일을 통한 빈곤탈출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5.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	사회통합을 저해 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세대갈등에 초점을 맞추어, 세대갈등 수준을 파악한 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함.
	㊸ 국민중심의 복지 전달체계 개편 ㊿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
6. 아시아 각국의 복지제도 비교 연구 : 소득보장체계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국의 소득보장체계를 공적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로 구분하여 비교 분석
	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7.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센터 운영	사회복지의 실질적 성과가 도출되는 기반으로서 지역사회에 주목하여, 지자체 복지정책의 개발, 추진, 평가 등 일련의 과정을 고도화할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통하여 지역의 균형적 복지 발전에 기여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㊷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 농어촌 건설
8.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 관리 및 운영	조사기획(설계), 자료수집, 자료처리, 자료활용(제공) 측면에서 보건복지 통계정보의 통합적 관리 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활용 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
	㊹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㊵ 고부가가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㉞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9.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아동안전 및 식품안전 전략구축 방안	아동의 주변환경 및 각종 활동에서의 안전실태 및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통해 대응의 적시성을 제고하여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응 전략과 개선안 모색
	㊸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㊼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㊽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현 ㊽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 ㊸ 총체적인 국가재난관리체계 강화 ㊹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 ㉀ 공공갈등 관리시스템 강화 ㉞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 3.0 구현
10.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혼·임신·출산·자녀양육·모자보건·가족생활·가족가치관 등 제 영역의 기본지표 수준 측정, 시계열적 추이 분석, 경제사회현상 및 정책과의 연관성 분석 등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시의적절한 대책 강구
	㊺ 건강한 가정 만들기 ㊾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㊷ 행복한 임신과 출산 ㊸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㊺ 여성 경제활동 확대 및 양성평등 확산

과제명	개요 관련 국정과제
11.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 (총괄)	외부 연구자 및 정책관련 담당자들에게 한국복지패널자료를 공개하고, 다양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대회 보고서 작성을 통해 패널 조사자료의 학술적·정책적 활용도 제고
	㊸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영역별 맞춤형 급여체계 구축 ㊺ 건강한 가정 만들기 ㊻ 청소년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지원 ㊼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12.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국민의 의료비 분석,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자의 이용행태 및 공급자 특성분석, 보건복지관련 지표생산을 통해 국민의료비 산출 및 변화양상 추적, 의료비의 흐름(인과관계)을 분석, 보건의료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동태적 보건복지관련 지표 생산, 의료비 지출향상과 패턴에 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㊾ 건강의 질을 높이는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축
13.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현실화	업무관련시스템 기능개선 및 신규 개발과 시스템보안 및 정보보안관련 솔루션 도입 등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효과적 지원 및 안전성 확보 서비스 향상
	-

▣ 연구관련사업

과제명	개요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외국의 보건복지 정책 및 제도 사례에 관한 국내 전문가의 지식축적과 우리나라의 보건복지 제도 현황에 대한 외국 이해관계자의 관심도·이해력 제고
국민연금 기금관리 포럼 운영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 및 금융, 연금정책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필요한 정보를 교류하고 의견을 교환하면서 기금운용 전반의 이해를 높이고 발전방향 논의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정책개발을 위해 이론적, 실증적 뒷받침을 위해 복지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성과를 공유함으로써 학문적 발전과 정책적 기여도 높일 수 있는 포럼 운영
2015년 빈곤통계연보	2006년도부터 시작된 선행연구에 2013년도 통계를 추가함으로써 선행연구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사회경제여건변화에 조응하는 통계자료(중간소득계층비율, 근로빈곤층 등)를 제시하여 우리나라 빈곤과 불평등 등의 소득분배 실태를 횡단면, 종단면으로 이해하는데 기여
소셜 빅데이터 기반 보건복지 이슈 동향 분석	소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연도별 보건복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보건복지 정책의 수요를 예측하여 수요자 맞춤형 보건복지 정책 제공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비용 절감

▣ 연구지원사업

과제명	개요
연구기획	기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맞는 연구사업의 전략적 기획·조정,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연구성과물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관리 및 평가 등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가치 및 책임성 강화
출판물 발간 및 홍보	연구원에서 수행되는 연구활동 결과물의 생산 및 배포 등을 통한 연구성과의 확산 및 연구성과물 출판을 통한 기관홍보의 극대화 및 대국민 보건복지정보 서비스 제공
전산운영	연구원에서 창출된 지식정보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국민서비스 확대 실시를 위한 IT 관련 인프라 확보 및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관리 및 운영
학술정보운영	보건, 복지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자료를 수집, 정리, 가공하여 새로운 지식정보 제공 및 정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웹기반의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의 정보와 최상의 정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 사회조사 운영	조사운영을 합리화하고, 사회조사 인프라 개선 로드맵 현실화하는 한편 조사통계업무 선진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강화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KiHASA

KiHASA

Ⅵ

부 록

1. 2013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① 기본연구
   ② 수시연구
   ③ 일반사업
   ④ 협동연구
   ⑤ 수탁연구
2. 기타 간행물
3. 연구위원 현황
4. 도서관
5. KIHASA 웹사이트

2014년도 수행 연구과제 현황

■ 기본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발전방향	2014.02.01.~2014.10.30.	김남순
한국 의료의 질 평가와 정책과제: 한국 의료의 질 보고서	2014.02.01.~2014.10.31.	강희정
한국의 건강불평등 지표와 정책과제: 한국의 건강불평등 보고서	2014.01.01.~2014.12.31.	김동진
건강보험 가치기반 성과보상 지불제도(VBP) 도입방안	2014.01.01.~2014.10.31.	신현웅 황도경
보건복지 빅데이터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2014.01.01.~2014.10.31.	송태민
병원산업의 성장과정 분석과 발전방향	2014.02.01.~2014.11.30.	김대중
신의료기술의 도입과 확산에 관한 정책분석	2014.02.01.~2014.11.30.	박실비아
(총괄8) 한국의료전달체계의 쟁점과 발전방향	2014.02.01.~2014.11.30.	윤강재
・병상자원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환자이동과 의료자원 분포를 고려한 진료생활권 분석		이수형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의 경향과 과제		윤강재
(총괄9) 생활습관병 실태와 대응방안	2014.01.01.~2014.12.31.	정영호
・생활습관병 감소 전략을 위한 건강의식, 건강행태, 건강수준 경로분석		정영호
・한국 성인의 복합질환 현황과 이환패턴 분석 연구		전진아
・생활습관병 치료순응 현황 및 개선방안		박은자
각국 공공부조제도 비교연구: 일본&영국 편	2014.01.01.~2014.12.31.	노대명 이현주
고용.복지 친화적 재정징출정책 연구	2014.01.01.~2014.10.31.	남상호 이철선
사회서비스업의 산업적 성장가능성 진단 연구	2014.02.01.~2014.10.31.	박세경
장애노인 대상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2014.02.01.~2014.11.30.	김성희 황주희
가족의 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가족유형과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2014.02.01.~2014.11.30.	김유경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장기재정전망과 재정평가	2014.01.01.~2014.12.31.	신화연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2014.01.01.~2014.10.31.	고제이
보건복지 정책현황과 과제	2014.04.01.~2014.12.31.	신영석
미래위기 대응을 위한 해외 사례연구	2014.04.01.~2014.12.31.	유근춘

■ 수시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우리나라 복지레짐 전망과 부담수준에 관한 연구	2014.01.20.~2014.05.31.	고제이
기초연금 도입과 노후생활안정 효과분석	2014.01.01.~2014.05.31.	원종욱
제3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2014.03.10.~2014.10.31.	정기혜
사회대타협을 위한 사회협약 국제사례 연구와 시사점	2014.04.01.~2014.06.30.	유근춘
의료산업 선진화를 위한 현안과 대응방안	2014.04.01.~2014.08.31.	김대중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2014.06.01.~2014.12.30.	강신욱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현황과 체계화 방안 연구	2014.10.06.~2014.12.31.	류정희
보건복지 국정과제 추진현황과 정책과제	2014.11.01.~2014.12.31.	신영석
중앙-지방 간 사회복지 재정책임 정립방안 연구	2014.11.01.~2014.12.31.	고제이

■ 일반사업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2014년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9년차).총괄	2014.01.01.~2014.12.31.	이삼식
· (총괄)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위험과 대응전략	-	이삼식
-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원인과 정책과제	-	이삼식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의 인구사회의 인구자질에 관한 연구	-	이소영
- 초저출산·초고령사회 위험과 대응전략: 초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	-	강은나
-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	김재호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에 따른 거시경제 및 노동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	경제시스템 분석학회
- 초저출산·초고령사회와 산업구조	-	이진면
- 초저출산·고령사회 위험과 대응방안 -금융, 주택, 국방, 사회갈등-	-	유경원
- 농촌의 중장기 인구변화에 대응한 지역 활성화 과제	-	성주인
- 초저출산·고령사회와 교육	-	차우규
- 초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여성의 사회집단별 위험과 대응 전략	-	장미혜
-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II): 정릉3동·영등2동·소태면 사례을 중심으로	-	오영희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제비교 공동 연구	-	이심식(EWC)
-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인구자질에 대한 연구	-	조성호
- 동아시아 국가의 다문화가족 현황 및 정책 비교연구	-	변수정
· (총괄)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녀 양육 환경 개선 방안	-	신윤정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 저출산 정책 확대에 따른 자녀 양육 행태 변화 분석	–	신윤정
– 출산 및 양육의 사회·문화적 환경 분석	–	박종서
– 자녀양육 실태 및 돌봄지원 서비스 개선방안: 맞벌이 가구를 중심으로	–	김은정
· (총괄)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재정	–	원종욱
– 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	우해봉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조세수입 전망과 사회복지 지출부담 분석	–	고제이
–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사적 연금자산의 전망 및 운용전략	–	원종욱
– 인구구조 변화와 공·사적이전 분담실태 연구	–	황남희
–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 과제	–	정경희
· (총괄)노인 건강상태주기별 보건사업의 대응전략	–	선우덕
– 노인 보건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	선우덕
– 생애말기 케어의 사회적 가치 분석	–	고숙자
– 건강위험요인과 사망의 관련성에 대한 종단연구	–	김혜련
– 건강영향평가 사업 운영	2014.01.01.~2014.12.31.	최은진 서미경
– 사회정신건강연구센터 운영: 4대 중독 및 자살현황과 대응 방안(총괄)	2014.01.01.~2014.12.31.	이상영
· 약물 및 알코올 중독과 대응방안	–	정진욱
· 인터넷 및 도박 중독현황과 대응방안	–	송태민
· 자살위험도 결정요인 및 지역간 격차 요인분석	–	이상영
사회서비스정책 비교 연구	2014.01.01.~2014.12.31.	박수지
사회통합 정책영향평가 사업(총괄)	2014.01.01.~2014.12.31.	여유진
·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연구: 사회통합과 국민행복을 중심으로	–	김미곤
· 사회통합정책영향평가 지표개발 기초연구	–	정해식
· 사회갈등 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정영호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센터 운영	2014.01.01.~2014.12.31.	김승권
·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김승권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	2014.01.01.~2014.12.31.	여유진
보건복지통계정보 통합관리 및 운영(총괄)	2014.01.01.~2014.12.31.	오미애
· 보건복지통계정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오미애
· 보건복지통계정보 생산 및 활용 촉진을 위한 마이크로데이터 통합 연계 방안	–	오미애
한국복지패널 구축 및 운영(총괄)	2014.01.01.~2014.12.31.	이태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 2014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	이태진
한국의료패널 구축 및 운영	2014.01.01.~2014.12.31.	최정수
·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만성질환, 임신·출산, 보건의식행태	-	최정수

■ 협동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가임기 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2014.01.01.~2014.12.31.	이상림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산부인과 이용 및 인터넷 이용 환경 개선		이상림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지원 방안: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김동식 (여정연)
복지와 기술 융합(W-Tech)체계 구축 연구	2014.01.01.~2014.12.31.	유근춘

■ 수탁연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2014년한국의의료패널구축및운영	2014.01.01.~2014.12.31.	최정수
2014년도개인정보통합관제센터위탁운영	2014.01.01.~2014.12.31.	정영철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 연구	2014.01.09.~2014.06.09.	김은정
제1차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수립연구	2014.01.10.~2014.11.28.	이상영
통일시대 준비를 위한 분야별 미시적 종합연구	2014.01.13.~2014.06.30.	황나미
2014년OECD등국제기구통계생산및관리	2014.01.13.~2014.06.30.	장영식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4.02.01.~2014.11.30.	박은자
2013년기준한국의사회복지지출	2014.02.10.~2014.12.10.	고경환
2015년도유형별환산지수	2014.02.18.~2014.08.17.	신현웅
2013년기준국민의료비추계및국민보건계정	2014.02.20.~2014.12.10.	신정우
2014년도노인실태조사	2014.03.14.~2014.12.10.	정경희
건강보험 사기□부당 지출의 실태와 방지 방안 연구	2014.03.18.~2015.01.31.	신영석
장애종합판정체계제도 도입연구	2014.03.19.~2014.08.14.	김성희
복지와 고용의 연계실태 분석 및 정책적 함의	2014.03.21.~2014.11.28.	이현주
분야별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2014.03.24.~2014.08.13.	남상호
보건분야 글로벌 다자기구에의 전략적 참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연구	2014.03.25.~2014.12.12.	원종욱
2014년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성과평가	2014.04.01.~2015.01.06.	박세경
기후변화 취약성 저감기술 개발	2014.04.01.~2015.03.31.	이수형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2014.04.03.~2014.08.01.	김미숙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제3기서천군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2014.04.14.~2014.10.17.	김승권
저출산고령사회대응 중장기정책과제 개발연구	2014.04.14.~2014.11.28.	이삼식
동아시아 가족정책 비교연구	2014.04.16.~2014.12.15.	신윤정
협동조합의 사회서비스분야 참여 가능성 모색 및 방안연구	2014.04.17.~2014.09.16.	이철선
보건정책관리 다년간 연수과정	2014.04.20.~2014.05.03.	강유구
한국여성의 우울증과 만성통증에 대한 심층분석	2014.04.22.~2014.12.21.	김남순
제3차사회보장장기발전방향(09.~13)2013년도추진실적평가및5개년종합평가	2014.04.23.~2014.10.20.	정홍원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2014.04.23.~2014.10.20.	이삼식
2014년음식점위생등급제평가	2014.04.25.~2014.12.10.	정기혜
아동 및 청소년 비만예방 대책 마련 연구	2014.05.07.~2014.12.06.	김혜련
국내외 희귀의약품개발 및 환자지원제도연구	2014.05.09.~2014.11.08.	박실비아
복지전달체계 개편평가 및 확산마련 연구	2014.05.09.~2014.12.19.	이현주
위생서비스수준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2014.05.13.~2014.11.28.	정진욱
중국방문요양서비스(Home-helpservice)정책의현황과시사점:북경지역을 중심으로	2014.05.14.~2014.10.31.	선우덕
노인장기요양보험 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14.05.14.~2014.12.13.	선우덕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프로파일개발 연구	2014.05.15.~2014.11.30.	김정선
한약재 위해평가를 위한 사전기획 연구	2014.05.15.~2014.11.30.	김정선
2014년도사회보장제도모니터링연구	2014.05.20.~2014.11.28.	김승권
상대가치 총점관리 모형구축	2014.05.20.~2015.04.19.	신정우
아동보호체계 진단 및 개선 방안 연구	2014.05.21.~2014.12.12.	박세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실행 방안 연구	2014.05.21.~2015.02.27.	노대명
2014년도식품안전체감도조사	2014.05.23.~2014.12.20.	정기혜
고령사회대응을위한세대간경제의이해(국민이전계정을위한접근)	2014.05.26.~2014.12.23.	황남희
복지자원의 관리방안 연구	2014.05.27.~2014.11.28.	정해식
신설변경사회보장제도의협의조정을위한기준과절차연구	2014.05.28.~2014.11.28.	정홍원
2014년사회보장통계구축및관리	2014.05.29.~2014.12.10.	이태진 정해식
2014년장애인실태조사	2014.05.30.~2014.12.10.	김성희
산재근로자납골당(위령탑)건립타당성에대한연구	2014.06.01.~2014.11.30.	박종서
농촌지역사회복지수요 및 자원현황 분석연구	2014.06.11.~2014.10.10.	김태완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개발 연구	2014.06.13.~2014.11.28.	김미숙
2014년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현황평가및체감도조사	2014.06.13.~2014.11.30.	정영호
사회서비스업화를 위한 인력양성방안 연구	2014.06.23.~2014.12.20.	박세경
의료안심주택의 관리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014.06.23.~2015.02.02.	이수형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따른 노인돌봄서비스 개편방안 연구	2014.06.24.~2014.09.22.	정경희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입양기관 기능 및 지원체계 개편방안 연구	2014.06.24.~2014.11.20.	신윤정
노인복지정책 추진체계 현황분석 및 향후 발전 방안	2014.06.24.~2014.11.20.	정홍원
선택진료료 개편에 따른 의료질향상분담금 제도 시행방안 개발 연구	2014.06.25.~2015.01.25.	신영석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평가 및 인공수정 급여화 방안	2014.07.03.~2014.12.12.	황나미
사회복지시설 조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	2014.07.09.~2014.11.28.	김유경
재판상이혼및협의이혼에서의부모교육(자녀양육안내)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	2014.07.15.~2015.03.14.	이소영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방안 연구	2014.07.21.~2014.11.28.	여유진
나눔실태2014	2014.07.21.~2015.04.16.	장영식
공적연금 연계제도 활성화 방향 연구	2014.07.24.~2014.12.05.	윤석명
저소득노인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의 타당성 및 지원방안 연구	2014.07.25.~2014.11.28.	신현웅
사학연금 가입자수 추계모형 연구	2014.07.28.~2014.11.27.	이삼식
고령친화형식품의제도적시스템구축및경제/사회적지원방안연구	2014.07.30.~2014.11.30.	김정선
건강보험재정변동요인분석연구용역사업자선정	2014.07.30.~2014.12.19.	신현웅
빅데이터 분석기반의 위기청소년 예측 및 적시대응기술개발	2014.08.01.~2015.03.31.	송태민
2013년도저출산고령사회정책성과평가연구	2014.08.08.~2014.12.15.	이삼식
재난 발생시 취약계층 사회보장 대책	2014.08.20.~2014.12.05.	강신욱
제3기지역사회복지계획점검및시도지원방향설정을위한연구	2014.08.21.~2015.02.10.	정홍원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확충 정책 심층평가	2014.08.25.~2014.12.11.	김동진
포괄보조금 방식의 복지분야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2014.08.26.~2014.11.28.	정은희
2014년보건복지정책수요조사및분석	2014.08.28.~2014.11.25.	김미곤
사회보장 재정추계 기반강화 연구	2014.08.28.~2014.11.28.	신화연
약가 사후관리제도 합리화 방안 연구	2014.08.28.~2015.01.27.	박실비아
노인 요양서비스 사업군 심층평가	2014.09.01.~2015.02.27.	선우덕
실시간인구현황파악및전망과경제·사회현상의분석·예측을위한분산·병렬다차원인구마이크로시뮬레이션기술개발	2014.09.01.~2015.08.31.	이삼식
기초연금15년선정기준및제도개선방안연구	2014.09.04.~2014.12.10.	최현수
고령화 저성장 시대의 대한민국 지속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4.09.05.~2015.02.28.	원종욱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선행연구	2014.09.11.~2014.12.26.	임완섭
보건의료 진료경향 분석 콘텐츠 개발	2014.09.15.~2015.03.15.	신현웅
장애종합판정체계 모의 적용 연구	2014.09.25.~2014.12.23.	김성희
사회보장 통계데이터 관리 및 운영방안 연구	2014.10.02.~2014.12.10.	정영철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체계화 방안	2014.10.02.~2015.02.27.	김현경
제3차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수립	2014.10.02.~2015.04.19.	김동진
2014년복지욕구실태조사	2014.10.02.~2015.11.30.	이태진
아동친화적 아동보호 체계지원을 위한 정보관리 방안마련 연구	2014.10.06.~2014.12.19.	정영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4.10.14.~2014.12.12.	여유진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2014년지역복지정책평가결과및성과분석	2014.11.03.~2014.12.19.	김승권
2014년도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사업평가	2014.11.05.~2015.03.31.	오영희
사회보장사업 실태조사 및 유사 중복 제도의 조정방안 연구	2014.11.07.~2015.03.31.	강혜규
2014년도환자조사	2014.11.10.~2015.09.06.	정영호
인구정책50년성과정리연구	2014.11.14.~2015.05.12.	이삼식
음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알코올 정책 개발	2014.11.17.~2014.12.16.	정영호
제3차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중점과제의효과평가	2014.11.26.~2015.04.24.	정영호
진료받은내용 안내 제도 개선방안 및 예방교과 연구	2014.12.08.~2015.03.07.	신현웅
국민의료비 미래 추계	2014.12.09.~2015.06.05.	신정우
산후조리원 적정 운영기준 마련 연구	2014.12.10.~2015.07.07.	이소영
장기요양기관 적정 인력배치 기준 연구	2014.12.15.~2015.04.14.	강은나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14.12.17.~2015.06.17.	황도경
주요 연금 및 복지분야 장기재정전망 모형 구축 사업	2014.12.19.~2015.05.18.	신영석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재산 상관성 분석 연구	2014.12.24.~2015.05.23.	오미애
50+재단설립타당성검토연구	2014.12.26.~2015.03.25.	정홍원
국가중장기전략수립을위한작업반운영(인구복지분야)	2014.12.30.~2015.10.26.	원종욱
보건복지 분야 조사데이터 및 행정통계 통합 관리체계 구축방안	2014.12.30.~2015.10.26.	오미애 최현수

■ 연구관련사업

연구관련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책임자
해외사회보장제도 정보서비스	2014.01.01.~2014.12.31.	강유구
사회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2014.01.01.~2014.12.31.	최현수 강혜규
국민연금 기금관리 전문가포럼 운영	2014.01.01.~2014.12.31.	원종욱
통일한국 사회보장포럼 운영	2014.01.01.~2014.12.31.	유근춘
2014년 빈곤통계연보	2014.01.01.~2014.12.31.	임완섭

기타 간행물

■ Working Paper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Social Risk Factor Prediction Utilizing Social Big Data	송태민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in Koare: Past Trends and Main Determinants	여유진
Quality of Life of Middle Aged and Older Persons and Policy Initiatives	정경희
Equity in Health and Health Care Utilization of the Elderly in Korea –Istheincome–relatedinequalitymorepronouncedintheelderlypopulation?	김동진
Quality Analysis of Child Care Services using SERVQUAL and Study on Factors Effecting Intent to Recommend to Others and to Re–use	김은정
Effects of Pharmaceutical Cost Containment Policies on Physician Prescribing Behavior	박실비아
Collaboration in Child Protection Services	김미숙
A study on the reduction of economic burden after the expansion of childcare support	신윤정
Distribution and types of multiple chronic conditions in Korea	정영호
Healthy Life Expectancy in Korea by using the Disability Weights of Diseases	고숙자
Comparative Study on Policies linking Welfare and Work in Korea, China and Japan	노대명
Prospects of Family Changes and Policy Implications	김유경
Analysis of Net Tax Burden in Korea: Evidences from HIDS Data	남상호
Social Welfare Financing Soutions for Improving Intergenerational Equity in Linear Programming Simulation Model for National Health Insurance	유근춘
Analysis on the Causes for Increase/Decrease in Health Care Expenditures	신현웅

■ 현안보고서 / 정책자료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Long–term Projection of Social Expenditure in Korea	원종욱
건강영향평가국제컨퍼런스보고서	최은진
기초보장 현장 모니터링: 현장 전문가와 실무자 포럼	임완섭
민간협력의 모형 개발과 매뉴얼–우수사례 분석을 기초로	김승권
500조 시대를 대비한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개선방안	원종욱
건강보험 의사결정기구의 개편 방안	신영석
보건복지 현안분석과 정책과제 20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현황 (2015.07.31.)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부원장	신영석	건강보험, 의료급여, 사회재정
연구기획실장	신현웅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정신보건, 의료정책
보건정책연구실장	이상영	보건정책 및 건강보장, 보건경제, 건강증진
건강보장연구실장	황나미	여성과 어린이 건강정책, 통일대비 보건정책, 저출산ODA
사회보장연구실장	김미곤	공공부조, 빈곤, 소득분배, 소득보장
사회서비스연구실장	강혜규	복지전달체계, 사회서비스, 복지행정
인구정책연구실장	이삼식	인구분석, 인구정책개발, 다문화, 북한
미래전략연구실장	원종욱	기금운용, 기금제도, 사회재정, 경제성분석
통계정보연구실장	송태민	U-Health, 보건정보, 보건복지통계
선임연구위원	김승권	정책평가, 가족정책, 인구정책, 아동복지
	변용찬	장애인복지, 가족복지
	정경희	노인복지, 고령정책, 장기요양서비스, 가족부양
	정기혜	식품안전, 공중위생, 정책평가
연구위원	강신욱	빈곤정책, 소득분배, 사회통합
	강희정	건강보험제도·급여, 부당청구 및 사후관리, 의료공급자 프로파일링 및 성과평가
	고경환	복지재정, 복지경영, OECD SOCX 추계
	김남순	근거중심보건의료, 의료의 질, 기후변화와 건강
	김미숙	빈곤아동, 아동복지서비스, 사회서비스일자리
	김성희	장애인복지정책, 장애인실태조사, 직업재활
	김유경	다문화가족정책, 미혼모·한부모정책, 입양정책, 정책·시설평가
	김정선	식품정책, 식품안전관리, 식품위해분석
	김진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김태완	빈곤 및 사회분배, 사회정책, 공공부조, 농어촌복지
	남상호	소득 및 자산분포, 복지재정, 고령화정책
	노대명	기초보장, 자활사업, 사회통합
	박세경	아동/가족정책, 사회서비스정책, 자원봉사
	박실비아	의약품정책, 의약품산업, 의료보장
	서미경	보건교육, 건강증진
	선우덕	장기요양, 노인보건복지, 노인사회활동지원, 고령화대책
	신윤정	저출산, 영유아보육, 가족, 아동
	여유진	공공부조, 소득재분배, 교육불평등, 빈곤정책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연구위원	오영호	보건정책, 의료인력, 의료자원
	오영희	노인보건정책, 노인여가복지정책, 고령화정책
	우해봉	공적연금제도, 다층소득보장체계, 사망력, 혼인력
	유근춘	보건복지재정, 경제성평가, 보건의료
	윤석명	공적연금, 다층소득보장, 복지재정, 효과적 은퇴준비
	이윤경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기요양, 정책설계 및 평가
	이철선	고용복지연계모델,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서비스산업
	이태진	주거빈곤, 노숙인지원서비스, 공공부조모니터링
	이현주	빈곤, 사회복지행정, 복지전달체계, 지역사회복지
	정영철	보건복지정보화 계획 및 평가, 보건복지통합정보
	정영호	보건경제, 보건의료정책, 의료재정 및 의료비, 건강증진, 보건산업
	정홍원	복지전달체계, 사회복지정책분석, 소득보장정책
	최복천	장애인복지, 장애아가족지원, 권리옹호, 사례관리, 서비스전달체계
	최은진	담배안전관리, 건강영향평가, 청소년보건교육
	최정수	공공보건의료, 모자보건, 보건정책
	최현수	빈곤 및 소득보장,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복지정책모니터링
	홍석표	사회안전망, 복지지표, 건강보험, 의료급여
부연구위원	강은나	노인경제활동, 사회참여, 사회복지행정
	고숙자	보건경제, 보건정책, 건강증진
	고제이	조세정책, 세수추계, 복지재정, 미시모의실험모형
	김경래	인구정책, 고령화, 복지용구, 노후설계, 장례
	김대중	보건정책, 산업조직, 복지용구
	김동진	건강증진, 건강형평성, 건강영향평가
	김문길	빈곤정책, 불평등, 고령화, 사회보험
	김은정	보육서비스, 가계소비, 가족정책, 소비자경제
	김정현	사회복지, 노인복지
	김현경	기초보장, 노동경제
	박은자	의약품정책, 약물역학, 노인건강
	김재호	고령화, 연금, 고용, 빈곤
	박종서	가족사회학, 일-가정양립정책, 저출산정책
	백혜연	연생모형연구, 다층노후소득보장, 기초연금, 노후생활안정효과
	변수정	가족복지, 다문화가족, 사회서비스, 사회복지
	류정희	사회복지정책, 사회서비스

직위	성명	주요 연구분야
부연구위원	신정우	국민의료비, 수가(상대가치, 환산지수)정책
	신화연	공적연금재정평가, 장애연금제도, 사회복지예산지출추계
	오미애	기계학습, 데이터마이닝, 표본설계
	윤강재	보건의료정책, 한방의료정책, 공공보건의료
	이상림	인구변동, 결혼 및 가족, 다문화 및 국제이동
	이소영	사회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임신출산정책, 사회조사방법론
	이수형	건강형평성, 보건의료전달체계, 기후변화와 건강영향
	임완섭	사회정책 효과성 평가, 빈곤 및 관련 통계, 고용복지연계
	전진아	정신건강, 건강증진, 국제보건
	정은희	아동빈곤, 사례관리, 양육
	정진욱	사회정신건강정책, 자살예방대책, 공중위생
	정해식	비교사회정책, 사회통합, 사회보장통계, 다차원불평등
	조성호	인구경제, 노동경제, 응용미시분석
	황남희	세대간 소득이전, 세대간 형평성, 노후소득, 사회참여
	황도경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건의료분야
	황주희	장애인복지정책, 직업재활
초빙연구위원	김혜련	건강증진, 보건영양, 다문화가족 건강
	도세록	보건복지통계, 통계생산방법
	서문희	육아정책, 보육
	장영식	보건통계, 인구통계, 사회지표

도서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도서관은 보건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 인구 및 가족계획 등 보건복지 전 분야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전문 발간물과 학술지를 소장하고 있는 보건복지 전문도서관입니다.
-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및 국제회의 회의록을 포함한 단행본 5만여 권과 정기간행물 828종(약 2만여 권) 및 CD-ROM, 전자저널, 학술DB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이용을 희망하시는 분은 예약을 통해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예약 및 문의

전화: 044-287-8229

이메일: library@kihasa.re.kr

KIHASA 웹사이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홈페이지를 통해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되는 보고서 및 정기간행물 등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홈페이지에서 국문 웹진 혹은 영문 뉴스레터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최신 보건 복지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복지패널 (http://koweps.re.kr)

■ 한국복지패널은 우리나라 가구·개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SPSS, SAS, STATA), 기초분석 및 심층분석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패널 (http://www.khp.re.kr)

■ 한국의료패널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 수준 및 배분의 동태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하는 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정책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다양한 정책개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표본추출 및 조사방법에 대한 정보, 설문지와 데이터, 기초연구보고서, 리서치브리프 등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 (https://data.kihasa.re.kr)

■ 보건복지 데이터 포털은 국내외 보건복지분야의 각종 보고통계 및 조사통계, 복지재정통계, 통계관련 분석보고서, 통계뉴스, 조사사업 마이크로데이터, 통계용어 등 다양한 형태의 정형통계뿐만 아니라 이용자 맞춤형 비정형통계를 서비스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제별 또는 일반통계, 북한통계, 지역통계, 국제통계 등 영역별 특성에 따른 분류를 통해 이용자의 통계접근성 편의를 최대화 하고 있습니다.

건강영향평가지식포털 (http://hia.kihasa.re.kr)

■ 건강영향평가 지식포털은 건강영향평가(Health Impact Assessment: HIA)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학습이나 수행에 필요한 최신의 정보와 지식을 쉽게 찾아 볼 수 있고 보다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지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

모바일 웹 · 앱 출시

이제 **모바일**에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KIHASA)의
연구보고서 등 간행물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웹

1. QR 코드

2. 모바일 기기에서
   m.kihasa.re.kr로 접속

>> 모바일 앱

1. 안드로이드마켓(Play Store),
   앱스토어(App Store)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또는
   보사연, KIHASA로 검색

2. 다운로드 후 설치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Yes24 http://www.yes24.com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2015년 7월 발행

발 행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소 재 지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F~5F
문 의 044-287-8000
편집·인쇄 경성문화사(02)786-2999)

이 책의 저작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와 전재를 금합니다.
이 책은 사업적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6827-240-0 93330